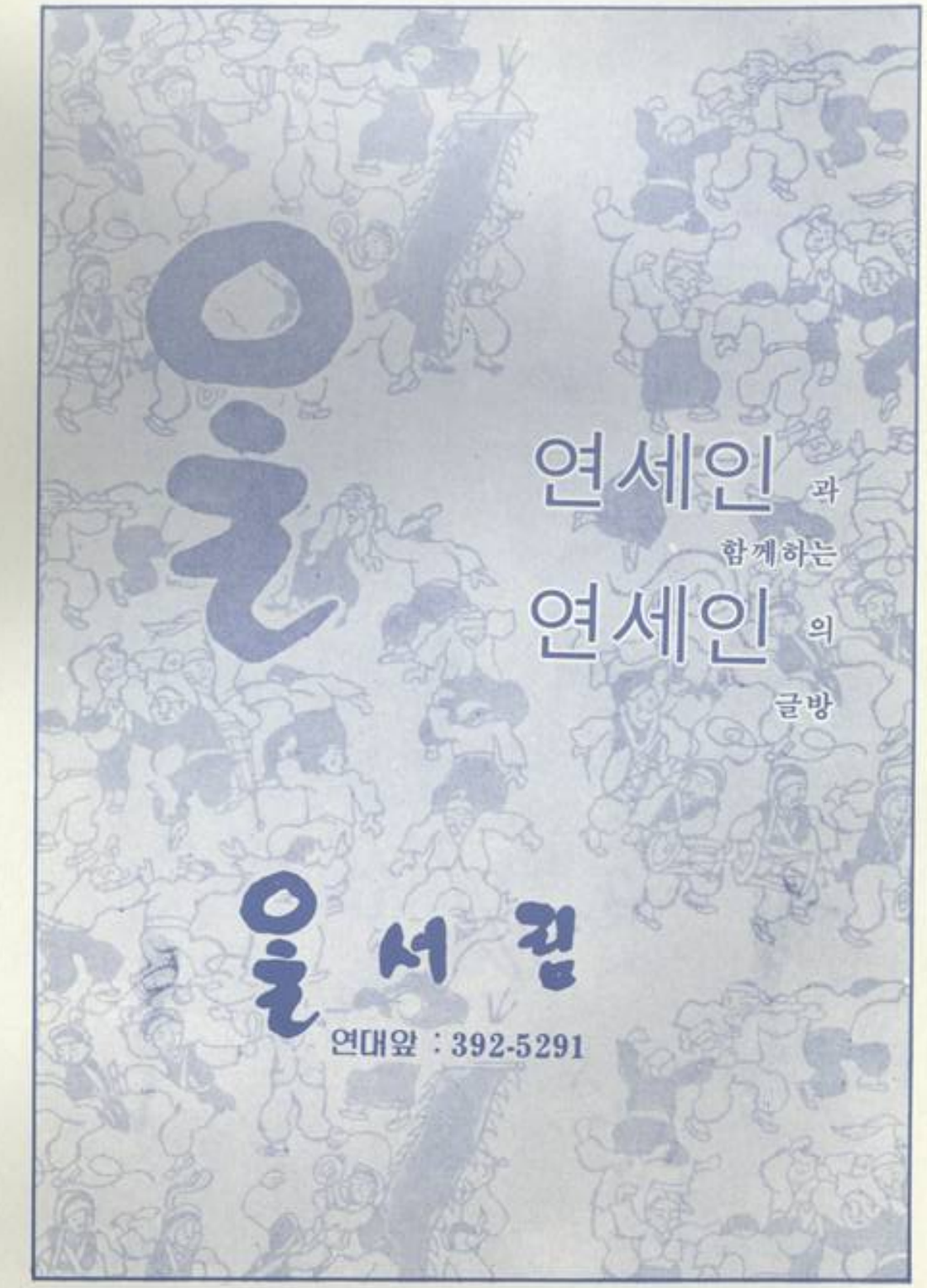
1988년6월

상경논총

연세대학교상경대학편집위원회



88학년도 수습 편집위원 모집

상경대학내의 건전한 학문풍토와 비판적 대학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저희 「상경대학 편집위원회」에서는 88학번을 모집합니다.

본 편집위원회에서는 시사지인 「상경인의 소리」와 종합 예술·교양지인 「상경논총」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관점을 기르기 위해 Study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편집실무에 필요한 PC(퍼스날 컴퓨터) 학습과 편집실무기술을 지도하고 있읍니다.

언제든지 상경대 1층 「상경대 편집위원회」 실을 찾아 주십시요.

상경대학 편집위원회

상경논총 제40호 일반원고모집

힘찬 지성과 날카로운 시각을 지닌 경제·경영·응용통계학분야 및 인접학문의 논문을 모집합니다. 마감일은 1988년 11월 30일까지이며 채택되는 원고는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그외 제언·르뽀·서평 등도 환영합니다. 상경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접수장소 : 상경대학 편집위원회실(114호)

‘드립니다’

상경 3000여 학우들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상경논총



1988 • 제39호

연 세 대 학 교
상경대학편집위원회

책을 내며

……,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로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에서-

갈갈이 찢겨져버린 한반도의 허리에 다시금 분단조국 44년의 깊은 통증이 스미고 있읍니다.

재 민족을 팔고 억누르고 착취하던 자들이 해방의 그 날을 비웃고 있읍니다.

비양심적이고 현실에 굴종하는 창백한 인테리의 술잔 속에 열사의 살이 씩어가고 있읍니다.

억압의 굴레, 배반의 세계에서 운명이란 흐름속에 침식되어 우리는 진정 이 부조리 속에 과묻혀야만 합니까?

비록 오늘은 초조함과 혼잡함과 남루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망각의 심연 저편에서 끊임없이 흘러 나오는 통일에의 갈증이 가시지 않는 까닭에-,

우리 민족은 헤어져 살 이유가 없으며 헤어져 살 수도 없음을 아는 까닭에-,

생존보다 더 높은 가치가 우릴 부르고 있음을 아는 까닭에-,

군화발에 채이고 가슴이 베어지고 페퍼포그의 느끼한 꼬임에 빠지면서도 우린 자유와 해방의 그 날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지만 용기는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자질구레한 여러 까닭으로 우린 변혁과 개량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고 민중을 배신하는 이 강제된 침묵의 어둠을 지켜보고 있을 수 만은 없읍니다. 깨치고 일어서서 우리 시대 우리 역사를 함께 읽어가야 합니다. 시대적 난류 속에 흔들림이 없이 자리지킴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6천만 동포의 하나됨과
내 사랑 한반도의 부활을 그리며-,
3천 상경인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통일염원 44년 6월

상경대학 편집위원회

특집

미국의 경제침략과 우리의 주체적 대응을 위하여

실는차례

1. 미국의 對韓경제 정책의 본질
-박 용 수-

2. 수입개방을 통해서 본 신식민지 체제
-최 훈-

3. 수입 개방과 농민들의 대응
-김 보 근-

4. 한·미 통상 마찰과 한국 경제의 과제
-문 상 덕-

미국의 對韓경제정책의 본질

박 용 수
(경제학과 4년)

목 차

Ⅰ. 머리말
Ⅱ. 본 론
1. 2차대전 이후의 미국을 중심으로한 선진제국간의 질서개편
2. 식민지 체제의 구축의 의의
3. 선진제국간의 모순의 발전과정
4. 신식민지주의의 모순과 그 한계
Ⅲ. 결 론

Ⅰ. 머리말

노태우 대통령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쇠고기 담배, 보험 등을 필두로 하여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은 거세게 밀려왔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품목에 대해 덤핑판정을 내리는 등 수출제재를 가하고 보호무역법안을 제정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수출경쟁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율인하압력을 포함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GSP 전면철회, 아직까지 미국이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부문과 보험·금융 등의 서어비스부문 등에서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이미 미국이 자기 내부의 경제적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갈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문제를 약소국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전체적인 대외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때문에 그다지 커다란 문제로 보지않고 또 쉽게 극복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볼 때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대외의존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허약한 상태라고 생각할 때, 또 이것을 앞으로 극복해야만하는 과제라고 생각할 때 지금의 기울어져가고 있는 (老大國)의 몸부림에 바짝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의 소신있고, 올바른 장기적인 관점과 이에맞는 적절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약한 국민들의 절실한 외침에 대해서는 항상 아차같이 굴던 정부는 대외교섭,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즉 국내에서는 국민들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고 미국을 상대해서는 국내의 사회문제나 정치일정을 방해삼아 구걸하는 듯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올바른 정부라면, 수입개방압력이 있고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파급력을 각각의 부문별 산업에 대해 조사·발표하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 전체적인 대응방침을 세우고 또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 진행과정을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비밀로 붙여와 결국 현재의 시점에서 속수무책의 사건으로 맞이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노대우 당선이 국민들에게 주는 첫번째 선물이 되고 말았다.

이에대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의 즉각적인 반발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우리는 어떠한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정말 미국에서 말하는 바와같이 그동안 자기네들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어갔으니 이제 우리것도 좀 내어놓을 때가 되었고 또 현재 인플레조짐도 심상치 않으니 이것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외무역흑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도 대폭적인 개방이 필요하고 이에대한 결과는 낙관적으로 보아도 좋은 것인가. 아니면 수입개방의 전반적인 추세는 우리의 대응능력 밖에 있는 것이므로 어쩔 도리없이 받아들이되 다만 미국의 너무나도 고압적이고 무차별적인 압력에 대해서는 일단 예봉을 피하고 시간을 끄는 도리밖에 없는 것인가. 위의 두가지 중 어느것이 옳으며, 만약 둘 다 옳지 않다면 도대체 어떠한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또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이 글의 목적이며 그 내용으로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앞에서의 수입개방에 대한 전체적인 또는 부분별 대응방안이나 그 파급력을 분석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의 추세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머물고 말 것이다.

앞으로의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서 2차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를 선진제국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둘째 그 속에서 현재 개발도상국, 제3세계국가 등으로 불리우는 국가들의 경제적 배경을 선진제국의 지배예속관계 속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와같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2차대전 때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은 지금의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이 자신의 세계지배전략에 입각한 내부의 누적된 모순의 결과로 나타난것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현재의 자본주의체제를 신제국주의체제와 신식민지체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원조나 수혜의 관계가 아니라 수탈관계임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세째 결론부분에서 앞의 내용을 종합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즉발적이긴 하지만, 분출되는 민중들의 외침 속에서 수입개방압력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2차대전 이후의 미국을 중심으로한 선진제국간의 질서개편

주지하다시피 2차대전 이전의 세계는 각각의 선진제국들이 세계각지에 자신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자국의 통화를 주축으로하는 블럭경제를 형성하고 있었다.[1] 그러한 세계경제체제는 19C말부터 급속도로 진행된 독점단계로의 이행을 그 경제적 토대로 하며, 그로인한 세계분할지배의 완료와 이것의 재편성과정이 세계역사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2차대전 또한 식민지체제의 재편을 둘러싼 선진제국들의 아귀다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2차대전의 결과는 단순한 식민지체제의 재편 이상의 좀더 복잡한 세계경제구조를 초래하게 된다. 크게, 선진제국간의 질

1) 세계경제론, 백산서당 참조.

게 개시된다. 제국주의의 반격은 폭력과 개량을 배합한 온폐된 식민주의 곧 신식민주의 전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개량적인 방법은 독립의 승인, 미국식 민주주의의 이식, 경제개발을 위한 원조와 차관제공 등을 예로 들을 수 있으며 폭력적 방법으로는 반동적 예속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쿠데타의 기도, 군사동맹의 체결, 군사원조, 군사 고문관 파견, 군대주둔, 해방지구에 대한 강제적 차단 등을 예로 들을 수 있겠다.[9] 이와같이 여러가지 지배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들을 포함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독립한 정치권력을 다시 자신의 지배영역하에 두는 것이다.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일단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다는 의미는 국내계급 중 어느 하나에 국가권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국가권력이 종속적이라면 곧 국내 지배계급의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배구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식민지에 대한 자본수출에서 부터 시작된다. 이것에 의해 식민지 내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급속도로 전전되며 따라서 식민지 내부에 노동자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또한 부분적으로 민족자본가 계급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의 성장과 식민지의 대다수 민중인 농민과 결합될 때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물질적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분명 민족자본가 계급도 외국자본의 초과이윤착취와 민족적 억압 때문에 외국자본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에 서게 되며 또한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민족자본가 계급은 민족해방운동이 철저한 계급해방으로 까지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이 또한 민족자본가가 제국주의와 타협이 가능한 기본적 이유이다. 이러한 타협의 가능성은 현실화되기 쉽다. 식민지내에서의 격렬한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나고 전세계적 흐름이 식민지의 정치적 독립을 막을 수 없게 될 때 제국주의 국가는 식민지 내부의 민족자본가 계급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일정부분 양보하여 또는 형식적 국가권력 획득을, 앞에서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돕게된다. 즉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초과이윤의 일부로 민족자본가 계급을 지원함으로써 민족해방전선의 분열을 야기시킨다. 그리고 개량적인 민족자본가계급이 권력을 잡도록 하며 이후에는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반면에 권력을 잡거나 잡으려하는 민족자본가계급도 국내 착취기반이 미약하고 또한 노동자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민족해방운동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제국주의의 도움을 받는 종속적 자본주의화의 길로 자신의 활로를 개척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제국주의의 초과이윤의 일부를 얻어먹는 종속적인 관계에 들어선 이상 민족자본가 계급은 이미 민족성을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10] 즉 경제적 종속을 토대로 현대 제국주의가 정치적으로 독립한 신식민지국가의 권력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식민지국가 내부의 반봉건적 지주계급은 민족해방운동의 과정과 이후의 종속적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 세력이 소멸·쇠퇴의 길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신식민지전략에서도 대소방위전략은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아니 오히려 전제조건이기까지 하다. 이것은 보통 군사동맹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결국 확장해가는 소련에 대한 전세계적인 포위 전략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이상으로 신식민주의의 확립과 변화의 원동력을 추상적으로 나마 살피보았다. 이것은 너무나도 다양한 신식민적 종속국들의 현상들에 대해 이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맥락을 잡고자 함이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과 같이 그대로 재편된 국가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모습들은 앞으로 신식민주의의 모순의 심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알아나가기로 하자.

이와같이 해서 2차대전 이후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간의 질서재편과 신식민지체제의 의미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이와같은 구조를 갖는 자본주의 세계가 자체내에 어떠한 모순이 있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모순을 심화시켜 갔는지 알아보자.

9) 코민테른과 세계혁명Ⅱ, 거름, p 19 ~ 20.
10) 신식민주의론, 한겨레, "현대자본주의와 식민지체제" 참조.

3. 선진제국간의 모순의 발전과정

유럽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확보, 신식민지내에서의 미국의 지배력 강화, 이를 통한 대소방위체제의 강화, 그리고 전후 세계경제의 급속한 부흥, 이 모든 것을 단시일 내에 가능하게 했던 것은 미국의 생산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달러살포의 힘이었다. 2차대전의 종결 이후 미국은 전시 중에 연합국의 병참기지로서 공업생산력을 배증시킨 결과 이제는 과잉생산 공황에 접을 내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한편 서유럽과 일본은 전쟁에 의한 막심한 생산력의 파괴때문에 전후의 부흥을 앞두고 필수물자 수입을 위한 대외구매력의 부족으로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매우 필요했으며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 여러 신생국들도 외화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러살포는 1차대전 이후 戰債문제와 배상문제가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자본주의 체제를 오랜 위기와 혼미 속에 빠뜨려 경제부흥을 뒤지게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패전 자본주의국의 경제부흥을 가속화시킨 효과가 컸으며 나아가서는 미국에 있어서 격심한 과잉생산의 도래를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제무역 거래액도 급속히 상승했다.[11] 그리고 달러살포를 통한 전후 세계경제의 부흥은 미국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면이 많았다.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축통화국은 일반국가들에 비해 국제통화 및 금융부문에서 훨씬 큰 재량권을 누릴 수 있다. 즉 다른 나라로부터 과잉수입(수입초과)을 한 경우라도 화폐를 찍어내거나 또는 국내통화량을 증대시키는 간단한 방법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수지 적자를 보인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걱정없이 편안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다 중요한 사실은 국제통화를 마음대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수출의 증대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되며 또 그것을 통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계속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 위치는 절대불변의 안전한 위치는 결코 아닌 것이다. 전쟁이나 자본주의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갖가지 위기, 경쟁세력들로부터 가해지는 끊임없는 각종 압력등이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핵심권 국가들간의 위계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선행조건을 조성시킨다. 또한 금융면에서 미국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50년대 초반에 이미 국제수지 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미국은 이에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않고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은행들에 의해 미국의 달러화가 철철 넘치도록 만들었다.[12]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도출되는 현상은 실질적 달러가치 하락현상이다. 우선과잉 달러살포를 통한 달러의 감가가 예상될 수 있으며 또한 대소방위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유럽의 지역공동체 국가들과 일본은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달성해 미국의 경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미국이 세계 각처에 뿌려놓은 과잉달러를 흡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흡수된 달러는 유럽 각국에 누적되었는데, 직접적으로 IMF체제에서 각국이 달러에 대한 환시세를 일정한 변동폭 이내로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시장에서의 달러시세의 하락에 대해서는 달러화에 대한 매입을 해야한다. 이것이 유럽국가들에게 달러화가 누적되는 현상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누적된 것이 유로달러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누적은 달러가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이것은 금투기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미국에서의 금유출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이 보유하는 금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금유출도 달러화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이것은 결국 달러화의 명목가치와 실질가치간의 더욱더 큰

11) 현대금융자본론, 동녘, 제11장, p 208 ~ 209.
12) 미국자본주의 위기, 일월서각, 제2장, 미국달러와 미제국주의 p 95 ~ 96.

괴리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현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금1온스당 35달러의 명목가치를 고집하였다. 결국 과대평가된 달러화에 의해 미국은 미국시장에 다른 공업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을 증가하면서도 싼 값으로 외국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자본수출을 쉽게 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은 57년과 58년의 공황을 기점으로 58년 서유럽의 통화의 교환성의 회복을 전기로 무역환의 자유화가 실시되어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세계지배가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서유럽이나 일본의 생산력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업별 경쟁에서는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달러의 과대 평가를 통해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세계적 지위를 강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지배지위의 강화는 미국의 상품수입의 증대와 다량의 자본수출로 국제수지의 만성적 적자를 대가로 치루면서 가능한 것이었다.[13]

또한 미국의 달러화 위기에는 50년 이후 지속되어온 재정적자현상 또한 그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자유진영의 헌병으로 자처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다. 주로 베트남전과 같은 국지전과 세계 각 지역에 존재하는 미군의 유지비, 군사원조, 경제원조 또는 외국에 있는 미국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등의 부문에서 타국에 비해 엄청난 달러를 쓰고 있는 미국의 재정은 그 적자액이 60년대 초반에 연평균 21억달러, 후반에 36억달러, 70년대 초반에 86억달러 후반에는 492억달러에 이르게 된다.[14] 이에 대한 처리를 살펴보면 60년대에는 미국정부와 은행에 의한 달러공급 팽창으로 국채를 소화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고, 70년대에 들어서는 외국은행과 국제기관의 자금을 이용한 처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어떠한 방법이든 결국 국채에 대한 이자상환이 통화증발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특히 외국이 국채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이것이 이자지불을 통한 국제수지 적자요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의 누적으로 85년도에는 결국 대외채무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같이 국제수지 악화에 대한 처리와 필요한 자금의 충당을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 할지라도 찍어내는 달러로는 인플레와 달러가치의 실질적 하락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메꿀수 있는 방법이 외국자본의 유입이고 이를 위해서는 고금리 정책이 필요하다. 이 고금리 정책을 통해 유로달러와 오일달러 등의 외국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었고 이것은 사실상 미국내의 저성장과 인플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15] 이렇게 달러화에 대한 미국의 자체적인 대량수요는 실질적인 달러가치의 하락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고달러체제를 초래했다. 미정부에 의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달러화 정책은 국제무역관계에서 미국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켜 미국산업의 생산력 정체와 아울러 무역수지마저 적자를 기록하게 했다.

이와같은 내용이 현재 미국의 쌍둥이 적자문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즉 2차대전 이후 자신의 세계지배를 위한 정책에 의해 달러위기를 필두로 대외경쟁력 또한 점차 하강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미국의 무역상대국 중의 몇몇 나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4. 신식민지주의의 모순과 그 한계

앞에서 현재의 미국의 세계 지배구조가 그 자체의 모순에 의해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신식민지주의 또한 그 자체에 신식민지 체제이기를 거부하는 근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경향은 지배국과의 경제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나며 정치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두가지 측면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모든 정치적 독립국은 일단 자본국으로의 길로 들어선 이상 국내 지배계급이 이윤을 확보해서 국내경제가 유지될 수 있게 해야되며 또한 적어도 실업률을 인구증가율보다는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규모의 성장과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내 지배계급의 몰락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입장에서는 예전과 같이 이를 국가로부터 무한정 착취할 수 만은 없는 것이며 어쨌든 위의 조건들을 최소한 유지시키는 한도내에서 초과착취가 가능한 것이다. 분명히 초과이윤을 확보해야하나 이것이 일방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종속적인 자본주의화의 길을 걷고 있는 신식민지국가에 대한 지배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식민지 자체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종속적 자본주의화의 길을 걷고 있는 신생 독립국들은 대부분 구식민지 시대에서 지배국의 원료산지와 상품시장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보통 단일 수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시장에서의 이들 상품에 대한 가격변동은 이들 국가의 무역수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54년 이후 60년대에 걸쳐 이들 원료상품의 국제가격은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반면에 공업제품가격도 상승경향을 나타냈다.[16] 또한 당시에 원료자원이 최종 소비국에서의 가격과 자원보유국의 판매가격과의 차이는 약 4배가량 된다고 한다. 이것은 원료자원의 대부분을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생산하고 유통판매까지 독점하고 있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은 사정이 60년에 UN에 UNCTAD가 생기고 여기에서 "프레비쉬보고서"가 발표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1차 산품에 대한 선진제국의 관세인하와 수입확대정책,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르는 제품·반제품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일반적 특혜공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원조 조건의 완화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수출품에 대한 생산판매과정 자체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 것이며 또 완전히 실현되지도 못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국제적인 공식석상에서 발표되고 그 공식적인 정당성을 많은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선진제국들의 이들 국가에 대한 지배력이 정치적 독립이 달성된 후에 훨씬 약화되었으며 또 계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몇몇 국가들도 블럭 탈퇴의 경향과 미국 일변도의 방침에서 이탈하려는 경향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중립주의와 자주독립의 외교정책을 주장하는 그룹의 입장이 강화되고 있는 정치적 추세가 나타난다.[17] 이러한 흐름에서 자원 민족주의를 내걸고 나온 OPEC의 석유가 인상을 통한 1차 오일쇼크는 세계경제에 파급력을 크게 미치게 된다. 석유의 독점가격으로 OPEC제국들의 국제수지가 단번에 흑자로 전환되었다. 74년에 산유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595억달러였으며 반면 선진제국과 비산유 개발도상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각각 270억달러와 235억 달러를 기록했다.[18]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불황과 시기가 겹쳐서 불황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으나 그 이후 산유국들의 급속한 공업화정책을 통해 오히려 남북무역을 확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오일달러는 다시 선진제국들의 손으로 흡수된다. 그리고 79년에 제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고 이 덕분에 80년도에는 산유국들의 무역수지 흑자액이 약 1,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때에는 1차 오일쇼크 때와같은 급속한 공업화정책도 없었기 때문에 오일달러의 환류문제를 대두케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일달러는 구미계 대은행에 설치된 구좌에 예치되어 거기서 전문요원의 조언에 기초한 계획에 따라 다방면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도 구미계 대은행들의 자금력을 강

13) 현대금융자본론, 동녘, 제11장 달러해체와 다국적기업, p 210 ~ 213.
14) 제국주의의 시대, 풀빛, p 111.
15) 동아일보 85.10.1 참조, 85한국경제사정,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에서 재인용.
16) 신식민국의론, p 172.
17) 전반적위기론, 백산, p 49.
18) 국제무역론, p 324.

화시켜 그들의 세계지배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같이 1.2차에 걸친 오일쇼크는 세계 경제의 격심한 불황의 선호탄 역할을 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국제무역과 국제금융관계를 확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지만 제국주의의 지배력 약화 경향을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그 지배의 우회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남북문제에서 석유문제와 더불어 항상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것은 외채문제이다. 외채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는 남미국가를 중심으로 한 비산유 개발도상국이 그 대상이 된다. 이들 국가로 자원보유 상태를 비롯하여 많은 조건들이 서로 다르지만 대부분 국제분업체계 내에서 공업부문으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공통성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높은 기술 수준으로 외국과 경쟁할 수는 없는 처지이며 공업화와 국제분업체계에의 편입은 저임금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점차 가공부문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화로 자국의 자본이 아니라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직접투자하여 경영하든지 아니면 원조나 차관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상품은 대부분 수출을 목표로 하게된다. 왜냐하면 공업화의 전략이 국제분업체제의 요구에 의해 생산 판매가 가능한 것이지 자국내의 수요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내에서의 생산 판매 소비는 당장에 필요한 외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본과 생산기술 판매시장까지 국제시장에 의존하는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산업의 발전은 원료나 기술생산재의 다량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속에서 흑자를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것이 누적되어 결국에는 빌린 돈을 갚기위해 또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다. 대부분 외채문제와 관련된 나라들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외채문제는 빚을 진 당사국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나라에 돈을 대준 외국의 다국적 은행은 이러한 상황때문에 부실화 경향을 나타내게 되며 심지어는 도산위기를 겪는다. 문제가 이정도로까지 확대되면 국제금융질서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채무국의 계속적인 지불유예 지불정지 등의 조치들을 채권국에서도 묵과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를 미끼로 다시 전면적인 간여와 지배를 획책하지만 그러한 정책은 채무국의 반발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외채문제는 산유국의 석유문제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즉 자원민족주의를 실현하여 일시적으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던 오일쇼크는 이후에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지만,다국적기업의 이해에 종속되고 어려운 무역조건에서 초과이윤을 과도하게 착취당한 결과인 외채문제는 오히려 세계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 역시 현재 제국주의가 안고있는 딜레머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또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산유국이든 비산유국이든 자국의 비자립적인 경제가 궁극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립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식민지주의는 계속적인 문제때문에 자꾸 우회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본질인 식민성은 그 색깔이 점차 엷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성 속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힘은 더욱 노골화될 수도 있다.

Ⅲ. 결 론

우리는 앞에서 현재의 미국경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의 수행과정과 그 지도적 지위를 향유하려는 경향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살펴보았고,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 중의 일부인 신식민주의로 이제는 일방적인 초과착취 상태가 불가능함으로해서 자체의 붕괴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신식민주의에 대항한 민족자립의 경향은 지배수단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추세임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은 어디인가. 우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신식민주의 전략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앞에서 나왔던 산유국도 아니며 또 86년부터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당분간은 흑자기조가 유지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같은 조건과 현상들은 크게볼 때 신식민지체제에 편입된 종속국으로써 무시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종속국 내에서도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군사적 정치적인 면에서 심한 종속성을 띠고 경제의 성장도 그 초기에는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고 이후 차관에 의존하는 외자주도형 개발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때문에 신식민지체제에의 편입을 부인할 수 없으나 경제적 지배의 직접적인 형태인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19] 즉 저임금과 세계 제1의 최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자원이 없으며 정치·사회적 정세로 항상 불안한 것이 외국인 투자업자들에겐 썩 좋은 투자조건이 못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외국자본의 유치를 추구해도 별 진전이 없었던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직접투자보다는 기술도입과 차관을 선호하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20]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조건이 역설적으로 지금에 이르러 수 많은 부실기업정리와 8.3 사채동결 80년의 마이너스 성장등을 겪었지만 나름대로 대외 경쟁력을 키워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근래에 들어와 저금리 저원유가의 유지와 엔고현상에 의해 세계경제에서의 힘의 공백(힘의균형) 상태의 지속이 우리경제의 실질적인 평가를 과대하게 만들기로 하였지만 결국 이러한 호조건 속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신식민지체제 내의 국가들보다 자립경제의 실현조건이 상대적으로 좀 낫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약간의 경제적 호조건이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자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자립도 멀게만 느껴진다. 또한 앞으로 수입원료 가격이 언제까지 안정적이라는 보장도 없으며 엔고현상에 의해 일본에 대해 상대적으로 좋아졌던 경쟁조건도 엔화절상은 이제 될만큼 되었고 이번에는 원화절상이 가속화되며 이미 엔화에 대한 환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한 달러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싼맛에 수입했던 미국의 수입상들로 수입선을 이제 다른 곳으로 돌려야겠다는 이야기로 들려온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산업도 어차피 상당부분 재편이 불가피하다. 즉 전환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영세하고 낙후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부문과 농업부문이다. 재편과정에서 눌려 오히려 독점자본에 의해 괴멸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미국의 담배 최고기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과 보험과 운행 등의 자본시장 광고, 영화 등의 서어비스 부문의 개방, 지적소유권 또한 원화절상 압력 이러한 모든 것이 한꺼번 무차별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는 미국에 생색을 내느라 정신이 없다. 앞으로 미국의 요구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미국의 비대한 몸집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모두에게 커다란 짐덩어리가 될 것이다. 제국주의의 자유경쟁 논리에 바탕을 둔 요구는 대부분 불공정한 것이다. 대부분 정면대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신식민적 종속국이라는 생각을 할 때 자립경제 실현이라는 관점에 더욱더 철저해져야 하며 이에 입각해서 각 부문별 개방도 판단해야 한다. 더구나 수출해서 배부른 놈 따로 있고 그 반대 급부로 피해보는 놈 따로 있다는 농민들의 외침은 자립경제의 관점과 아울러 또 하나 지침을 담고 있는 것이다.

---

19) 한국자본주의 성격 구명을 위한 일시론 양우진, 석사학위논문, p 64～65 참조.
20) 한국경제론, 경세원,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부광석 참조.

라 국제통화기금(IMF)이 1947년 3월1일에, 국제부흥은행(IBRD)이 1946년 6월5일에 발족한다. 이것은 블럭경제의 타파와, 달러를 기축통화(세계통화)로 하여 미국의 자본과 상품에 대한 문호개방을 폐한 구상으로 이에따라 1948년 1월1일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발족되면서 무역제한의 철폐와 관세인하에 의한 무역자유화 촉진의 체제가 확립된다.

이러한 IMF-GATT체제는 대전후 전후부흥기(45-52), 상대적 안정기의 전단계(52-60), 상대적 안정기의 후기(61-68)를 거치면서[9] 1968년 3월에 이르면, 세계통화로서의 달러의 신인(信認)유지를 위한 다국간 협력형태인 금풀이 무너지고, 달러가치와 금가치는 괴리되어 금의 이중가격제로 올아간다. 이후 1971년 8월의 금-달러 교환정지, 1973년 3월의 주요 자본주의국통화의 변동환율제에로의 이행에 따라 그간에 세계경제의 통일성을 매개지운 IMF 체제는 해체된다. 곧 1968년 이래로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구조적 불안정기로 접어들고, 1974년 제1차 석유파동의 여파는 내부적 모순에 작용하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황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전후 4반세기에 걸친 장기적 고도성장도 1974-75년의 공황에 의해 전후 국가독점자본에 의한 관리능력의 한계가 폭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0]

즉 전후 세계경제는 자본주의적인 상품생산의 무정부성에서 주어지는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으로 인하여 세계자본주의 내부에서 민족간·자본간의 이해대립이 중요한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여왔다. 그러한 경제적 민족주의로 발현되는 분극화에의 경향은, 자본의 범세계적 통합에의 경향과의 대립관계속에서, 그간의 역사적 전개는 미국의 상대적 우위의 후퇴과정으로 되면서 세계경제질서는 이제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11]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은 민족주의를 보다 적나라한 것으로 하게 하면서 197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경제는 일본과 서구 선진자본주의 제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세계자본주의의 최강자로서의 위치를 위협받음과 동시에 자본축적조건의 악화로 인한 설비투자의 감소, 가동률의 저하, 실업률의 증가 및 인플레등으로 내우의환의 위기에 처해있다.[12]

이런 요인들이 '힘의 우위'를 강조한 극우 보수세력인 레이건정권을 등장시키게 되었다. 레이건 정권은 미국경제의 장기불안 타개책으로서 공급중시 경제이론가(Supply-siders)들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라는 '경제재생계획'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 사회보장관계비, 일반행정비를 중심으로 한 세출의 대폭삭감 2)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대폭삭감 3)각종 정부 규제의 철폐 4) 억제된 수준의 안정적 통화공급과 동시에 5) 국방비 지출의 증대로 된다.

결국 민간수요부문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군수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그 의도를 인플레의 억제와 더불어 부유층과 대기업의 조세감면→투자확대→고용창출→유효수요창출로 과거 미국의 영광을 다시 되찾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조세의 누진원리를 부정하고 미국내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한 것이었다.[13]

그러나 레이거노믹스하의 고금리와 고달러는 미국내 투자조건의 악화로 기업의 도산과 실업률의 증가로 귀결되어 국내적으로는 미국경제(특히 제조업부문)를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고가게 되었고, 고금리로 인해 금리가 연 21%까지 치솟았던 1980년의 경우 미국은 대외투자수익(차관이자)으로 3백억 달러를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였으며, 제3세계 채무국들의 비난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의 출혈을 강요한 셈이되었다.

결국 군비확장, 대규모감세 - 고금리·달러공세 -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확대 메카니즘이 정착되고[14] 이어 미국은 '달러가치 절하를 통한 파상적 수출공세'를 핵심으로 하는 '신무역정책' 이른바 '람보노믹스'로 돌파구를 모색하게 된다.

'람보노믹스'는 타국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자유거래의 원칙을 적용시켜 시장개방 압력을 통해 비교우위가 큰 미국상품 및 서어비스를 수출, 무역적자를 축소시켜 나가고 자국시장에 대해서는 평등보상의 원칙 즉 '균형무역'을 주장하며 수입규제를 통해 비교우위가 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산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시말해 공격적인 자유무역주의라는 제국주의적 창으로 타국을 마구 유린함과 동시에 자국시장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라는 방패를 둘러침으로써 미국 국가독점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15]

레이건이 내건 보호무역주의와 시장개방압력은 미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안고있는 기본적 모순의 산물이다.[16] 사실상 한국의 덤핑수출은 미국내의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고 오히려 한국의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도 잇따른 덤핑관정과 수입규제조치 그리고 '불공정 무역관행' 운운하면서 타국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속에서 자국의 모순을 신식민지 종속국에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의 본질을 드러낸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성을 잃은 미국의 경제정책[17]은 한손에는 달러가치의 하락(원화절상)이라는 칼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보호무역주의라는 도끼를 들고 마지막 손에는 시장개방압력이라는 총을 든 괴물로 둔갑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그 괴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리고 국내의 지배계급을 위해 대문을 활짝 열고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18]

오히려 미국이 지금 해야할 것은 보호무역주의와 압력을 통한 여타국의 착취가 아니라 자국산업의 기술혁신과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룩함과 동시에 군수산업과 서어비스산업의 과잉투자를 자제하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임으로써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도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일일것이다.

2) 수입개방과 신식민지체제의 종속적 구조

"다음 6~12개월이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것이다. 총선후 또는 올림픽후로 매번 시장개방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정책을 지속한다면 한-미 두나라는 대결할 수 밖에 없다."

- 피터 알가이어 미통상대표부(USTR) 차관보 '87.12.

"(미국) 민주당은 동맹국이나 교역상대국들중에서 속죄양을 찾고 있으며 경제학 수업시간에 내놓으면 낙제점을 받을만한 보호무역적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다."

- 미 민주당 정책 전문가 테드·반·다이크, 매경 '87.10.6

이제 앞에서 본대로 미국경제의 위기를 여타국에 전가시키려는 수입개방압력의 본질성이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관련하에서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를 볼 차례이다. 우선 수입개방이라는 문제를 바라볼때 간과하기 쉬운 또는 일부러 회피하려하는 두가지 관점을 지

9) "전후 자본주의의 재검토" P 286.
10) 같은 책. P 291.
11) 고대신문. 88.2.24. 박현채.
12) 이현섭 '수입개방저지투쟁의 대중적 실천을 위하여 "녹두서평" 녹두 P 349.
13) 연간소득액이 1만달러미만인 빈곤층은 연간 4백달러의 사회보장 급부액을 삭감당한 대신 연소득 8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은 연간 8천4백달러의 감세혜택을 받았다.
임재경 '미국은 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가' "전환기의 노동운동, 현장-6" P 72. 돌베개 186

14) AALAR1 "시장개방의 본질과 그 실태" P 21.
15) 이현섭, 앞의 책. P 350.
16) 임재경, 앞의 책. P 76.
17) 워싱턴의 미통상관계자들은 이제 한·미간의 협상이 논리적인 해결 단계를 지나 국가간의 신의에 금이 가 있는 상태(Credility Crisis)이므로 301조 발동이나 GATT제소와 같은 물리적인 수단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 중앙일보 88.1.29.
18) AALAR1, P 24.

식은 너무나 이완되어만 가고[23] 현정부의 대응은 같은 민족임을 의심케까지 한다. 한 예로 국내 지퍼업계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난 '일본 YKK덤핑제소사건'은 정부(상공부)가 우리업계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대기업편을 들어 덤핑무혐의 판정을 내림으로써 현정부의 정통성까지도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24]

그 이유가 일본의 무역보복의 후유증을 두려워했다는 점이고 보면 얼마나 국민과 괴리되고 국민적 기반이 허약한 정권인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평균관세율 3%보다 더 높은 7%의 관세율을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매기고 있는데(섬유류등은 10~30%의 관세율) 한국의 독재정권은 그야말로 미·일의 이해와 그 기반을 같이하고 있지나 않은지?

무역보복이 두려워 오히려 조기개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논리는 대미 수입개방에서도 대부분 그러한데 과연 조기 수입개방을 한다고 했을때 미국 압력의 예봉이 늦추어질 것인가의 해답은 이미 수십 차례의 계속되는 개방요구가 그런 논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고, 사실상 수입개방압력은 미국의 적자가 줄어야만 완화될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한국과 미국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 세계적 경제상황에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힘이 없기 때문에 수입개방압력에 응하는것이 저변층의 신상에 더욱 유리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마음은 없는지.[25]

과연, 아시아 중진국들과 개도국을 겨냥하여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한국이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은 직접 간접적으로 규제만 받고, 국내시장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일본과 미국의 상품시장으로 개방해버린다면 한국은 어떠한 시장을 근거로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추진할 것인지?

아물든 이러한 대미·대일 무역의존도가 다른 여러가지 요인과 함께 미일이 호혜주의나 쌍무주의를 내세워 시장개방을 요구할때 한국으로 하여금 협상권에 있어서 열세에 처하게 하는 요인이 됨[26]을 알아보았고, 그것은 또한 전후 민족·민주적 변혁의 좌절과 자본운동 전개의 필연성에서 연유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시장의 다변화라는 현실적 대응과 함께 궁극적으로 민족자주적 정부를 세워서 자립경제의 달성을 이룩해야한다는 과제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수입개방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심화와 미국경제의 모순극대화로 인한 제국주의적 신무역 정책과 예속정권의 합작품으로서 신식민지 경제질서의 재편·강화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27] 이와 연관하여 이제 한국내부의 체제적 구조, 특히 수입개방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고 있는가라는 점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수입개방에 대한 현재의 정부, 실업계, 학계의 기본입장은 우선은 농축산물수입의 자유화폭을 대폭 확대하고 다음으로 서어비스 및 지식산업 시장을 개방하고, 끝으로 원화절상문제는 비틸수 있는 최후까지 버텨보자는 입장인듯 싶다.[28]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은, 농민 노동자등 기층 계급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29] 대신 기층민중의 피해를 이용하여 독점재벌의 수출만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계급적으로 또한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아야 자기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독점자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런지 모르지만, 수입농산물의 국제가격이 국내가격에 비해 엄청나게 저렴하고, 수입물량도 품목을 가리지 않고 요구하는 품목은 모두 대량수입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농민과 농업에 얼마만한 피해를 안겨줄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실지로 한국 정부는 87년 6월 미국정부와의 경제협의회를 가지면서 그해 말안에 양담배·보험·쇠고기의 수입문제를 매듭지어주겠다는 비밀약속을[30] 국민들 모르게 했었고 이후 미국의 개방압력의 호재로 이용되기도 한다.

외국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와 예속독재정권의 차익금을 보면 〈표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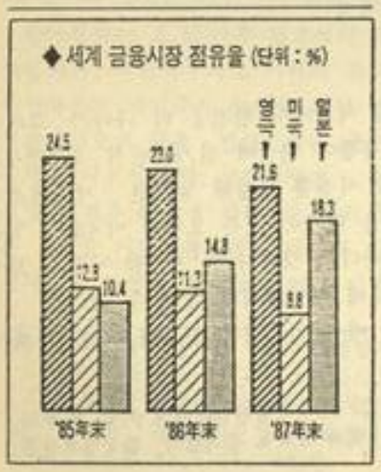
예속독점자본은 대외 국가독점자본의, 특히 미국 국가독점자본의 보호무역주의와 수입개방 압력하에서 수입개방 정책에 의해, 한편으로는 미국독점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자의 저렴한 공급이라는 이익을 꾀하고 있다. 또한 외채 상환 부담과 외자도입의 원활화를 위해 자본자유화를 시도함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는 직접투자[31]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개방체제에 적합한 경제구조의 재편을 위해 예속독점자본은 여전히 저임금 구조의 유지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임금도 예속독점자본의 축적기반인 수출의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미국등의 국가독점자본의 국내투자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한국의 거대 독점재벌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노동자·농민 그리고 중소상인 기업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장개방정책을

〈표3〉

수 입 품	농 민 피 해	예속독재정권차익금
바나나(1984년 필리핀산)	참외농가 108.3억원 수박농가 216억원	130억원 이익
외국 소	농민 2조원 손해	6천억원 이익
마늘, 고추, 양파	손해량집계 안되었으나 막대한 손해	200억원 이익
팔 2만톤	쌍룡재벌 114억원 이익	60억원 이익
바나나(1986년 대만산)	토마토, 참외, 수박농가 손해	80억원 이익예상
양담배(1987년부터 5억달러 수입예상)	담배재배농가 1,000억원 손해	미국 4,500억원 이익

(가톨릭농민회, 『농민신문』, 1986년5월)



23) 매경 5월14일자에 의하면 일본은 빠르면 올해안에 영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금융시장 점유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로 한국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도 개방하고자 하고 있는 이때 일본은 해외주식매입에 혈안이 되어있다. 무역제국주의 일본의 새로운 경제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모두의 철저한 준비와 예의 주시가 필요하리라 본다.

24) 매경 88.5.13.

25) 신용하. "신동아" 86.1. P 168.

26) 동아 88.5.14일자에 따르면 미통상압력에 대해 일본·싱가폴·대만·홍콩등은 미국의 통상위협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유독 한국만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7) 이현성. 앞의 글. P 351.

28) 고대신문. 88.3.2. 홍성걸.

29)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으로 85년 한국의 수입자유화율이 87.7%가 되었을때도 독과점 품목의 경우는 78%밖에 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이것을 잘 대변하고 있다.

30) 조선일보, 87.12.27.

31) 직접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신용하, 앞의 글. P 180 참조.

〈표5〉 연도별 수입자유화율

구분 / 년도		총품목 (A)	금지	제한	자동 (B)	자유화율 (B/A)
1976	上	1,312	66	584	662	50.5
	下	〃	64	579	669	51.0
1977	上	〃	63	580	669	51.0
	下	〃	61	560	691	52.7
1978	上	1,097	50	456	591	53.9
	5	〃	—	431	666	60.3
	上	〃	—	424	673	61.3
	9	〃	—	385	712	64.9
1979	上	〃	—	344	753	68.6
	下	1,010	—	327	683	67.6
1980	上	〃	—	318	692	68.5
80.下/81.上		〃	—	317	693	68.6
81.下/82.上		7,465	—	1,886	5,579	74.7
82.下/83.上		7,560	—	1,769	5,791	76.6
83.下/84.上		7,560	—	1,482	6,078	80.4
84. 1. 1.		7,560	—	1,459	6,101	80.7
84.下/85.上		7,915	—	1,203	6,712	84.8
85.下/86.上		7,915	—	970	6,945	87.7
86.下/87.上		7,915	—	668	7,247	91.6
(以下 計劃)			—			
87.下/88.上		7,915	—	508	7,407	93.6
88.下/89.上		7,915	—	367	7,548	95.4

"수입자유화의 대응방향" 상공부 1985.11. p 79.

〈표6〉 한·미 통상관계 주요일지

〈83년〉
- 11월 레이건 한국방문 — 수입자유화 요구

〈84년〉
- 12.17 컬러TV 덤핑재심 최종판정(평균 10.65%)

〈85년〉
- 9. 7 레이건대통령, 한국의 보험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를 지시
- 9.10 미영화협, 미통상대표부에 한국의 영화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 지시
- 10.23 미상무성, 한국산 앨범 덤핑 최종 판정(61.81%)
- 11.25～27 301조 실무협상(워싱턴)
- 12. 9～12 301조 실무협상(서울)
- ·12.17 레이건, 더몬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86년〉
- 1 ～ 주미대사와 미통상대표부 301조 협상(워싱턴)
- 5.23～28 대코널 상원의원 방한, 담배수입개방요구
- 5.27～29 야이터 미USTR대표방한, 301조 협의 쇠고기 수입개방요구
- 7.15～21 301조 협의단 방미, 일괄타결

〈87년〉
- 1.28 대미 관심품목의 관세율 7월1일부터 5% 인하방침 발표
- 2.23～27 김만제부총리 워싱턴방문, 야이터·베이커등과 요담
- 4.22 미시판 특허품목에 대한 제1차 실무회의
- 5. 6～ 8 한미 해운 협의
- 6. 8～11 제2차 미시판 특허품목 회의
- 7. 6～ 7 한미 항공회담
- 7.20～21 제3차 미시판 특허품목 회의
- 7.29～30 제1차 담배수입 개방문제 협의
- 8. 4 한미 광고개방 실무회의
- 8.17 한미 항공회담
- 9.17～18 제2차 담배협의
- 10.16 제4차 미시판 특허품목회의
- 11. 3～10 제3차 담배협의
- 11.19～20 통신부문 실무협의
- 12.17～21 제4차 담배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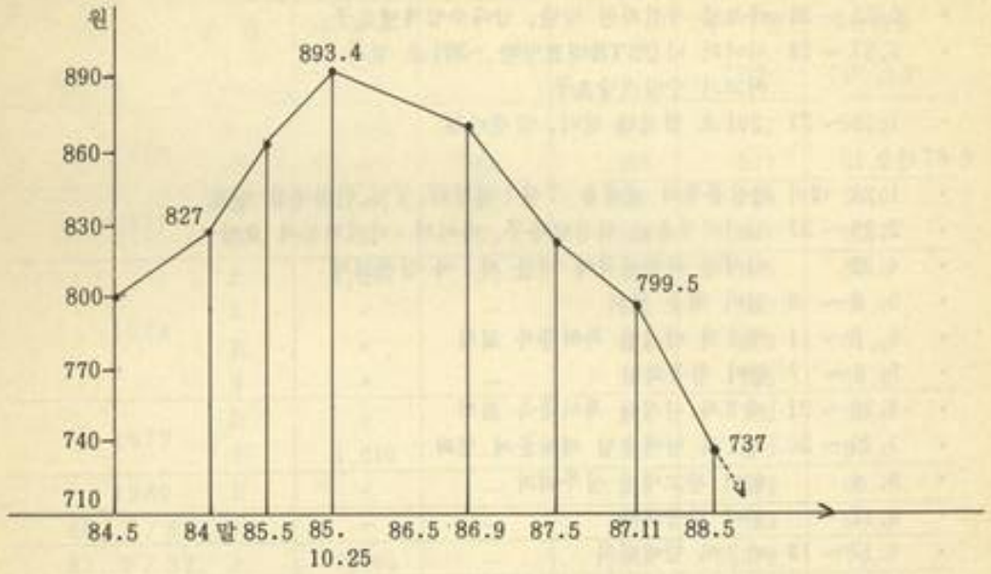
〈88년〉
- 1. 2～1.7 정인용부총리, 워싱턴에서 야이터와 통상협상, 타결실패
- 1.22 쇠고기등 3대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 전달
- 11.23 미담배 수출협회(USCEA), 한국전매공사를 걸어 301조 제소
- 1.26 USTR, 쇠고기문제 GATT에 제소준비지시
- 3.17～18 76개품목 감시해제·수입자유화, 합작생명보험사 설립허가
- 4.27 미의회 종합무역법안 통과
- 5. 2～4 제8차 한미무역실무회의 양담배 수입(700원대로) 허용
- 5.14 항구적 쇠고기 수입개방
- 5.21 외환거래의 자유화 자본자유화방침 재무부발표

이렇게 대부분의 공산품이 개방됨으로써 국내 제조업계는 외국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들은 도산의 위기에까지 처하고 있다. 이러할 때 미국은 원화절상 압력까지 파상적으로 요구해와 '88년 5월10일 현재 737원까지 떨어져있다.

'87년 내내 미달러환율 8백원 대를 지키겠다던 정부당국의 공언은 미국의 압력으로 무너진지 오래고, 수출업체 들은 7백20원 대를 고비로 바이어 들의 이탈현상이 시작되고 7백원 밑으로 내려가면 심각한 타격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8) 참조. 이러한 사정에는 아랑곳없이 미국은 6백원 대까지의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압력은 관세인하에서도,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재외에서도 관철된다. '76년부터(EC는 71년부터) 한국등

〈표 7〉 대미환율 변동추세



자료 : AALARI. p 54, 동아. 87.11.6 참조.

〈표 8〉 원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영향 분석

품 목	환 율 영 향	바 이 어 동 향
생활용품	700원이하부터 수출격감 영세기업부터 수출중단 예상	700원을 고비로 고정바이어들 수입선전환예상 고급품으로 전환중
철 강	대기업은 700원 이하도 극복가능 중소기업수출감소	세계적 물량부족으로 가격인상가능
금속양식기	720원이 손익분기점	OEM경우로 수입선전환움직임 일본 유럽은 괜찮은편
컨테이너	720원일때 5%, 700원일때 10% 정도로 수출감소	—
자 동 차	완성차 및 부품 모두 680원이 손익분기점	별문제없음
기 계	공작기계 730원, 운반·하역기계 740원, 건설·광산기계 700원선이 각각 손익분기점	
타 이 어	트럭·버스용 바이어스타이어는 700원까지 현상유지 가능. 승용차용 래디얼타이어는 700원이하면 수출불가	720원이면 3%, 700원이하면 60%정도가 이탈가능성
완 구	봉제완구 720원선이면 40% 수출감소	현재 5%인상 가능 720원이면 이탈시작
전 자	730원대에서 10%이상 수출감소 업체가 35%, 680원이면 20% 이상 감소업체 45%정도로 예상	수출마진 1~2% 수준에 불과
신 발	가죽운동화는 별 영향없으나 플래스틱신발이 문제. 720원에서는 가격절충가능, 680원이면 중소업체도산	중공·동남아로 수입선전환 계속
시 멘 트	720원이 고비. 미국시장은 700원이하면 수출중단 예상	일본지역 제외한 바이어들 수입선 전환시작
비 료	원자재값 안정으로 채산성호조	
섬유제품	수출주문 감소 추세	다품종·소량주문추세
섬유직물	면직물은 수출단가 10~20% 하락	수입선 전환검토
가죽제품	가죽의류는 20%가격인상. 모피의류·가방은 중소기업 어려움 가중	수입선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

(중앙. 88.5.11)

개도국을 상대로 보통 5~9%의 관세율 부담을 면제시켜주던 것을 88년 벽두에 들어서자 그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버린 것이다. 이것은 통상마찰에 대한 일종의 보복책으로 볼 수 있으며 관세율 인하와 함께 그러한 압력이 미국에 한정되는것이 아니고 EC 제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관세율에 대해서는, 당국은 현재 18.1%를 나타내고 있는 전품목 평균관세율을 오는 93년에 선진국수준인 7%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37] 더구나 이제는 상품 뿐만 아니라 투자·서어비스 산업개방 → 물질특허권·지적소유권까지도 수입개방의 일정에 올라 있다.

5월 20일 재무부가 제출한 「금융산업개편안」에 따르면 외환거래의 자유화 및 자본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점차 금융국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다.[38] 이것은 '81년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온 과정으로서 정부는 '81년 1월 '자본자유화를 위한 자본시장 국제화의 장기계획'을 발표, 본격적으로 자본자유화를 시행해왔다.

이 계획에 따르면 1단계(81~84)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증권의 간접취득,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2단계(85~)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증권 직접취득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단계(80년 대 말)에서는 외국인의 증권투자를 본격적으로 허용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을 촉진하고, 4단계(90년대)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후 완전개방화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39]

정부에서 이처럼 일찌기 자본시장의 개방을 생각한 것은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서 해외의존적인 한국경제가 수출을 계속해내기 위해서는 독점기업의 성장의 재원을 조달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것은 국제 분업체계 속에 더욱 더 깊숙히 포섭되어가는 것으로 규정지을 수 있고, 독점대기업은 재무구조의 개선, 외채부담의 증가, 수입자유화로 인한 외국기업과의 경쟁, 보호무역주의 등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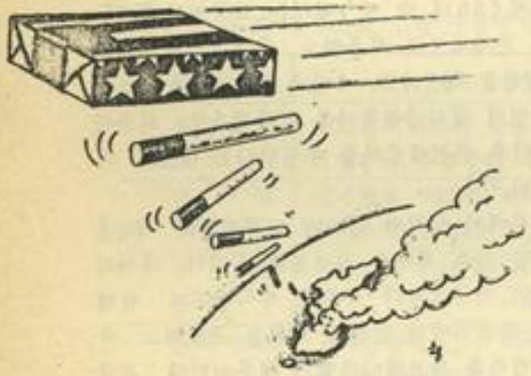
하지만 일본이 세계 자본시장을 휩쓸고 있는 판국에, 아직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증

37) 매경 88.5.14.
38) 동아 88.5.20.
39) 「말」지 88.5월호, P 67.

진국 문턱의 한국이 자본자유화를 달성한다고 했을때,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가 심화되고 한국경제의 일부분이 외국자본에 의해 소유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상으로 상품·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해방이래의 한국에 있어서 자본운동의 꾸준한 흐름이 지금에도 그대로 연결되어 관철되고 있으며, 또한 그 과정은 외세의 종속에서 탈피를 못한 속에서, 지금은 토대로 있어서의 예속성과 정치 군사적 종속성이 수입개방의 전개과정을 관류하는 규정적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 군부정권과 예속자본은 그 본질에 있어서 반민중성과 반민족성을 공통된 속성으로 하고 있으며, 2장에서 본 신식민지체제의 종속적 구조를 온존·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한국 88.1.19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그림 金 宣 辛>

4. 농축산물 수입과 한미관계

"83년에 이미 소는 잃었고 이 동네에서 민을 것은 담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담배마저 뺏기게 될 판이구먼유. 결국 우리 농민은 떨어지는 이슬만 받아먹고 사는 셈이구요. 설 자리가 없어유.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구만유"

—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한농민 '88.2.—

수입자유화를 크게 상품수입 자유화, 외환(금융) 자유화, 자본 자유화의 세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상품수입자유화 그중에서도 농축(수)산물 수입과정은 다른 어떤것보다도 현 정권의 대미예속성, 반민중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그 정당성을 심히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비교우위가 전혀 없는 농축산물은 경제발전(?)이란 측면에서 볼 때 아니 독점자본의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빨리 개방해서 물가상승요인도 없애고 인건비도 줄이고 또한 공산품 수입개방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미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펼지도 모르나 — 사실 이정도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진 않는다. 그런 훌륭한 이론(비교우위론)의 미사여구아래 농민의 기나긴 한숨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될 때는 다시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비교우위론은 ①기술수준이 동일하고 ②소득수준이 동일하고 ③완전고용 상태이며 ④전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비교 생산비가 낮은 산업에 특화하여 무역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무역발생이론에 불과한데 이러한 전제조건의 충족도 없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40] 또한 비교우위론은 현상을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비교우위를 가진 생산물과 열위를 가진 생산물이 변화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산업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선후진국간의 관계를 고착화하게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41]

40) 신용하. 앞의 글. P 182.
41) 강기석 "수입자유화의 전망과 한계" 86. 석사논문. P 64.

이런 논리들은 IMF[42]나 GATT 등에서 내세우는 논리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미국과 한국간의 정치·경제·문화적 불균등 관계를 사상해서 한국의 수입개방에 적용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특히 자원민족주의의 추세에 따라, 선진강대국이 자기의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식량수입국을 정치·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식량무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도 비교우위론을 거들먹거리는 자들의 저의는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이다.[43]

그럼 현재 쟁점으로 되어있는 양담배수입(양담배수입은 담배농가의, 나아가 농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과 쇠고기수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두 품목 모두 현재 미통상대표부(USTR)에 301조 제소장이 내어진 상태이다. 5월에 열린 8차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한국은 오는 7월 중 양담배가격을 현행 1천1백~1천5백원에서 700원 대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즉 앞으로 전매공사의 간섭없이 자유로운 수입 판매가 보장되도록 한국의 관계법 개정에 노력하고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원가·수량·형태·횟수에 제한없이 양담배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44]

미국은 건강상 미국내에서 금연운동이 벌어지자, 국제도의와 보건윤리상의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그 손해액을 한국등의 나라에서 빼내어 갈려는 것이다. 더구나 양담배의 미국 소매가격이 대체로 850~1000원 수준이고, 대만에서의 판매가격이 1350원정도(대만산 담배가격의 1.6배), 그리고 일본에서 소매가격이 150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한국을 얼마나 알잡아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45]

카톨릭농민회의 한 담당자는 "양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15%가 되면 잎담배 생산량이 연간 8천4백톤 감소될 것이고 경작농가 소득은 2백20억원 감소되며 이에따라 8~9천 농가가 담배경작을 포기해야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양담배가격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46]

쇠고기 수입문제도, 축산농가의 심한 반발에 불구하고 올해 6월 경까지는 재개되어 연 1만5천톤(고급쇠고기 5천톤, 일반쇠고기 1만톤)을 수입할 예정이고 — 국내수요의 약 15% — 그 가격은 2천만달러에 이르게 된다.[47] 미국과 한 통속인 GATT에 쇠고기 수입문제가 미국의 압력으로 제소되자 지레 겁을 먹은 정부는 아예 항구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버렸고, 이제 83·84년도의 소값파동 당시 7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소농가들은 또다시 악몽을 되씹게 되었다.

쇠고기수입은 식량자원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소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축산물, 나아가 모든 농산물로 파급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54개 품목의 농축산물도 멀지 않아 완전개방되리란 것은 미국의 압력에 대처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면 훤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오는 7월초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농축산물은, 아직 제국주의의 제일인자의 명성을 유지하기엔 충분히 다양하다. 냉동감자, 아보카도, 육액기스, 식물성 단백질, 야채쥬스, 알팔파목초, 북어, 농축오렌지쥬스, 포도주(301조 제소중), 콩기름, 밀, 옥수수 ……등 가히 무차별적이고,

42) IMF는 지금도 농산물 수입확대등 시장개방과 원화절상의 가속화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43) 한 예로 외국보다 그 배가 비싼 비료·농기계에는 비교우위론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유리할 때만 차용되는 비교우위론의 숨겨진 의도를 예증한다고 보여진다. 매경 88.5.17.
44) 효성, 두산 등 국내 굵지의 기업들이 앞장서서 미국산담배 파는일을 거들어주기 위해 경쟁적으로 싸우고 있다. 물론 국적과 양심을 초월한 자본논리 — 이윤추구를 위해서이다.
45) 「말」지 제23호. 김성훈 P 110.
46) 고대신문. 88.3.2.
47) 동아. 88.5.14.

올해 대만에서 들여오는 5천여톤의 바나나는 kg당 1300원 정도에 들여와 소비자가격 3천 6백원에 국민들에게 팔아먹음으로써 50여억원의 장사까지 하려한다.

농축산물 수입개방만을 따로 떼어 본 것은, 공산품이나 다른 부분들은 미국의 수입개방요구에 따라 우리가 실질적 주체로서 이끌어 가는 입장이라면 산업경쟁력 提高에 기여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48], 농축산물의 경우는 어떤 화려한 논리로도 그 반민중성과 반민족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국의 천 만농민은 미국과 예속적 정권의 반동적 작태에 대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지만 정부 및 독점자본이 기초를 두고 있는 기반은 농민들과는 같을 수가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농축산물 수입개방은 미국자본운동이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로서 요구하고 있는것으로서 단순히 농민·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 경제의 자립성에 관계되는 문제이다.[49] 농축산물은 한나라 경제의 기초산업으로서, 국내적 자급이 외세에 방해받는다면 민족경제의 자립과 민족자주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문제는 민족자주의 문제와 민중의 문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전민중적 대응이 요청된다 하겠다.

결국 농축산물 수입개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국민적 지지기반이 허약한 반민중적 현정권은 그 정당성을 국외 제국주의의 힘에서 구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에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본질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그런 현정권의 예속성은 해방이후 전개되어온 자본운동의 과정, 그 토대의 예속성에서 일차적으로 비롯되는 것이며, 예속독점자본과 예속군부정권에 의해 유지되어지는 총체적 신식민지성이 현재의 수입개방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한미관계의 본질이다. 여기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예속파쇼권력과,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접점을 이루고있는 예속독점자본은 공히 우리 운동의 대상으로 설정되게 되는 것이다.

5. 끝맺는 말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해오는 현재의 상황은 구한말 당시의 강대국들이 문호개방을 요구하던 때를 생각나게 한다. 혹은 개항이후 한일합방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본의 경제침탈을 연상하게도 된다.[50]

조선의 강제개항이 19세기 후반의 약소국의 비극이었다면, 최근의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은 Pax-Americana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있는 나라의 비애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 지배권력이 민중의 입장에 서지 못함으로써 결국 외세에의 예속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역사적 진리를 깨우쳐 준다.

중세사회와 달리 개별국가가 고립되어 살 수는 없는 현대사회에서 각국의 국민경제는 상호유기적으로 연관되면서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방과 자유화의 역사적 전진성은 수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이 달려있는 민중의 손에 의해서, 민중적 관점하에서 또한 민족적 독립성과 주체성이 상호 인정되는 한에서 정당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작금, 한국의 수입개방의 현실은 그러한 전제조건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로의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제국주의 세력과 예속파쇼권력 그리고 예속독점자본의 기본적 성향이 우리 운동의 극복대상이 된다고 본다.

신식민지체제의 해체라는 과제는 우리운동의 동력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학생 등 이

48) 정부당국은 처음엔 국제경쟁력 강화를 수입개방의 주요 논거로 삼더니, 이젠 오히려 개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앞아서 조기개방하는게 유리하다는 식으로 그 논거가 조금 달라졌다.
49) 한겨레신문 4호 88.5.19. 박현채.
50) 조기준.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1973. 대왕사 참조.

시대민중의 어깨 위에 부과되어 있는 사명이다. 파쇼체제의 속성인 사회 제반의 비민주적 요소들 —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 을 몰아내고 민주적 정부가 민중을 중심에 두고 국민경제의 자립을 위해 자주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우리 운동의 기나긴 하나의 과정은 새로운 도약에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고 믿는다.

※ 이 글에 대해 마지막으로 덧붙일것은 이글은 기본적으로 수입개방의 본질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수입자유화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차원의 대책은 거의 다루지를 않았는데 이는 짜임글에서 이글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러하기 때문이며, 또 한가지 이유는 단순히 정책적 차원의 미시적 해결대안의 제시만으로 글을 전개하기엔 민족자주적, 민중적 관점에서 수입자유화의 문제를 봐야한다는 것이 전략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너무나 크고 절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입개방과 농민들의 대응

김 보 근
(경제학과 4년)

목 차

1. 머리말
2. 수입개방을 바라보는 시각
   1) 수혜자와 피해자
   2) 자립경제라는 시각속에서의 수입개방
   3) 수입개방과 정치
3. 농축산물 수입개방
   1) 개방농정의 본질
   2) 개방농정의 문제점
   3)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전개
4. 농민들의 대응—투쟁사례를 중심으로—
5. 투쟁평가와 이후의 과제
6. 맺음말

1. 머 리 말

요즈음 우리 주변에는 수입개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언제나 신문을 펼쳐보면 경제면과 심지어는 1면에서 까지 미국이 이번에는 또 무엇을 요구 했으며 만약 이것을 거부했을 때는 미 통상법 301조를 발동할 것이라는 소식들을 접할 수 있다. 미국이 수입개방을 요구하는 품목은 그 종류가 워낙 많고 범위 또한 워낙 넓어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자본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며, 너도 나도 우리의 경제를 걱정하는 심정속에서 기존의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초보적인 반미감정까지도 국민들에게서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수입개방은 우리 앞에 닥친 커다란 문제이며 전국민의 올바른 대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수입개방 문제가 우리 국민 전체에게 닥친 일임은 분명하나 우리의 내부의 모든 계층—계급적 이해를 달리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동일한 이해 속에서 수입개방을 바라보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의 일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보편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또 현재 비교 우위론을 내세우는 자본의 논리와 농민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상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올바름을 검증받을 수 있다. 현재, 각 언론의 보도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수입개방의 문제를 제국주의 미국과 제3세계 국가의 하나인 한국간의 민족적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이 존재한다. 만일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수입개방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대응책을 제시해주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내부의 자본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은폐시키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가를 살펴보고 또 다른 부분 즉 농업에서 어떻게 모순을 전가받으며 이에 대해 농민들은 어떠한 형태로 대응하는지,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2. 수입개방을 바라보는 시각

1) 수혜자와 피해자

우리가 수입개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할 때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은 "어휴, 이제 우리민족은 큰 일났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수입개방은 우리 국민 전체가 고민하며 올바른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재 유포되어 있는 이러한 인식속에는 우리의 국내에서조차 수입개방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은폐함으로써 수입개방에서 오는 불이익을 다른 계급에 전가시키려는 독점자본의 논리가 중첩되어 있다. 수입개방에 대한 올바른 민족적 대응은 민족적 문제라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에게 모순을 전가시키는 허위의식을 분리해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글은 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대한 자유화, 개방압력은 이제 우리 민족구성원 속에서 이것을 지지하는 사회적 구성원을 갖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것은 한국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광범한 세력이 그간의 한국자본의 비자립적인 대외의존적 성장구조 속에서 물질적 기반을 갖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

다시 말해서 우리앞에 놓여 있는 시장개방 확대 정책은 미국의 독점자본이 자국내의 모순을 제3세계 국가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와 한국내의 매판적 독점자본의 이해가 일치하는 점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독점자본은 자신들의 이러한 의도를 「민족주의」라는 가면과 비교우위론이라는 무기를 통해 이러한 점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기업들이 미 달러에 대한 원화의 평가절상이나 미국이 취하는 보호무역의 높은 장벽으로 인하여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수입개방의 문제가 계급적인 문제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계급적인 문제를 떠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민족」을 강조하는 독점자본의 논리가 우리 내부의 각 계급, 계층에게 어떠한 결과로써 다가가는가를 살펴보면 명확해 진다.

85년도에 수입개방의 문제가 본격적 으로 여론화되기 시작하였을 때의 앨범업계의 도산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여 지금도 길거리에서 앨범을 파는 광경을 목격하면 그때의 상황을 기억해 내면서 우리 기업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매번 되새긴다. 그러나 이것은 약체의 자본—중·소자본—인 앨범업계의 도산을 전 국민에게 선전하면서, 이것이 마치 독점자본 전체에까지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확대 선전하였던 측면이 있다. 그뒤 86년, 87년도의 대미흑자는 계속 증가하였고 제조업부문의 성장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이었다. 88년의 전망에서도 전경련은 수입개방 압력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수출의 둔화와 성장의 둔화로 기업경영의 애로요인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견해는 제조업의 경우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성장을

1) 박현채 「수입개방 압력의 본질과 민족경제」, 『고대신문』제 1067 호 (1988. 2. 24 일)

나타내리라고 내다본 증권회사의 전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이 전망들이 각기 자신의 이해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앨범업계 사건을 매개로한 전국민적 위기감 조성이나, 전경련의 88년 경제평가는 바로 노동운동에 대한 견제 논리로서 사용된다. 그것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경제는 대폭의 임금인상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자가 임금인상투쟁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독점자본의 논리는 노동자의 이익을 「민족주의」라는 말 속에서 희석화 시키려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지적해야할 부분은 독점자본의 수입을 통한 이윤의 확보이다. 우리는 수입개방시 그것이 미국등 여타 수출 대상국의 보호무역의 장벽을 완화시켜 우리나라 자본의 수출이 보다 활성화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수입개방이 우리민족의 국제화시대의 올바른 대처방안이라고 하는 논리를 많이 듣는다. 그러나 독점자본에게 있어서 수입이란 이러한 문제 뿐 만이 아니라 수입자체에서도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으며, 그러기에 수출과 관련없이도 수입을 주장하도 한다. 물론 수입개방시 외국상품의 국내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으로써 국내자본의 이익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수입개방의 수입자율화율이 독과점 품목에 비해 비독과점 품목의 그것이 훨씬 높은 점[2]등은 바로 수입부문에서도 이들 독점자보의 이익이 관철됨을 알 수 있다. 농축산물의 수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농민들은 단지 생산을 하는 단위일 뿐이다. 그 나머지 저장, 가용, 유통, 판매에 이르는 모든 행위는 모두 대자본에 의해서 운영된다. 그러기에 대자본의 가공, 유통, 판매에서의 이윤을 노려 농축산물의 수입을 조장하기도 한다.[3]

그 일례로 86년 87년에는 국내의 우유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여 우유를 버리는 사태가 속출했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정부 에서는 뉴질랜드와 치즈 도입에 합의했었다. 이것을 근거로 뉴질랜드는 계속 치즈 수입을 요구하게되었고 서울우유 협동조합은 원료 상태인 크르드치즈를 뉴진랜드산 80%, 국내조달 20%로 하고 뉴질랜드와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다가 농민의 반발에 의해 일시 중지되었다가 소비재벌인 롯데에서 원료조달을 70%로 약간 변경하여서 다시 치즈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4] 그리고 이러한 수입개방에 따른 이익 때문에 국내자본이 오히려 미국 등의 수입개방 압력을 부추기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생명보험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때마침 제기된 미국의 수입개방 요구에 편승하여 오히려 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드러낸다.[5] 국내 30대 재벌의 미국과의 합작보험회사 설립의 참여 금지에도 불구하고 코오롱과 동부그룹 등은 국내생명보험시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국의 통상압력을 부추기며 결국 우리의 국내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미국업체의 진출과 자신들의생보시장에의 참여를 실현해 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독점자본은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한쪽으로는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노동자,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등의 수입개방 압력을 부추기는 반 민족적 매판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수입개방이 비록 민족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민족주의」라는 말로 그 내부의 계급적 이해를 간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의 무역구조와 시장개방정책의 본질」『시장개방의 본질과 그 실태』A·A·LA 연구소
85년 한국의 수입자율화 율이 87.7%가 되었을 때도 독과점 품목의 경우 78%밖에 되지 않았다.
3) 「수입개방, 무엇이 문제인가」『자유언론』 88. 2월 p 28.
4) 전개서 p 31
5) 「경제동향」『노정권의 출범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기사연 리포트 6호』 p 216.

2) 자립경제라는 시각속에서의 수입개방

흔히 수입개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수입개방시 우리민족 전체의 후생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것이 누구의 후생증대인가 하는 점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입개방-특히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우리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은 폭락되고 이로 인해 농촌은 황폐화되면서 지속적인 이농현상이 일어나며, 이들은 도시의 하층을 형성하여 저임금 노동력의 주공급원을 이룬다. 이리하여 독점자본으로서는 노동력의 재생산비를 농민이 희생하는 구조 속에서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의 운동자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비교우위론자들의 후생증대 속에는 노동자, 농민의 후생증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식량생산에 관계되는 농업부분은 그 생산기반을 허물어 트리는 데는 불과 몇년이 소요되지 않을 지라도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데는 초현대식의 첨단장비를 동원하고 국력을 걸고 시도하더라도 수십년의 세월이 경과해야 한다. 농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식량자급도는 1965년 93.0%였던 것이 86년 현재에는 47.7%로 뚝 떨어졌다.[6] 우리나라 경제의 예속성이 농업부문의 희생을 통한 저임금. 저곡가정책의 유지와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에 있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의 수입개방 논의도 단순히 그때 그때 공산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비교우위론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경제의 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성장으로 인한 혜택이 민족의 성원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한다.

3) 수입개방과 정치

앞에서의 분석에서 나는 수입개방에서의 정부의 입장을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부의 태도에서 독점 자본의 논리와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른 여타의 상황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지만 수입개방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정부가 독점자본의 이해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나아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의 잇권개입자로서 수입개방에 관여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몰이 싸움'과 '농촌 후계자 자살'을 낳았던 83년 이후의쇠고기 수입에서 찾아볼 수 있다. 81, 82 년의 경우 국내 쇠고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소 도입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83년에는 소값이 안정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2억원 상당의 엄청난 양을 수입하였고 심지어 84년도에는 소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6만 3천두의 미국소를 들여옴으로써 소값은 폭락하고 말았다.[7] 그리고 최근의 일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쇠고기 수입의 뒷면에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통한 전경환의 막대한 잇권개입이 있었다.[8]

그리고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의 강도에 있어서도 작년 이후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그 압력의 강도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선거시에 약화되었다가 다시 선거가 끝난 뒤에 강해지는 변화를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의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배려(?)

6)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농촌현실」『자하』 20호 p43 에서 재인용.
7) 「곤두박질 소값 축산농 울상」『주간매경』 88. 5.5
8) 조선일보. 88. 3 23. '84년도 소값파동시 전씨의 요구로 2만4천마리 추가로 도입했음을 확인'

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즉 작년과 올해에 걸쳐 있었던 양대선거에서 정부.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수입개방 문제는 미국과 우리정부의 협의에 의해 표면적으로 약화된 듯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측의 배려에 대한 우리정부의 보답(?) 또한 만만치 않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새해가 시작된 벽두부터 미국을 찾아간 정인용 당시 부총리가 아이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에서 양담배 가격을 8백 20원대로 인하하고 한·미합작 진출보험회사의 자본금 규제를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데 합의해 주었다. 그런데 개방을 전제로 하면서도 쇠고기 수입은 총선에의 영향을 생각해서 총선이후로 개방의 시기를 연기하였으며 더불어 호텔용만이 아닌 일반쇠고기도 수입대상으로 거론하기로 하였다.[9]

3. 농축산물 수입개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입개방의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농민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입개방을 정당화시켜주는 측면을 지니는 정부의 '개방농정'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따른 현재의 수입개방의 진행상태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개방농정의 본질

현 수입개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에서 그 경제적 배경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는 지난 60년대 이후 저임금과 이를 위한 저농산물 가격을 바탕으로 하여 자본, 기술, 원료시장을 해외에의존해 온 공업화위주의 성장정책인데 이는 70년대 에 들어와서 두차례의 석유파동과 세계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심화 및 선진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로서 소득의 평등한 재분배와 민족자립경제 실현이라는 진보적 방향에서가 아니라 외국독점자본에의 종속성과 반 민중성의 강화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수입개방으로 나타나는 개방경제 체제이다. 그리고 '개방농정'은 바로 농업부문의 수입개방을 정당화시켜주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우선 개방농정의 기본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유지를 위한 저농산물 가격체제를 계속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70년대 이중곡가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하고, 둘째, 저 곡가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를 농촌 공업화의 추진에 의한 농외소득의 증대와 주곡이외의 축산, 원예등을 함께하는 복합영농정책을 통한 주곡부문 이외의 농업소득증대에 의해 보안하며, 세째, 농지임대차의 양성화, 농지상한선의 점진적 철폐 등에 의한 기업농의 육성을 추진한다.[10]

제법 장황한 설명이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얘기다. 즉, 이제부터는 이중곡가체제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졌고 등 외국의 개방압력도 있고 하니 차제에 외국의 값싼 농축산물 수입을 본격화하되, 이로인한 농민의 파산사태를 최대한 막아 보기 위해 복합영농, 농촌공업화, 기업농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80년대 개방농정은 그 수식이 아무리 화려하다해도 정책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방농정의 문제점

이상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는 개방농정은 그것이 가져온 농촌현실에 있어서의 파괴적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그 계획의 논리구조에서부터 비현실적이고 상호모순된 논리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첫째, 이논리는 그 밑바탕에 '비교우위론'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공업화를 해서 공산품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외국농산물을 수입해 먹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하며 전체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이 논리는 앞서 수입개방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던 데로, 자립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경제의 구조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국민의 후생증대라는 말속에서 내부적 갈등구조를 은폐시킨다. 둘째, 농지임대차(賃貸借) 양성화와 기업농 육성계획은 대다수 농민, 즉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의 토지문제 해결과 정반대의 길이다. 그것은 대자본, 비농민의 토지소유, 토지투기를 촉진할 우려가 있으며, 농민의 토지상실, 소작농의 확대와 농가부채를 가속화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더나아가 저농산물 가격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국제적 가격경쟁력을 갖는 기업농을 육성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세째, 복합영농정책은 저농산물 가격과 수입자유화에 의한 농업소득의 저하를 메우기 위해 축산, 원예등을 함께 함으로써 농업소득의 증대를 꾀한다는 것이나 복합영농이 제대로 이루어 지려면 가격보장과 계획생산 및 수입제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농축산물 수입개방 정책하에서의 복합영농이란 완전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네째로 농촌공업화의 추진.역시 공장에 대한 농촌의 입지유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현실적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설령 강력히 추진한다 해도 공업산업의 이전이나 값싼 노동력과 토지이용, 토지투기, 정부의 각종 특혜를 겨냥한 것으로 되기 쉽다.

이상과 같이 개방농정은 그 출발점이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합리화에 있으므로 그 내용성이 허구적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미국 등의 독점자본의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게된 국내독점자본의 공산품 수출을위해 계속적으로 농업부문을 희생시키며 저임금.저농산물가격을 유지시키겠다는것을 복합영농이니 농촌공업화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이니 하는 말 들로 은폐시킴에 다름아니다.

3)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전개

미국 등 선진국의 독점자본의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나타난 '개방농정' 이후 외국 농축산물 수입이 본격화되어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외국 농축산물의 종류는 무려 3백 50여가지가 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이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쌀, 밀.콩.옥수수 등 곡물의 경우 90%를, 축산물의 경우 50%를 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며 그 결과 우리는 세계 최대의 곡물수출국인 미국의 네 번째로 큰 농산물 판매시장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끊임없이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그 결과 1983년에 토끼고기, 코코넛, 살구, 자두, 면실, 냉동과실, 피마자, 생모피, 돼지비계 등 20개 품목의 농산물이 개방된 것을 필두로 해서 84년엔 9개 품목, 85년에 7개 품목에 이어서 1986년에는 칠면조 고기, 기타 가금류(家禽類)고기, 토마토소스, 커피차 등 7개 품목이 수입자유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86년 9월 1일부터는 양담배가 수입되어 시판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1987년에는 4월에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700㎖짜리 포도주 55만병을 10월 1일부터 수입개방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1년에 가면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87년 7월 1일부터 가금(家禽)고기 통조림, 돼지고기 통조림, 소시지 유사조제식료품, 방광, 그레이프 후르쯔쥬스, 크랜베리 혼합쥬스가 개방되어, 농수산물에 대한 무역대상품목 717개 가운데 1987년 말까지 482개 이상이 개방된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88년에는 대두유, 황도통조림, 마르멜로, 과일칵테일, 기타 조제과실, 냉동감

9) 동아일보 88. 1. 7
10)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농촌현실」『자하』 20호, p42

자, 알팔파(배합사료) 등을 수입개방할 방침이며, 88년 이후에는 별도의 수입자유화 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해마다 품목별로 개방여부를 결정, 예시하기로 하였다.

4. 농민들의 대응 -투쟁사례를 중심으로 -

여태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입개방에 대한 자본의 논리를 살펴보고, 이들 자본의 논리가 「민족주의」라는 가면으로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노동자,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허구적 이론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80년이후 수입개방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행정조치로서의 개방농정의 본질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이렇게 수입개방으로 인한 모순을 집약적으로 받고 있는 농민들은 이 수입개방 문제에 대응하는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보기로 하자. 수입개방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1985 년도인데, 그 전인해, 1984년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1984년도에는 바나나 수입으로 인해 참외, 수박등 여름과일값이 20~30% 폭락하여, 참외농가가 약100억원, 수박농가가 약 20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아울러 미국소가 과잉도입됨에 따라 국내 소사육이 급증하여 소값이 1년사이에 약 60%가까이 폭락, '소값이 개값'이 되어 120만 소사육농가가 총 2조원 가량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농민들은 설마, 설마하던 그간의 참기 위한 생존권 투쟁에 나서게 된다. 1985년 1~3월에 카톨릭 농민회의 소도입으로 인한 피해의 실태조사에서 부터 시작한 투쟁은 1985년 4월 22~23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미국 농축산물 수입개방 요구 규탄대회」에서 그 선언적인 방향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집회에서는 카톨릭 농민회, 기독교 농민회, 카톨릭 여성농민회의 공동성명, 공동 공개질의서 발표를 하고, 기독교 농민회의 주제하에 민통련, 민청련등과연대하여 100여명의 농민들과 함께 경찰의 저지를 뚫고 미 대사관에 진입, '소값피해 보상하라' '미국은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을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싸움은 투쟁방식의 적극성과 정치투쟁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후속 선전활동과 대중 프로그램으로의 연결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말미암아 선도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싸움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 싸움은 '소값피해보상 및 외국 농축산물 수입개방 반대운동'이 최초로 문제제기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4월 22, 23일 싸움은 농민운동에 있어서 수입개방 저지투쟁이 광범한 직접생산자의 참여에 기초한 대중적 경제투쟁으로 전개될 때, 그 투쟁의 실효성이 더욱 커짐을 재인식 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5~6월 농번기를 지나 7월에 접어들면서 소값 피해보상 투쟁은 소위 '소몰이 싸움'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소몰이 시위는 7월이후, 경기도 안성, 강원도 홍천 춘천, 원주, 경상북도 의성, 안동, 경상남도 고성, 진양, 전라남도 무안, 함평, 해남, 강진, 전라북도 완주, 진안, 임실, 부안, 충청남도 당진, 충청북도 괴산, 청주, 음성, 진천등 20여개 군에서 총 2만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여 전개하였다. 이들은 저지하는 경찰에 적극 대응하며, 경운기에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가두선전을 하고, 소 잔등에 각종 구호를 붙여 트랙터 경운기를 앞세우고 경찰의 저지선을 과감히 돌파, 수십 km를 시위 행진하여 연도의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속에서, 국도차단, 도로점거, 읍내장터장악등 그간의 농민운동에서 볼 수 없었던 대중적인 투쟁전술과 폭발적인 투쟁성을 나타냈다.

그 중 대표적인 싸움으로는 7월1일 경남 고성 싸움, 7월 5-8일 강원 홍천싸움, 7월 17일 충북 청주 싸움, 7월 26일 전북 전안 싸움 등을 들 수 있다. 7월1일 경남 고성 싸움은 카톨릭 농민회 경남 고성 협의회의 주도 하에 농민 100여명이 소 38 마리와 경운기 3대를 동원하여 법인 최초의 소몰이 시위로서, 소값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아침 7시-낮 1시까지 고성 읍내와 우시장에서 항의 시위를 한 후 마산-고성, 마산-충무간 국도를 차단하는등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1986년에 들어와서는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는데 85년 에 비해 소값피해보상등의 차원에서 수입개방문제등 농민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슬로건 제시가 많아졌다. 그리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86년에는 수입개방 저지투쟁을 전담할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른다.[11]

지역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수입개방저지 및 미국 예속정권 타도를 위한 무안 농민투쟁 위원회」, 「농축산물 수입저지 영동군 농민위원회」, 「농민 생존권쟁취 및 농축산물 수입개방 반대 괴산군 농민회」 등을 들 수 있다. 86년은 이들 각 위원회와 기존의 카농, 기농등을 중심으로 수입개방 싸움이 전개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먼저 1월말의 전남 강진의 쇠똥물 투척 시위를 들 수 있다. 1월22일 있었던 이 시위는 강진군의 탐진 농우회, 기독교 농민회, 카톨릭농민회 등 3개 단체가 「강진지역 농협문제 대책위원회」를 공동구성하여 이 대책위의 주도하에 농민 50여명이 강진군 농협 개관식에서 쇠똥물을 넣은 계란을 민정당 김식의원과 농협중앙회 윤근환 회장의 얼굴에 투척한 사건이다. 3월 11일에는 충남 아산의 영농후계자 오한섭씨가 소값 폭락으로 진 빚 1천만원을 갚지 못해 비관해 오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4월 13일 아산에서와 4월 16일 경북 안동에서 각각 기도회 및 수입개방 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또 7월13일 충북 괴산에서는 농, 학연대투쟁으로서의 「수입개방 저지와 살인농정 철폐를 위한 범농민, 학생실천대회」를 가졌다. 이 실천대회는 괴산군의수입개방 저지 농민투위와 괴산군내 농촌활동을 마친 성균관대 학생들의 공동투쟁이었다.

학생들이 농활을 마치고 귀가하기전인, 7월13일 괴산읍 장터에서 600여명의 학생과 수십명의 농민들이 4시간 동안 경찰과 격렬하게 싸웠다. 이 싸움은 수입개방문제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 학연대투쟁의실천적 모색을 시도한데 의의를 찾아 볼 수있으나 경찰의 탄압과 사전계획의 부실로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87년은 온나라가 개헌이냐 호헌이냐의 문제로 떠들석했던 시기이다. 이 때 재야에서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기존의 농민운동 단체들도 민주헌법쟁취 농민위원회를 조직하여 국민운동본부의 참여하게 된다. 그리하여 6월 대투쟁 기간동안에 각지역 농민위원회의 주도하에 싸움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때는 호헌과 6.10대투쟁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개헌싸움이 중차대한 일로 부각되어 농축산물 수입개방은 부차적인 관심영역으로 물러나게 되었었다.

그리고 87년도 학반기에는 대통령선거가 치루어진 기간으로 이 때 대권주자들은 농민들에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이것도 농민들의 투쟁을 유보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례로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노태우후보가 낙농대표들에게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은 농민들의 사전승인 없이 수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12]

이러한 공약과 약속은 노태우가 당선된뒤 空約이 되어버렸는데, 이에 88년 벽두부터 농민들의 투쟁은 다시 가열되기 시작했다. 88년 1월8일 서울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국낙농 육우농민 5,000명이 집결하여 '쇠고기 수입반대 전국 낙농육우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13] 이 대회에서 참여 농민들은 "쇠고기 수입개방에 백만농민 죽어간다"

11) 『녹두서평』
12) 「곤두박질 소값, 축산농가울상」『주간매경』88. 5. 5
13) 「쇠고기 수입에 앓는 축산농가」『신동아』88. 3

고 밝히고 쇠고기 수입개방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경찰 차량 14대를 부수고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의 투쟁이 격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의 확답을 못얻자 1월 18일에는 임시국회에 맞추어 국회의사당 앞에서 87년 12월 10일 결성한 전국낙농인연합회의 주도하에 5,000여명의 낙농인들이 수입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후의 싸움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2월 10일에는 '쇠고기 수입반대 축산농민 결의대회'가 수원(1,500)명 참가, 의정부(3,000명 참가), 제천(300명 참가), 대구(600명 참가), 원주(600명 참가) 등지에서 쇠고기수입 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2월 5일에는 '전국 양계인 대회'(1,500명 참가), 2월 9일 '닭고기, 달걀 수입 반대시위' 등 쇠고기 이외의 품목에서도 수입개방 반대시위가 진행되었다.

5. 투쟁평가와 이후의 과제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싸움을 지켜보면 대통령 선거이전과 대통령선거 이후가 다른 양상을 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87년 대통령선거 이전의 싸움은 주로 기존의 공개운동 단체인 카톨릭 농민회, 기독교 농민회 등에서 주도하는 소규모 단위의 싸움이었는데 반하여 대통령 선거이후인, 88년에는 자생적 낙우회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싸움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농민운동조직들이 전 농가의 40%를 차지하는 낙농육우농가의 포섭에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까지의 농민운동 단체의 조직활동이 요구별, 직능별 조직의 확산에 힘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생긴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기존 농민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기독교농민회나, 카톨릭농민회의 종교적 외피는 이제 여러층의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그 요구를 조직화하는데는 일정한 한계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존 농민운동조직의 분열상도 농민대중의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투쟁열의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있다. 기존의 농민운동의 조직역량은 대단히 미약한 편으로 전국의 1백39개군에서 농민운동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80여개군에 불과하며 조직원도 2만여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농민운동이 보다 많은 농민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농민운동의 종교적 외피를 벗고 분열을 극복하여 직능별, 요구별 농민조직의 건설에 힘을 기울여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민주노조 쟁취 싸움과 같이 자주적 농민회 건설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14] 두번째, 로는 이러한 조직역량의 확충에 힘입어 농협과 축협등 현재의 형식적 농민대표 기구의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관해서도 농협과 축협의 그 비민주성을 여실히 드러냈는데 축협의 예를 들어보면 축협은 농민들의 거센 항의와 수입개방에 대한 여론에 밀려 표면적으로는 수입개방, 쇠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수입개방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잇권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축협은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서도 정부에 「쇠고기 수입권의 축협관리」의 내용을 포함한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축협은 3월 18일 쇠고기 수입권을 축협에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고위층에 보고한 뒤 3월 24일 초도순시차 축협에 들린 윤근환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개방을 예견하여 이전에 소 도입을 하였던 여러 수입상사들은 벌써 외국의 공급업자— 일반 쇠고기—를 물색하고 있고 이것을 매개한 줄로서의 축협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소식도 듣게 된다.[15] 즉 축협은 겉으로는 농민을 대변하는 듯이 발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직형태나 정권과의 관련성속에서 농민의 이익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주적 농민회의 결성노력들을 결집하여 축협등 형식적으로 농민대표기구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수입개방 저지투쟁에서의 조직의 문제이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투쟁에 있어서 명확한 자기논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와 독점자본과의 모순을 한국민중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농민운동의 차원에서는 이것을 명확히 폭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기 논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농민들의 주장이 자칫 정부와 독점자본에 의해 장악된 오도된 언론을 통하여 농민들의 계급이기주의로 선전될 지 모른다는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농민운동 단체들도 모든 것을 현 정부의 비민주성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특수성과 중요성을 명확히 하여 농축산물 수입개방 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파행성과 종속성을 심화시키며 이의 결과는 소수의 독점자본 이외의 대다수 국민이 모두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맺 음 말

이상에서 우리는 수입개방이 우리 내부의 각 계급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와 또 수입개방에서의 최대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점자본은 수입개방에서 「민족적」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을 살펴볼 때 그들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민족적 행동까지도 서슴치 않고 행하며 그들이 「민족적」임을 내세우는 것은 다른 여타계층의 피해를 호도하거나, 민중의 자본에 대한 요구를 저지한 때 행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땅의 농민이 수입개방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임을 보았는데 이 피해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들 농민의 피폐와 몰락은 우리의 경제구조의 종속성을 가속화시키며 이에따라 소수재벌을 제외한 전국민이 직간접의 피해 대상이 됨을 보았다. 이글에서는 수입개방의 우리내부의 계급에서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수입개방을 민족적 문제로 모두 환원시킬 수 없듯이 계급적 문제로만 파악하려 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수입개방 문제는 그 내부에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수입개방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견해가 수입개방문제를 민족적 문제로 파악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듯하여 우리사회 내부에는 민족적 모순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계급적 이해득실의 차이가 존재하며 수입개방이 갖는 민족모순의 성격에서 현재 중첩되어 있는 독점자본의 허위의식을 분리해 내는 것이 수입개방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출발점이라 생각해서 쓴 글이면 결코 수입개방에서의 민족적인 성격을 간과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 이러한 시각속에서 볼 때에야 농민들의 수입개방 거부투쟁이 갖는 의의를 올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농민들의 투쟁이 농민계급의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수입개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우리내부의 계급간의 갈등의 심화, 그리고 경제구조에서의 파행성의 심화를 생각할 때 농민들의 투쟁은 농민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전체 국민— 독점자본을 제외한—의 이해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민들 이외의 부분에서는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독점자본에 의해 유포된 허위의식의 결과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대응에서 내부적으로는 보다 대중을 포괄할 수 있는 조직적틀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여기에만 멈추지 말고 수입개방의 공동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노동자, 도시빈민, 중소자본가들과의 공동대처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14) 「농민운동조직 무엇이 문제인가」『말』23호 88년5월호
15) 「쇠고기 수입권 명분 공방」『주간매경』 88.4.28

한·미통상 마찰과 한국경제의 과제

문 상 덕
(응용통계학과 4년)

목 차

Ⅰ. 머리말
Ⅱ. 한미통상마찰의 배경
Ⅲ. 종합무역법안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1. 종합무역법안의 주요내용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의 본질
Ⅳ. 한미통상마찰의 내용과 일본경제의 침투
  1. 한미통상마찰의 실상
  2. 수입개방에 따른 일본경제의 침투
Ⅴ. 통상마찰에 따른 우리의 대응자세
Ⅵ. 결 론

Ⅰ. 머 리 말

해방후 자기경제의 독자적 발전의 기틀속에 들어서게 된 한국경제는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해 민족자본의 토대위에 선 굳건한 자립경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해방후 한반도로 진출한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 국가에게 그의 자주적 발전의 틀을 맡기게 되었다.

신독립국가에 대한 온정적 원조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과잉생산물을 무상으로 원조하는것을 시발로 하여 제국주의의 자본[1] 은 서서히 한반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한국경제는 미국의 자본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에서 보기드문 고도성장을 기록하며[2] 농업후진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의 불균형 분배로 인한 빈부의 격심한 격차는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국내경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당면 과제는 굳건한 민족자본의 기반위에선 자립경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대미원조의 후광아래 성장하여 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외시키고서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논하기가 어려워졌고 지금도 상당부분 미국경제의 영향권아래 종속되어져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문제인 것이다.

수출액의 39.9%를, 그리고 수입액의 20.7%(86년도 기준) 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3] 미국경제의 위기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로 연결되어진다. 그런데 주목하여야 하는 사실은 오늘날 미국경제가 바로 위기국면속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끊임없는 재정적자과 무역적자— 이른바 쌍둥이적자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그들의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의 해결책으로 자국에게는 보호무역을 타국에게는 무역개방을 요구하는 불공정무역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한·미간의 통상마찰은 단순히 국제간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마찰로서만 여길 수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전개되어 지고 있는 한·미통상마찰은 미국경제의 내재적 문제점과 그에 따른 자국경제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변국가에 대한 무역적 압력이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통상마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면 (일국) 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되고 양국이 처해있는 경제적 특수상황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상황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갈등을 비교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우리는 한·미통상마찰을 총체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고찰하여야 하며 단순히 이 문제가 양국 정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생존권의 문제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통상회담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범국민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아래 한·미통상마찰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재가 위기의 상황인가를 먼저 검토하여 통상마찰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 후에 미국이 자국의 경제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무기로 삼고 있는 종합무역법안이란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보고 과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정책을 취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통상마찰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일본의 경제적 침투의 위협을 고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상마찰에 따른 우리의 대응자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Ⅱ. 한미통상마찰의 배경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는 실업이 증가하고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과 생산성 둔화 및 자원부족등의 양상을 띄게 되어 새로이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공급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급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 등장하게 되었다.[4]

1970년대를 접어들면서 미국경제도 외적으로는 일본과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패턴의 위협과 베트남 침략에서의 참패, 내적으로는 자본축적의 악화로 인한 설비투자의 감소, 가동율의 저하, 실업율의 증가, 인플레의 야기등의 불안을 갖게 되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탄생하게된 레이건 정권은 미국경제의 장기 불안 타결책으로써 세출의 대폭삭감과 감세, 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통화의 안정적 공급등을 주장하는 공급중시이론가(Supply-Siders)들의 논리를 받아들

* 87.1-88.5 까지의 일간지, 경제신문 2종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 과 국내 4개일간지(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를 바탕으로 하고 신동아 85년 1월호~88년 5월호까지 실린 경제논고를 참조하였다.

1) 전후세계경제의 재편성 과정과 관련하여 마샬계획(Marshall Shall)과 포인트 포계획(Point Fow Point)등에 의해 미국은 절름지구에 무상으로 원조를 하였다.

2) 1966년 12.7% 69년 13.8% 73년 14.1% 76년 14.1% 83년 95%의 고도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송병락「한국경제론」1988. 박영사.

3) 한국은행「경제통계연보」1987년.

4) 정운찬「거시경제학」법문사. 1986. p400.

여 이른바 '레이거 노믹스'[5]라는 경제재생계획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으로 미국은 일순간 달러가치를 회복시켜 값싼 외국제품의 수입을 촉진함으로써 인플레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레이거 노믹스하에서 고금리와 고달러는 국내적으로 미국경제를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고가게 되어 결국에는 전후 최대의 무역적자를 낳게 되었다.[6]

미국의 87년도 무역적자는 1월 1백 19억 달러, 2월 1백 44억 달러, 3월 1백 29억 달러, 4월 1백 30억 달러, 5월 1백 40억 달러, 6월 1백 57억 달러, 7월 1백 65억 달러 등 작년 미국의 총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1백억 달러 늘어난 1천 6백 50억 달러 수준이었다.[7] 올해들어서만도 1월에 1백 24억 달러, 2월에 1백 38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도 계속 불어나는 추세여서 작년말의 순대외채무는 4천억 달러를 육박하고 있다.[8] 또한 87년 회계년도(86년 10월~87년 9월)에 1천 4백 8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던 미국의 재정적자가 88회계년도에 1천 5백 80억 달러, 89회계년도에는 1천 7백 60억 달러로 재차 확대될 것이라고 미의회 회계국(CBO)이 전망했다.[9]

이렇듯 미국이 심각한 불안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레이거 노믹스의 실패로 인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달러가치 절하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증권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내경기 부양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인 미국의 입장에서 그동안 인플레 억제 달러화 하락방지라는 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금리인하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채택하는 대신 달러화 약세를 방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상황은 G 5회의 (서방 5개국 재무장관회의 : 85년 10월) 이후 달러 절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929년 대공황이래의 공황이을 것으로 우려될 상황에 이르렀다.[10] 실제로 "암흑의 일요일"이라 불린 87년 10월 14일의 미국의 주가 대폭락은 1929년 10월 28일 "블랙프라이데이"의 주가 하락폭 12.82%를 능가하는 22.62%가 되어 제2의 대공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었다.[11]

미국은 달러가치 절하와 아울러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 및 시장개방확대를 통해 미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자국의 시장에 대해선 수입억제 정책을 펴나가는 이른바 "람보 노믹스"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율정책이나 보호주의 정책으로는 미국이 안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해결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MIT대 폴. 사무엘슨 교수는 미경제의 치유책으로 보호주의나 환율정책보다 기술혁신을 강조하였고[12]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탠퍼드대학의 밀턴 프리드만 교수도 재정적자 문제보다 정부의 과다한 지출이 진정한 문제라고 보고 정부의 지출을 줄일 것을 강조하였다.[13]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통상법 301조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이렇듯 자국의 경제적 문제점들을 무역상대국 특히 일본이 아닌 한국과 대만에게 전가시키고 계속적인 자국의 경제적인 번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복무역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Ⅲ. 종합무역법안과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 경향

미상하양원 합동위원회는 4월 1일 과다대미흑자국에 대해 흑자규모를 매년 10%씩 축소시키도록 한 게퍼트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불공정 무역관행국에 대한 통상법 301조의 발동 권한과 제재조치 결정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미통상대표부(USTR)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무역법안에 합의하였다. 4월 21일에는 종합무역법안이 미하원 본회의에서 레이건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거듭되는 가운데 찬성 312, 반대 107로 통과되었고, 4월 27일에는 상원에서 찬성 63, 반대 36으로 의결되었다.

1. 종합무역법안의 주요내용

종합통상법안은 주로 자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규제를 통해 비교우위가 적은 국내사업을 보호하고 시장개방을 통해 비교우위가 큰 미국상품 및 서어비스를 수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적 무기이다.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의 조항으로 통상법 301조 (불공정 무역관행), 통상법 201조 (수입급증으로 인한 미국업체 피해 긴급규제), 관세 법 337조 (지적소유권 보호), 국제금융정책 및 환율정책 신설등이다.[14]

1) 통상법 301조 (불공정 무역관행)

이 보복조치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로 미국이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피해를 교역상대국에 가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수출품에 최고 1백%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15] 종전에는 불공정 무역관행국에 대한 통상법 301조의 발동권한과 제재조치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었지만, 이번 수정안으로 미통상 대표부(USTR)로 이전되었다. USTR은 매년 불공정 무역관행국을 지정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21일 이내에 조사·협력을 개시하여 비무역사항은 조사개시후 1년, 무역사항은 18개월 이내에 보복결정하고, 보복결정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301조에 의한 협상실패시에는 미국 (기업) 이 받는 피해에 상응한 보복조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301조의 발동대상으로 ①수출 양성국가(export-targeting Country) ②노동권 침해국가 ③시장접근 봉쇄국가를 추가하였다.

2) 통상법 201조 (수입급증으로 인한 미국업체 피해 긴급구제조치)

과잉수입에 따른 업계의 피해입증 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경제적 강화계획 및 실천약속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또한 이번 수정안에는 미국산업의 피해여부를 판정하는 요건에 ① 국내시장 점유율감소 ②제3국을 통한 대미우회수출 ③현존 연구개발 투자수준 유지곤란등을 추가 하였다. 국제무역위원회(ITC)[16]가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긴급한 상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의 구제조치를 의무화 하였다.

3) 관세법 337조 (지적소유권보호)

특허·상표등 지적소유권 피해 제소자의 피해입증책임을 면제해 주고 USTR은 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정도 및 이로인한 미국의 피해에 관한 연례적 조사를 실시해 이 조사에 따라 협상이 필요한 나라를 선정하여 301조

---

5) 구체적 내용으로 1) 사회보장 관계비, 일반행정비를 중심으로한 세출의 대폭삭감
2)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대폭삭감
3) 각종정부규제의 철폐
4) 억제된 수준의 안정적 통화공급
5) 대소의 군사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국방비 지출의 증대 등이다.

6) Asia·Africa·Latin America Research Institution. 「시장개방의 본질과 실태」 1988. 소나무
7) 매일경제신문 87.9.12
8) 조선 일보. 88.1.8
9) 매경 88.2.5
10) 동아일보 87.11.6
11) AARARI 「시장개방의 본질과 실태」 p17.
12) 매경 88.1.12
13) 매경 88.4.19
14) 한국은행 해외조사과 자료(88.4)
15) 매경 88.1.25.
16)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의 약자

에 의한 협상 및 보복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허권 소지자는 위반품목의 수입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4) 국제금융제도 및 환율제도신설

재무장관에게 대미 무역흑자국중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믿는 나라와 IMF 체제내 또는 개별적인 협상을 의무화하였고, 경제정책의 협조와 환율안정을 위해 다국간 공동협의를 지속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재무장관이 제3세계의 채무를 인수하여 채권화 할 수 있는 특별채무기금의 창설을 위한 관계국과의 협의 또는 채무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노력 의무를 부과하였다.

미국 금융기관에 국채인수 매매업무를 개발하지 않는 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정부증권의 Primary dealer 자금 박탈 및 신규인하를 금지 하였다.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7]

최근 한미통상관계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보험, 쇠고기, 담배협상에도 미측이 내세우는 위협수단은 바로 301조의 보복조치발동이다. 301조의 특징은 미국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고 보복대상에도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 301조에 근거를 두고 보복할 경우 제재대상은 상품교역분야의 대미진출이 활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어비스 부분에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대미수출비중이 큰 전자제품, 자동차등에 1백%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불공정무역관행을 규정한 301조에 비해 업계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재하고 있는 337조는 지난해 삼성반도체통신과 미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 사의 반도체 특허 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였다.[18]

또한, 현재 우리나라 대미수출상품 가운데는 특수강제품이 201조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 7월까지로 한정했던 규제기간이 89년 9월말까지로 연장됐다. 이와함께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대미무역흑자를 이유로 GSP[19] (일반특혜관세) 에서 제외시켰다.[20] 미국은 이 밖에 막대한 무역적자의 해소방안으로 올해 한국등 주요개도국에 대한 환율조정압력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일본이나 대만등에 비해 대미 환율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우리나라로서는 원화가 큰폭으로 절상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반덤핑제소 판결을 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의 본질

미국이 일반통상법안 특히 301조와 337조를 내세워 한국에 수입개방압력을 내세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있는 것 처럼 그들이 안고 있는 쌍둥이적자—즉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때문이다. 미국은 1970년대이후 특히 레이건 행정부이후로 생산력에 비하여 과도한 소비를 즐기느라고 저축과 자본축적을 게을리하여 제조업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새로운 투자의 상당부분이 군사장비의 생산과 새로운 첨단무기의 개발에 쓰여지고 있는 것도 국제경쟁력 약화의 한 이유이다.

미국은 자동차, 철강, 전자등의 산업에서는 일본에 고전하고 있으며, 섬유와 신발류산업등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제품에 고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산업의 쇠퇴가 심각한 정치문제로 까지 비화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수입규제와 무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라고 볼 수 있다.[21] 미국은 자국내의 이러한 정치문제를 해결하고, 지난 1981년부터 1970년대까지 누려 왔던 무역흑자를 다시금 회복하여 지난날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 무역정책의 변환을 가져야만 했다. 70년대이후 계속되어 온 무역적자의 폭을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인 무역정책을 모색하여야만 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자국내의 비교우위가 약한 상품에 대해선 무역상대국의 상품에 대해선 무역상대국의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무역상대국에게는 통상법 301조를 무기로 상대국의 시장개방압력을 강요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즉 자국에게는 보호무역을, 타국에게는 자유무역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미국이 이러한 무역정책을 기본적 골격으로 삼고 있지만 무역상대국에 대한 개방압력의 전략은 바뀌어 가고 있다.

5월초에 열렸던 서울의 대미무역실무회의에서 미국은 종래의 개별품목주의 협상방식을 탈피하고 앞으로는 전반적인 시장개방을 촉진할 통상정책차원의 문제들을 다루는 포괄적인 협상방식을 제의해 왔다. 이러한 포괄적인협상방식을 제시한 그들의 속셈은 종전의 무역협상이 필요 이상으로 중요한 양국간 마찰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협상방식을 제안한다는 그들의 제안과는 달리 오는 7월에 열리는 한미경제협력 의회에서의 미국측 협상자세가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 무역정책의 보다 빠른 자유화를 요구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22]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새 움직임은 지난 1월2일 미·캐자유무역협정 출범을 시범으로 하여 미국이 주요 교역상대국들을 개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자간 자유무역체결수단은 새로운 압력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23] 게다가 미국은 캐나다와 이스라엘과 맺은 2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NICS와 아세안 각 국과도 맺자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24]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경제의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한국에게 시장개방을 가속화시키는 압력수단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들어오는 상품을 규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수출을 크게 늘려 적자를 보전하려는 미국은 이를 위해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기구인 GATT[2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GATT

〈표1〉 미국의 대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내용

체결국 경 위	캐 나 다 88년 1월 2일 조인	멕 시 코 87년 11월 잠정협정조인	이 스 라 엘 85년 9월부터 발효
상 품 무 역	99년 이전까지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조인후 90일 이내에 섬유·철강·농산물 서어비스 지적 소유권등 분야별로 양국간 협의 개시	95년 1월1일까지 모든 상품의 관세 철폐, 이스라엘의 수출보조금 철폐
비관세 장 벽	수량제한등 모든 비관세 장벽의 삭감 또는 완화		농업부문 비관세 조치의 유치는 허용
서비스 분 야	내국인 대우		서어비스분야에 관한 규정은 구속력 없음

〈자료〉 한국경제신문 88.2.11

17) 조선일보 88.1.9을 중심으로

18) 86.2.7 텍사스 인트루사가 미관세법 337조에 의한 의거 DRAM특허 (9건) 침해사유로 일본 8개사와 한국의 삼성을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에 제소하였을때 ITC가 87.9.21에 삼성반도체 측과 컴퓨터등에 수입금지 명령조치를 내렸다. 이 사건은 미관세법「337」에 따른 특허 침해 시비 사상 최대규모의 사건이었다. 그후 삼성은 8천만불의 로얄티를 물고 수입금지 조치에서 풀렸다고 한다.

19)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약자

20) 미국이 연간 베풀고 있는 GSP수혜액은 1백39억달러인데 한국은 해마다 16%를 차지했다. 동아 88.1.29

21) 신동아〈수입개방에 관한 대담〉86년 10월호

22) 매경 88.5.4 사설「미통상정책의 변화 조짐과 우리의 대응」

23) 매경 88.2.9「미시장개방 압력이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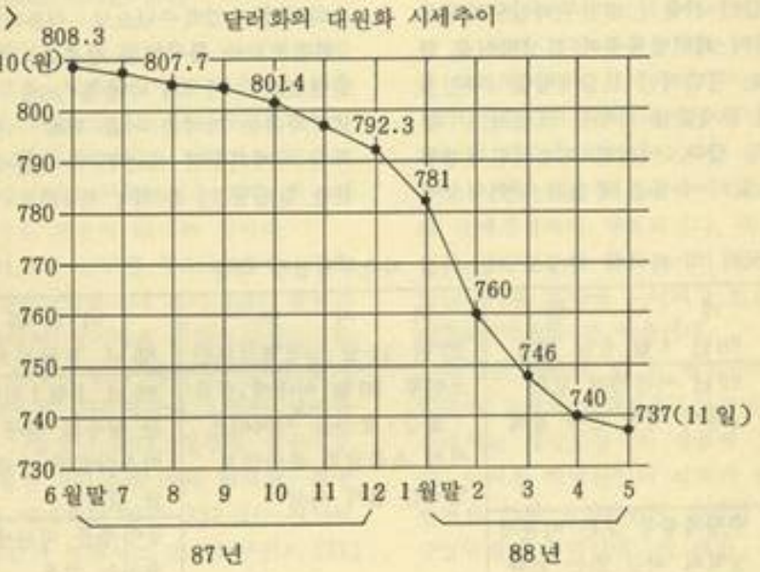
24) 매경 88.5.4「사설란」

25)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를 통해 미국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인하를 유도하고 비관세장벽도 철폐하자는 것이다.[26] 실제로 우리나라는 1월 22일에 통상압력을 완화하고 국내물자 안정 및 국내산업의 과보호정책을 고쳐나간다는 취지아래 금년중에 관세율체계를 전면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다.[27] 이러한 전반적인 미국의 무역정책은 비록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섣불리 채택할 경우 세계경제가 또다시 공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보고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28] 궁극적으로 자국의 엄청난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을 취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미국 상품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들 나라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리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301조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4월 21일 미하원을 통과하고 4월 27일 미상원을 통과한 종합무역법안이 미국 흑자국에 대해 흑자규모를 10%씩 줄이기로 한 「게파트 법안」을 제외한 대신에 통상법 301조의 무역보복 최종결정권을 대통령으로 부터 통상대표부(USTR)로 이전하고 보복조치를 대통령이 의무화하는 등의 수정을 가하고 또한 수입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규정조항인 201조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수입상대국에게는 통상법 301조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자국경제에 대해서는 337조와 201조와 같은 조항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등 미국은 자국경제의 문제점과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주변국가에 대해 무역적 압력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달러화의 대원화 시세추이



26) 매경 88.2.16
27) 중앙일보 88.1.22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산품의 관세율을 지금의 16.9%에서 절반수준인 8~9%로 크게 낮추고 수입품의 62%가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중심세율 역시 10%로 내리기로 했다. 최고율은 현재 100%인 것을 50%로 낮추고 공산품의 경우는 30%까지 낮출 방침이다.
28) 사실 미국은 1930년대 지나치게 보호무역주의를 취하여 대공황때 여타국보다 더욱 심하게 공황의 타격을 받았었다.

Ⅳ. 한미통상마찰의 내용과 일본경제의 침투

1. 한미통상마찰의 실상

먼저 3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5월 4일 폐막된 제8차 한미무역실무회의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보도록 하자. 이번 회의는 한 마디로 혹 떼려다 도리어 붙이고만 격인 지난 1월의 정인용 전부총리와 아이터 미통상대표부(USTR) 대표화의 협상결과처럼 일방적으로 굴복만 하다 끝낸 한미 무역회담이었다. 오는 11월 실시될 미국대통령선거를 불과 몇달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종합무역법안이 통과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미국측은 이 회담에 참가하였는데, 여기에서 이들이 제시한 주요내용을 보면, △광고회사의 지사설치허용, 광고대행업에 대한 제한철폐등 시장의 완전개방, 공산품관세율의 대폭인하 △맥주, 포도주관세인하 및 포도주수입 완전자유화 조기실시, △미판매 물질특허의 보호, △수입담배 가격인하 및 광고허용, △농산물 추가개방, △부가가치통신망(VAN)개방확대등 이었다.[29]

그러나 정부측 대표들은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양담배가격을 7월부터 700원으로 인하하고 포도주에 대해서는 완전 수입자유화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하는 등 거의 전면 그들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고 말았다.[30]

다음으로 회담상의 압력외에 현재 미국이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우리나라에게 가하고 있는 구체적인 통상압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은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에게 원화를 절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환율은 대통령선거와 총선이 끝난 2월에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5월 11일 현재 737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수준은 앞으로 연말까지 연간 절상율 16%선인 6백 8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런식으로 환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경우 수출액의 감소와 수입의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흑자 감소는 물론이고 그보다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2월 12일 중소기업은행이 종업원 50인이상 3백81개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31] 환율이 7백 30선까지 하락하면 95.5%가 채산성을[32] 잃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사실 730원대까지 떨어진 현재 수출에 의존해온 중소업체들의 도산사례는 이미 여러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로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체의 상당수가 이미 문을 닫았고 호황을 누려왔던 가방수출업체 가운데 5개업체가 원고충격을 이기지 못해 쓰러졌다. 세계업계도 채산성악화에 주문량까지 줄어드는 바람에 이미 20여개 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이른바 세계 일류화 추진상품으로 추진되어왔던 낚시대, 피아노, 안경태, 도자기 업체들도 이미 한계에 도달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중소기업의 도산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 될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33] 그러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계속적인 도산의 위기를 막기위하여 정부는 이제까지 수수방관만 하던 자세를 탈피,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불공정 무역거래의 보복조치로 7월부터 무역흑자국인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른바 아시아 NICS (신흥개발공업국) 4개국을 GSP (일반특혜관세) 대상

29) 매일경제신문 88.5.4
30) 이 밖에도 지적소유권 분야에 있어 전품목 (911)에 대해서도 보호해 주기로 했으며 공산품에 대해선 5년내 OECD (선진경제 협력기구) 수준까지 관세를 인하 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워터방식 고급외고기 수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31) 매경 88.2.12
32) 채산성 (採算性) : 수지가 맞고 안맞는 성질. Profit
33) 매일경제신문 88.4.28

〈표 3〉 각국별 예상수출 감소액(1986년도 실적기준)

〈단위=US 백만달러〉

구 분		한 국	대 만	홍 콩	싱가포르	합 계
대미총수출	(A)	12,729	19,791	8,891	5,257	46,668
GSP수혜수출	(B)	2,220	3,762	1,424	740	8,146
B / A	(%)	17.4	19.0	16.0	14.1	17.5
예상수출감소액	(C)	268	488	171	81	1,008
C / A	(%)	2.1	2.5	1.9	1.5	2.2

자료 : 매일경제신문 88.2.1

에서 완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34] 이로 인해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약 2억 7천만 달러(86년도 기준)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입개방압력이 우리 경제에 위협을 주는 요소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압력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현재 5월 4일 폐막된 제8차 한미실무회담을 통해 담배가격의 700선 인하, 쇠고기수입, 백주, 오렌지, 포도주의 수입개방등을 강력히 요구했고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적 개방요구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요구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에 관해서도 이번 회담에서 고급쇠고기 수입을 제외한 쿼터베이스방식[35]의 쇠고기수입을 재개할 것이라는 반응을 정부측으로 부터 받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바 이번 회담만 보더라도 미국의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은 이미 위험수준까지 도달했으며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농민들은 지난 1월 7·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앞에서 전국의 1백만 양축 농가를 대표하는 1백 58개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들이 모여 「쇠고기 수입반대 결의대회」를 가지고 어느때 보다도 규모가 큰 농민시위를 가졌었다. 또한 그 전날인 1월 6일에는 각도의 민주쟁취 농민위원회, 카톨릭 여성위원회, 전국농민협회, 카톨릭 농민회, 기독교 농민회 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최근 미국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그후 1월 18일에는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낙농민 연합주최로 1만여명의 농민이 모여 「쇠고기 수입저지 결의대회」를 가졌었다.[36]

이보다 앞서 12월에는 전국연초경작농민일동 명의로 "10만 연초경작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양담배 시장개방압력을 미국은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며[37] 한국 자유금융 노동조합연합산하 보험단 노동조합협의회도 1월 5일 성명을 발표, "허울좋은 자유무역주의의 미명아래 저질러 지고 있는 미국의 보험시장압력은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비춰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장개방압력의 철회를 촉구했었다.[38]

이처럼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중소기업의 몰락과 농민들의 생존권위협으로 그 본질을 들어내고 있다. 그렇기에 이 현안문제는 단순히 정부차원의 정치적 문제로써만 해결하기에는 이미 우리들의 살속을 깊숙히 파고 들어와 있으며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무역회담에 임하는 정부측의 자세가 전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34) 동아일보 88.4.5
35) 환할당제도(Quota System) : 특정상품의 수입에 관하여 그 수입대금 지불에 필요한 외환은 수입상대국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할당조정하는 수입할당제도를 말한다.
36) 신동아 「쇠고기 수입에 앓는 축산농가」 88.3
37) 조선일보 88.1.1
38) 조선일보 88.1.6

2. 수입개방에 따른 일본경제의 침투

미국의 시장개방압력과 더불어 우리가 주시해야되는 또 하나의 대상은 수입개방에 따른 일본경제의 침투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신보호무역주의를 택하게 된것도 일본의 5백억달러에 달하는 대미무역흑자로 인해 발생한 미국의 무역적자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재 NICS (신흥공업국)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의 화살은 일본이 맞아야 하는데, 화살을 대신 이들이 맞는 것이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미국의 전체무역적자중 3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국민경제는 ①미국의 시장개방압력 ②일본의 무역제국주의정책 ③국내의 일부경제관료들의 이에 대한 대응등의 3자 결합으로 1962년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39] 이러한 일본의 경제팽창 또한 우리가 미국의 무역정책과 아울러 오늘날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미무역의 미국측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개방의 결과가 일본상품의 대량침투로 나타나서 이부분의 한미무역의 미국측 적자는 거의 줄지 않고 한국만 이 부분에서 일본상품의 시장으로 되어버리고 있다. 참고로 84년도에 수입을 개방한 품목들의 나라별 국내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상품은 16%였고 일본상품은 44%였다.[39]

이런 구조위에서 만일 미국이 한미무역이 균형점에 달할때까지 개방압력을 가하고 한국정부의 경제관료들이 이에 순응하면 한미무역이 균형점에 도달하기 전에 한국은 완전히 일본의 상품시장으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이다.[40] 이처럼 일본의 무역팽창정책은 미국의 수입개방압력만큼이나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오늘날 자본주의경제권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장본인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정비하여 미국에 못지 않게 일본에 대한 경계의 태세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V. 통상마찰에 따른 우리의 대응자세

한국의 경제성장과 무역신장의 결과 발생한 한미간의 갈등, 미국내의 실업문제 및 국제수지 적자, 그리고 끊임없는 산업구조의 재편등

〈표 4〉 미국의 주요상대국별 무역수지동향

단위 : 억달러

	1985	1986
총 계	-1,485	-1,698
일 본	- 497	- 586
캐 나 다	- 222	- 233
E C	- 226	- 263
대 만	- 131	- 157
한 국	- 47	- 71

자료 : 한국은행 〈주간내외경제〉 제1306 p18

39) 신용하 (서울사회대 교수, 한국사회사) 「미국의 개방압력과 일본의 무역팽창정책」 신동아 86.1
39) 신용하, 앞의글
40) 신용하 「앞의글」

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와 개방압력으로 압축되는 한미 경제마찰은 결코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역사적이고 미래에도 계속되어질 현상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41]

한국경제의 발전은 1945년 해방이래 미국의 마샬정책에 의한 원조를 시작으로 미국의 자본과 더불어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선 5백억달러의 외채를 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그리 심하게 무역압력을 가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84년도 부터 우리나라가 무역흑자국으로 들어서고 미국도 생산성 둔화와 소비지출의 증가로 심하게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겪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무역흑자국에 대해 심하게 무역개방압력을 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자국경제에 대해서는 개도국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저임금 수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른바 신보호무역주의를 택하고 있다.[42]

무역개방압력과 신보호무역주의를 미국으로 하여금 택하게 만든 무역적자의 요인으로 미국내에서는 국내적요인과 국외적요인 두가지로 분석하고 있는 듯 하다.[43] 국내적으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 비능률적인 기업경영관리, 연구활동의 축소등으로 경쟁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흑자교역국의 정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수출지원과 수입규제등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강한 미국인들이 국내적 요인보다 국외적 요인을 중요시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려 한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미국은 자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무엘슨교수가 지적한 「기술진보」나, 프리드만교수가 지적한 「정부지출감소」보다는 대미흑자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시장개방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점은 신용하교수가 지적한 것 처럼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를 볼 때 「중진국」단계에서 민족자주성과 민족주체성을 발휘하여 국가이익을 잘 지키지못하면 「중진국」으로서 그냥 주저앉을 뿐만아니라 그 나라는 외국의 압력으로 외국의 상품시장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다.[44]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통상마찰문제는 우리가 해방후 계속되어온 종속경제로 머무느냐 아니면 자주경제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19세기 문호개방이 약소국의 비극이었다면 최근의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은 팍스 아메리카나(Pax-Americana)의 틀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미통상마찰을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시장개방압력을 대처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방압력이 아무리 드세고 개방의 거부나 지연으로 인한 당대의 고통이 아무리 큰것이라 해도 자립경제의 달성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라면 개방은 당연히 거부 또는 지연되어야만 하며 온국민이 고통을 함께해야 한다.[45] 는 말처럼 무엇보다도 통상압력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를 송두리째 말아먹는 수입개방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개방과 관련된 현재의 여러가지 정책을 자립경제의 달성이라는 장기적 목표로 전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대외적 자주성의 상실 즉 대외의존성의 심화는 한 경제가 자의든 타의든 간에 국제경제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도록 할 뿐만아니라 국제분업질서속에서 강대국의 논리인 이른바 비교우위에 따라 국내산업구조를 조정당하게 되어 한나라 경제의 대외적 균형이 깨지고 종국적으로는 성장잠재

41) 정운찬 (서울대사회과교수, 경제학) 「경제협력인가, 경제종속인가」신동아 86.7
42) 박영호 (한신대교수, 경제학) 「한국의 대미협상카드는 없는가」신동아 85.12
43) 곽승영 (미하워드대교수 경제학) 「미통상압력과 한국의 대응」한국경제신문 88.2.20
44) 진용하「앞의글」
45) 정운찬「경제협력인가 종속인가」신동아 86.9

력이 소진되기 때문이다.[46] 그리고 미국의 개방압력은 그들이 일본에게 가해야 하는 것을 한국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것이므로 굴복하지말고 버티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우리가 뚜렷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자본과 기술을 앞세운 일본의 상품이 대거침투하여 멀지않아 한국의 국내시장은 일본의 기업들에 의하여 점유당하고 말것이다. 원화절상으로 인하여 국외시장까지 위협받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국내시장마저 일본에게 장악되어 버린다면 그들이 서야 할곳은 대체 어디인지 암담할 따름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대기업의 기술수준으로는 일본 굴지의 기업들의 기술수준을 따라 잡을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기에 적어도 수입개방은 국내기업들의 기술수준이 일본의 기술수준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까지는 보류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엄청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의 철회를 모면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당장의 기술진보가 어렵다면 현재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생산재의 수입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등 새로운 차원에서의 무역정책을 세워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 만큼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식수준의 변화이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경제의 사정을 들어 수입개방철폐를 주장한다 할 지라도 흐르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를 역류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에 반드시 부분적이 될지, 아니면 최악의 사태—이것만큼은 국민이 단결하여 막아야 할 일이지만—인 전면적 개방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개방이 되어 수입품이 들어온다 할 지라도 이를 스스로 퇴치 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무엇보다 간직하여야 한다. 이번 통상마찰은 1962년이후 우리경제의 최대위기인 만큼 정부의 경제정책입안자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며 또한 그들의 힘만으로써는 해결할 수도 없다. 이번 통상마찰은 국민모두가 하나가 되어 조금씩 침투해 들어 오는 외국 상품과 맞서 의연히 싸워 나갈 때만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에 비록 외국상품과 비교하여 국내상품의 질이 떨어진다하여 그것들을 선호하기 보다는 장래의 한국경제를 생각하며 국산품을 애용하는 자세가 오늘날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하는 문제는 기술진보이다. 조금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것 처럼 결코 현재의 한국 기술수준은 비록 과거보다 많이 진보되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양대 거목인 미국과 일본의 수준에는 아직도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무역마찰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오늘날의 상대적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끊임없는 기술진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경제가 하여야 할 과제는 현재 미·일양국에 만 치중해 있는 무역구조를 탈피하여 유럽과 신흥개발국과의 교역을 넓힐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무역대책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이번 한미무역마찰이 이처럼 한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다 미·일 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때문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러한 무역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도 시급히 다각적인 교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날의 한미통상마찰을 직면하면서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과제는 또한 이제 까지 모든 논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과제는 민족경제수립여부 문제이다. 이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이래 한국경제는 자기의 독자적 발전의 길에 접어 들었지만, 그러나 불행히도 그간의 과정은 독자적 발전의 길이 국민경제의 자주·자립의 실현으로 민족경제의 확립을 이룩한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 유제는 청산되지 못했으며 그간의 경제성장과정은 잘못 설정된 경제개발 유형의 필연적 귀

46) 정운찬「앞의글」

결로 다른 형태로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었다.[47]

그러므로 오늘날의 모든 한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열쇠가 바로 민족경제의 수립여부이다.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가질 수 있을때 우리는 세계의 흐름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럼없이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자체에 잠재해 있는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 즉 기술개발, 산업구조의 개선, 농촌문제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Ⅵ. 결 론

이제까지 나는 오늘날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한미통상마찰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그러나 고찰기간이 보름남짓 불과하였기에 얼마만큼 한미통상마찰을 잘 이해하였는지 자못 부끄러울 따름이다. 경제학을 깊게 전공하지도 않은 나라로서는 관심하나로만 가지고 이번 주제에 대해 탐구한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는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한미간의 경제관계를 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과정, 한국경제의 구조, 미국과의 역사적 발전관계, 미국경제의 구조등 여러방면의 연구가 부분적으로가 아닌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에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한미통상마찰과 한국경제의 과제"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데에는 내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한미통상마찰이 너무나 절실한 우리의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본론 부분에서 여러번 말한 바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한미통상마찰은 우수한 경제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나 이를 책임지고 있는 정책입안자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한반도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문제를 직접 간접으로 직면하게 될 사람이고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번 한미통상마찰의 문제를 대학생의 시각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성을 느꼈으며 그러한 과정속에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졌었다.

고찰하는 과정속에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신문지상에는 나오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통상마찰의 문제를 너무 미국 한 곳에만 치중하여 본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통상마찰의 직접적인 대상은 미국인것 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각 일간지나 매스컴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 중요하고도 위협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속에 접어 두고 지내왔다.

그것은 언제라도 수입개방과 더불어 한반도로 경제적 침략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현해탄 건너 일본이라는 존재이다. 우리는 그 암울했던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해방된지 반세기,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해방이후 그리고 분단이후 한반도의 사회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게 일본의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9세기말 강화도 조약이후의 시대가 군사적인 침략의 시대였다면 오늘날의 일본의 침략은 문화적 특히 경제적 침투인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반미 반독재의 투쟁과정속에서 조금씩 우리를 잠식하여 들고 있는 일본이라는 제국주의를 너무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분명 한미통상마찰은 일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국과의 문제이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한미통상 마찰에 우리가 굴복할 경우 어부지리로 혜택을 보고 한국경제를 잠식해 들어갈 존재는 바로 일본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이번 한미통상마찰을 계기로 새롭게 인식하여 자주로 가는 길을 한 걸음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 본다. 또 하나 이번 고찰에서 느낀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미통상마찰이 분명 우리의 생존권을 파괴시키는 위협적인 존재일진데 이를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너무도 빈약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이 문제를 맞는 자세가 너무도 안이하고 편협적이다. 지금도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원고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 없이 도산되어 가고 있고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곧 수입될 지도 모르는 농산물로 인해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고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신문에 실린 몇몇 경제학자들의 안타까워 하는 투고와 도서관 앞에 붙여 있는 대자보가 전부이다. 이를 대처하는 정부나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권유지와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이 현안문제를 과소평가하여 국민의 고통은 어떤 것이든 아랑곳 없이 그저 조용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리 하여서는 결코 엄청난 세계경제의 거목인 미국과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의 압력과 침투를 막을 수는 없다. 만약 압력과 침투가 100% 우리에게 가해진다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것은 불을 보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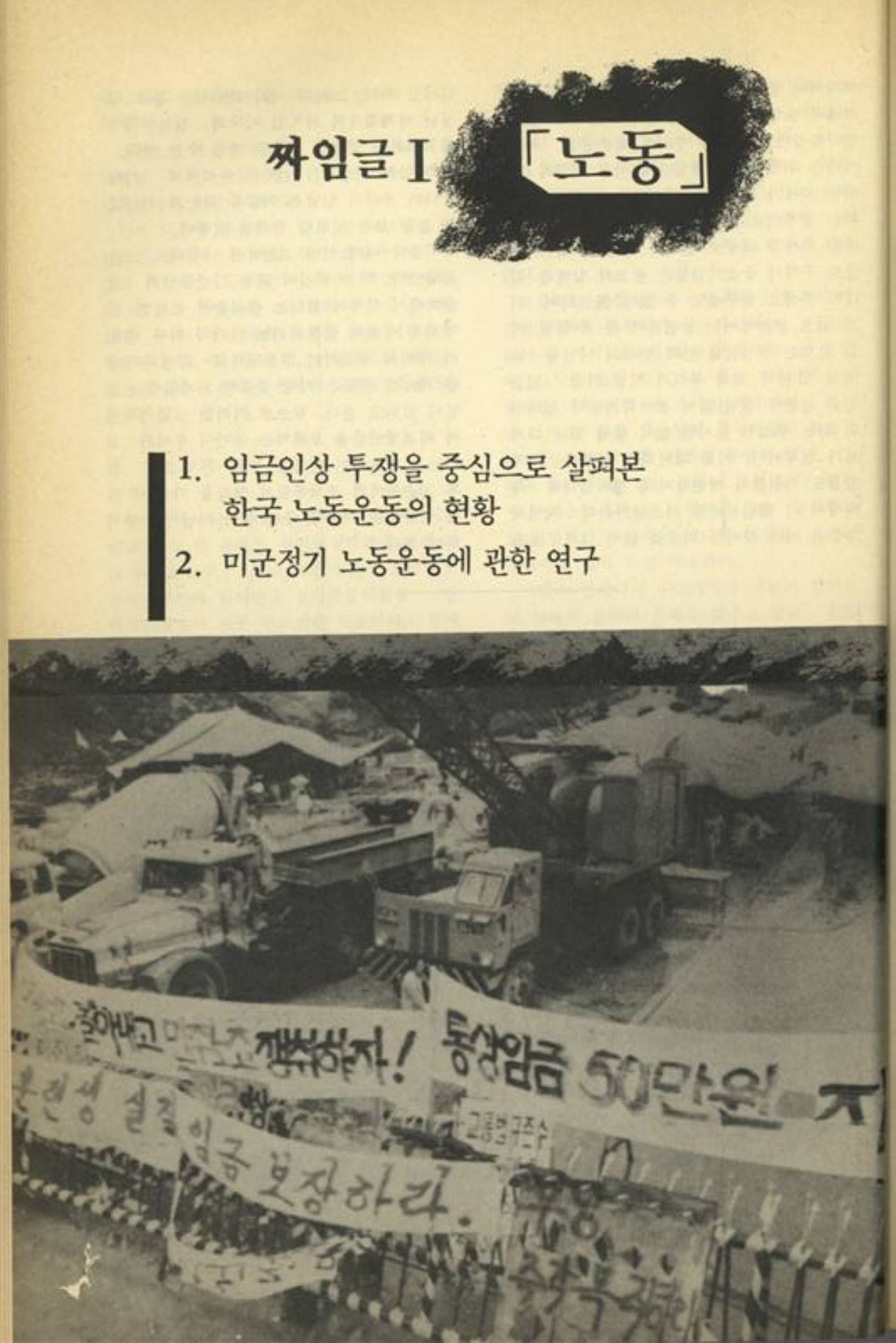
이상이 내가 이번 고찰에서 나름대로 느낀 점이었다. 비록 이것이 짧은 기간동안의 고찰속에서 이루어 졌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분명하게 새로이 일본이라는 나라와 이와 아울러 우리의 종합적인 대응자세를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 만큼은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다. 끝으로 이러한 인식속에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고 계속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으며 이후 자손들에게 조국통일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해 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여 본다.

---

47) 조용범「한국경제의 논리」의 서문중에서 전예원(1981)

짜임글 I 「노동」

1. 임금인상 투쟁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 노동운동의 현황
2. 미군정기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인상 투쟁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 노동운동의 현황

조 용 욱
(경제학과 88년졸업)

목 차

Ⅰ. 머리말
Ⅱ. 한국의 경제 현실과 그 특수성
  1. 한국자본의 축적과정
  2. 한국경제의 식민적 구조
Ⅲ. 현하 임금인상투쟁의 배경과 조건
  1. 자본주의하 노동문제의 발생
  2. 임금인상 투쟁의 객관적 조건
  3. 임금인상 투쟁의 주체적 조건
Ⅳ. 임금인상 투쟁의 진로
  1. 임금인상 투쟁의 의의
  2. 임금인상 투쟁의 진로
Ⅴ. 맺음말

Ⅰ. 머 리 말

1987년 여름의 3개월 동안 '노동자대투쟁'은 "이땅,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하는 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 그것은 바로 이 세계를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노동과 생산이라는 것이었고 이의 담당자인 노동자들의 무서운 힘이었다. 20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3개월 동안의 전국 각지에서의 파업투쟁은 6.25이후 자본가와 정권에 의해 빼앗겨 있었던'' 노동자의 단결권을 힘차게 되찾았던 쾌거였다. 이를 계기로 이후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중심으로하는 투쟁은 88년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활발히 진행중이다. 드디어 현장에서의 활발한 노동운동이 대중적 지반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 생성이후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는 원칙은 "토지와 산업의 사유화"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이다.[2]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자본가에게 큰 이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필

1) 김윤환, 머리말 중에서 『한국노동운동사 I 』, (청사, 1981)
2) 포스터, 정동철 옮김, 『세계 노동 운동사 I 』, (백산서당, 1986), 31쪽

요해 왔으며, 또한 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하면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자본축적의 관건이 되어왔다. 이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 왔다. 생산의 주체이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자본가에게 뺏기게 된 노동자들은 힘센 자본가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찾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노동자들의 단결로 나타났다. 초기자본주의 시대에는 소수 숙련노동자들 중심의 배타적인 성격의 직업별 노동조합 결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산업혁명이후 여성·청년·화이트칼라층까지 포함한 비숙련노동자들이 참가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발전해 왔다.[3] 또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임금인상 등의 요구를 들러싼 초기의 비조직적인 파업투쟁부터 시작하여 이후 다른 정치적인 투쟁으로까지 영역을 넓혀왔다.[4] 이러한 흐름은 생산의 담당자이며 노동의 주체인, 그래서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가 노동의 댓가를 충분히 보상받으며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려는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 11월의 어느날, 한 노동자가 죽어 가면서 부르짖었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의 외침[5]은 과연 이땅에서 해결된 문제들인가? 또한 이러한 노동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과연 얼마만큼 보장되어 있는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어가는 자본가들의 노동정책에 맞서 임금인상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현장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떤 조건속에서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일제식민지와 8.15를 겪고난 이후 한국경제의 왜곡된 식민적 성격의 자본축적 과정은 노동문제에 어떻게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물음들이 중심적 과제로 되면서 전개될 것이다.

Ⅱ. 한국의 경제현실과 그 특수성

한 사회내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들에 대한 구조적 파악은, 그 사회내의 자본대 임노동이라는 기본관계 속에서, "한 사회가 어떠한 내적 구조를 가지고 다른 국가사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운동해 나가고 있는가?"[6]하는 사실이 중요하다. 즉, 특정 생산양식도 그 발전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로 상이한 발전의 단계를 경험하게되며, 이는 동일한 생산양식하에서도 각 사회에 따라 여러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사회의 특수성으로 자리잡게 되는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1876년의 개항이후 전개되어 온 한국의 자본의형성, 축적의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오늘날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것에 의해서 가중되는 오늘날 한국노동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자본의 축적과정

1876년 개항이후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된 이후 초기(일제하) 한국의 자본축적과정은 일본독점자본의 식민지 수탈 메카니즘에 규정을 받는 왜곡된 길을 걸었다. 일제의 한국수탈 메카니즘에 따른 일제하의 총독부 권력기구를 통한 한국민중들에 대한 세금, 공출 등을 통한 가혹한 수탈은 당시 한국자본주의의 물적기반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었으며[7]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정착하게 되는 1930년대[8] 이후에도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지주·소작관계의 반봉건적 생산관계가 일제의 식민지 수탈요구에 맞물려 광범위하게 유지·온존된다.

8.15이후 일제가 물러가자 곧 한국사회를 장악한 미국은 2차대전 이후의 변화해 가는 세계전략에 맞추어 한국사회를 규정해 나갔다. 한반도에서의 변화보다는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두는 것이 우선이었던 미국의 정책은 미군정에 의해 실시된 귀속재산불하, 농지개혁의 과정을 낡은 일제식민지 유제의 청산속에서자생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가 아닌 일제식민지자본주의의 미청산, 지주·소작관계의 미청산의 과정으로 진행시켜 버리게 된다. 또한 미국의 원조는 농지개혁의 실패·적산불하 과정과 맞물려 한국경제를 대일종속구조에서 대미종속적인 구조로 정착 시키게 된다. 원조는 물질적 기초가 취약하면서도 일제하때부터 8.15이후까지 그대로 유지 존속되어 기본적으로 민중을 수탈·억압하는 기능을 바꾸지 않은 국가기구를 뒷받침 하면서 친일지주에서 변신한 매판자본가의 강력한 자본축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9] 미군이 한국에 진주한 후 3개월 동안 내린 결정들이 전후 남한의 기본적 정치·경제구조를 형성하게했다[10]는 사실은 위의 귀속재산불하과정, 농지개혁의 실패등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구조가 50년대를 관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47년 남한 정권 수립 이후 계속된 귀속재산불하를 통해 생산시설을 특혜적으로 부여 받으며, 반민중적 친미매판자본은 원조물자의 판매결과 형성된 대충자금으로부터 낮은 금리의 특혜융자를 얻어내어 자신을 살찌워 나갔다. 동시에 미 잉여농산물 도입, 인플레에 따른 저농산물 가격정책등이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50년대의 자본축적은 진행된다.

그리하여 한국의 독점자본은 그 형성기에서부터 미국제국주의의 한국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예속적 성격의 자본을 형성해 나갈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각종 특혜의 조성속에서 이승만정권과의 철저한 결탁속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정상(政商)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었다.

1960년 4.19를 통해 민중들은 "종속적 국민경제의 탈피와 국민경제의 자립달성"을 외쳤으나,[11] 이후 5.16구데타 세력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발사업은 민중들의 자립경제 달성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다. 원조물자의 배분과 귀속재산의 불하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취약한 토대일 수 밖에 없었던 50년대의 자본은, 60.70년대의 막대한 외자와 정책금융의 특혜적 배분에 의해 독점자본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식민지적 자본의 성격을 더 심화시켜 나가게 된다.[12] 60년대의 막대한 외자도입에 의한 정유, 비료, 석유, 화학등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70년대의 해외건설 사업, 중화학 공업 국내 유치 등은 남한의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자, 정책금융에 의해 가능했던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가 확립되고, 이는 자본의 식민지적 성격을 고착시키게 된다. 그리고 45년이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왔던 저농산물 가격정책과, 탈농화된 사람들로 계속 쌓여온 산업예비군의 형

3) 인천공실위,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진』, (거름, 1988), 215쪽
4) 편집부 엮음 「노동조합·노동조합주의」 『사회과학사전』, (사계절, 1986) 243~246쪽
5) 자세한 내용은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눈빛계, 1983)
6) 장상환,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와 성격」, 『현단계 1집』, (한울, 1987), 113쪽
7) 장상환, 앞의글, 124~125쪽
8) 1920년대의 일제하의 교역관계가 주로 미곡수출·경공업제품의 수입으로 특징지워지던데 반하여 1930년대에 들어서서 일제의 중화학 공업의 필요성은 조선에서의 일정정도의 자본주의화의 필요성을 낳게 되었으며, 이에 일본의 산업자본이 유입하게 되고, 1920년대의 탈농화되고 있던 농민들의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존재는 1930년대 자본주의화의 토대가 되었다.
9) 원래 원조라는 것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이윤착취와는 모순되는 듯이 보이나, 우호적인 정권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신생국이 비자본주의적 길을 걷는 것을 막으면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중심세력을 만들면서, 신생국에 대한 경제적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10) 브루스 커밍스, 김주환역 『한국전쟁의 기원 I』, (청사, 1986), 231쪽
11) 김성환, 「4.19혁명의 구조와 종합적 평가」, 『1960년대』, (거름, 1984), 55쪽
12) 이현우, 「한국사회구성체의 성격에 관한 일 연구」, 『현단계 1집』, (한울, 1987), 215쪽

성은 노동의 가격을 계속 싸게 유지시켰으며 여기서 파생하는 부의 재분배상의 불균등 심화현상은 한국경제의 식민지적 성격과 함께 구조적 문제를 이루고 있다.

2. 한국경제의 식민적 구조

한 사회경제구조에서의 식민지성이라고 했을때 가장 큰 특징은 '한 사회안에서 실현된 경제 잉여가 다른 사회로 누출되는 것'이다.[13] 자본축적 과정에서 일제하의 자본의 종속적 성격이 완전히 극복되어 지지 못하고, 8.15 이후 곧바로 대미경제에로 종속된 한국 경제는 현재 다국적기업을 통한 직접적 경제잉여의 유출 현상은 심각하지 않고,[14] 가장 보편적인 잉여유출기구는 무역을 통한 부등가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외채무의 많은 양[15]은 한국경제를 계속 외국과의 수출입 무역에 매달리게 만들며, 한국경제를 민족자립경제의 달성과 소득재분배의 민주화의 과제보다는 수출증가에만 주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70년대에 주력했던 중화학공업 건설의 기치 역시 표면에 내 걸었었던 '자립경제'를 위한 생산재공업의 확립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 가공적인 중화학 수출공업의 확립이 의도 되었던 것이다[16].

대외종속형 경제구조는 재생산 과정에서 한 사회의 국민경제를 자기 완결적인 합리적 구조를 갖기 힘들게 만든다. 국내자본은 항상 외국자본에 의한 초과이윤실현의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국내의 값싼 노동력과 농업부문에서의 정체성을 강요, 계속적으로 탈농화 계층을 만들어 내며 이들은 저소득 불완전 취업군을 형성 하면서 저임금에 대한 식민적 자본의 요구를 받아 들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식민지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한국자본은 본래의 축적과정에서부터 종속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외국자본의 초과이윤보장을 위해 무역중심의 경제구조를 채택하고, 수출을 위해 저임금, 저농산물 가격정책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Ⅲ. 현하 인금인상 투쟁의 배경과 조건

1. 자본주의하 노동문제의 발생

자본주의 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자본대 임금노동의 관계이다. 즉 노동력의 상품으로서의 가치와, 이의 매매를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과, 이에 파생하는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는 자본가의 목적이 그 기본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17] 이 기본적인 관계는 노동자가 상품(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아서 생산활동을 벌이게 되고, 화폐(임금)를 획득하여 다시 상품[18]을 구입하기까지의 과정이 되풀이 되는데 이 순환과정에서 각기의 노동문제들은 발생하게 된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노동문제는 「임금문제」이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 잉여의 몫을 자본가와 노동자가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산활동 과정에서의 중요한 노동문제로는 노동시간, 노동강도, 작업환경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노동력은 물론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거래되는 일종의 상품이지만 일반상품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동력을 그 판매자인 노동자로부터 분리 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계약분 만큼의 자신의 상품(노동력)이외에 노동자의 육체·정신이 항상 동반하게 되며, 자본가에 의한 '부적당한 상품소비[19]'는 노동력의 원천인 노동자 자신에게는 중대한 위험이 될 수 밖에 없다. 노동시간의 초과연장, 무리한 강도의 노동 등은 '부불노동'의 폭을 확장시키는 문제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작업환경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 나쁜 작업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 질병으로부터 위험은 노동력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생의 문제인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의 일반을 살펴 보았다. 다음절에서는 한국노동문제의 구체적 상황, 이를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려는 구체적 조건들에 대해 살펴 보겠다.

2. 임금인상투쟁의 객관적 조건

(1) 저임금 구조

임금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노동력 가치규정의 측면에 있어서 노동력의 창출과정이 어떤 경로를 밟아 왔는가 하는 것이다.[20] 세계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면서 묵묵히 저임금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창출되었는가? 그것은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해방후 농지개혁의 실패, 45년 이후 계속 고수되고 있는 저농산물 가격정책 등에서 그 계기를 찾을 수 있다. 노동의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많은 잠재적 과잉인구의 상존은 위의 농지개혁실패, 저곡가 정책에 의한 농촌내 빈곤탈피를 위한 탈농화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소작농, 영세농, 젊은 남녀 등은 언제나 산업노동자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농촌의 절대적 빈곤에 의해 도시에서도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극히 낮은 임금에도 고용되는 것이다.

또한 저농산물정책에 의해 탈농화하여 노동자화한 사람들의 저임금 구조를 뒷받침 하는것 또한 최저생계비 저하 역할을 하는 저농산물가격정책이다.

최근 경제기획원 조사를 보면 10인이상 제조업체 노동자의 53%가 한달평균 2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이며 14만원 이하도 26%가 넘는다. 특히 극심한 저임수준인 1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도 3.3%를 기록하고 있다.[21] 그리고 이 자료가 10인이상 고용제조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삼았으므로, 10인미만의 초영세규모 사업장에서의 수준은 이보다 훨씬 열악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제조업 부문이외의 각종 서비스업이 급증하면서 여성·연소노동자의 지속적 증가, 불완전 취업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평균임금 수준은 훨씬 하락하게 된다.

---

13) 박현채, 「한국노동문제의 정치경제학」, 『한국노동운동론Ⅰ』, (미래사, 1985), 68쪽
14) 그러나 1981년 이후 외국기업 혹은 외국인의 직접적 투자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다.
15) 최근 35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이를 갚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열심히 '수출'이라는 절대명제를 위해 고군분투 해야 할 것이다.
16) 박현채, 앞의글, 62쪽
17) 현대경제연구회편 『정치경제학 세미나』, (세계, 1985), 29~30쪽
18) 노동자의 노동력이 아니라 소비에 필요한 물품 즉, 새로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품
19) 무리한 노동강도, 계약분 이외의 초과 노동 등
20) 윤경호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와 고용 실태」, 『연세 22』, 48쪽
21)

임 금	근로자 수 (천명)	구 성 비 (%)
10만원미만	76	3.3
10 ~ 12만원	199	8.8
12 ~ 14만원	319	14.1
14 ~ 16만원	277	12.2
16 ~ 20만원	333	14.7
20 ~ 30만원	509	22.4
30만원이상	554	24.5
계	2,267	100.0

〈임금별 근로자 분포〉
(10인 이상 제조업체 대상)

※ 5월9일 경제기획원 발표 자료

초저임 수준을 없애겠다는 취지아래, 최저임금법 10조1항 규정에 따라 노동부가 1987년 12월 31일 고시한, 1988년 한해동안의 임금 최하한선[22]은 식료품 섬유·의복등 12개 업종에 대해서 하루 8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일급 3,700원, 중화학공업 업종 중심으로 하루 8시간 노동기준 일급 3,900원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급 3,700 ~ 3,900원 수준의 임금 하한선이 작년 대통령 선거이후의 극심한 인플레에 의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생계비 수준을 얼마나 따라 잡을 수 있겠는가? 이미 86년도에 조사된 한국기독교노동자연맹 산출의 이론최저생계비 수준은, 1인독신 남·녀 각각 하루 6,800원과 6,5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년동안의 생계비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1인독신 생활비는 월평균 최저로 2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합한 가구당 최저생계비 수준은 두배이상 오를 수 밖에 없다.

위와같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과반수에 달하는 현실[23]은 생계를 위해 가족들을 불완전, 저소득 취업으로 내몰게 되고, 작업시간·작업강도면에 있어서 세계제일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심한 직종간 학력간 임금격차의 심화현상은 대다수 생산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더욱 악화시켜면서 소득재분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24]

(2) 임금인상 투쟁에 대한 자본가와 정부의 대응

60년대 이후부터 차관도입을 통한 정부주도하의 수출주도 경제속에 살찌어온 한국 독점자본과 한국정권의 기본적 속성은 서로에 기반해서 상호이익을 추구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농민들에 대한 억압·수탈을 이익창출의 원천으로 구조화 해 온 것이다. 즉 한국자본의 식민적 성격은 국내의 저임금 구조를 강요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정치자금을 대가로 국내 정권은 독점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며[25] 동시에 독점자본가에게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을 비롯한 노동운동에 대해 제반의 탄압책을 시행한다.

이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동원해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조직의 건설을 막아내려고 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의 전통은 산업별노조(이하 산별노조)였다. 해방직후 건설되었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라는 노조는 당시 절대다수의 노동자 들에 의해 결성되었던 산별노조였다.[26] 그러나 이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 당했으며, 1953년 6.25 기간 중에 제정된 노동법은 일본것을 모방하여 조직형태는 기업별노조 중심으로 정하였다.[27] 5.16이후 산별노조가 다시 인정을 받았으나 박정희 정권하에서 철저히 어용화하였으며, 73년 긴급조치에 의해 노동조합법을 개정, 어용화마저 모자라 단체협약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박탈해 버린다.

산별노조에 비하여 기업별 노조는 노조의 단위가 개별 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마저 개별기업 차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은 고립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는 소규모성속에 노조간부와 회사간부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노사협조주의에 빠지는 경향도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산별 노조의 실질적 불인정은 규모가 크고 힘센 독점자본에 대항할 때 필요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공동투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87년11월 개정노동법을 발표하여 기업별 노동조합만을 인정하고 있던 노동조합법 제13조 1항이 삭제 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직종별 노조를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는 우선 노총이나 산별노련[28]에 가입하지 않고는 신고증이 나오지 않게 되어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등에 의해 산별노련이나 노총이 허락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마음대로 지역별·업종별·산업별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는 '조직이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사업장내에서의 어용노조의 보호와 민주노조의 출현을 막아내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러한 교묘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악덕자본가들의 노조파괴 공작도 치열하다.

작년 7월이후 계속되고 있는 울산현대엔진 민주노조에 대한 현대그룹과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 백스테크사의 두차례에 걸친 위장폐업 사건, 구미의 계림요업, 성남의 월드 아트사, 부평 한독금속 등 기업의 위장폐업 그리고 구로의 오트론전자, 대원전기등 기업의 농성노동자 들에 대한 구사대 깡패의 폭력 등[29]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생생한 실례들이다.

이와같이 자본가들은 자기들끼리는 임금인상, 물가조정,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전국경제인 총 연합회〉〈한국경영자 총협회〉〈대한 상공회의소〉 등의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해 가고 있으면서[30] 노동자들의 민주적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탄압과 회유로 맞서고 있다.

3. 임금인상투쟁의 주체적 조건

"88년 들어서 5월10일 현재 노동쟁의 발생건수는 700건, 이중 해결된 것이 621건 진행중인 것이 79건 노사분규로 아예 폐업해 버린 것이 5건이다. "이는 5월중순 어느일간지 기사내용이다.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때 엄청난 양적성장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이와같은 활발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 투쟁 이외에도 민주노조 건설, 노조협의회 건설 지역노조 설립등 노동자 투쟁의 기초가 되는 조직작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최근의 두드러진 주체적 조건의 조직적 측면의 향상으로는 ① 산업별·직종별 지역노조의 설립, ② 지역별, 업종별 그룹계열사간 노조협의체의 구성을 들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있던 수공업적이고 정치적 영향력이 적었던 기존의 60,70년대 노동운동을 탈피, 도약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업별, 직종별 지역노조 설립의 움직임은 〈청계피복노조〉가 최근 완화된 지역노조 설립요건에 맞추어 합법성을 되찾았으며 〈서울제화공노조〉〈부산혁공노조〉〈성남제화공 노조〉가 각각 최근에 설립되었다. 또한 을지로 일대의 인쇄공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인쇄노조〉가 지난 1월17일 설립되었다.

그리고 광범위한 노조협의체의 구성은 지난

22) 최저임금법 시행령 2조 적용범위에 보면 '10인이상 제조업체 근로자'에 한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0만원 미만의 초 저임금 수준에 놓여있는 곳이 많은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력이 없다.
23) 주 21) 참조.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노동자의 70%이상이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못미쳐 임금을 받고 있다.
24) 신유식, 「한국의 저임금구조와 임금실태」, 『상경논총35』, 70쪽
25) 한국에서의 정경유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정치자금공여와 특혜제공의 형태인 것이다.
26) 김학준 『한국 노동운동사 - 해방후편 - 』, (청사, 1982), 54~55쪽
전평은 광산노조를 비롯한 전국적 규모의 10여개 산별노조가 모여 결성 되었다.
27) 산별노조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이고 가장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형태이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기업별 노조란 찾아보기 힘들다.
28) 산별노조와는 다르며, 섬유노련 광산노련, 금융노련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어용적 성격이 강하며 실권은 없다.
29)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편, 『기사연리포트6』, (민중사, 1988), 69~83쪽
30) 인천공업지역 연합, 앞의책, 226쪽

해 7,8,9월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4일의 〈마산 창원지역 노동조합총연합회〉의 구성을 필두로 다른 지역에서도 속속 건설되어 가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등 덕스테크 위장폐업철회 연대 투쟁을 벌였던 노조들이 중심이 되어 5월 29일 〈서울노조협의회〉가 발족했으며, 인천지역에서도 지난 3월의 한독금속 파업투쟁에 대한 회사측의 탄압에 맞서 공동투쟁을 벌였던 노조들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노조협의회 준비위〉가 결성되어 있다. 이 세 단체의 특징은 조직의 결성 과정이 모두 함께 연대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노동운동에 있어서 단위노조의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고 노조의 조직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조직들은 실천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연대와 통일의 틀을 모색해 내야 한다는 명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조직적 측면과 함께, 두드러진 주체적 조건의 변화된 모습은 노동자 투쟁의 대중적 기반의 확산이다.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연합 문화제, 노동조합 연합대중집회 등에 대한 노동자들과 노동자가족들까지의 열띤 호응의 분위기, 그리고 임금인상투쟁을 중심으로한 노동투쟁의 급속한 확산등은 노동자 이야기만 꺼내어도 '불순세력' 이라고 규정해 버리곤 하던 자본가들의 논리를 많이 극복해 낸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라는 객관적 사회관계 속에서의 위치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노동자 계급의식을 획득하는 것이 몇번의 파업농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이러한 작은 투쟁들의 경험속에서 역사관과 계급의식은 획득되어진다는 사실을 작년 7,8,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진행된 주체적 조건의 변화속에서 알 수 있다.

Ⅳ. 임금인상 투쟁의 진로

1. 임금인상투쟁의 의의

임금은 자본가와 노동자에게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이윤획득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31] 즉 자본가는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이윤을 획득하게 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질수록 풍요해 질 수 있다. 이런 모순되는 관계는 자본주의 제도의 기본조건이므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는 임금을 사이에 두고 항상 투쟁하게 되는 것이다.[32]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상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는 항상 자본가가 임금수준결정시 우위에 있게 만들었다. 이는, 노동력은 여러사람에게서 나오는데 반하여, 자본은 한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강력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구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자본가들과 싸울 수 밖에 없었다.[33] 임금인상투쟁의 가장 큰 의의가 여기에 있다. 노동자들은 수많은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결투쟁"이라는 것이 가장 훌륭한 무기라는 것을 임금인상투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직접 임금인상투쟁을 한번 해 봄으로써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주장인 '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해서 안된다' '임금상승폭이 이만큼되면 회사는 망한다'는 등의 논리에 대한 한국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본자와 노동자의 대립의 산물로서 발생하는 제반의 노동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단결 투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체득하게 된다. 임금인상 투쟁은 "후진적인 노동자층은 경제적 요구를 통해 비로소 파업 투쟁에 참가하게 된다"[34]는 명제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임금인상 투쟁의 승리를 통하여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활을 이전보다 훨씬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고 자신과 가족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임금쟁취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어쩌면 결과로서 획득되어 지는 임금의 상승은 임금인상투쟁의 가장 큰 동기가 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임금인상투쟁의 진로

(1) 최저생계비를 쟁취하자!

한국노총은 지난 1월 6일 올해 임금 인상율을 87년 최저생계비의 올해 상승율 12.5%와 87년 추정 전산업노동생산성 증가율 12.3%, 소비자 물가 상승율 4.5%를 합쳐 29.3% 인상으로 발표하였으며,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적정임금 인상율을 7.5~8.5%선이라고 발표하였다.[35] 이는 양자간에 무려 20%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노총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임금인상 폭은 올해 들어 와서의 극심한 인플레를 고려 한다면 실질임금상승분은 87년 추정 전산업 노동생산성 12.3%에 훨씬 못미치는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최저생계비는 이땅의 주인인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져야 하며, 또한 노동자들에 의해 기필코 쟁취되어야 할 과제이다.

(2) 연대의 틀을 강화하자!

올해 벽두 덕스테크사의 위장폐업에 맞선 연대투쟁의 경험은 연대투쟁의 위력과 함께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 주었다. 특히 최근 악랄해 지고 있는 자본가 들의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 위장폐업등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 강한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해 지게 되었다. 최근 연대틀의 모색은 파업농성지지 연대투쟁과 함께 연대조직의 결성으로 나아 가고 있다. 앞서 나왔던 〈마창노련〉 〈서노협〉 〈인노협 준비위〉 등의 결성은 협의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후 연대조직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산업별, 지역별, 업종별 연대조직, 대중조직별 정치조직별, 지원조직별로의 다양하고 치밀한 연대조직의 모색에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금인상투쟁은 연대틀 모색에 좋은 매개물이 된다. 거의모든 노동자, 노동조합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이며, 또한 적정한 임금인상 요구선의 협의, 투쟁시기, 투쟁방법의공유등에 대한 상호간의 공동보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낮은 차원에서라도 연대의 틀은 형성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연대투쟁의 조직적 틀의 확보속에서는 각자 개별투쟁에 대한 상호간의 지원형태가 아니라 공동의 노동문제 나아가 노동문제를 야기하는 사회구조의 정치적 변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3) 정치교육을 일상화 하자!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상 아무리 초보적인 임금인상요구의 문제일지라도 이것은 자본과 국가권력과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구조적으로는 정치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36] 결국 임금인상문제를 비롯한 제반노동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하는 구조적 모순의 정치적 해결로써 완전히 극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파업농성시의 토론과 노조를 통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이 노동문제에 대해 구조적 인식을 할

31) 현대경제연구회 편, 앞의책, 94~95쪽
32) 현대경제연구회편, 위의책, 92~93쪽
33) 로스터, 정동찬 옮김, 앞의책 41~42쪽
34) 鰍江正規, 한상훈역, 레닌인용『파업론연구』, (세계, 1987), 106쪽
35)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편, 앞의책, 92쪽
36) 박현채, 앞의글, 68쪽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되고 정치적 변혁을 위한 투쟁에 주체로서 나설 수 있게 된다. 작년 곳곳에서 벌어졌던 노동자들과 노동자 지원투쟁을 벌이려던 학생들과의 충돌은 여러가지원인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임금인상투쟁이 가지는 본질적 의의에 대한 일상적 교육부재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정치적 활동을 강화하자/

앞서 이야기 했듯이 임금인상투쟁이 정치투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임금인상의 문제가 노동문제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했을때 노동문제의 사회구조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임금인상 투쟁은 정치적 문제와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임투의 전개과정에서 정권과 결탁한 자본가들의 노조와해공작, 현행 노동법을 이용한 임금인상투쟁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구속, 탄압 등의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물론이고 임금인상투쟁 전 기간을 통하여 정치적 선전, 선동의 기회를 포착해 내어야 한다.

역사적 경험에서도 노동자로 하여금 소득분배의 틀 내에서의 투쟁만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제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리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소망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임금인상투쟁이 현재의 가장 중요한 노동운동의 영역으로 위치지운다고 하더라도 일상활동에서의 끊임없는 정치적 계기에 대한 포착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V. 맺음말

—노동운동에 있어서 대중적 지반과 이념적 지반을 강화하자/

70년대의 민주노조운동의 재평가와 함께 그간의 지역노동자 정치조직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의 협소한 대중적 지반을 반성하면서 새로이 정립된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이것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노동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구축하고, 또한 그간의 지역노동자 정치조직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의 협소한 대중적 지반을 반성하면서 새로이 정립된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이것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노동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연대틀의 모색등을 통해 통전적 조직의 기초로서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37]는 문제제기는 노동운동의 대중적 지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간의 경험속에서 뼈저리게 느꼈듯이 노동조합의 존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긴급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중활동의 근거지인 노동조합을 통한 운동의 전국적 확대가 기본적 임무[38]로 되어야 함과 동시에 노동계급의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 가지는 본원적 한계는 무엇인가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의 생활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내는 경제투쟁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노조중심의 활동을 어떻게 정치적인 영역과 결합시켜 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투쟁에 있어서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배합문제, 조직건설에 있어서의 대중조직과 전위정치조직과의 관계, 노동운동의 변혁과제의 성격논쟁 등 우리에게는 풀어 나가야 할 매듭이 겹겹 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노동운동 부문 뿐 아니라 학생운동, 농민운동 등 타 부문운동에서의 사정도 비슷하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에 의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란 기치는 모든 운동을 포괄할 것이다.

37) 김남 「 80년대 노동운동론의 평가 」, 『녹두서평 』, (녹두, 1986), 402~403쪽
38) 민족주의 민족전선 편집, 「 조선노동자조합 전국평의회 」, 『해방조선 I 』, (과학과 사상, 1988) 194쪽.

끝으로 우리 선배노동자들이 주장했고 지금의 1000만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외침을 따라 외쳐보며 이글을 맺는다.

1.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최저임금제를 확립하라/
2.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3. 성별·연령별·인종이나 출신지의 구별을 불문하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라/
4. 7일중 1일 휴일제와 공휴일 휴무제 확립하라/
5. 부인노동자의 산전·산후 2개월간의 유급 휴가제를 실시하라/
6. 유해위험 작업은 7시간제를 확립하라/
7. 14세 미만 유년 노동을 금지하라/
8. 노동자를 위한 주택·탁아소·오락실 도서관·의료기관을 설치하라/
9. 부인노동자를 위한 공장설비(탁아소 탈의실 등)를 고용주 부담으로 즉각 설비하라/
10.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단체협약권을 확립하자/
11. 공장폐쇄, 해고와 실업은 절대 반대한다.
12. 실업·상해와 질병, 노동자,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제를 즉각 실시하라/
13. 착취를 본위로 하는 사업을 반대한다/
14. 언론·출판·집회·결사·태업·시위의 절대 자유를 보장하라/
15. 노동악법을 폐지하라/
16. 조직결성의 자유 보장하라/
17. 농민·학생운동을 지지한다/

미군정기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이 동 선
(자유기고가)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 2 장 해방과 미군정의 성립
  제 1 절 해방의 의미
  제 2 절 해방전후의 실정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제 3 절 미군정의 성립과 점령정책
    1. 미군정의 성립
    2. 미군정의 점령정책
제 3 장 미군정기 노동운동의 개관
  제 1 절 통계적 개관
  제 2 절 미군정의 노동정책
제 4 장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노동운동
  제 1 절 전평의 성립과 운동노선
    1. 전평의 성립과 성격
    2. 전평의 운동노선
  제 2 절 전평의 노동운동 전개
    1. 초기 운동노선 : 노동자 공장 관리운동
    2. 산업건설운동
    3. 9월총파업과 전평의 와해
  제 3 절 전평의 평가
제 5 장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과 노동운동
  제 1 절 대한노총의 성립
  제 2 절 미군정하 대한노총의 특징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8·15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적 계기였다.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 잠재되었던 요구와 역사적으로 생성된 맥락은 8·15라는 역사적 계기에 의해 크게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전개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단순히 재생산되는 것만이 아니라 대전후 외세의 민족문제에의 개입에서 주어진 상황 전개에 따라 이데올로기,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적 실천방법을 둘러싼 전술문제 등이 개입하여 정치·사회운동을 둘러싼 서로의 얽힘을 더욱 복잡하게 했다.

정치·사회운동에 대한 인식은 한 사회에 있어서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간의 생활상의 요구를 둘러싼 모순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이건 사회적이건 인간의 사회적 실천은 그것을 위한 노력 속에서 자기발전의 논리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서는 내부적 요인에 외부적 요인이 크게 규정적인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역사에서 일정한 계기가 강력한 것으로 밖에서 주어질 때가 그런 경우이다. 우리 사회에서 2차대전후의 상황은 그런 것들이다.[1]

해방직후부터 약 3년동안의 미 군정기는 국가권력과 국민경제의 기본성격이 새롭게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였다.[2] 해방은 일제 식민지 통치에 의해 왜곡되어 온 제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제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3]

따라서 해방 3년의 사회변동과 국가형성과정에 있어서 제사회계층의 의식과 역할, 변모양상은 한국현대사 연구의 매우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사건의 피상적인 움직임과 표피만을 관찰하기 보다는 현상을 저변으로부터 변화시키는 힘을 발견해 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볼 때, 해방 3년에 대중부문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국가형성의 노력과 그것의 잠재화과정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관점과 의도를 가지고 해방 3년의 정치·사회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노동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 군정기의 노동운동은 임금노동자의 노동쟁의라는 일반적 성격에 대하여 해방이후 전환기의 사회, 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한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즉 노동운동을 통해 국가형성과정에 참여하고 국가의 성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해방 3년사를 연구하는데[4] 있어서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이 좌익진영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직후 노동운동이 좌익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도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다. 즉 여기에는 운동사가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제조건에 의해 구조화되는 투쟁의 영역과 투쟁의 효과를 분석해야 하는 힘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미 군정기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에 이뤄지고 있어[5] 본 연구에서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러나 주로 부분적이고, 사실기술의 성격이 강했고, 운동의 총체적 성격의 파악이 결여 되었고 특히 대중집단을 좌익에 의해 수동적 객체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본 연구도 이상과

1) 박현채, "해방 후 정치·사회운동을 보는 시각",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pp.9-19 참 참조
2) 이헌창, "8·15의 사회경제사적 인식", 「한국자본주의론」(까치, 1984) p.72.
3) 송건호, "해방의 민족사적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 1979) pp.14-16.
4) 김학준교수는 해방 3년사의 본격적인 연구가 1970년대 중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김학준, 「한국정치론」(한길사, 1983) pp.118-127를 참고.

같은 난점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렴·정리하는 수준을 넘지는 못했다.

본 연구의 내용전개는 노동운동의 형태에 근거하여 자연발생적 단계, 합법적 운동단계, 비합법적 운동단계로 전개했다. 그러나 논문의 구성은 제 2 장에서 해방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해방직후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서술하고, 미 군정의 성립과 점령정책을 노동운동에 관련 깊은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제 3 장에서는 미 군정기의 전체적인 개관을 다루었는데, 해방직후의 자연발생적인 노동운동은 이곳에서 상세히 다루고 따로 장을 마련하지 않았다. 제 4 장과 제 5 장에서는 합법적 단계에서 비합법적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어서 전평과 대한노총의 성립과 노동운동 전개 그리고 그 붕괴과정을 정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미흡함으로 인해 요구되는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별적 과업투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운동과 정치세력과의 관계가 치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전평의 지방조직과 개별 사업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③ 식량문제와 관련된 식량요구투쟁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④ 전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과 연대적 관계, 노농동맹의 구체적 양태도 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이 분야에 대한 기존의 연구, 논문, 잡지글 등 2 차자료에 주로 의존했고 입수가능한 1 차자료도 참고하였다.

제 2 장 해방과 미군정의 성립

제 1 절 해방의 의미

지금에 와서 1945 년 8 월 15 일이 무슨 날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에 의아심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날이 바로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라고 배워 왔으며,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6] 그러나 미 군정이 통치했던 해방 3 년이라는 격동기가 지나간지 40 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는 남과 북의 분단체제로 고정화되었고, 숱한 사회·경제적 모순을 미해결의 과제로 안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8·15 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해방 직후의 주요과제와 변혁이론운동[7]을 고찰함은 현재 한국사회의 존립근거와 모순구조의 뿌리를 찾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의 현실로서 8·15 는 일본의 항복으로 한국이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맞이한 날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제가 연합국에 항복하여 '주어진' 8·15 는 타율적인 산물이었기에 외세의 개입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8·15 는 식민지 지배체제의 전면적 붕괴로 한반도가 간직하고 있던 모순들을 일제히 현상화시킨 중요한 민족사의 역사적 계기이기도 했다.

즉 해방은 낡은 사회를 해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될 것인가란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총독부권력이 물러나 공백이된 국가권력을 어떠한 성격을 가진 주체가 장악하며, 파행적인 식민지 경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할 것인가란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그런데 국가권력의 성립과 국민경제의 형성은 서로 무관한 과정이 아니다. 경제적 토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각 경제주체들은 각기 경제적 이해에 규정되면서 운동을 전개하기 마련이고, 그중에서 어떤 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경제적 요구가 주로 관철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8]

이에 따른 해방의 과제는 무엇이겠는가?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지배구조를 완전히 척결하여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지배의 유산을 철저히 분쇄, 청산하고 민족경제를 기반으로 국민경제의 재편성·재정립을 이룩함으로써 국민경제와 민족경제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었다. 즉 8·15 직후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해결문제는 자주적 민족독립국가의 건설, 철저한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한 반봉건적 제관계에 타파, 식민지적 통치기구의 해체 등 이른바 반제(=반식민지) 반봉건의 과제로 요약된다.

먼저 반식민지란 정치적으로 반제의 의미였으며, 경제적으로 반일본·반예속자본이었다. 반제를 통해 36 년의 세월이 고착화시켜 놓은, 조선총독부로 대표되는 모든 식민지적 지배기구를 배제하여 완전히 자주적인 민족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적 완전독립을 달성하고, 반일본·반예속자본을[9] 통해 당시 국내 총생산의 80 %를 점유하고 있던 일본인 자본가와 친일적 예속자본을 타파하는 것이 반식민지의 과제였다.

반봉건제란 반봉건적 토지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제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반봉건적 토지소유관계란 일본제국주의의 요구에 의한 경공업 대 농업이란 국제분업에 규정되는 존재로서 여기에서 비롯된 생산력적 제약 등에 의해 종래의 지주—소작관계가 온존되었지만, 식민지 수탈의 도구로서 상품—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어도 법적,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토지소유관계자가 성립된 것을 말한다.[10] 따라서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은 이러한 토지문제의 완전한 해결(反封建)을 필수적인 전제로 삼아야만 했던 것이다.[11]

제 2 절 해방전후의 실정

1. 정치적 측면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것은 1945 년 8 월 15 일이었지만 소련군은 9 일 앞서 한반도에 진출했고[12] 8 월 24 일에는 38 선까지 이르렀다. 반면 미군은 거의 한 달 뒤인 9 월 8 일에야 한반도의 38 선 이남을 점령하기 위해 한국에 상륙했다. 양국 군대는 3 년 동안 주둔하다가 그들의 정치체제를 모방한 2 개의

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1979), 조영건, "미군정기 임금노동의 사적 연구(1945.8-1948.8)"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고현전, "미군정기의 노동운동"「해방 40 년의 재인식」(돌베개, 1985), 성한표, "8·15 직후의 노동자 자주관리운동"「한국사회연구 2」(한길사, 1984), 성한표, "9 월 총파업과 노동운동의 전환",「해방전후사의인식 2」(한길사, 1985), 이혜숙, "미군정기 노동운동의 성격과 전개과정"「현상과 인식」(1986. 겨울), 정진호,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한국사회연구 5」(한길사, 1987) 등.

6) 김낙중,「한국노동운동사-해방후 편-」(청사, 1982) p.44.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그 날을 지칭하여 '광복', '독립' 등으로 불러왔다. 이재오, "미군정 시기의 학생운동", 변형윤 외,「분단시대와 한국사회」(까치, 1985) p.93.

7) 해방 3 년사연구회,「해방정국과 조선혁명론」(대야출판사, 1988)의 머리말 참조.

8) 이헌영, "8·15 의 사회경제사적 인식", 이대근·정운영 편,「한국자본주의론」(까치, 1984) p.72.

9) 민족자본, 예속자본 및 토착자본의 개념을 정돈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 개념은 식민지를 경험한 제민족의 역사 서술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다. 토착자본은 제국주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논리가 관철된다. 그리고 독점형태로 나타나는 제국주의 자본과 필연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논리적으로 이 단계에서 토착자본은 민족자본과 예속자본으로 분열된다. 즉,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정치적 태도와 경제적 조건을 가지는 민족자본과 제국주의에 자신을 예속시켜 자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확대하려는 예속자본으로 분열이 일어난다. 정진상, "일제하 한국인 토착자본의 성격", 한국사회연구회,「한국 근대 농촌사회와 일본제국주의」(문학과 지성사, 1986) 조기준,「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대왕사, 1973)을 참조.

10) 이헌영, 앞의 글, p.74.

11) 김태승, "미군정기 노동운동과 전평의 운동노선", 박현채 외,「해방전후사의 인식 3」(한길사, 1987) pp.309-310.

12) "소련은 8 월 8 일에 대일전에 참가했다. 8 월 8 일 나진공습에 이어 9 일에는 한반도 최동북인 웅기를 폭격하고 곧 경흥으로 진격, 13 일에는 청진에 상륙했다."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송건호 외,「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p.69.

우파단독의 정치체계로 성격지워졌다.

2. 경제적 측면

구한국은 봉건제의 태내에 근대화의 내재적 기초를 매뉴팩쳐와 광범한 밑으로부터의 대중운동으로 간직하면서도 급박한 외래자본주의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구한국은 불평등조약에 의한 대외개방의 과정에서 후발선진자본주의형의 미성숙 제국주의국가인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식민지 한국에서 일본자본의 운동은 식민지에서 선진자본의 운동의 정형에 따라 개괄적으로 다음 세 개의 단계적 양상을 보여주면서 진행되었다. 그것은 ① 자본의 원시적 축적기 (1905 ~ 1918) ② 산업자본단계 (1919 ~ 1929) ③ 금융자본단계 (1930 ~ 1945)이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서구의 고전적 자본주의의 발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되는 특수한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식민지반봉건사회란 ① 일정한 독립적인 사회구성체가 아니며, ② 외국자본주의 침입 이후에 점차로 형성된 사회이며, ③따라서 여러가지 경제형태가 중첩되어 있으며, ④경제구조의 변화보다도 정치사회구조의 변동이 한층 더 격렬한 사회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한국사회의 주요한 정치·경제·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역사적 요인으로 되었다.[17]

일본제국주의의 가혹한 수탈과 민족자본 억압으로 해방 당시 한국의 경제는 전근대적인 반봉건적 기생지주제에 입각한 농업과, 일본에 종속된 절름발이 구조를 가진 공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식민지반봉건경제였다.

농업은 당시 전국민의 77 % (1946 년) 가 종사하고 있었던 주된 산업이었다. 그러나 이 농업은 반봉건적 토지소유, 즉 지주—소작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었다. 농촌의 몰락농민은 도시에서의 취업기회가 부족하고, 농촌에서도 품을 팔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머슴으로 들어가거나 소작농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토지소유 관계를 기반으로 일제시대에는 전체 미곡생산의 절반정도 (1930 년대 평균 800 만석) 를 일본으로 강제 반출을 당해 왔는데, 해방후 몇년간은 비료부족 등으로 식량생산이 저조하여 식량수급사정이 악화되기도 했다. (〈표 2-2〉 참조).

1939 년부터 일본의 대륙침략 및 태평양지역 침략을 위한 군사적 중공업체제가 강화되자 그때까지 저조했던 공업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총생산액중 공산액의 비중은 1930년의 24 %에서 1940 년에는 40.5 %로 상승되었다. (〈표 2-3〉참조) 그러나 이렇게 성장한 공업도 그 대부분은 일본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카르텔적 독점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공업의 대일종속성은 기술자 등 고급기술자의 대부분이 일본인이라는 데서도 드러난다. 일제는 저임금 노동력을 조선인으로 충당했지만 고급기술에 대해서는 조선인의 접근을 봉쇄하여 해방 당시 기술자의 80 %는 일본인이었고 (1944 년),[18] 특히 핵심공업인 화학·금속공업에 있어서는 조선인 기술자수의 비율이 10 %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했다.

또 한국의 공업은 일제의 전시요구에 의한 본국 공업의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각 생산부문의 소재 및 가치보존은 개별적으로 일본자본에 연결되어 운영되었다. 이것은 생산재 생산부문과 소비재 생산부문의 구성에서의 불균형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즉 중공업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금속·기계 기구공업의 비중은 각각 전체의 14 %, 6 %에 불과하였다. (1943 년) 이에 따라 주요 기계기구는 국내자급율이 30 %선이었다.

일반적으로 종속경제는 자국 스스로의 결정권이 상실되고 생산구조가 불구화되어 있어서 종주국 경제와 단절되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파탄에 빠지는 경제를 의미한다. 해방 당시 한국경제는 종속경제의 전형적인 예였으므로 일제로부터의 해방=단절로 생산의 급격한 감퇴 등 대혼란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제파탄

군수경제체제하의 물자 부족과 발악적인 통화증발로 인해 이미 1930년대 말부터 한국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표 2-4〉참조) 1936년을 100으로 한 도매물가지수는 1944 년에는 241 이었고 특히 식료품 및 공업재료 (화학공업) 는 265 및 341로 폭등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일제하에서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한국경제는 일제의 퇴각과 함께 진행된 일본자본 및 기술자의 철수, 그리고 일본경제권으로부터의 이탈과 남북분단으로 인한 생산체계의 '이중적 단절'속에서 일시에 노출된 식민지 종속경제로서의 후진성과 취약성을 극복할만한 여력이 없었다.

〈표 2-2〉 해방후 식량생산 추이

	미곡(정곡)				맥류(정곡)			
	면적 (천정보)	1정보당 수확고 (석)	생산고 (천석)	지수 (1940~44=100)	면적 (천정보)	1정보당 수확고 (석)	생산고 (천석)	지수 (1940~44=100)
1930-34-36 평균	1,226	11.08	13,587	99.0	1,013	8.47	8,583	101.6
1940-44	1,035	13.26	13,718	100.0	1,152	7.33	8,450	100.0
1945	1,055	12.17	12,836	93.6	829	4.12	3,414	40.4
1946	1,077	11.19	12,047	87.8	719	8.15	5,810	67.8
1947	1,123	12.33	13,850	100.9	747	6.91	5,163	61.1
1948	1,121	13.81	15,485	112.9	771	7.05	5,437	64.3
1949	1,053	14.00	14,738	107.4	786	-9.00	7,077	83.7
1950	1,098	13.30	14,607	106.5	805	9.07	7,301	86.4

자료 : 장상환, "해방후 대미의존적 경제구조의 성립과정", 송건호·박현채외, 「해방 40 년의 재인식 I」(돌베게, 1985), p.88.

〈표 2-3〉 농업생산액과 공업생산액의 비중 변화

(단위 : 천엔)

	총생산액	농산액 (%)	공산액 (%)
1930	1,176,086 (100)	724,227 (62)	280,963 (23.9)
1933	1,520,580 (100)	920,841 (61)	367,235 (24.2)
1935	2,090,459 (100)	1,147,055 (55)	607,476 (29.1)
1937	2,839,456 (100)	1,490,892 (52.5)	959,308 (33.8)
1940	4,440,000 (100)	1,700,000 (38.3)	1,800,000 (40.5)

자료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 년판), I-318 쪽.
장상환, 위의 글, p.88 에서 재인용

17) 한국근대경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가지 상이한 학설이 있다. ①근대화설, ② 자본주의설, ③ 식민지 상인자본주의설, ④ 식민지반봉건사회설 등이다. 본고에서는 ④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안병직, 「3·1 운동」(춘추문고, 1975) pp.8-26, : "한국근대경제의 성격", 「한국노동문제의 구조」(광민사, 1978) pp.7-19, 장시원 편역,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한울, 1984) pp.434-435, 강재언 외, 「봉건사회 해체기의 사회경제구조」(청아, 1982) 를 참조.

18)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 I. p.100.

〈표 2-4〉 물가의 상승

연 도	서울 시장가격 지수
1936	100.1
1944	241.1
1945 년 3월	259.4
6월	272.4
9월	2,047.2
12월	4,359.2
1946 년 3월	8,415
6월	12,058
9월	16,292
12월	25,563
1947 년 3월	35,676
6월	37,249
12월	58,305
1948 년 3월	67,066

자료 : 「식은조사월보」(1949), 제 4권 제 3호, p.7. 박현채, "해방전후 민족경제의 성격" 「한국사회연구 1.」(한길사, 1983). p.407 에서 재인용

8·15 이후 자본가의 생산기피[19] 와 계속된 통화증발 및 통제체제의 폐지로 물자의 수급 균형이 파괴되었고, 이를 틈탄 투기행위는 일제 말의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② 대량실업

〈표 2-5〉 공장 및 남여별 노동자의 감소

(1943.6 ~ 1946.11)

구 분	1943.6	1946.11	감 소 수	감소율 (%)
공장	10,176	5,249	4,927	48.4
노동자 (남녀계)	254,177	122,159	132,018	51.9
남 녀 노 동 자	189,533	86,291	103,242	54.5
여 자 노 동 자	64,644	35,868	28,776	44.5
공장당 노동자 수	25	23	-	-

자료 : 조선경제사, 「조선통계요람」 p.153.

경제의 파탄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 원인으로는 사업장과 고용노동자의 감소, 귀환 및 월남민의 이동을 들 수 있고 실업노동자 중 청년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8·15 전에 비해 그후에는 공장이 48.4 %, 공장노동자가 51.9 % 감소했다. 노동자들의 감소율이 사업장의 감소율 보다 높은 것은 당시 폐쇄하지 않은 공장이라해도 조업율을 떨어뜨리거나, 생산을 중단,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1946년 11월에 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남한에서 일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약 1백만명이었다. 이중 귀환동포나 월남민이 60만명에 달하였다. (〈표 2-6〉참조)

③ 저임금

해방이후의 경제파탄, 대량실업과 함께 저임금은 당시 경제상황의 특징이었다. 이는 1930년대 일본독점자본의 전제가 되었던 한국노동자의 극한적인 저임금구조가 8.15 이후 통제가격의 철폐로 물가가 일시에 현실화되자 더욱 악화되었다.

노동임금지수를 소매물가지수와 비교해보기 위해 〈표 2-7〉을 보면 1945년 12월의 격차는 소매물가의 경우보다 더 커졌다. 그것은 일제의 물가통제가 도매물가보다 소매물가에

19) 공업부문에서 전체적으로 75.2 %의 생산감소를 보였다. 그 원인으로는 휴업중인 390개 업체 중 272개 업체가 원료부족을 들고 있다. 원료부족은 ① 종주국과의 경제관계의 단절, ② 남북분단에 기인한다.

〈표 2-6〉 남한의 실업상태 - 1946년 11월

이전의 직업	인 원	퍼 센 트	피 난 민	도 착 민
농 업	210,287	20.0	125,594	84,693
제 조 업	187,955	17.9	106,877	81,078
광 업	122,598	11.7	79,353	43,245
운 수 업	39,965	3.8	18,784	21,171
건 축 업	141,784	13.5	67,599	74,185
사 무 직 · 상 업	111,347	10.6	62,983	48,364
잡 업	237,001	22.5	126,060	100,941
합 계	1,050,937	100.0	587,260	463,677

자료 : KOREAN LABOR REPORT, Prepared for the Secretary of habor by Stewart Meacham, Labor Advisor to the Commanding General USAFIK. 김금수, 「한국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풀빛, 1986), p.240 에서 재인용.

〈표 2-7〉 8·15 이후의 실질임금 변동추이 (1930 = 100)

월 변	1945			1946			1947		
	노 임 지 수	소매물가 지 수	실질임금	노 임 지 수	소매물가 지 수	실질임금	노임지수	소매물가 지 수	실질임금
1	246	238	103.36	3,581	8,543	41.92	11,450	33,272	34.41
2	247	238	103.78	3,865	9,353	41.32	11,711	38,894	30.26
3	253	242	104.55	4,212	11,645	36.17	12,668	38,486	32.92
4	275	249	110.44	4,960	13,312	37.26	14,043	36,517	38.46
5	277	254	109.06	6,570	13,772	47.71	14,442	36,101	40.00
6	283	259	108.88	6,772	14,932	45.35	15,093	37,431	40.32
7	293	-	-	6,996	15,808	44.26	15,666	38,635	40.55
8	-	3,359	-	7,371	17,795	41.42	15,930	39,665	40.16
9	-	3,813	-	9,262	19,317	47.95	16,299	41,444	39.33
10	-	4,906	-	9,667	21,195	45.61	16,575	42,951	38.59
11	-	5,795	-	10,976	22,462	48.86	17,225	51,753	33.30
12	2,724	7,335	37.14	11,186	26,622	42.02	17,088	55,961	30.54
월평균	-	-	-	7,118	16,211	43.32	14,843	40,926	36.60

자료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년보」 P.I-215, 성한표, " 8·15 직후의 노동자자주관리운동 ", 「한국 사회연구 2」 (한길사, 1984) p.578. 에서 재인용

더욱 철저히 적용되었던 것을 8.15 이후 한꺼번에 풀어버림으로써 소매물가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④ 식량 (쌀) 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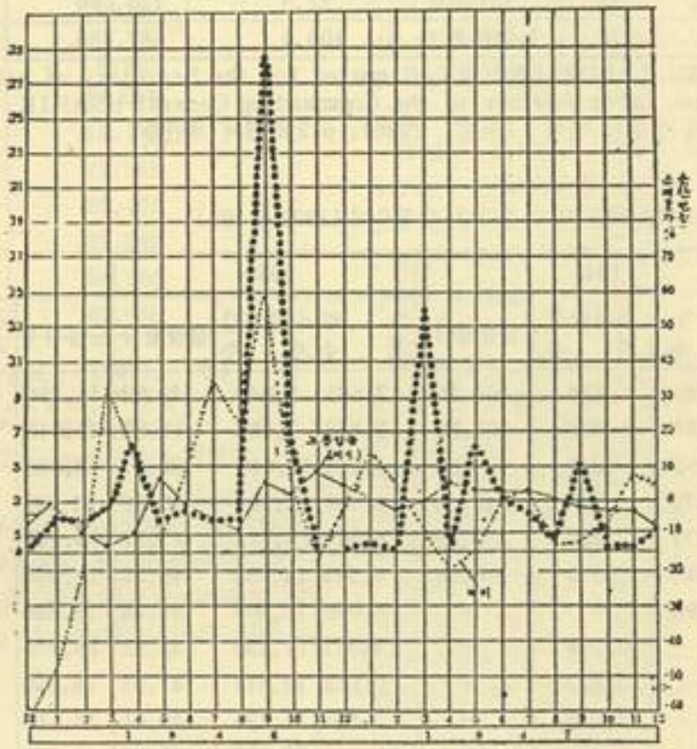
먹고 사는 일조차 힘들었던 당시에 가장 관심이 큰 문제는 쌀값이었다. 쌀값의 폭등상은 1946년의 배급가격이 kg당 11.72원이었던데 비해 시중 쌀값이 가마당 9,000원(1946년 7월) 내지 11,000원이 될 정도로서 그것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과도 관련되어 쌀값의 계절별 변동지수와도 상관없는 상승 일변도의 추세였다. 당시의 대중들은 쌀값의 등귀에 의하여 생활이 위협받고 있었으므로 미 군정하 노동쟁의 발생

은 쌀값의 등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20]

(도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쟁의 상승은 쌀값 상승에 뒤따라 일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도표를 보면 1946년 9월 총파업과 1947년 3월 총파업이 미군정 당국에 대항하는 전평 산하좌익 노동조합들의 정치적 파업이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심각한 생활난에 처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아울러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2-1) 노동쟁의의 발생과 쌀값

노동쟁의 참가 인원수 (단위 : 1,000 명)



자료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 Ⅰ. p.200. 김락중, 「한국노동운동사」(청사, 1982) p.95에서 재인용.

20) 예를들어 9월총파업의 원인으로 수집미를 배급치 않는 것을 첫째로 드는 견해도 있다. 「독립신보」, 1946.11.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1979) p.339에서 재인용, 이와에도 김동범, 「조선 식량문제와 그 대책」(창건사, 1946.12) 이후 돌베개 출판사에서 1984년에 재발간한 책을 참조.

제 3 절 미군정의 성립과 점령정책

1. 미 군정의 성립

미 군정은 1945년 9월 인천상륙에서부터 시작하여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는 약 2년 11개월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불과 3년 미만에 걸쳐서 한국사회를 지배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미친 영향은 단지 그러한 시간적인 것으로만 설명될 수가 없다.[21] 미 군정이 미친 영향은 정치·경제·문화에 이르기까지 과도할 정도로 심각한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속에 모든 사상이 침몰됨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문제 삼으려는 관념조차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1945년 7월 17일로부터 동년 8월 2일까지 진행되었던 포츠담회의에서 38 도선이 구체적으로 확정지어졌다. 그 명목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편의상의 조치라는 것이었다.[22] 이에 따라 1945년 9월 8일 하지(S.R.Hodge) 중장과 그의 미 제 24 군이 인천에 상륙하였다.[23] 당초에 미군은 한국점령에 있어 일본의 총독통치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할 의향이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한국인측의 반대가 강하여 맥아더 사령관의 명령으로 그것이 실행되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전개된다.[24]

9월 20일 미군은 군정청의 조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25]

군정청이란,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민주주의적 정부를 건설하기까지의 과도적 기간에 38도선 이남의 조선지역을 통치·지도·지배하는 연합국 군총사령관 아래에 미군에 의해 설립된 임시정부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군은 한국인이 기대하고 또 생각했던 것과 같이 해방군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보다는 오히려 점령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점령군이라는 것은 미군정[26]이 당시의 한국사회를 기본적으로 패배한 일본사회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 따라서 전쟁에 패한 국가의 영토의 일정지역을 지배하는 형태로 한국에 진주했다는 것이다.

미 군정에 대해서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국이 공산주의 소련의 궤도를 향해 나가는 것을 막고 그곳에 친미적인 단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느

21) 미군정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다음의 글을 참조.
① 전덕규, "미군정의 정치사적 인식",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 1979) p.33. ② "미군정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 김금수, 「한국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풀빛, 1986) p.99. ③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결정적인 시기…" 최정집 편, 「한국현대사Ⅰ」(열음사, 1985) p.20. ④ "해방 후 대략 2, 3년 동안이 새로운 국가권력이 성립되고 동시에 새로 형성된 국민경제의 기본성격이 결정되는 시기" 이현창, "8~15의 사회경제사적 인식", 이대근·정운영 편, 「한국자본주의론」(까치, 1984) p.72. "민족의 국가형성을 위한 자주적 역량이 최초로 시험받는 시기였다." 박영미, "미군정기 사회구조와 대중의 사회·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1987. p.124.

22) 한반도의 분단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의는 크게 두갈래로 나뉘는데 그 하나는 '군사적 편의주의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알타밀약설'이다.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가론연구회, 「한국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한울, 1986) p.16.

23) 림전방부, 「조선경제의 기록」(엄남당, 1967), 정도영 역, "미군의 남한 진주와 군정의 개시", 「한국사회연구 5」(한길사, 1987) p.328.

24) A.Wigball Green, The Epic of Korea (Washington: Public Affairs Press, 1950). 위의 글 p.342에서 재인용.

25) 위의 글, p.344에서 재인용

26) 군정이란 협의적으로는 교전국 일방의 군대가 타방의 육지상의 영역에 진주한 후 피점령국의 권력을 배제하고 자국 고유의 권력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적으로는 군사적·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행정작용 이외에 입법·사법의 역할까지 행사하는 경우의 점령지역의 정치를 말한다. 미군정은 형식상으로는 미국인에 의한 입헌적 독재정부이다.
박문옥, 「한국정부론」(신천사, 1983) p.257.

나" [27] 하는 데에 그 정책목표가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세계자본주의의 유지와 재편성을 위해 한국을 동남아 방어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모든 방해물을 미 군정의 정책을 통해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다.

미 군정의 이상과 같은 측면의 성격은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냉전체제가 한국사회에 무비판적으로, 그리고 비주체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남북의 각 지역에 진주한 외세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 그대로 그 지역에 고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변혁의 성격마저도 철저하게 제한함으로써 38선 이남의 지역에서는 조선공산당 계열의 세력이 철저히 배제되는 형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운동에서 전평 주도하의 모든 노동행위들이 철저히 봉쇄되거나 견제당하는 모습이나 적산의 처리가 보수세력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등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2. 미군정의 점령정책

미국의 대한정책에는 '우호적인 한국' 의 수립이라는 전제하의 두가지의 선택적 대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하나는 '신탁통치에 의한 통일정부의 수립' 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점령에 따른 확실한 부분의 확보' 였다. 전자는 국제주의적 이상주의의 산물이었지만 실제로는 루즈벨트식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후자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대단히 중요하며, 따라서 한국이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의 소산이었다.

구체적으로 대한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기본방침을 제시한 두개의 정책문서인 '맥아더 포고' 와 '초기 기본지령' 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대한점령정책이 한국에 상륙한 하지중장의 24사단의 독자적인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국무성, 국방성, 동경의 극동군최고사령관(SCAP) 맥아더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한점령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이 유엔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손색이 없고 건실한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국의 장래에 대하여 그 전망을 명백히 하면서도 종래의 식민지 통치기구·인권·법령 등을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하는 데에 그 한계성이 있다 할 수 있다.

해방후 미 군정의 토지정책은 '건전·온건한 민주주의의 수립' 과 변혁적인 토지개혁이라는 '강력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확실한 범위' 라는 것이 제1차적 동기였다. 따라서 미 군정은 국내 공산주의, 급진적 민족주의 세력의 물리침과 함께 전면적 토지개혁 요구를 포함한 정치·사회적 격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에 선 반봉건적 토지제도를 '위로부터의 개혁' 에 의해 타협적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 군정의 토지정책은 반봉건적 토지소유의 타협적 해소의 한 형태로서 농지개혁의 방향과 성격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28]

미 군정은 1945년 12월 12일 군정법령 제33호 '재 한국 일본인 재산의 귀속에 관한 건' 을 통해 모든 종류의 일본인 재산을 관리하였다. 이들 재산은 1946년부터 미군정청의 각 부처 또는 대행기관의 미국인 고문에 의해 관리되었는데, 그것이 짧은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귀속재산[29] 자체가 막대한 것이었고 또한 그것이 일개기관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뒤에 불하하였던 만큼 한국경제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게다가 귀속재산의 재건, 운영에 대한 구체적 대책의 지연과 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군정·한민당·독립촉성중앙회 등에 밀착한 인사를 선정하는 등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생산의 위축과 물자의 결핍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관리인의 일부는 원자재, 반제품, 기계 및 부분품 심지어 공장건물과 부대시설을 암매함으로서 생산관계의 파괴와 쇠퇴를 야기시켰다.

27) G.Kolko & J.Kolko, "미국과 한국의 해방"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돌베개, 1982), p.23.
28) 황한식, "한국 농지개혁 연구", 최정집 편, 앞의 책, p.489.

제3장 미군정기 노동운동의 개관

제1절 통계적 개관

1945년 해방이 되자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일제의 정치적, 경제적 유산을 극복하고 어떻게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이룩할 것인가였다. 한국민족의 일원이면 그 누구나 독립국가 건설을 앞에 두고 정치적 열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었으니, 한국의 노동자와 노동지도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따라서 8.15 직후 미군정하에 있어서 노동운동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정치운동의 일환으로서, 노동자들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정치세력을 확장하는가 하는 투쟁이었다. 그것은 좌익 전평계 노동조합들이나 이를 상대로 하는 미군정 당국이나 또 미군정의 옹호를 받는 우익 대한노총이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군정 하의 노동운동이 다만 정치투쟁뿐이었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었다. 8.15직후 범람하는 실업자들 속에서 치솟는 물가고와 싸우면서, 하루 하루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노동자들의 생활문제는 심각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생을 위한 몸부림을 계속했으며 그것은 노동운동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정하에서 노동운동은 미증유의 폭발적 고양을 보였다.

미군정청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6년에는 총 170건에 57,434명이 쟁의에 참가했으며 1947년에는 총 134건에 35,210명이 쟁의에 참가하였다. 얼핏 보기에 1947년에는 1946년에 비하여 쟁의가 크게 감소한 것 같으나 1946년에는 9월 총파업이 있었으며 1947년에는 3월 총파업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정치적 총파업으로 인한 쟁의를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쟁의 건수나 참가인원의 수가 모두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쟁의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임금인상이 총 124건으로 최고이며, 다음이 해고반대로 63건, 감독자 배척이 20건의 순이었다. 임금인상과 해고반대를 요구한 쟁의가 많았다는 것은 미군정기의 노동조건의 악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쟁의의 발생원인을 연도별로 보면 1946년의 노동쟁의에는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감독자 배척, 노조승인, 휴일임금 지불, 미지불 급료의 요구 등의 원인이 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해고반대, 공장폐쇄 반대의 원인은 17%밖에 안되었음을 보아, 공격적 노동쟁의가 다수결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47년 중의 쟁의에는 전자의 제원인으로 인한 것이 18%로 격감하고, 후자가 2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미군정기 후반에 와서 노동운동이 공세에 몰렸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에 노동쟁의의 해결방법을 보면, 자연소멸이 171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조정이 116건이었다. 그리고 미군정기 후반에 올수록 행정조정 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군정기 노동운동이 대체로 자율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 및 노동행정의 부재를 말

29) 일반적으로 '적산' 이란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연합국(또는 미국의 입장에서 적성국가의 재산이란 뜻이며, '귀속재산' 이란 그러한 적성국가의 재산이 미군정에 귀속된다는(vested) 뜻에서의 개념이다. 또한 미군정 지배하의 귀속재산이 1948년 8월 한국정부 수립과 함께 한국정부에 귀속된다는 뜻에서 귀속재산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귀속재산의 총액이 70~80%라고 추산하고 남한의 주요산업의 전부가 포함된다고 보나 확실한 실증적 자료가 없으므로 명확하지 않다.

〈표3-1〉 미군정기 월별 노동쟁의 총괄

	쟁의		파업		해결방법								원인(요구조건)										결과 요구관철	
	건수	참가인원	원수	참가인원	조정	행정조치	기타		휴지 임금동맹	조합승인	감봉 복직	노동시간 단축	해고반대	공장폐쇄반대	임금인상	기타			건수	%
							중명	자소연멸	미결											
1945.12.	1	308	1	308	1	40	19	84	17	4	4	16	1	1	1	9	4	10	1	100
1946 합계	170	57,434	80	36,400	10	2		1											37	21
1	3	2,295				5		2											1	33
2	11	1,813	1	322	3	4		1	4	1	1	1	5		3	1	1	3	5	45
3	11	2,770			3	6		1	3	2	2	2	7		3	1	1	3	7	63
4	12	6,377			1	7			3	1	2	1	7		4	1	1	2	7	58
5	10	1,903			3	3			1	1	1	1	2		2	1	1	1	2	20
6	7	2,275			1	8			3	1	1		7		1	2	1	1	5	71
7	11	1,980				4			1	2	2		3		2	1	1	1	5	63
8	25	1,941				19			2		8		1		1	1	1	1	2	8
9	64	28,801	64	28,801				64											9	0
10	16	7,279	15	7,277	1	1		15											3	6
11	-	-	-	-	-	-		-											-	-
12																				
1947. 합계	134	35,210	77	24,422	15	49		70	2	1	4	1	1		1				42	31
1	4	453				4		1											3	75
2	1	20				1													1	0
3	69	14,774	60	14,515	3	3		63											3	4
4	7	287			1	7			3	1	1		1						5	71
5	8	6,252	2	5,424	1	4		1	1	1	1		1						8	100
6	6	3,587			1	5		1	3	1	1		1						3	50
7	7	2,658	2	2,514	2	4		1	3	1	1		1						5	71
8	5	770	2	700	1	8			3	2	1		1						2	40
9	11	5,100			2	3			1	1	1		2						9	81
10	5	106			3	2			1										3	60
11	5	29	5	29	3	2			1											0
12	6	1,174	6	1,240		2		4	1			1							1	16

자료 : 노동조합사전 간행위원회, 「노동조합사전·총론」, (형성사, 1984), p.98.

해주는 것이지만, 후반기에 가서는 행정적 간섭이 강화되었다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다.

끝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1946년 중의 요구관철 건수는 37건, 요구불관철 건수는 30건이었으나, 1947년엔 각각 42건, 22건으로 관철된 건수가 점차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관철건수의 증가는 노사협조적·개량주의적 노조간부와 기업주 간의 공동이익의 추구, 즉 사회적명적 노동조합의 분쇄자는 대전제 앞에서의 타협적 관철이지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적 관철이라고 보기 힘들다.

미군정은 해방후 자주독립의 추진을 위해서는 일제하의 모든 제도와 더불어 친일적인 구세력을 제거시키고 일제하에서 모든 박해와 탄압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투쟁을 계속해온 저항세력을 해방과 건국의 최전선에 등장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사회주의 세력의 팽창저지와 자본주의 시장권의 유지라는 미국의 전후 기본 전략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미군정은 보수세력과 연합하게 되고 전평과는 본질적으로 모순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미군정은 '국가비상시의 선언', '노동조정위원회의 실천', '노동부의 설립' 등을 통해 전평을 비롯한 좌익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면서 한편으로 쟁의자체에 대해서도 탄압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평에 의한 노동운동의 주도는 1946년 철도노동자의 파업을 시작으로 한 9월 총파업과 그 후 1947년 3월의 총파업 실제 및 미군정의 탄압과 그 후의 전평의 비합법화,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사라지게 되고, 합법적 노동운동의 주도권은 대한노총으로 이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미군정기의 노동운동을 임금의 인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 등 노동자의 일상적 이익을 위한 경제투쟁이란 좁은 범주로서는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미군정기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은 노동운동에 있어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 나아가 무장투쟁에로의 발전의 개연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었다.

제2절 미군정의 노동정책

미군정 당국이 맨먼저 실시한 노동관계 법률은 법령 제14호 '일반 노동임금에 관한 법령' (1945.10.10)이었다. 이 법령은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감독하는 모든 회사, 사업, 조합, 협회 기타 조직체가 사용하는 일반적 노무자에 대한 임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당시 악성 인플레가 진행되는 상황하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강해진 것을 반영하는 조치에 불과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실은 당시 미군정 당국은 법령 제2호(1945.9.25)에 의하여 조선 총독부 산하기관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할권은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1945년 10월 30일 '폭리에 관한 취제법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제2조는 「개인이나 개인집단으로서 직업을 순에하고 방행없이 근무하는 권리는 이를 보호하고 보호할 것이다. 공업생산의 중지 또는 감축을 방지함은 조선군정청에서 민중 생활상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약속과 조건에 대하여 발생하는 쟁의는 군정청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것이니 그 결정은 최후적이고 구속적이다. 사건이 노동조정위원회에 제출되어, 해결될 때까지 생산은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미군정의 노동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경제체제의 혼란을 가능한 한 빨리 수습하고, 생산부흥과 민중의 생활구제를 담당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정위원회는 그 후 군정법령 제34호 '노동조정위원회법' (1945.12.8)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폭발적으로 앙양된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없었으며, 더구나 정치성을 띤 쟁의에 대해서는 전혀 무력한 것이었다.

1946년 7월 23일 미군정청은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공포·노동부설치'라는 제목의 법령 제97호에 의해 '민주주의적 노동조합'의 장려를 자기정책으로 한다고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노동정책의 전환은 미소공

동위원회 결렬 후에 미군정이 생각을 고쳐 입안한 남한에 있어서의 정치·사회체제의 정비(통합정책)의 일환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97호 법령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적 노동조합'은 조선공산당을 배제한 노동조합을 의미하였다.

미군정 당국이 좌경적 전평을 타도하고 우익 노동단체를 육성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은 1946년 9월 총파업 이후에 비로소 구체화하였다.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킴으로써, 소련의 협조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남한에서는 1947년 6월 드디어 미군정청 노동부장 이대위가 「정치성을 띤 노동조합은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여 전평의 합법성을 정식으로 부인하였으며, 전평은 이에 대하여 활동을 점차 비합법 지하투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46년 3월에 설립된 대한노총은 여러 면에서 미군정의 적극적인 옹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전평 좌익노조 타도를 원하는 우익정당 청년단체 및 일부 기업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후 각처에 조직을 확장해나갔다.

결국 식민지적 경제구조 재편성을 기본 목표로 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인플레, 식량부족,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 군정청의 기본 정책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소치였으며 따라서 당연히 한국의 노동자, 농민들은 급박한 생존의 문제로서 그 정책수행을 반대한 것이었다. 1946년 9월총파업, 10월 대구폭동, 그리고 다음해 1947년 3월의 총파업도 그 과정이야 어쨌든 민족진영 인사들의 비난 성명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상황을 그렇게까지 만든 요인은 미군정 정책의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제 4 장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노동운동

제 1 절 전평의 성립과 운동노선

1. 전평의 성립과 성격

해방과 함께 시작된 각 기업·공장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노동운동은 그 출발점부터 전한국노동자의 전국적 결집을 지향하여 진행되어 갔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조직체로 결실을 본 것은 1945년 11월 5일의 일이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일찌기 일제의 압정하에서 조직된 조선노동총동맹(1927년)과 일제말기의 비합법적인 지하노조의 전통[30]을 계승하여, 해방후 한국노동자계급의 연대의 기치로 되었다.

해방 직후의 노동조합운동은 지방적으로 산재하고 있던지 하노조가 표면에 등장하고, 이들이 출두한 직업적 노동운동가와 결합됨으로써 다시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이들은 해방 직후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거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노동조합을 전국적 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에 착수했던 것이다. 이들은 미조직 부문의 노동조합 조직에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분산적이고 총파적이고 기형적이었던 노동조합 조직을 산업별 원칙에 입각하여 목적의식적 지도하에 개편하기 시작했다(〈표 4 - 1〉참조).

전평의 결성 태동은 그 기점을 1945년9월 26일 서울의 경성토건노동조합사무실에서 열린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가칭) 준편위원회'에 까지 소급할 수 있다.[31] 동 준비위원회는 금속·화학·출판·섬유·토건·교통운수·식료품·철도·연료·피복 등의 제산업에 이르는 대표 51명이 참가하고, 8월 15

30) 일제말기의 비합법적 지하노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민족전선 편「조선해방 1년사」(1946), p.192 . 와 노동조합사전간행위원회 편,「노동조합사전·총론」, (형성사, 1984), pp.68 ~ 95. 를 참조

31)「해방일보」, 1945.10.18,「조선인민보」, 1945.10.4, 송모미지사, "'해방'과 전평노동운동",「한국자본주의와 임금노동」(화다, 1984), p.199 . 재인용

〈표 4 - 1〉 각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상황

(1945년 11월초)

명 칭	창립년월일	분회수	조합원수	참 가 지 방 명	중요간부
1. 금 속 노동조합	45.11. 2	208	26,725	서울, 인천, 강릉, 순천, 대전, 천안 목포, 점이포, 성진, 원산, 대구, 김천, 소사, 신의주, 해주, 문천, 흥남 영흥, 증단, 연안, 광주, 진남포, 삼척, 수원, 함흥	현 훈 백일성
2. 철 도 노동조합	45.11. 2	45	24,728	부산, 대구, 대전, 목포, 광주, 이리 북계, 사리원, 고원, 원산, 함흥, 성진, 청진, 수원, 서울, 평양	이성백 오병모
3. 교통운수 노동조합	45.11. 2	127	23,785	서울, 인천, 마산, 부산, 광주, 대전 평양, 원산, 성진, 대구, 전주, 해주 삼척, 함흥, 청진	조맹규 현 훈 이영복
4. 광 산 노동조합	45.10.31	75	23,281	부산, 광주, 평양, 삼척, 함흥, 청진 대구, 해주, 신의주, 원산, 성진	마존길 맹종호
5. 토 건 노동조합	45.11. 3	111	14,215	서울, 고양, 원산, 함흥, 문천, 성진 해주, 신천, 안악, 경수, 군산, 순천 이양, 영주, 대구, 청주, 김제, 진해 부산, 인천, 이리, 길주, 계산, 강릉 함흥, 천안, 연안, 삼척, 구흥, 대전 봉화	한 철 김재덕
6. 화 학 노동조합	45.11. 3	118	28,215	신의주, 해주, 평양, 서울, 인천, 청주, 함흥, 흥산, 원산, 철원, 삼척, 부산, 마산, 대구,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임수중 곽이경
7. 통 신 노동조합	45.11. 3	8	496	원산, 대구, 전주, 광주, 함흥, 서울 김천	마수길 김 태
8. 식 료 노동조합	45.11. 4	117	7,746	라진, 청진, 흥남, 함흥, 원산, 삼척 신의주, 평양, 사리원, 해주, 서울, 대전, 인천, 군산, 이리, 전주, 광주 목포, 순천, 마산, 부산, 대구	현초득 이동록
9. 전 기 노동조합	45.11. 4	45	5,602	대구, 전주, 삼척, 함흥, 해주, 원산 청진, 평양	문은종 최성야
10. 섬 유 노동조합	45.11. 2	96	15,340	대구, 대전, 부산, 밀양, 목포, 광주 원산, 성진, 함흥, 사리원, 마산, 해주, 여수, 서울, 평양	한용규 박일용

명 칭	창립년월일	분회수	조합원수	참 가 지 방 명	중요간부
11. 출 판 노동조합	45.11. 2	77	2,180	순천, 강릉, 목포, 서울, 신의주, 대구, 전주, 대전, 수원, 군산, 부산, 정읍, 원산, 라남, 여수	장규경 이인동 김관성
12. 일 반 봉 급자조합	45.11. 2	30	3,819	서울, 김제, 이리, 군산, 여수, 해주 정읍, 대전, 원천, 마산, 목포	김호영 이학종
13. 목 재 노동조합	45.11. 4	53	2,628	원산, 이앙, 신의주, 회기, 순천, 익수, 강릉, 영흥, 군산, 풍산, 명천, 고원, 김천, 광주, 성진, 길주, 청진 서울	마수길 조보행
14. 어 업 노동조합	45.11. 4	23	4,82	원산, 장장, 군산, 청진, 흥남, 성진	최흥봉
15. 조 선 노동조합	45.11. 4	(미상)	(미상)		최 창

자료 : 「전국노동조합전국협의회 결성대회 회의록」, 소림영부, "해방직후의 한국노동운동"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돌베개, 1982), pp. 452 - 453 에서 재인용.

일 이후 각 공작에 조직되었던 조합이 산별 노조로 확대 발전하는 기세를 배경으로, 그러한 산별노조를 연락 통일하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조직을 결성할 방침을 공고히 했다. 11월 1일부터 4일에 이르러 결정준비가 최종단계에 들어갈 때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단일노조가 결성된 것이었다.(〈표 4 - 2〉 참조) 이와 같이 밑으로부터 조직되어 올라온 산업별 노조를 기초로 하여, 해방된 지 석달도채 못된 1945년 11월 5일에는 전국 50만 노동조합원을 대표한 615명의 대의원이 서울에 모여 한국 역사상 최초로 산업별 전국조직인 전평을 결성했다.

전평의 결성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원칙과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전평의 결성은 산별노조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역으로 전평결성의 준비가 산별노조를 낳게되었던 것이다.[32]

② 전평이 결성될 무렵에는 아직 각 산업별 노동조합이 완전히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일부의 단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33]

③ 전평은 산업별 조직원칙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해방 직후 산업발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업별·직업별·지역별 조직형태도 부분적으로 시인하고 있으며, 각 지방의 노동운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남한의 11개 중요 산업지대에 지방 평의회를 두고, 그 지방에 있는 각 산업별 지부를 총괄하도록 했다.

④ 전평의 지방조직은 건준의 지방지부가 개편된 인민공화국의 지방인민위원회와 역할을 동시에 겸하거나 최소한 그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다.[34]

⑤ 결성대회시 채택된 선언에서 볼 수 있는 전평조직[35]의 특징은 완전한 상향조직의 기초 위에서 하향조직과의 통일, 민주주의적 중앙집권 관리, 즉 이른바 '민주집중제'라는데 있다.

32) 중미미지자의 위의 글, p.199.
33) 전평결성대회 선언문, 민주주의 민족전선 편, 앞의 책, pp. 194 - 195.
34) Bruce Cammiys, 「한국전쟁의 기원」하, (청사, 1986), pp.106 ~ 107.

그러면 전평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모든 조직의 성격은 구체적인 역사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또 현실적인 객관적 조건의 변화와 상응하여 부단히 변천해 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결성 당시의 성격은 잠정적으로나마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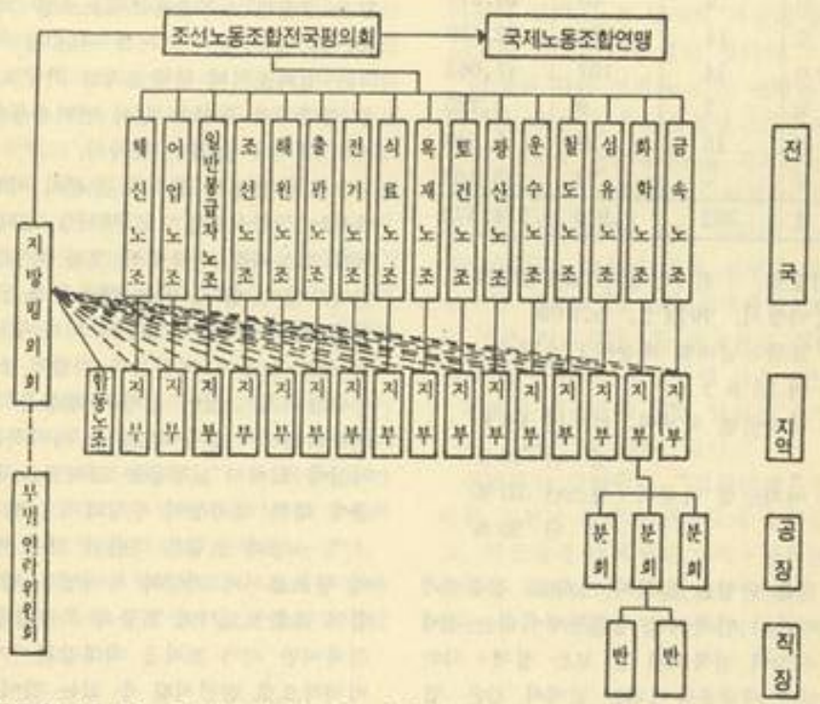
전평의 성격은 강한 정치지향적 성격의 조선공산당(조공)의 영향과 노동자의 자발적인 조직체로서의 독자성, 두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전평의 노동운동이 재건파 조공의 박헌영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사실은 결성대회 과정에서부터 확인될 수 있다. 전평결성 당시 4개항의 결의사항을 보면 "조선민족통일전선에 대한 박헌영 동지의 노선을 절대 지지한다[36]"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평 간부의 대다수가 조공의 간부를 겸하고 있는 인적교류를 보여주고 있다.[37] 이처럼 해방직후에 조직선 노동조합의 좌경적 경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38]

① 일제하에서 노동운동은 1930년대 후반

35) 〈도 4 - 1〉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조직체계도



자료 : 민주주의 민족전선, 「해방조선 I」, (조선해방년보출판부, 1946), (과학과 사상, 복간 1988), p. 197.

36) 김남식, 「남로당연구」(돌베개, 1984), p.65.
37) 전평의 위원장 허성택은 조공의 서귀국원을 겸임함으로써 조공과 전평 사이의 인적교류를 보여주고 있다. 김태승, "미군정기 노동운동과 전평의 운동노선",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p.320.
38) 이혜숙, "미군정기 노동운동의 성격과 전개과정", 「현상과 인식」, 제10권 4호, (1986, 겨울), p. 74. 그외 참고내용은 김익진, "운동노선을 통해 본 한국의 노동운동", 박현채, 김금수 외, 「한국노동운동론 I」, (미래사, 1985), p.94. 참조

〈표 4 -2〉 전평 산하 조합 및 조합원수
(1946년 2월 현재)

산 별	지부수	분회수	조합원수
금 속	20	215	51,364
화 학	18	167	49,015
섬 유	16	121	30,268
출 판	16	65	4,368
교 통	28	140	58,041
식 료	23	108	22,523
토 건	17	127	59,118
전 기	14	54	15,742
목 재	11	125	30,722
어 업	9	50	35,653
광 산	9	123	64,572
통 신	9	40	10,215
철 도	14	117	62,439
일반봉급자	14	107	17,065
해 원	7	9	4,720
조 선	10	38	5,549
합 동	-	74	53,101
합 계	235	1,676	574,475

자료 :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4), p.308.

비고 ① 조합원남여별 백분비 (남 75 %, 여 25 %)

② 남자년별 백분비 청소년 60 %
장 년 40 %

③ 여자년별 백분비 청소년 80 %
장 년 20 %

부터는 계속 탄압을 당하여 지하로 잠복하게 되었고 따라서 민족적인 항일투쟁이라는 전제하에서 지하에 잠복하게 된 모든 정치·사회운동은 일단 애국운동이라는 점에서 같은 입장과 협조적인 위치를 취하게 된다.

② 일제하에서는 일본인 자본뿐 아니라 극소수 조선인 자본가들도 친일세력화하였으므로, 당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자본가와 대결하는 투쟁은 동일성을 지니고 있었다.

③ 해방 직후의 경제적 위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좌익사상이 일반대중에게 쉽게 보급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 이는 좌익세력이 조직과 선전에 뛰어나기도 하였지만 당시의 경우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일반인들에게 큰 저항없이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항일운동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④ 민족주의 우익 지도자들이 노동운동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들은 한국의 신탁통치문제가 대두하여 좌·우간의 대립이 심하게 벌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정치조직 '조공'의 외곽단체로서의 조직이라는 이유때문에 당시의 전평은 단순한 노동운동조직으로만 파악될 수 없는 보다 복잡한 의미를 지닌다. 즉 조공이라는 정치조직의 대중조직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당시 변혁운동의 주력조직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평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향식(밑으로 부터) 조직으로 이루어진 결성과정 자체에서 오는 특징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해방후 노동자들의 조직이 비록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는 해도 노동자 자신들의 자발적 조직체로 형성되었다가 그것이 전평의 결성을 계기로 공산주의세력에 흡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노동운동 조직으로서 전평의 조공에 대한 독자성이 주장되기도 했다.

"…당과 조합은 대립된 것이 아니다…당이 당으로서의 기능과 독자성을 발휘하고 조합이 조합으로서의 기능과 독자성을 충분히 발휘해야만 각기 조직을 확대강화시키며 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39]

전평의 노동운동을 좌익 정치운동의 일환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노동자들은 우선 자신의 이익을 지켜줄 조직이 필요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39)김양제, 「노동조합 교정」, (전진사, 1947), (돌베개 복간, 1987), p.55.

전평과 조공의 이상과 같은 관계로부터 전평 주도하의 노동운동은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즉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권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형태를 띠지만,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일정한 정치적 지향성을 나타낸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지향성이 당으로부터 제시되어 전체조직을 통합하는 정치노선이다.

2. 전평의 운동노선

해방 직후 한국사회에 있어서 혁명적이론들을 가지고 나타났던 좌익의 운동노선으로는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론(박헌영), 연합성 신민주주의론(백남운), 프롤레타리아혁명론(최익환, 이청원, 임해 등) 등이 있었다.[41] 여기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론은 해방 직후 장안파 공산당과 일본에서 귀국한 임해와 같은 일부 반박헌영그룹에서 일시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분파주의적이고 좌경적 오류에 젖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실천적인 운동노선으로 자리잡지 못했고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론이 중심노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조공의 외곽세력으로 존재했던 전평의 정치노선도 이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한 것이었다.[42]

전평의 정치·운동노선을 결성 당시의 여러 문헌을 통해 잠정적으로나마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평은 친일파·민족반역자·매판자본가 반봉건적 대지주에 대한 투쟁, 즉 반민족세력의 타도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민계급 나아가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도 제휴하는 통일전선을 형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② 전평은 투쟁의 방법으로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적 투쟁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전평은 경제투쟁에만 안주하는 노동조합주의(trade unionism)는 단호히 배격하고 있음과 동시에 과도한 정치투쟁으로만 일관하는 경향도 극좌적 소아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③ 그러나 전평은 일부 매카시적 어용노조 이데올러거들이 강변해 왔던 것처럼 프로레타리아혁명을 주장한 단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43]

이상에서 살펴볼 때 전평의 정치노선은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고 농민을 동맹으로 삼으며, 또한 도시 소시민과 인텔리겐차의 대표와 기타 모든 진보적 요소를 포괄하여 인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루조아민주주의혁명 노선이었다. 이 노선에 따라 전평은 노동자들의 일상투쟁을 조직화해내고 또한 이들이 보다 높은 단계의 계급적 동일성을 지니도록 지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성격을 갖는 전평은 미군정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운동했던가? 민족해방운동의 정통적 계승세력임을 자처하는 전평과 과도적 식민지 지배권력으로서의 미군정이 본질적으로 모순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음은 극히 당연하였다. 그러나 전평 자체가 미군정을 처음부터 민족해방운동의 적대세력으로 간주했던 것은 아니었다. 또 미군정도 처음부터 전평을 본격적으로 탄압했던 것은 아니었다.

전평의 미군정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른 두 가지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첫번째는 박헌영의 "8월테제"에서도 보이듯 조선의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로 파악하고, 미군정에 대해서도 반제·반봉건혁명에 비적대적 요소로 인식하였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당시 조공의 정세인식의 결정적 오류였

40)박헌영, "8월테제" 김남식, 앞의 책, pp.515-529와 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3), pp.283-298 참조

41)여현덕, "8.15직후 민주주의 논쟁",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pp.23-75. 참조. 당시 다양한 주의주장에는 아직 정치이론으로 승화되지 않은 심경고백적 주장들도 상당수 있었지만 이들 용어는 현상적인 대립이나 차별성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계급적 토대의 차이를 반영하는 이념적 대립을 의미하였다.

42)김승대, 앞의 글, p. 321.

43)고현진, "미 군정기의 노동운동", 송건호·박현채 외 「해방 40년의 재인식 I」, (돌베개, 1985), p.195.

〈표 4 -2〉 전평 산하 조합 및 조합원수
(1946년 2월 현재)

산 별	지부수	분회수	조합원수
금 속	20	215	51,364
화 학	18	167	49,015
섬 유	16	121	30,268
출 판	16	65	4,368
교 통	28	140	58,041
식 료	23	108	22,523
토 건	17	127	59,118
전 기	14	54	15,742
목 재	11	125	30,722
어 업	9	50	35,653
광 산	9	123	64,572
통 신	9	40	10,215
철 도	14	117	62,439
일반봉급자	14	107	17,065
해 원	7	9	4,720
조 선	10	38	5,549
합 동	-	74	53,101
합 계	235	1,676	574,475

자료 :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4), p.308.

비고 ① 조합원남여별 백분비 (남 75 %, 여 25 %)

② 남자년별 백분비 청소년 60 %
장 년 40 %

③ 여자년별 백분비 청소년 80 %
장 년 20 %

부터는 계속 탄압을 당하여 지하로 잠복하게 되었고 따라서 민족적인 항일투쟁이라는 전제하에서 지하에 잠복하게 된 모든 정치·사회운동은 일단 애국운동이라는 점에서 같은 입장과 협조적인 위치를 취하게 된다.

② 일제하에서는 일본인 자본뿐 아니라 극소수 조선인 자본가들도 친일세력화하였으므로, 당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자본가와 대결하는 투쟁은 동일성을 지니고 있었다.

③ 해방 직후의 경제적 위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좌익사상이 일반대중에게 쉽게 보급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 이는 좌익세력이 조직과 선전에 뛰어나기도 하였지만 당시의 경우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일반인들에게 큰 저항없이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항일운동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④ 민족주의 우익 지도자들이 노동운동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들은 한국의 신탁통치문제가 대두하여 좌·우간의 대립이 심하게 벌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정치조직 '조공'의 외곽단체로서의 조직이라는 이유때문에 당시의 전평은 단순한 노동운동조직으로만 파악될 수 없는 보다 복잡한 의미를 지닌다. 즉 조공이라는 정치조직의 대중조직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당시 변혁운동의 주력조직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평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향식(밑으로 부터) 조직으로 이루어진 결성과정 자체에서 오는 특징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해방후 노동자들의 조직이 비록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는 해도 노동자 자신들의 자발적 조직체로 형성되었다가 그것이 전평의 결성을 계기로 공산주의세력에 흡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노동운동 조직으로서 전평의 조공에 대한 독자성이 주장되기도 했다.

"…당과 조합은 대립된 것이 아니다…당이 당으로서의 기능과 독자성을 발휘하고 조합이 조합으로서의 기능과 독자성을 충분히 발휘해야만 각기 조직을 확대강화시키며 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39]

전평의 노동운동을 좌익 정치운동의 일환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노동자들은 우선 자신의 이익을 지켜줄 조직이 필요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39)김양제, 「노동조합 교정」, (건진사, 1947), (돌베개 복간, 1987), p.55.

전평과 조공의 이상과 같은 관계로부터 전평 주도하의 노동운동은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즉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권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형태를 띠지만,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일정한 정치적 지향성을 나타낸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지향성이 당으로부터 제시되어 전체조직을 통합하는 정치노선이다.

2. 전평의 운동노선

해방 직후 한국사회에 있어서 혁명적이론들을 가지고 나타났던 좌익의 운동노선으로는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론(박헌영), 연합성 신민주주의론(백남운), 프롤레타리아혁명론(최익환, 이청원, 임해 등) 등이 있었다.[41] 여기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론은 해방 직후 장안파 공산당과 일본에서 귀국한 임해와 같은 일부 반박헌영그룹에서 일시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분파주의적이고 좌명적 오류에 젖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실천적인 운동노선으로 자리잡지 못했고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론이 중심노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조공의 외곽세력으로 존재했던 전평의 정치노선도 이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한 것이었다.[42]

전평의 정치·운동노선을 결성 당시의 여러 문헌을 통해 잠정적으로나마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평은 친일파·민족반역자·매판자본가 반봉건적 대지주에 대한 투쟁, 즉 반민족세력의 타도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민계급 나아가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도 제휴하는 통일전선을 형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② 전평은 투쟁의 방법으로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적 투쟁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전평은 경제투쟁에만 안주하는 노동조합주의(trade unionism)는 단호히 배격하고 있음과 동시에 과도한 정치투쟁으로만 일관하는 경향도 극좌적 소아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③ 그러나 전평은 일부 매카시적 어용노조 이데올러거들이 강변해 왔던 것처럼 프로레타리아혁명을 주장한 단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43]

이상에서 살펴볼 때 전평의 정치노선은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고 농민을 동맹으로 삼으며, 또한 도시 소시민과 인텔리겐차의 대표와 기타 모든 진보적 요소를 포괄하여 인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루조아민주주의혁명 노선이었다. 이 노선에 따라 전평은 노동자들의 일상투쟁을 조직화해내고 또한 이들이 보다 높은 단계의 계급적 동일성을 지니도록 지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성격을 갖는 전평은 미군정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운동했던가? 민족해방운동의 정통적 계승세력임을 자처하는 전평과 과도적 식민지 지배권력으로서의 미군정이 본질적으로 모순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음은 극히 당연하였다. 그러나 전평 자체가 미군정을 처음부터 민족해방운동의 적대세력으로 간주했던 것은 아니었다. 또 미군정도 처음부터 전평을 본격적으로 탄압했던 것은 아니었다.

전평의 미군정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른 두가지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첫번째는 박헌영의 "8월테제"에서도 보이듯 조선의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로 파악하고, 미군정에 대해서도 반제·반봉건혁명에 비적대적 요소로 인식하였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당시 조공의 정세인식의 결정적 오류였

40)박헌영, "8월테제" 김남식, 앞의 책, pp.515-529 와 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3), pp.283-298 참조

41)여현덕, "8.15직후 민주주의 논쟁",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pp.23-75. 참조. 당시 다양한 주의주장에는 아직 정치이론으로 승화되지 않은 심경고백적 주장들도 상당수 있었지만 이들 용어는 현상적인 대립이나 차별성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계급적 토대의 차이를 반영하는 이념적 대립을 의미하였다.

42)김승대, 앞의 글, p.321.

43)고현진, "미 군정기의 노동운동", 송건호·박현채 외 「해방 40년의 재인식 I」, (돌베개, 1985), p.195.

으며, 이 오류가 남한내의 공산주의운동의 실패로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견해는 실제 운동과정에서 합법주의·타협주의 운동시기(1946년 9월 총파업 이전)를 거론하면서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두번째로 조공은 미군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군정에 호의를 표출했다기보다는, 미군정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국제정세의 흐름을 볼 때 미군정의 의도가 결코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으리라고 추측된다.

제 2 절 전평의 노동운동 전개

1. 초기 운동노선 : 노동자 공장관리운동

앞에서 정리한 운동의 기본노선에 서서 전평이 제시한 행동방침은 해산수당요구투쟁, 해고반대투쟁, 노동자공장관리운동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해방과 더불어 수많은 일본인 자본가가 귀국하고 또한 정국의 불안 때문에 상당수의 국내 자본가도 사업장 문을 닫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실업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조업재개를 촉구하는 해고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해고반대투쟁은 주로 소규모의 비양심적이거나 매판적인 자본가의 공장에서 발생하였다.

해산수당(퇴직금) 요구투쟁은 거의대부분 귀국하는 일본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주로 지역별로 그 지역에 거주했던 일본인들과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형식을 취했다.[44]

초기 노동운동 중에서 위의 두가지 경우는 결코 지속적인 운동이 될 수 없었다. 물론 해고반대투쟁과 같은 경우는 해방의 혼란기 동안에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지만, 단위 사업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한정적인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이 투쟁이 종료됨과 함께 거대한 실업자군으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투쟁으로 전화할 필요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다른 형태의 투쟁이란 곧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사업장을 계속 꾸려가는 형태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해방 초기의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노동자공장관리운동'이다.

노동자공장관리운동도 당초에는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띠었지만, 이미 운동노선에서 보이듯이 전평이 이 문제에 간섭한 것은 처음부터 보다 의식적이고 심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성대회 선언에서 '노동조합의 생산관리'(혹은 '관리전의 참여')로 표현되고 그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로서의 그 내용은 역시 막연한 것에 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노동운동의 초기적 모습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그 내용은 일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문제를 둘러싸고 공장관리운동의 기반을 제약하는 동시에 미군정은 노동운동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폐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 제한의 건'이라 명명된 군정법령 제2호(1945. 9. 8)는 "점령지에서도 사유재산의 보호를 제일원칙에 두는 미국적 자유의 이념에 입각"한다는 명분에 의해 노동자의 자발적인 접수관리운동을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이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군정법령 제19호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에서는 개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 즉 노동자조직이 노동자들에게 공동행위에 참가를 호소하거나 요지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쟁의는군정청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데 그 해결은 '최종적'이고 '구속적'이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노동쟁의에 군정청이 개입할 예정임을 천명하고 있다.

2. 산업건설운동

진주 초기부터 국내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한 미군정의 태도는 조공 또는 전평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민군정과 타협관계를 바꾸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보다 노골적으로 대미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전평은 "자주독립을 위한 건실한 통일전선 결성과 민중생활 확보를 위한 산업부흥의 필요"라는 목적에 의해 1945년 11월 30일 '산업건설 협력방침'을 제시했다. 이 방침은 사실상 기존의 노동자공장관리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공장관리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운동이 단순히 생존권 보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이 운동의 형태는 기존 자본가들을 몰아내기 위한 파업투쟁의 일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평이 제시한 협력방침은 기존의 노동운동 세력으로부터 방향점을 빼앗는 결과를 낳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부단위에 의해 무시되기도 했다. 이것은 전평조직과 노동대중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산업건설운동이 노동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946년 들어 노동자들이 중점으로 일으킨 노동운동이 '대악덕관리인 투쟁'이다. '관리인'제도는 군정법령 제33호(1945. 12. 6) '조선내 소재 일본인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에 의거 생겼다. 이에 따라 모든 일본인 재산에는 관리인이 파견되었는데, 이들 관리인의 대부분은 식민지시대의 관리나 매판자본가들이었다. 대악덕관리인투쟁은 공장의 관리권을 미군정에 넘긴 상태에서 그 관리인의 불법행위나 가렴주구에 대항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내는 싸움이었다. 이같은 투쟁은 이미 단순한생계투쟁, 혹은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권리투쟁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1946년에 들어서면서 전평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운동을 자신의 조직과 긴밀히 연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대중운동과 일정의 간격을 두고 말았다.

한편 1945년 12월 27일에 개최되었던 미영·소 3국의 모스크바협정은 한국의 신탁통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 직후부터 남한의 좌·우대립은 격화되었다.[45] 전평은 12월31일 성명을 내어 '절대반대'를 주장했지만, 3일 후 1946년 1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민족통일 자주독립 촉성 시민대회'에서는 '신탁통치 찬성'에 동조하게 되었다. 전평은 1946년 1월 5일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찬탁의 성명을 발표하고, 총력을기울여서 찬탁의 정치캠페인을 개시했다.

이러한 찬탁의 대중운동과 그 과정에서 발휘된 전평의 조직력을 직접 목격했던 민족주의파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들의 '반탁'노선을 지지하는 대중적 노동단체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46년 3월 10일에 '대한추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결성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변화와 함께 지금까지 미군정에 대해 지속적인 타협적 자세를 견지해 온 전평이 1946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커다란 전술적 변화를 갖었다.[46] 새로이 등장한 '신전술' 골간은 미국과의 비타협적 공격적 투쟁과 파업까지도 자제했던 타협적 노선의 깨끗한 포기였다.

미군정은 비슷한 시기에 전평의 자체를 위협하는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였다. 법령 제97호(1946. 7.23)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공포, 노동부 설치'에서 '민주주의적 노동조합'의 장려를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동법령의 제1조의 내용 가운데 자율적 노동조합을 강조함으로써 전평과 같이 정당의 산하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

44) 해방직후 일본인들은 '내지인 세와카이'(내지인세화회)라는 사적 단체를 설립하여 생업의 계속, 생활원호, 재산권 옹호, 본국 귀환 등에 관해 관민협력체제를 확립했다.

45) 상세한 내용은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문제 1943~46」",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pp.213 - 308 . 을 참조

46) 박일원, 「남로당의 조직과 전술」, (1947), (세계 복간, 1984), pp.31 - 32.

가 숨겨져 있다. 또한 노동부의 설치를 통해 지금까지 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온 노사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3. 9월 총파업과 전평의 와해

1946년 7월 중순에 전평 상임위원회는 파업회피지령을 정식으로 철회했다. 전평의 운동방침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변화는 7월 하순에 나온 조공의 새전술, 즉 '정당방위의 역공세' 채택을 전후하여 일어났다.생활고로 시달리는 노동자대중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었던 때에 전평지도부 일부의 파업회피지령이 나왔었고, 이 지령은 다시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취소되었으며 전평 기관지는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선동하는 글을 게재했던 것이다.

'쌀획득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7월과 8월, 서울 철도국 경성공장에서는 전평의 분회 대표를 중심으로 대한노총 조합원들도 참여하여 쌀배급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 운수부는 '적자타개와 노동자관리의 합리화'라는 이유를 들어 운수부 종업원 25 %를 감원하고 월급제로 지급되던 임금을 일급제로 바꾼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경성공장 노동자 3,700여명은 9월 14일 요구조건을 결정하고, 16일 요구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코넬슨 운수부장에게 제출하였다. 9월 23일에는 경성 철도종업원 대우개선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단행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24일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곧 전국의 철도노동자들에게 확산 4만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전국열차는 모두 운행이 정지되었다. 이에 전평은 24일 '남조선총파업회원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26일 '총파업투쟁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즉 전평이 총파업선언서를 통해 내건 요구조건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병행'이라는 전평운동노선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노동자의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총파업 선언에 따라 남한일대의 운수 및 통신기관은 마비상태에 빠졌다. 또 파업은 각 방면으로부터 동정투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총파업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지방인민위원회 및 농민조합(전농)의 활동과 연결되고 사태는 폭동의 양상으로 격화되어 갔다. 즉 파업투쟁은 정치적 총파업 또는 무장진출의 단계로 전개된 것이다. 그 양상은 처음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 경북 전지역으로 번졌고 다시 경남으로 전남으로 번져나갔다. 이처럼 철도파업을 기점으로 확산된 전국에 걸친 농민, 노동자를 중심한 폭동(10월 폭동)은 11월말까지 지속되었다.[47]

미군정 당국은 1946년 9월 30일 새벽 2시 경부터 장택상수도청장이 지휘하는 3,000여명의 경찰관과 철도경찰로 하여금 철도파업의 본거지인 용산의 등을 포위하고 압축케 하였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여 우익계 청년단체인 대한민청, 대동청년단, 서북청년단들의 단원들과 대한노총회원들이 합세하여 (<표4-3>참조), 각처에 돌입, 파업노동자들과 육박전을 벌여 16명의 전평계 노조간부와 1,200명의 노동자들을 검거하였다.

이렇게하여 서울의 철도파업의 본부가 미군정 당국의 강력한 조치에 의하여 붕괴되자 10월 1일 대한노총에서는 파업이 수습되었음을 알렸다.

결국 전평 산하 노동조합들은 9월 총파업을 계기로 미군정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노골화했으며, 미군정은 또 우익 노동단체인 대한노총과 협력하여 좌익 전평노조를 제거하고 말겠다는 태도를 명백히 한 결과가 되었다. 전평은 이와 같은 정치투쟁의 과정에서 미군정의 강력한 단속정책을 만나 점차비합법 지하단체로 전환하는 운명을 걷게 된 것이다.

9월 총파업 이후 조직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전평은 1946년말 이후로는 거의 세

47) 소림영부, "해방직후의 한국 노동운동",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돌베개, 1982), pp. 460 - 467를 참조

〈표4-3〉 민족진영단체 일람표

단 체 명	창립년월	지도자명	지 도 자 의 약 력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46년 3월	전 진 한	경북문경출신. 조대정경과졸업. 동경에서 협동조합운동종사. 1928년 민족단일당운동중 피검. 1년체감. 해방후,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1945.11 창립, 총재 이승만, 부총재 김구)위원장
서북청년회		문 봉 제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채 규 항	
대동청년단		이 청 천	경기도출신. 구한국시대 정부파견생으로 일본사관학교 졸업. 제1차세계대전시, 일본군의 견습사관으로 청도전에 참가. 기미년(1910년) 일본군에서 탈출. 만주독립군교육. 만주사변시, 흥진과 독립군하에서 중국군에 협력. 망명후, 장개석원조하에 조선청년에게 군사훈련. 전광복군총사령.
민족청년단		이 범 필	20세전 상해에서 독립운동에 참가. 진남군관학교 졸업. 기미년만주에서 조선인청년 군사교육을 위한 군관학교설립. 임시정부군무부 요원

* 자료 : 조선통신사, 『조선년감』 1947, 1948, 정계요인록에서 작성
소림영부의 앞의 글, p. 451에서 재인용.

력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허약해진 전평이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1947년 3.22총파업이었다. 미군정의 좌익세력에 대한 계속적인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전평은 3월 22일 전국적으로 24시간 시간제 동시파업을 단행했다. 3.22총파업의 요구사항은 전부 정치적 요구 일색이었다. 이는 이미 전평이 노동자의 중앙조직으로서 노동자들의 일상이익을 위한 투쟁을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22총파업도 그 결과로 남은 것은 2,000여명에 달하는 관계자들이 피검되는 조직의 손실밖에 없었다. 이것은 9월총파업으로 인해 당한 조직의 손실과 더불어 전평의 조직을 완전히 붕괴시킨 최후의 결정타였다. 이후 전평의 활동은 철저하게 지하화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명망가의 대외적 외교활동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전평은 일제말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지하화하여 비합법적 노조운동을 하거나 게릴라로 전환되었고, 이같은 비합법 무장투쟁은 한국전쟁시기까지 계속되었으나 전쟁이 끝나고 분단체제가 고착되면서 전평도 동시에 최종적으로 붕괴하게 된다.

제3절 전평의 평가

전평의 노동운동은 운동의 기본성격이 일제하에 전개된 비합법 지하노동운동의 계승자였다. 즉 전평은 혁명적 사회주의 이념과 목표를 자기 것으로 하고 전개된 운동이다. 흔히 전평의 이러한 기본입장이 단순히 해방이후 국제정세의 좌우대립의 산물로 이행되고 있으나, 근원적으로는 민족해방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그같은 사회주의혁명노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전평이 발표한 선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전평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사상한 채 정치투쟁만으로 지도하려는 좌익 소아병적 경향의 위험성을 크게 강조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돌보는 투쟁을 벌로 하지 못한 채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극렬한 투쟁을 전개하다가 미군정 및 우익단체들의 격심한 탄압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전평이 총파업 등의 투쟁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군은 해방군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점령군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일제하 관념적인 운동 자세로부터 발생한 분파·패전주의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그들 내부의 통일성 형성과 민족주의자와의 연합형성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세째, 기층 대중의 요구와 일치하는 노동운동을 대중적 형태로 전개하지 않고 자기과시적인 정치투쟁에 치중함에 따라 이후 모험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전평의 총파업과 폭력투쟁의 실패과정은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을 무시한 시기상조이거나 속도를 상실한 전술의 연속적 채택에 의하여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해 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물론 전평의 운동노선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좌우대립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일제하에서도 비합법 노동운동이 끈질기게 지속되어 왔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945년 이후의 유리한 운동조건 속에서 그것이 대중 속에서 더 광범하고 철저화하지 못한 데는 전평이 걸어왔던 운동노선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 5 장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과 노동운동

제 1 절 대한노총의 성립

해방직후 우익 노동조합은 다음 두가지 점에서 그 발생근거를 두었다. 첫째, 해방 직후 격발하기 시작한 노동쟁의들이 전평의 조직하에 조직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점차 직접생산자들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생산관계를 변혁시키려는 운동으로 전화되자, 여기에 위기를 느끼게 된 자본가 및 전통건지주들이 여하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생산지점 외부로부터 힘(물리적 힘인 군대와 경찰)을 투입함과 동시에 생산지점 내부에서 직접생산자들의 투쟁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있는 메카니즘(이용 노동조합)을 고안하게 되었다. 생산지점 내부에 노동단체를 위장한 대항단체를 조직하는 사업을 지도하기 위한 중앙본부로서 급조된 단체가 대한노총이다.[48]

둘째, 해방직후의 정치상황에서 대중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우익 민족주의자들이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좌익 대중조직에 대항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49] 미군정 노동부와 합의에 의해 조직된 것이 대한노총이다.

현실적으로는 전자의 내용이 후자의 이면에서 함께하여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대한노총의 성립경로는 후자의 내용을 통해 전개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가 발표하기 바로 전인 1945년 11월 2일 우익 청년 단체들은 좌익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역량집결의 필요성에서 당시 난립상태에 있었던 10여개의 청년단체들이 모여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50]을 결성한 바 있었다.

48) 고현진, "미군정기의 노동운동", 송건호·박현채 외, 「해방 40년의 재인식 I」, (돌베개, 1985), pp.197-198.
49)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 -해방후편-」, (청사, 1982), pp.78-79.
50) 독청의 인적구성에는 총재 이승만, 부총재 김구, 위원장 전진한이었다.

독청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노동자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들이 안재홍이 이끄는 국민당 청년부사람들이었다. 이에 따라 우선 독청내에 노동부를 두고 그 부장에 당시 국민당 청년부 차장이었던 홍윤옥이 임명되었다. 홍윤옥은 김구와 당사 미군정 노동부 차장 박택을 만나 우익 노동단체를 만들겠다고 제의, 즉석에서 합의하고 조직에 착수한 것이 대한노총이었다.[51]

대한노총의 결성대회는 1946년 3월 10일[52] 서울 시내 사천교당에서 있었는데 15개 직장에서 45명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대회장에는 김구, 안재홍, 조소앙, 엄항섭 등 우익계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하고, 고문에 이승만, 김구, 김규식, 안재홍, 조소앙을 추대하여 그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성된 대한노총은 주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승만, 김구, 안재홍 등 우익 정치인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을 조직에 끌어 넣으면서, 모스크바 3상회의를 지지하는 전평 타도를 위한 대열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대한노총의 조직진척 상황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조직의 하향성이다. 즉 총연맹이 먼저 결성되어 지구연맹을 결성하고, 그 지구연맹이 단위조합 결성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 사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노총의 조직확대는 이미 산별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던 전평의 지역별 조직을 작전단위로 하여 실질적으로 분해·축출하는 과정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대한노총의 성격은 결성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결성대회시 채택된 각종 문헌에도 잘 드러나 있다. 즉 선언문이나 강령에 나타난 바

〈표 5-2〉 산업별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 (1947년 9월 현재)

사업체및노동자수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 수											
			대한노총산하			전평산하			기 타			합 계		
	사업체	노동자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금속공업	226	7,722 226	17	821	25	-	-	-	1	95	-	18	916	25
기계기구공업		17,717 469	55	7,366	128	7	743	12	4	149	4	66	8,258	144
화학공업	299	13,961 4,949	38	4,567	953	3	532	365	6	431	52	47	5,530	1,370
가스업·전기업	43	7,091 641	9	4,391	535	-	-	-	-	-	-	9	4,391	116
수도업														
요업및토석공업	241	6,812 652	9	864	31	1	188	84	1	153	1	11	1,194	116
방직공업	474	13,568 27,935	52	5,015	10,721	1	50	480	7	985	2,623	60	6,050	13,824
제재및목제품공업	272	9,588 144	5	443	71	-	-	-	1	8	-	6	451	71
식료품공업	369	13,185 2,925	12	1,055	110	-	-	-	1	63	3	13	1,118	113
인쇄및제책업	136	4,567 513	11	870	192	1	11	-	-	-	-	12	881	192
토목건축업	123	15,068 381	1	49	-	-	-	-	3	91	-	4	140	-
기타공업	159	4,818 1,601	12	1,348	242	-	-	-	4	225	25	16	1,573	267
	2,736	114,097 40,435	221	26,778	13,008	13	1,524	941	28	2,200	2,708	262	30,502	16,238

51) 자세한 내용으로는 ① 노동문제연구소, 「노동공론」, 1971, 12월호에 실린 박택, 배창우(대한노총 초대 조직부장)의 회고담을 참조.
② 최형기, 「노동자와 노동절」, (석탑, 1985) pp.62-64.
52) 매년 5월 1일 거행되었던 '메이데이'행사는 1959년 이후 대한노총의 생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1963년 이후 '근로자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

로는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및 요구조건을 제시하기 보다는 막연한 행동지침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노총의 제1차적 목표는 노동생활의 제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운동의 억제와 반공투쟁에 두었으며, 일상적이며 항상적인 단체로서 의도되었다기 보다는 모종의 의도하에 단기간에 급조된 것이었다.

〈표 5-2〉에서 볼 수 있듯이 1946년 9월 총파업 진압과정에서 전평에 대한 미군정의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것과 발 맞추어 대한노총의 조직확대 공작은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47년 9월 대한노총이 결성된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전평산하 노동조합들은 거의 다 타도되고 대한노총이 남한의 지배적인 노조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절 미 군정하 대한노총의 특징

이상과 같이 기반을 굳힌 대한노총은 195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을 치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활발하게 반공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하면서 노동자 속에서 그 조직을 확대해 갔다.

미군정기까지의 대한노총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에는 대중조직의 중요성을 경시했던 우익 정치세력이 반탁운동과 반전평, 반공운동을 목적으로 급조한 노동자 조직이다.

② 그 결성과정에서도 미군정의 비호 아래에서 하향식의 결성을 하였다.

③ 노동조합의 본래적·중심적 기능인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와같은 경제적 수행을 저지하기 위해 온갖 정치적 기능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시종일관했다. 즉 정치적 기능 그 자체로서 기형적으로 비대화되었기 것이다.

④ 많은 민간 기업체에 있어서도 전평을 타도하기 위하여 기업주들은 대한노총 계통의 노동조합결성을 적극 지지했으며, 전평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를 감수해야 했다.

⑤ 대한노총은 "모든 번잡한 이론은 타파하고"란 선언문의 구절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철저한 무이론을 그 특징으로 했다. 대한노총은 그 실체적 이해관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조차도 예컨대 노동조합주의조차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대한노총의 헤게모어 쟁탈전이 어떠한 이념투쟁도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파벌투쟁으로 점철된 원인중의 하나로 이같은 원초적인 무이론때문이기도 하다.

요컨대 미군정기의 노동운동의 전개는 해방직후의 사회구성의 급격한 변모와 정치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다시 한국 사회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제6장 결 론

한 나라의 노동운동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대개 그 나라의 노동자의 수, 노동자의 의식수준, 산업의 발달정도, 노동운동 세력의 양과 질 그리고 정치적 상황 등 여러가지 조건이 관계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에 있어서 특히 해방직후, 미군정기의 노동운동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들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주도하의 세계체제적 맥락에서 한국의 해방이 갖는 의미는 동서냉전의 기초를 이루는 새로운 정치적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였다. 이러한 외적 계기에 반해 한민족에게는 새로운 민족국가와 국민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계기로 어떠한 성격의 국가와 경제체제를 이룩할 것인가는 한국사회의 구성원간의 합의와 경쟁으로 결정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해방직후 한민족에게 주어졌던 계기는 국제 냉전체제라는 냉전체제로 편입이 강요되는 외적 작용과 구심점을 상실한 민족세력의 격렬한 대립과 갈등으로 그 의미를 상실하고 나아가 분단으로 악화되는 경로를 밟았다.

격을 좌익적 경향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째, 이 시기의 노동운동을 임금노동자의 노동쟁의라는 일반적 성격에 더하여 해방이후 전환기의 사회, 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의 성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네째, 전후 사회주의 세력의 팽창저지를 기본 전략으로 삼은 미군정이 보수세력과 연합하게 되고, 이들과 좌익적 성격을 갖는 노동운동과는 대립관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격화된 노동운동에 대하여 미군정은 노자협조주의·개량주의의 원칙으로 대응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탄압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전평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붕괴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한노총은 미군정과 우익진영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 또한 이처럼 좌익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노동운동 전통의 단절은 해방 3년동안의 사회변동 과정 속에서 좌해의 길을 걷게된 좌익진영의 운명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다섯째, 해방직후 노동운동의 주도세력으로서 전평의 운동은 노동자들의 일상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투쟁과 통일된 자주적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투쟁의 상호통일하에서 진행되었다.

여섯째,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미군정과 결탁한 각종 우익청년단체, 경찰, 군대 등이 강력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였고, 갈수록 기민해졌다. 또한 분단지향적 지배세력이 형성됨으로써 냉전사고가 노동운동에 대해서 강한 억압의 논리로 작용하게 되었다.

일곱째, 치열한 당시의 노동쟁의는 미군정 정책에 영향을 미쳐 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정 정책의 변경을 가져왔다. 군정청은 법령 제118호 '파도 입법의원의 창설' (1946년 8월 24일, 10월 12일 공포)을

이러한 상황하의 노동운동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전평이 주도한 공산주의 혁명의 일환으로서의 민족해방운동과 대한노총이 주도한 반공투쟁으로서의 전평 타도운동이 상호 대립·투쟁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같은 미군정기 노동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운동이 급격히 고양되었다. (〈표 6-1〉참조) 이는 해방직후 사회경제상태의 악화된 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노동자들은 전평을 통해 좌익 정치운동에 동원되기도 했지만 그들의 생활조건에 대한 극복의 소망을 전평의 투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중의 정치적 지향은 특정세력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요구와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표 6-1〉 쟁의참가자수와 결과
(1945년 8월 ~ 1947년 3월말)

쟁의건수	2,388 건
참가인원	586,786 명
사망자	26 명
피검거자	7,886 명

자료 : 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8년도판, p.260.

둘째, 해방직후의 노동운동의 주도세력으로서 전평의 성격이 일제하 지하에 잠복해서 민족해방운동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잠재세력의 성격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단기간내에 노동조합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직력을 가능하게 했고, 해방직후의 노동운동의 성격을 좌우하게 했다.

셋째, 노동운동의 합법적 주체로 등장하는 대한노총의 성격이 정부수립이후 1950년대 노동단체의 정치도구화를 초래했고, 그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민주화와 자율화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노래·사진으로 본 한국 현대사



바람앞에 탄식한다.

최 익 현

만리라 행색은
범의 굴을 이웃했고,
백년이라 회포는
용천검(龍天劍)을 만지도다.
나라 원수 못 갚고
몸이 먼저 늙었으니,
바람 앞에 다달아
탄식하고 파람한다.

운수가 비색하여
사해(四海)가 곤궁하니
예나 제나 사기(士氣)는
실날같이 약하구나.
시세를 타고 나온
서양놈들이,
손아귀에 잡아넣고
조롱을 하네.



그날이 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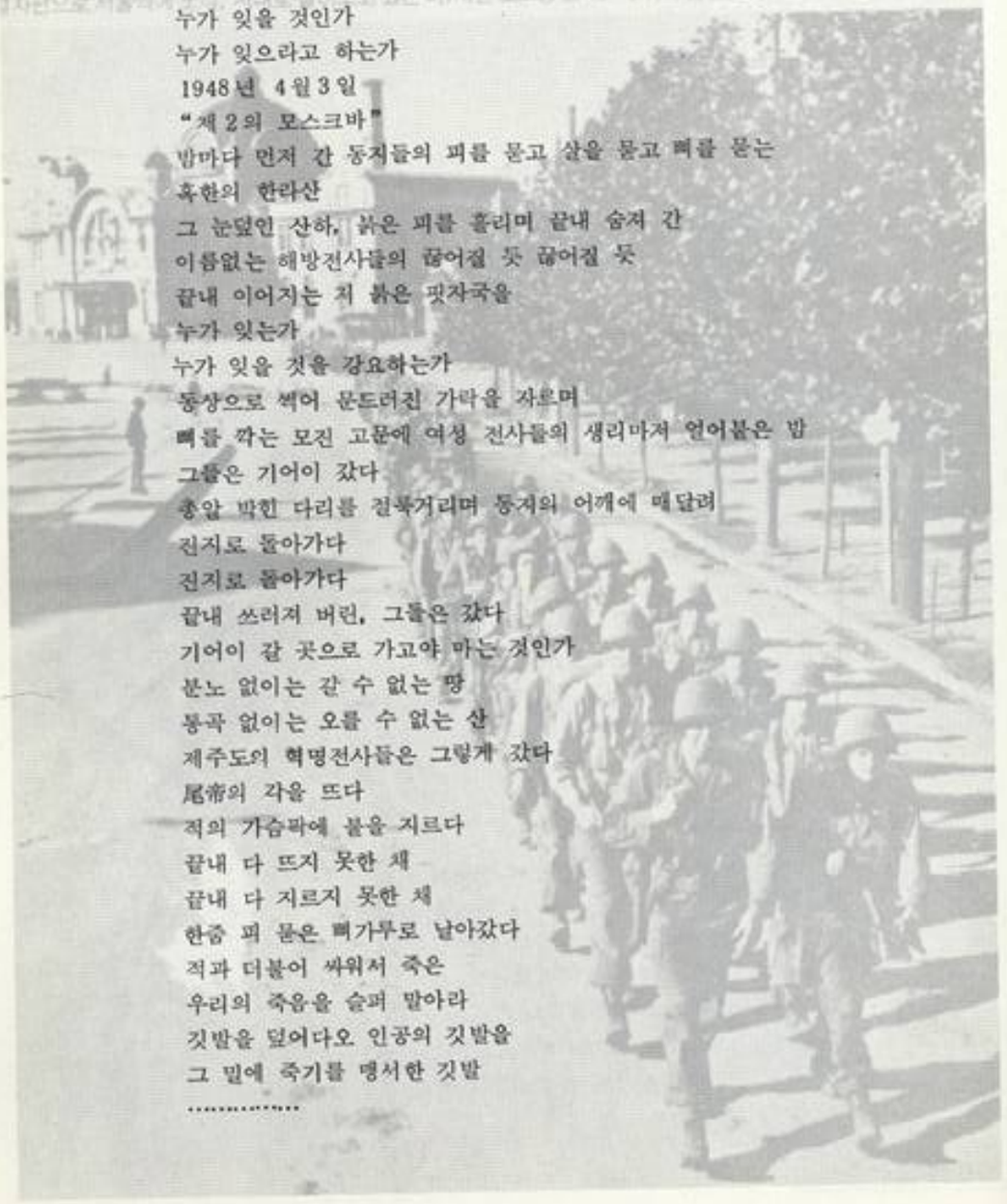
심 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
삼각산 일어나 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놈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꺼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美軍「京城진주」퍼레이드

한 라 산



〈2〉
이 땅은 아메리카의 한 州
그들의 병영에서 짐승처럼 사육되어 왔던 수많은 날들
그 수많은 신음의 밤들을
누가 잊을 것인가
누가 잊으라고 하는가
1948년 4월3일
"제2의 모스크바"
밤마다 먼저 간 동지들의 피를 묻고 살을 묻고 뼈를 묻는
혹한의 한라산
그 눈덮인 산하, 붉은 피를 흘리며 끝내 숨져 간
이름없는 해방전사들의 끊어질 듯 끊어질 듯
끝내 이어지는 저 붉은 핏자국을
누가 잊는가
누가 잊을 것을 강요하는가
동상으로 썩어 문드러진 가락을 자르며
뼈를 깎는 모진 고문에 여성 전사들의 생리마저 얼어붙은 밤
그들은 기어이 갔다
총알 박힌 다리를 절룩거리며 동지의 어깨에 매달려
진지로 돌아가다
진지로 돌아가다
끝내 쓰러져 버린, 그들은 갔다
기어이 갈 곳으로 가고야 마는 것인가
분노 없이는 갈 수 없는 땅
통곡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
제주도의 혁명전사들은 그렇게 갔다
尾帝의 각을 뜨다
적의 가슴팍에 불을 지르다
끝내 다 뜨지 못한 채
끝내 다 지르지 못한 채
한줌 피 묻은 뼈가루로 날아갔다
적과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깃발을 덮어다오 인공의 깃발을
그 밑에 죽기를 맹서한 깃발
.....

〈4〉
돌려주자
오늘도 노란 유채꽃이 칼날을 물고 잠들어 있는
아/ 피의 섬 제주도
그 4.3이여,
우리의 심장에서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이 진달래꽃을
그 누가 꺾을 수 있으랴
돌려주자
기름진 지주와 자본가의 살을 죽창에 꽂아
그들에게 돌려주자
공장의 프레스에 싹둑싹둑 잘려 나간 노동자들의 손가락을
포크레인에 찍힌 철거민의 팔과 다리를
열어붙은 배추포기 같은 삶을 살다 농약 속으로 사라져 간
농민들의 그 골수에 사무친 원한을
그리고
푸르른 5월의 금남로를 승냥이처럼 할퀴고 간
저 피 묻은 손을
찢어,
갈갈이, 찢어서,
"조국 아메리카"의 후예들에게 돌려주자
그리하여
똑똑히 들어라
우제통이 빨간 것은 빨갱이 사상에 물든 탓이 아님을
바로 너희들 때문임을
한반도 인민들의 피가 붉은 것도 바로 너희들 때문임을
그리고 침묵하라, 피로 맺어진 "혈맹 우방"이여
그대들이 두 눈 뜨고 살아 있는 한
우리는 잠들 수가 없다
너희 들의 칼날 위에서 우리는
잠들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잠들 수 없는 이 해방의 산하에
싹둑 잘려 나간 손가락이 아직도 팔팔 살아뛰는 붉은 피가
있어
농약 먹은 가슴으로 타오르는 싯붉은 피가 있어
단한의 불꽃으로
단한의 불꽃으로
저 헐벗고 굶주린 노동자 농민들의 여윈 손들이 숲을 이룰 때까지
마침내 해방의 숲을 이룰 때까지
적들의 심장에 불벼락을 안겨주자//
적들의 시체를 넘고넘어 동지의 시체를 되돌려 받자, ///

문점 우체 회담

휴 전 선

이 영 진

어느 날 보이기 시작했다.
인생이 죽음이다 싶은 때, 이상하게도
휴전선이 보였다.
책상 위에도, 커울 속에도, 재떨이 위에도, 밥상이나
내 막막한 가난 위에도
휴전선이 보였다.

휴전선의 철조망은
내 목숨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내 목숨의 한계였다.
내 일상의, 내 꿈의
더 나아갈 수 없는 한계였다.

하늘에도 휴전선은 가득 펼쳐져 있었고
나는 하늘을, 그 한계를
그 넘어갈 수 없는 슬픔을 고개를 젖히고 바라다 보며
눈물이 났다.

깊은 하늘 속에서는
자꾸 맑은 눈물이 솟아 났고
휴전선의 저 끝
저 끝에서 오는 찬란한 눈물

나는 내 목숨을 넘어, 밥상과 가난을 넘어
펄럭이는 성조기를 넘어, 한없이
한없이 차오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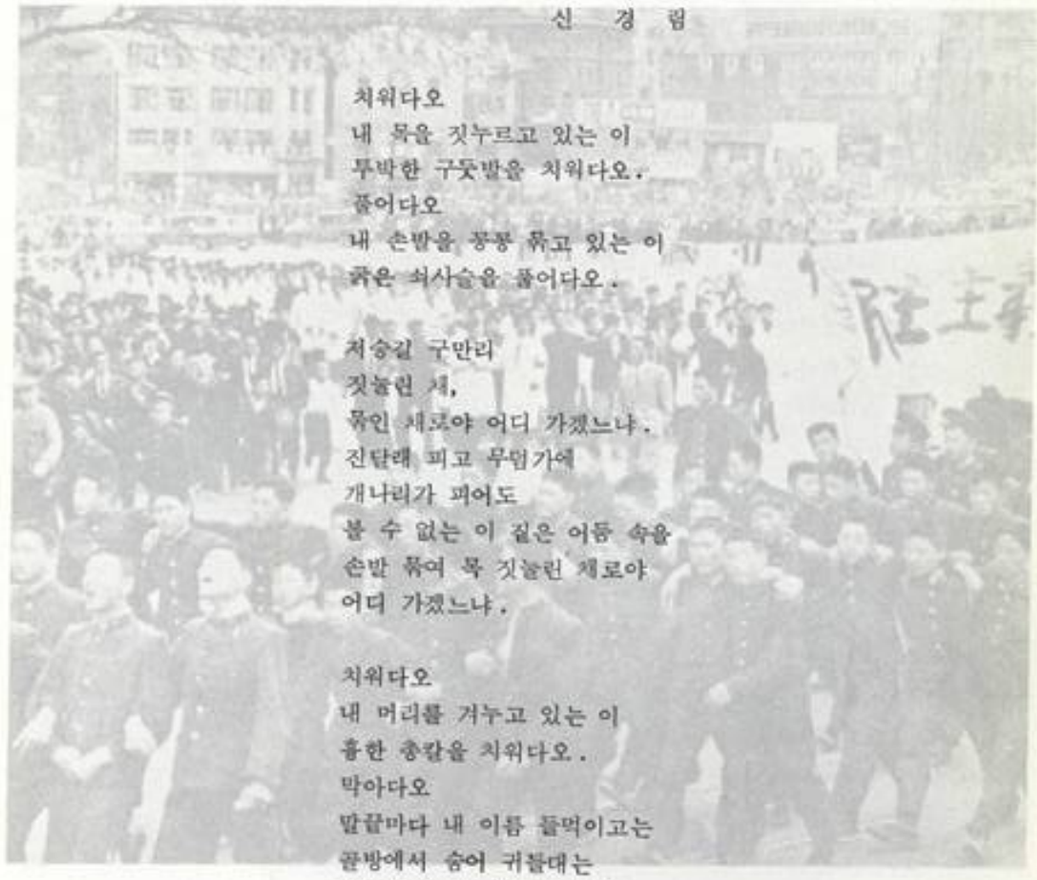
다시 눈을 뜨고 바라다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제히 제 낡은 이름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푸른 가을 하늘 밑에는
아무 것도 이름이 없었다.
휴전선도 꽃도 바람도 무덤도
나를 가두어 버리는 쇠창살도
그곳에는 마침내 아무 이름도 없었다.

남으로도 북으로도
그저 이름도 두려움도 모르는 빛나는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4 월 19 일

—수유리 무덤 속 혼령들의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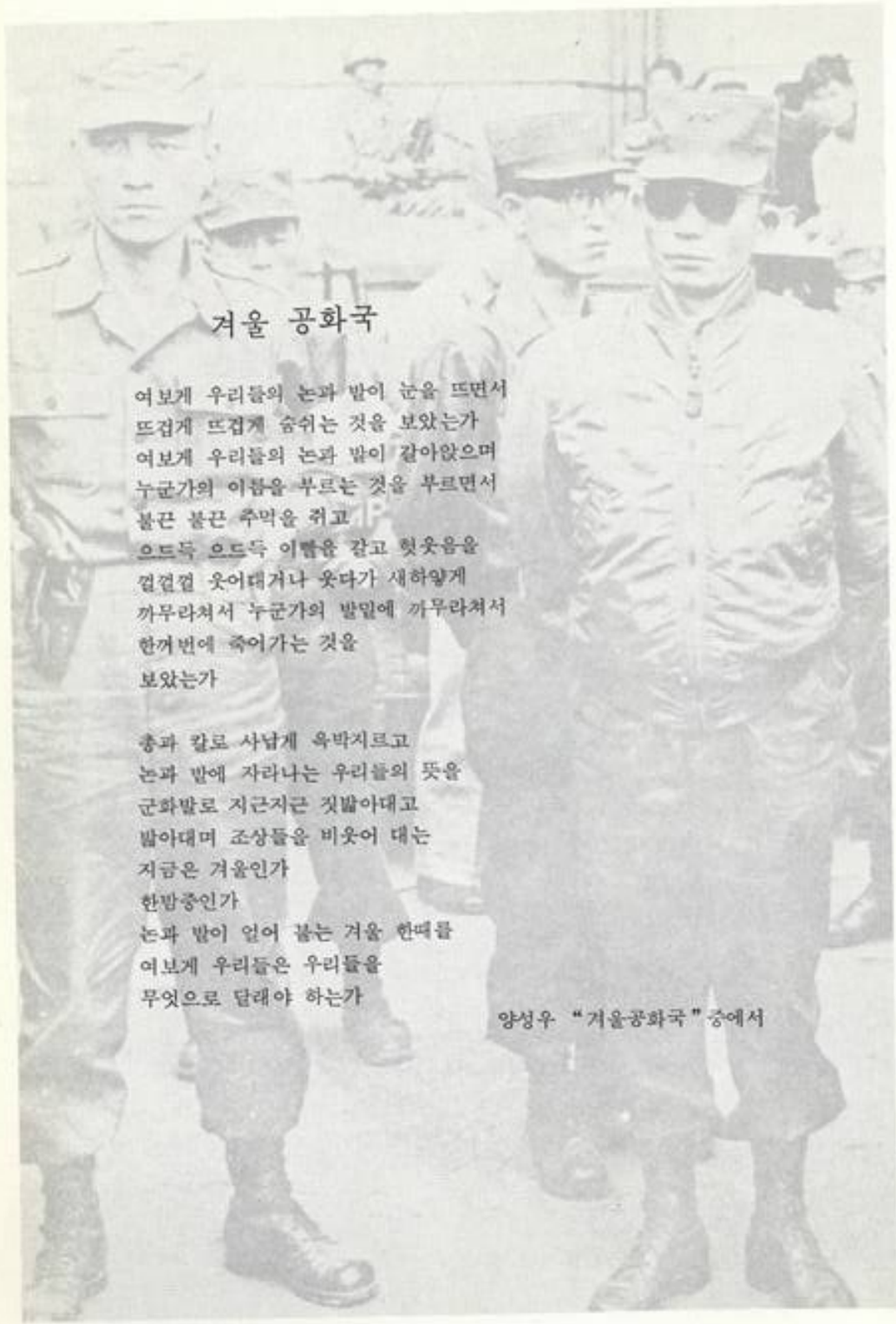
신 경 림



치워다오
내 목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무박한 구둣발을 치워다오.
풀어다오
내 손발을 꽁꽁 묶고 있는 이
굵은 쇠사슬을 풀어다오.

저승길 구만리
깃놀린 채,
묶인 채로야 어디 가겠느냐.
진달래 피고 무덤가에
개나리가 피어도
볼 수 없는 이 짙은 어둠 속을
손발 묶여 목 깃놀린 채로야
어디 가겠느냐.

치워다오
내 머리를 겨누고 있는 이
흉한 총칼을 치워다오.
막아다오
말끝마다 내 이름 들먹이고는
골방에서 숨어 귀틀대는
저 더러운 웃음을 막아다오.



겨울 공화국

여보게 우리들의 논과 밭이 눈을 뜨면서
뜨겁게 뜨겁게 숨쉬는 것을 보았는가
여보게 우리들의 논과 밭이 갈아앉으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부르면서
불끈 불끈 주먹을 쥐고
으드득 으드득 이빨을 갈고 헛웃음을
껄껄껄 웃어대거나 웃다가 새하얗게
까무라쳐서 누군가의 발밑에 까무라쳐서
한꺼번에 죽어가는 것을
보았는가

총과 칼로 사납게 욱박지르고
논과 밭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뜻을
군화발로 지근지근 짓밟아대고
밟아대며 조상들을 비웃어 대는
지금은 겨울인가
한밤중인가
논과 밭이 얼어 붙는 겨울 한때를
여보게 우리들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달래야 하는가

양성우 "겨울공화국"중에서



전 태 일

한국의 하늘아
네 이름은 무엇이냐
내 이름은 전태일이다

학살 2

김 남주

오월 어느 날이었다.
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80년 오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대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아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음산한 밤 12시였던가

오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 날 낮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이 민족의 침략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낮 12시 나는 보았다.
민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군의 군인들을
낮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아 얼마나 무서운 낮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노골적인 낮 12시였던가

오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도시는 벌집처럼 쑤셔놓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밤 12시
바람은 살해된 처녀의 피묻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밤 12시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의 눈동자를 파먹고
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아 얼마나 끔찍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조직적인 학살의 밤 12시였던가

오월의 어느 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 날 낮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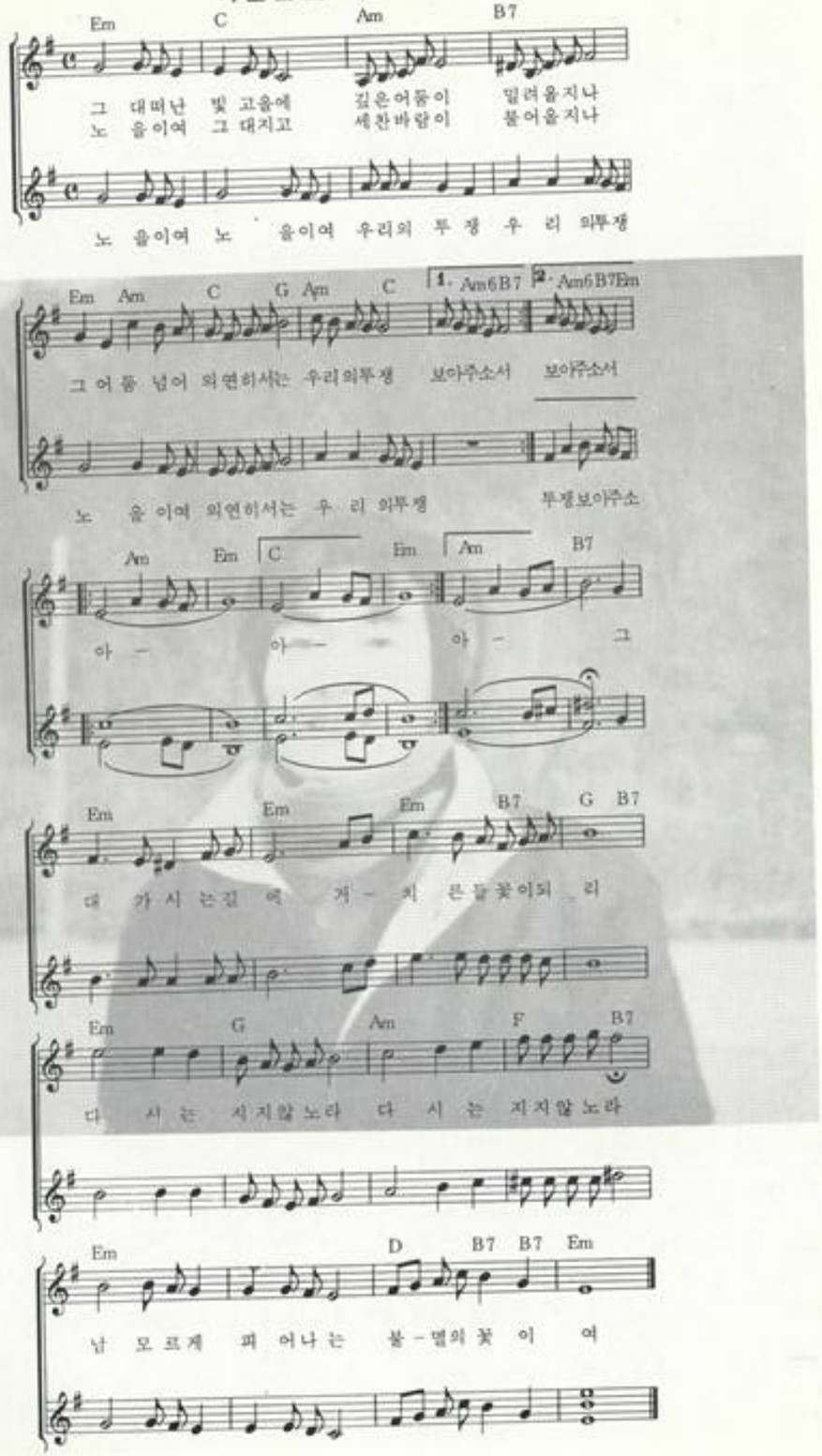
낮 12시
하늘은 핏빛의 붉은 천이었다.

낮 12시
거리는 한 집 건너 울지 않는 집이 없었다.
무등산은 그 옷자락을 말아 올려 얼굴을 가려버렸다.

낮 12시
영산강은 그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거둬버렸다.

아 게르니카의 학살이 이리 처참하지는 않았으리
아 악마의 음모도 이리 치밀하지는 않았으리

이한열열사 추모가





노동의 새벽

박 노 해

전생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가지
이럭다간 끝내 못가지

설은 세 그릇 짬밥으로
기울부성이 체력전을
전력을 다 짜내어 바동치는
이 전생 같은 노동역을
오래 못가도
끝내 못가도
어쩔 수 없지

달콤한 수만 있다면,
전이 빠져, 허깨비 같은
스물아홉의 내 운명을 날아 버릴 수만 있다면
아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멍에를,
이 운명을 어쩔 수 없지

닫어쳐진 육신에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노동을 위하여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기어코 깨뜨려 솟구칠

민중과 하나되는 그날까지

白　基　琓

아직은 캄캄한 밤
아직은 그 속에 밝힌
캄캄한 새벽

새벽녘 추위가 더 매서워
쏠리는 허기를
허벅지를 꼬집어
거역하는
이 작은 싸움에
뒤틀리다 보니

그날에 무너지던
꿈의 언덕이 떠올라
서릿발 같은 분노가
뽀얗게 앞을 가린다

우지 마라
꿈은 깨져야
삶으로 굽이치고
감돌아 광야를
적시나니

이 어두움에 묶여
잠 못드는 형제여

날마다 찢어져도
날마다 뿌리쳐라
민중과 하나되는 그날까지

무엇이 그리 서러운가
기름진 논과 밭도
못 잊어 휩쓸리는 거리도
정든 안방도
건넌방 쌀뒤지도
탈쇠 오라에 피가 맺히고
그 동맥을 거머쥔
콧대 높은 낙짓발
이제 천지는
반역과 의기만으로
가파르게 맞섰나니

돌아서면 죽음이요
깨치면 천지개벽이라

형제여
젖먹이적 밑힘마저
다한들 이 밤을
네 힘으로 헤치라

마지막 눈빛에
흙이 들어온들
발끝이 눈이 되어

그것마저 끌리면
온 몸으로

나뒹구는 한이 있어도
민족과 하나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말라

짜임글 II

현정세와 한국경제

1. 올바른 정세 분석을 위하여
2. 5.5공화국의 출발



"올바른 정세 분석을 위하여"

강 원 호
경제학과 87 졸업

〈서 론〉
〈본 론〉
1. 한국사회의 모순관계의 형성
1) 한국자본주의를 보는 시각
2) 개방경제체제와 자본축적
3) 수출주도형 재생산구조와 독점자본의 발전
2. 최근 정세의 성격과 전망
1) 군부독재 지배체제의 위기
2) 한국의 재생산구조와 자본축적
3) 한국의 정세에 대한 전망
〈결론을 대신하며〉

〈서 론〉

작년 6.29선언이후 집권세력의 소위 개량정책은 과연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당시까지만해도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기만에 불과하며 현 군부집권세력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 숨을 쉴 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를 적극 환영하기도 했다. 이는 한편으로 여당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다시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6월 이전의 노골적인 탄압 국면으로 급선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연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현 여당이 승리하여 노태우가 집권을 한 지금에, 그러한 예상은 현실화하지 못했고 기우였음이 들어났다. 적어도 현재 시기에서는 88년 올림픽까지는 이러한 유화국면, 내지는 개량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군부독재세력이 그간의 지배의 방식을 포기하고 6.29 - 대통령선거 - 총선(구체적으로는 소선거구제)로 연결되는 변화의 이유와 그 본질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상황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현재 전개하고 있는 정세를 좀 더 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노력으로 쓰여진 것이다. 즉 개량국면을(한편 이러한 표현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유화정책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가능케 했던 것은 혹 한국사회의 토대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가? 아니면 6월투쟁 이후 일시적 수세에 몰린 지배권력이 구사하는 기만적인 조치에불과한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결론적으로 이해할 성질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즉, 우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사회의 성격상 그간에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그 위기적 상황들은 항상 세계경제의 모순이 심화되는 정도와 기층민중의 저항정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로는 그러한 상황들이 급격히 한국사회의 위기를 몰아갈 시기가 아니라는 점과, 지배권력이 진행해가는 개량정책이 상당부분 국민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점과 그 속에서 지배권력과의 모순관계를 잊고 있다는 사실정도로 그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 보다 정확한 상황의 분석을 통해 그간 정세분석 등에서 보여주었던 한계였던 교조적이거나 관념적으로 흘러 현실과는 담을 쌓는 아전인수격의 백지장같은 논리를 극복하여 보다 실천적인 이론으로 무기를 마련하는 철저한 실험정신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 본 론 〉

1. 한국사회의 모순관계 형성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의 구조적 정착 -

1) 한국자본주의를 보는 시각

흔히 한국사회를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여 진다. 즉, 2차대전 이후 세계사의 새로운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고도로 발전된 후진종속자본주의라는 특질을 말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는 한국자본주의는 고도의 독점출현이 나타났으면서도 사회적 생산력의 저천한 수준[1], 도·농에서의 소생산영역의 광범한 존속, 심지어 지주제의 확대재생산 등에서 보여지듯 선진독점자본주의와는 현격한 후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5.16이후 군사정권의 소위 "고도의 자본축적"의 과정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의 본질은 다름아닌 민중적 생존의 유혈적 봉쇄 및 수탈을 통해 수행된 종속적[2] 발전인 것이다. 그로 인해 한국사회는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내적모순과 그 발현으로서의 일련의위기를 겪게 되었다. 한국독점자본주의의 형성, 발전의 과정은 일차적으로 2차대전 후 세계사적인 조건의 변화[3] 속에서 새로운 역사적 제조건이 어떻게 한반도에 규정되는가에 의해서 밝혀진다. 이는 즉 제국주의 세계체제내에서의

---

1) 그러나 독점자본 혹은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이나 고급 첨단산업부분의 생산력 축적 수준은 높은 상태이다. 여권 256KDRam이나 4메가 DRam등의 수준은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사회적 평균 생산력수준, 국내 생산력에의 연관성 부문에 관련하여 볼때 근본적 한계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여기서 종속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주변부 자본극의초 내지는 식민지반봉건 사회초에서의 소위 대리정치권력, 본질불변론과는 다른 '생리적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과 외적요인과는 다른 영역속에서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외재적으로 결합하는 상호의존적인 것 또한 아닌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각 사회구성체는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사슬을 구성하는 일련의 고리중의 하나로 되면서, 이것은 그것이 바로 각 사회구성체가 재생산되는 구체적 형태로 이해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때 한국 사회의 종속성이란 제국주의 상호간에 볼 수 있는 개별적 내지 특수한 경우의 종속이 아닌, 사회구성체 전체로서의 종속성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는 한국자본주의 재생산의 필수적 조건으로의 외국자본에 의한 국민경제의 지배 (금융적 종속과 정치, 군사적 종속), 특히 군사적 종속은 완전한 주권 상실, 그리고 한 민족이 두개의 적대적 사회 구성체로 대립되는 분단구조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대적 자율성과 주속성은 그 결합방식이 항상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구체적 정세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철「국가독점자본주의 혼과 민족경제」,「흑두서평 I」, p415.

3) 민족해방운동의 급격한 성장, 제국주의의 재편 및 새로운 발전, 특히 구 식민체제의 붕괴와 신 식민지주의의 전개,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의 탄생에 의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진영간의 모순점이다.

종속적 위치와 국민국가의 실존위에서의 국가의 선도적 역할에 의한 독점자본주의의 급속한 조기적, 조숙적 발전으로 규정될 수 있다. 여기서 종속성과 독점자본주의 상호이해는 중요한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성을 전후 한국사회의 지배적, 규정적 외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미국자본주의에 대한 반공군사기지로서의 특수한 위치에 기인하는 정치·군사적 종속과 소재보전, 가치보전의 경제적 재생산구조의 종속성[4]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잉여농산물에 대한 처리시장으로의 초기규정은 이후 한국농업의 피폐화와 그에 이은 종속적 경제구조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종속성은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일련의 중대한 형태변화를 겪고 있다. 즉,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의 변화는 원조이후 차관의 형태, 자본수출의 형태 및 국제분업상의 위치변화와 한국자본주의의 구조변화 등을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전후 한국자본주의에서의 자본주의 종속적 발전 및 그 현실적 재생산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국가의 개입양식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가 없는 순수한 자본운동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는 자본제 생산양식의 성립이해 항상 자본의 재생산과정, 생산관계, 계급관계 재생산의 필수적 존재조건의 역할을 행하여 왔다. 국가의 개입양식은 자본제 생산양식의 발전관계와 지배적 축적체제, 제국주의체제 내의 종속적 위치 등에 따라,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의 형성과정에 대응하여 변화된다. 이는 결국 노동력의 재생산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력이 상품으로서의 재생산은 자본관계의 존재를 위한 필수적 조건인데 이는 시장, 생산영역의 외부에서 필연적으로 국가의 개입에 의하여 계급갈등의 공간에 의해서만 현실화된다. 즉, 노동력의 상품으로서의 재생산은 상품이기를 거부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의 발전을 억압·봉쇄·포섭하는데 성공할 때만 달성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적발전은 민중에 대한 이중적 착취구조(국내독점자본의 수탈과 이를 매개로한 제국주의 자본에 의한 착취, 억압)은 한국전쟁이후 민중운동의 전면적 무장해제 상태에서 새롭게 자기세력화 하면서 끊임없이 지배세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형태와 질을 가지고 발전하여 오는데 이러한 민중운동에 대한 파악과 전망만이 정세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2) 개방경제체제와 자본축적

50년대 말 전후 최대의 공황, 달러위기를 맞은 미국은 달러방위를 위해 원조정책의 기조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옮겨가고, 미국원조를 기축으로 하는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적 재생산구조는 1957년 원조경제의 위기(성장둔화, 실업, 인플레 동시적 전개)를 맞는다. 이러한 위기가 정치적으로 표출된 4월봉기는 이정권을 붕괴하지만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대한 확고한 자기지향이 결여된 소부르조아적 학생운동이라는 한계로 5.16으로 귀결되는 내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5.16은 원조경제의 위기와 4.19에 의한 민족민주적 과제의 제기라는 두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을 요구받게 된다. 군사정권은 이를 국가개입의 양식과 세계자본주의에의 종속적 편입형태를 통해 대응하며, 이후소위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상 유례없는 고도의 축적=고도의 수탈로 자본주의적 지배체제를 이루게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현단계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질을 구성하는 제요소는 이때 형성된 것들이다. 군사독재세력은 자립경제건설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그것은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종속적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근본적인 개편을 광범한 민중적 기초 위에 선 권력만이 수행해 낼 수 있는 벅찬 과제였고, 민중적 기초가 결여된 5.16정권의 민족주의적 지향이 갖는 한계는 최초부터 명백한 것이었다.[5] 이리하여 군사정권은 차관을 주축으로 하는 종속적 '개방체제'로 선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아울러 그동안 한국에 대하여 반공군사기지의 의미를 부여하던 미국은 이를 더욱 확대, 한국내의 친미적 안정정권의 수립이라는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그간의 군사원조 중심에서 경제원조중심으로 크게 변화, 무상원조 시기와는 다른 적극적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리하여 한국에 대해 기존 경제계획기조의 수정과 종속적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미국의 후견하에 의한 한·일국교정상화로 일본자본의 광범한 진출[6]을 거치어 개방경제체제의 전환을 이룬다. 즉, 본격적인 무역·외환·자본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이다.[7] 이와 아울러 국가주권에 의한 자본축적의 과제로 진행된다. 이는 금융재정기구등을 통해 사적 독점의 육성·지원과 국가자본의 새로운 창출을 나타난다.

사적독점의 선도적 지원을 가능케 한 강력한 정부의 금융재정기구는 재정금융권 장악에 의한 정책금융체계의 확립[8], 금리개혁[9], 세제개혁[10]으로 마련되었다. 이렇게 동원된 막대한 자본은 사적독점의 급속한 축적을 낳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또한 새로운 국영기업, 정부투자기업 형태의 새로운 국가자본이 광범하게 창출[11], 제조업 부문에 사적자본이 취약성으로 진출 못하는 기간산업(철강·정유석유화학·비료 등)에서 외국자본과의 결합에 의하여 건설된다. 이는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상당수가 민영화됨으로써 사적독점자본 강화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였다.

결국 이러한 국가구조의 자본축적은 그 기본적 성격이 사적자본, 사적독점을 선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축적은 구조적 취약성, 내적 모순으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경제적 위기로 발현, 당시의 국내의 정치상황과 결합, 정치적 위기로까지 발전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부실기업과 불황, 국제수지의 위기, 인플레의 동시 진행으로 나타났다. 도입외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압박, 미국·일본과의 수직적 국제분업의 형성에 따른 중간재·자본재 수입수요의 권증, 사적자본의 취약한 축적구조에서의 국가의 특혜적 지원과 무분별한 과잉투자·시설, 이의 정치자금이나 투기업 자금으로의 유용(사채, 부동산 투기) 등에 의해 국가주도의 외자결합에 의한 축적구조는 내재적 모순이 경제적 위기로 들어난 것이다. 이에 수출시장의 압박(미국의 섬유류 수입규제)과 미국원조의 감소, 월남특수의 종식(당시 외환수입의 20%), 유엔군 수입의 감소 등이 가세, 위기는 더욱 격화되고 있었다. 또한 자본축적의 핵심적 수단이었던 저임금체제는 노동계급 내부의 도전으로 위기를 맞이하였다.[12] 또한 군부정권에 대한 야당의 계속적 공격과 학생들의 민주화운동 등이 가세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정세는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변화로[13]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허물어 뜨리고 이

4) 이는 자본수입과 잉여가치의 항상적 대외유출, 국제분업구조상의 종속적 위치등이다.

5) 이는 경제적으로는 화폐개혁과 부정축재처리를 통한 내자 동원노력의 실패, 차관로임의 부진, 흉작으로 인한 곡가의 파종(1963), 외환위기의 도래(1964), 인플레 양진등의 경제적 위기로 나타났고, 그나마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설정했던 자주적 경제구조의 설립은 그 단계를 겪게 된다.

6) 미일계 관계속에서의 동북아 문제 분담요구는 한·일 국교정상화로 귀결되었는데 일본제국주의의 과잉자본 수출이라는 일본의 요구와는 일치되었다.

7) 환율의 대폭 인상(130원→256.5원)(1964), 단일변동환율에 체택 165), 각종 수출지원정책과 수입규제 완화 금리현실화(15%→30%, 165)외자구입법제정, 가트가입, 수입규제 제도의 네가티브시스템 전환(관세개혁(67)등이었다.

8) 시중은행주식환수 정부출자의 특수은행 신설, 한국은행법의 개정에 의한 금융정책의 국가로의 이양 등이다.

9) 금리 현실화는 은행예금이자율을 단번에 두배인 30%를 올렸으며, 민간국내저축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다. 또한 환율에 의한 통화증발로 고도의 인플레, 강제저축으로 자금동원을 이룬다.

10) 재정규모의 급팽창, 국민대중의 조세부담급증등

11) 공기업수는 1961년 31개에서 66년 61개 70년 120개로 급상승한다.

12) 노중쟁의 건수는 1969년 130건, 1970년 165건에서 1971년에 1656건으로 10여배의 증가를 보여준다. 당시 저임금에 의한 축적구조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970, 11의 청계노동의 전태일 분석자살, 한영섬유 김진수의 청부살인 사건, 광주대단지 폭동사건 파월기술자 체불임금요구투쟁등 이었다.

13) 닉슨 독트린으로 표현되는데 미·중공접근, 미·소간 전략무기 제한 협정·주한미군 철수등이었다.

는 정치권력의 반공지배 이데올로기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리하여 한국자본주의는 새로운 재생산 구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축적 재개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곧 억압적 국가권력의 국가개입양식 =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 보증 = 유신체제와 세계자본주의로의 편입형태인 수출주도형 재생산 구조로 변화인 것이다. 이의 전제로서 파탄에 빠진 축적기조를 구제하는 작업으로, 60년대 후반의 고도축적에 내재한 모순으로 나타난 위기를 국가권력의 폭력적 개입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14]

3) 수출주도형 재생산구조와 독점자본의 발전

그간의 섬유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전략은 신보호주의와 새로운 경공업 경쟁국의 강력한 대두로 한계에 직면하기 시작한다. 또한 수입대체 중화학 부문의 과잉설비, 수직적 국제분업체제 속의 중간재, 자본재의 미·일의존, 차관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박에 따른 국제수지의 위기는 본격적인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화와 외국자본에 의한 국민경제의 지배를 의미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제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생산물의 실현을 세계시장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재생산구조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의 중화학공업화는 일본의 사양산업 이전에 따른 국제분업구조의 분화라는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외자도입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유치 등으로 마산·이리 등지의 수출자유 지역조성 등으로 섬유·전자의 저임금을 노린 일본·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상당히 진출한다. 그러나 외자의 주권 형태는 대부자본으로 되면서 토착독점자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70년대 말엽에 이르러서 절대규모의 권증과 함께 신규차입의 대부분이 원리금상환에 충당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중화학공업화는 한국자본주의가 제1차 석유파동을 중동건설에의 진출과 세계경제의 일시적 회복으로 벗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의 상대적 과잉인 국제금융자본 및 일본차관의 막대한 유입과 국내적으로 국민투자기금, 저축증강, 조세증징으로의 자금총동원체제로 독점재벌에의 특혜적 지원, 유신체제의 물질화의 저임금체제[15], 중동시장의 새로운 수출시장 창출에 힘입어 추진된 중화학공업화는 기본적으로 내구소비재에 집중, 기초중간재, 자본재부분이 결여되고 수직적 분업체계의 심화, 생산물 실현이 세계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재생산구조의 확립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재생산구조는 70년대 말, 80년대 초 자본축적의 위기에 봉착한다. 제2차 석유파동과 그에 따른 세계경제의 전반적 불황, 해외건설의 전반적 퇴조, 국제고금리의 개막, 막대한 원리금 상환의 압박, 실질임금의 급상승, 편중특혜에 의한 과잉, 중복투자로 이시기의 축적체제를 떠받치던 지주들이 이시기 동시에 붕괴함으로써 격심한 불황, 인플레, 국제수지위기의 동시 진행으로 국민경제의 파국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었다. 이후 유래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구조적인 장기불황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는 동시에 정치적 위기를 동반하였고 군부의 재등장과 민중운동의 질적비약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간 국가자본에 의하여 비로, 육성되어오던 독점자본은 70년대 말과 80년도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국민경제에 대한 전반적 독점체제를 확고히 다지게 되고 그간 수출주도형 경제구조하의 중화학공업을 직접담당하여 확보한 지배구조를 가져나가게 되었고 최강 그룹들은 세계적 독점체와 어깨를 겨루면서 '첨단산업' 분야에 까지 진출, 치열한 독점적 경쟁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적으로도 국가자본으로부터 독점, 독자적인 지배력과 그 물질적 기초를 이루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은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는 나타나듯이 국내에서의 자기 재생산구조를 가지는 구조는 되지 못하고 재생산위기를 겪을 때마다 세계경제체제에 더욱 편입되어지면서 스스로 국제분업구조에서 자기실현의 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면서 세계경제구조의 영향력을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80년도 중반기에 세계경제의 불황이 가져다준 '구조'라는 상황적 호재를 이용, 80년도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게 되는 또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2. 최근정세의 성격과 전망

1) 군부독재 지배체제의 위기

미국의 극동안정화정책에 의하여 형성된 한국 군부독재는 미·일제국주의의 이해와 요구에, 그리고 국내독점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민중에게 지지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민중에 대한 탄압을 위해 군부파쇼적 지배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급속한 자본주의화에 의하여 형성된 한국의 신중간층은 군부파쇼의 정치적 권리박탈과 폭력적 국민탄압정책에 반대하는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고, 종속적 독점자본주의의 심화과정에서 억압 당해오던 민중은 그 생존권의 침탈에 처절히 군부독재에 맞서 대항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지배체제에 대한 반대는 드디어 6월민주화 대투쟁을 정점으로 하여 지배계급중 비독점부분과 그 반대 세력과 함께(정치, 경제적으로 보수야권을 지지)군부독재타도 투쟁을 전개하였다. 결국 지배세력은 그간의 군부파쇼적 폭압통치에서물러나 개량적 양보를 통해 자신의 지배체제 재편성 작업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대통령 직선제선거를 통하여 그동안 군부통치를 민간민선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려 했던 신중간층들은 지배세력에 흡수되어 갔으며 민중들은 6월투쟁이후 7.8월 노동자투쟁으로 강고히 일어났으나 자본의 양보와 고립된 투쟁으로 적의 탄압에 무승부상태에 머물러있다.

그리하여 미국과 독점재벌의 계획대로 민중의 투쟁은 선거판으로 흡수되어 민족민주세력은 배제되고 '점진적 민주화'라는 판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현재 중산층은 제6공화국에 대한 일정한 지지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 불만을 6.29와 대통령선거에서 일정 해소하였고 총선에서의 소선거구제는 이를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다.

또 경제적인 호황(3저 호황의 계속적인 진행)에 대한 전망과 국제수지의 막대한 흑자 등을 바탕으로 증권시장 등의 장미빛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은 아직 반군독의식이 낮은 상태에서 곧바로 대정권투쟁의 발전이 기대되지는 못한 상황이며 누적되어온 모순에 압박으로 생존권에 관련한 투쟁을 매개로 대정권투쟁을 진행할 전망으로 보인다.

2) 한국의 재생산구조와 자본축적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하여 한국 독점자본은 그들이 매스컴을 통해 엄살을 부리듯이 그렇게 위험스러운 단계는 아니었다. 7.8월 당시 전체사업장의 30%가 파업, 전국적으로 15%의 추가 임금인상을 했어도(87년은 20%의 임금이 인상되었다) 87년의 GNP는 12.2%, 성장했고 무역흑자는 98억불이라는 경이적인 호황을 이루었다. 외채규모도 88.2월현재 350억불로 대폭 줄었다.

한국의 독점자본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노동착취를 통하여, 그리고 독재정권에 의한 막대한 특혜로 자본축적을 이루었으며 그 속에서 현재 제국주의 자본과의 부등가교환으로 잉여가치가 유출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본축적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현재 개량적인 요구에 감당할 내적 자본축적의 여력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중의 자립적 요구와 민중주도의 민주적 변혁에 대해서는 대외의존성의 존재로 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내부생산력 발전에 기초하지 않고 미·일 제국주의 경제에 하청계열화하여 이들과의 관계속에서 움직이는

14) 이는 곧 72년의 8·3조치로 표현되는데 그 내용은 사채종결(3352억원), 특별 대환자금방출(금융기관 2천억원, 특별금융채권발행, 단기고리대출금의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유예), 장기처리자금대부(658억원) 금리인하(19%→15%), 환율안정, 공공요금인상억제, 물가동결(3%, 임금동결) 등으로 사적자본의 위기를 타개해 준다. 이 출자는 당시의 경제위기에 대하여 가히 기사회생의 혁명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5) 당시의 상황을 결정적으로 대변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임금이 불가피 하다"라는 구호는 새로운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당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사활을 건 재생산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산업의 경우는 일본 자본과 미국 자본이 한국의 상대적인 저율임금의 착취를 위해 개량의 기계·설비·기술을 노임하고 있는데 한국노동자의 임금인상, 노동조합결성 등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힘들면 대만이나 중공 등으로 기계·설비 등을 이동시킬 것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우도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대우는 GM사, 현대는 포드사, 기아는 크라이슬러사 등과 제휴형태를 띠면서 급속한 신장을 이루었다. 이들은 차모델금형, 주요부품, 판매시장, 딜러(대리점)등을 제국주의 자본에 의존하면서 각 회사간의 세계시장 쟁탈전에 의해 생산규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업, 해운업, 해외건설 등 등도 이와 같은 현상을 띠고 있다.

결국 한국경제는 이러한 이유로 노동대중의 강력한 생존권 요구투쟁, 세계경제의 불황 등에 처할 때 극심한 어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제국주의 하청관계를 제3국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개량의 여지는 현실적으로 한국경제가 현재로서는 재생산구조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만큼 세계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내부폭발적 투쟁의 소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3) 한국의 정세에 대한 전망

현재의 정세는 〈6.29-대통령선거-총선〉이라는 개량적 기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를 한편으로는 개량국면으로 이해하여, 노동자의 물질적 조건이 개선되고, 민중의 혁명적 진출에 대한 방파제를 쌓아야 하는 지배계급의 절박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총자본의 대응으로 토대부분까지의 개량을 의미하는 사회개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하여 지배질서의 부르조아 민주주의로의 발전 우리들에게는 전략적인 변화를 예단하는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이는 정치적 대립관계의 일정한 조건적 변화[16]로써 지배계급이 정치적 대응방식으로 채택하는 유화국면의 내용(이후 또다른 조건변화에 의하여 탄압국면을 수반하게 됨)이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지배계급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노동자에게 실업보험이나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제 11만천원의 제시가 후자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현재 독점자본에게 개량화의 여력은 존재하고 있다. 그 가능성을 예로, 광공업부문의 부가가치대 급여의 비율이 70년대 46%에서 85년대에 26%로 떨어졌으며 현재 수준을 70년대 이전 상태로 돌리기만 해도 개량의 여지가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다.

주체적 역량에 관해서도 개량이란 계급간의 적대적 대립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했을 때도 실제 노동자의 힘이 미약한 현조건은 파업등이 실제 일어나는 자본가 계급에게는 이것이 노동자의 혁명성으로 위협적인 것으로 비치며 이를 막는 방파제로서 개량을 쌓으리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우리는 현재 전개되는 정국의 변화는 기본적으로는 유화국면을 내용으로하는 측면이 강하며 일시적으로 정국은 안정적인 기조를(지배계급의 탄압이 유보된) 이룰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간의 민주화투쟁전선에서 중산층의 일정한 이탈로 인해 전선의 약화 또한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경제 동향

국내적으로는 경기자극요인의 유리한 측면, 국외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휘말려 불리한 여건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88년도는 대체적으로 86 87년도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나 계속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경제동향

계속적인 불황으로 2%내외의 성장률, 무역증가율은 3.5%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동아 1.4) 미국의 무역적자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88년 초부터 "쇠고기, 담배, 보험"등의 개방압력을 시작으로 3.5 아이터 무역대표의 전면적인 수입개방 즉각 실현 압력을 들고 나오는 실정이다. 대미수출에 대해서는 수입규제조치, 덤핑판정, 특혜관세 폐지 등 보호무역조치, 보복조치를 취했으며 환율인하의 요구(88년 말 500원대 예상)를 하고 있으며 현재로 원화는 계속 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한국은 대미수출의 감소와 수입의 증가, 무역보복조치와 환율인하 등으로 중소자본제품의 노임따먹기식 제품 등이 광범한 도산이 예상되고 있다. 현상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독점자본간의 대립으로 무역압력 등이 나타나는 실정인데 한국의 독점자본은 그간의 종속의 역사에서도 보여지듯이 종속형 경제구조와 적극적인 국제분업화하면서 그 위기를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점자본과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압력을 "줄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자"라는 명분으로 무역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출경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독점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산업, 농산물 등 민중의 생활을 희생하려는 기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 농민생활을 압박할 것이며 소시민, 중소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 국내경기측면

국내경기는 여러가지 호조건을 가지고 있다.

-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평화의 댐, 중부고속도로)
- 정치자금 방출에 따른 민간 수요 증가(약 2조원 추정)
-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의회 선거자금 방출
- 88년 올림픽 수요의 증가
- 이윤축적에 의한 자본가 투자 확대 등

호황의 조건들이 초래한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인플레를 유발, 물가상승의 측면으로 존재하기로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방출된 자금은 현재 물가인상[17]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의 회수는 또한 각종 세금의 인상으로 서민생계를 위협할 것이다. 이외에도 총선자금 방출, 독점재벌지원을 위한 국내수요 진작자금 부실기업 정리자금, 증권시장 지원자금, 무역흑자의 지속 등 인플레 유발요인이 산재해 있다. 현재 통화 증가율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작년 12월 15일 현재 통화는 22%가 증가했으며 정부예산 또한 12.6%상승 하였다. 이리하여 작년 7.8월의 인상권 임금에 대해 실질임금을 떨어뜨려 이후 또다른 임금인상의 유발요인이 될 것이다.[18] (88년 1월 20%, 2월 18%의 통화증가율을 기록, 이에 대해 통화억제정책은 난항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또한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생산자동화 추진의 추세와 함께 신규노동자의 취업률을 떨어뜨리고 실업자를 증가시킬 전망이다.(동아. 1.11에 의하면 완전실업자 87년 55만4천명, 88년 63만8천명에 이르고 있다.) 결국 경제동향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난 몇년간 3조호황과 노동자, 농민의 희생으로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이윤이 축적되었다. 노동자들은 7.8월 대중파업을 통해서는 충분한 임금인상을 달성하지 못했다. 자본가들을 자본축적을 계속하겠지만, 노동자의 경우는 물가상승 등으로 그동안 임금인상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실질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켜나가기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민중의 노동의 열매를 외국독점·국내독점 및 그 옹호자 독재정권에 빼앗길 수 없으며 외국 경제침략, 국내독점 재벌의 민중수탈 반대의 반제, 반독점, 반파쇼투쟁

16) 87년의 민중투쟁에 의한 조건변화와 88년의 총선, 지방자치제, 올림픽 등이라는 상황적 조건을 들 수 있다.

17) 올해 1.2월중 물가상승 혹은 조합 도매 1.2%, 소매 2.2%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도매는 3.6% 오르고 소매는 7.8%나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억제선을 도매 2~3%, 소매 4~5%로 잡았으나 이미 1,2월동안 물가상승이 올해 물가억제선의 50%를 육박하는 실정이다.

18) 예상되는 임금인상 유발요인은 경기상승과 생계비 상승외에도 선거공약의 기대상승, 총선의 분위기 고양에 의한 기대상승 등이 존재하고 있다.

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19]

② 정치동향

현재 노태우정권은 88년 올림픽까지는 유화적 정책을 표방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전체운동에 대해서는 양보와 탄압을 병행할 것이다. 88년 임금인상 투쟁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작년 노사분규발생업체(3750여개)와 노동조건이 열악한 사업장(3000여개)에 대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기업주의 노동법 위반단속[20]과 임금인상의 폭, 시기, 타결방식을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간섭을 배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그간 경찰력의 직접적인 개입의 양상은 다소 둔화될 전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소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외부세력이 개입의 경우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단호히 응징" 하고 또 노조설립에 대해서는 신규노조설립은 허용하나 동일 사업장내의 복수노조, 산별노조 금지를 들고 있으며 결국 이는 기존 어용노총 중심의 노조체계를 온존, 민주노동구함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억압과 회유의 양면구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88올림픽을 의식, 노동자 농민[21] 등의 불만이 민중운동으로 결집되는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의 주체적 대응을 위하여—

한국자본주의는 초기 외래적 자본축적의 시발로 한 국내민중의 광범한 수탈을 기본 골간으로 하고, 이후 계속되는 발전의 축을 제국주의 경제구조에 의존하고 이루어낸 자본축적의 성공적 진행을 이루어 국내독점자본이 자기 위치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성격을 아울러 86년과 87년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간 구조적인 모순관계에서 미제와 국내독점자본에 이중적 착취로 생존권적 위기를 가지는 민중의 요구에 대응, 개량적으로 자기 자본의 일정분배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군부독재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한 개량정책과 일정 조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개량정책이 환상이든, 그렇지 않으면 한계를 띠는 속에서의 사회적 개량이든 광범한 개량적 이데올로기의 유포에 대한 민중들의 대응인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20여년간 유지되오던 강압의 지배들을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지배권력의 자신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민중들이 체제적 모순에 몰입되어 그 환상에 물들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인 것이고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주체적 대응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7, 8월 노동대투쟁을 통한 노동계급의 일정한 권리의식의 확보와 근본적으로 민중의 생존을 보장할 힘으로써 계급의식과 구체적 조직화는(정치세력화의 의미로서) 이를 해결하는 데 관건이 될 동향이 될 것이다. 아울러 농민과 도시빈민 등의 생존권적 요구가 체제내적으로 안주시키려는 지배계급, 계층의 의도를 이겨나가는 것에 달려있다.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적 성격을 띠는 한국사회에서 지배형태에서의 파쇼적 틀을 그러므로 지배계급내에서 극복되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질 때 한편으로 상황적으로 주어지는 합법적 열린공간으로의 진출과 이의 본질적 한계의 표현인 민중생존의 혁명적인 표현이 이후 주체적 대응에 관련한 우리의 연구과제로 남을 것이다.

---

19) 「88년 임금인상 투쟁을 위하여」, 서노련, 동력 88. p.14.

20) 이의 구체적 실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실제 3.18일 저녁 6:30분 CBS방송의 노사분규 "구사대"특집에서는 실제 3사대를 통한 불법폭행이 사용자측에서 진행되는 경우 의법조치하겠다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구호지역에서 3월10일경 노동부의 한 간부가 사용자들에게 구사대 비리도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노동자를 노조를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고무한 사실을 폭로 보조하고 있다.

21) 최근에 양담배, 쇠고기,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식품등의 전면 개방화 압력은 농민들의 치열한 생존권 요구투쟁을 야기 시켰는데 특히나 수입쇠고기에 대한 1월경의 광범위한 반대투쟁을 서울지역, 경남북지역등에 더 격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5.5공화국의 출발

편집위원회

목 차

Ⅰ. 머리말
Ⅱ. 현정세의 특징과 노태우 정권의 성격
1. 현정세의 특징
2. 노태우정권의 성격
Ⅲ. 이후전망
1. 한국 자본축적의 특징
2. 한국경제의 전망
Ⅳ. 맺음말

Ⅰ 머 리 말

현재 한국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는 듯하다. 86년부터 경제는 불황을 극복하고 흑자 무역때문에 물가안정이 어려울 어려울 지경에 도달하고 정부는 강력한 민주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87년의 소위 6.29선언 이후 12.16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야권의 단일화 실패와 민족민주 운동진영의 역량상의 한계, 사분오열등으로 인하여 군부독재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들의 가장 커다란 약점이었던 정통성에 관한 문제를 대통령 직선제라는 합법적 방법으로 일정정도 해결하고 제6공화국의 노태우정권을 출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등장한 노태우정권은 자신의 본모습을 감춘채, 6.29이후 미제와 국부독재세력의 각본대로 선의의 역할을 지속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6.29선언 직후부터 꾸며진 '민주화의 기수' 노태우는 대통령선거기간에서 현재의 이르기까지 기존의 군부독재정권들과의 연관성을 한사코 부인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꾸미고 있다. '민족자존의 새시대'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부각시키며 시작된 그의 취임사는 '민주주의 실현', '국민화합', '인권신장', 정직한 정부' '자주자존의 통일대국'등 온갖 미사여구로 가득차 있는것과 '근로자와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의 권익신장'과 '수준높은 교육' '학술과 문화예술 진흥'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양심수석방'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명예회복' 제5공화국과의 단절을 의미하고자 하는 '문귀동 구

속 기소'와 '새마을본부 비리수사' 등을 진행시켰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노태우정권은 자신의 통치방식을 변화시켰다. 적나라한 강권력에만 의존했던 지난날의 군부독재 정권들과는 크게 다르게 '권위주의 청산' 이라는 새로운 모토하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통치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국민대중의 진출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통치기반 강화에 크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노태우정권의 현재의 태도는 자신들의 과거의 군부독재정권과는 명백히 다르며 특히 제5공화국 전두환정권과는 눈꼽만큼의 연관도 없다는 것은 애써 강변하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들은 제5공화국과의 공연한 오해때문에 피해를 입는 피해자이며 제5공화국의 모든 비리를 가장 먼저 척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인양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노태우정권은 한국민중의 절실한 요구인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어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이며, 노태우 자신은 한국사회의 모든 구조적 모순을 혁파하는 혁명가인 것이다.

이러한 노태우정권의 모습은 국민대중에게 일정정도의 효과를 거두는 듯하였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그의 유화적인 제스츄어는 점차로 기반부터 흔들리는 있다. 최초의 심판대 였던 4.26총선에서 사상 최대의 금권과 관권이 동원된 부정타락 선거운동을 하였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도 민정당은 원내과반수 의석을 넘기지 못하고 패배하였다.

야권의 분열과 민족민주운동 진영조차 분열되어 있었던 유리한 조건하에서도 민정당은 민중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강경한 평민당을 제1야당으로 맞이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한 의회를 맞는 여당이 되었다. 변신의 외피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이미 폭로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노태우정권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미온적으로 인정했던 광주민중항쟁과 제5공화국의 비리 문제가 오히려 노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어느정도의 수준에서 덮어두려 했던 정권의 의사와 무관하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의 색출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가열찬 투쟁이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속에서 전개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비록 야당의 회유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흐려 놓기 위한 노력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반민주악법 개폐, 양심수의 전원석방등을 요구하는 투쟁과 결합되어 정권의 기반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이와 더불어 4월이후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고조성만열사의 할복투신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통일문제와 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에 관한 문제는 광범위하게 논의가 전개되며 현 정권의 한계를 뚜렷이 폭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또한 수입개방과 독점재벌 비호라는 현 정권의 반민족성과 반민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태우정권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일각에서는 86년 이후 진행되었던 경제성장과 노태우정권의 개량적 모습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정세를 부르죠아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과정이며 노태우정권을 그러한 임무를 맡은 정권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량조치가 민중의 힘에 의해 쟁취된 것이기에 과거의 유화조치와는 다르다는 역사적 배경과 특수성을 무시하는 편향을 극복할 수 있게는 한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여 신식민지독점 자본주의체제인 한국사회의 기본 특징인 구조적 허약성과 그에 따른 개량의 한계를 간과하는 것 역시 잘못으로 흐르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이글은 현 정세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서 노태우정권의 본질이 전두환정권과의 차별이 없음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후 전망을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한국경제 전망에 비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현정세의 특징과 노태우정권의 성격

1. 현정세의 특징

현정세의 기본 특징은 민중의 광범위한 진출과 보수야당 세력들의 국회장악, 그리고 노태우정권의 의도가 맞물려 펼쳐지는 것에 있다.

대통령선거를 통해 합법적 집권을 이루어 정권의 정통성을 크게 강화한 노정권 이지만 지난해부터 강력히 분출된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와 대통령선거에서의 낮은 지지도는 노정권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불안한 정치적 기반을 국회에서 절대다수의석 확보와 야권의 군소정당에서 다지려 했던 의도는 총선에서의 패배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여기에 덧붙여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그 이후 재신임에 대한 문제는 노태우정권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다. 오히려 이러한 부담때문에 지속적으로도 전두환정권과의 단절을 표방하는등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를 실현하는 듯한 개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물론 이과정에서도 현재 노골적으로 보이듯이 보수야당을 회유하여 보수화시키고 중산층을 개량화하여 민족민주운동진영과 기층민중과의 분리를 유도한 것이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반동화와 탄압은 일정기간 불가능하며 가능한한 기반과 회유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이와 맞물려 보수야당은 자신의 입지점을 재구축하고 급속히 보수화되는 한편으로 민중의 진출로인해 불철저하지만 대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양김씨는 대통령선거의 패배로 몰락의 위기까지 갔었다. 보수야당 역시 분열로 인하여 군소정당으로의 전락의 위기에 처했으나 예상을 뒤엎는 총선의 결과로 기사회생을 하였다. 총선이후 급속한 보수화가 눈에 보이나 올림픽 이후 재신임의 기회와 차기 대권경쟁을 내다보며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진행시킬 것이 예상된다. 물론 이들의 동요성과 기회주의성에 대한 투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정세의 반동화를 막고 정세를 극복해가는 민중들의 진출은 점차 더욱 활성화 되어 가는데 이는 총선에서 확연하게 보여졌다. 민중들의 진출은 농민들의 수입개방 반대투쟁과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과 민주노조설립 및 사수투쟁으로 전국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이들을 기반하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진영 역시 대통령선거시기 분열되었던 대오가 완전하게 복구되지는 않았지만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결성된 「총투련」이나 「광주항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를 결성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은 확대된 공간을 철저히 활용하여 예전과 같은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국통일과 올림픽 공동개최 요구투쟁 역사 현신적으로 벌이고 있다. 목숨까지 버리며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진영의 투쟁은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의도를 철저히 분쇄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개되는 정세는 무엇에 기인 하는가? 이 문제의 해결이 바로 우리 문제의 촛점이 되는 것이다. 노태우정권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제 여기서 노태우정권이 수세에 몰리고 있음에도 개량조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겠다.

(1) 국민대중의 진출

현정세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6월 민주화대투쟁 7.8.9월 노동자 대중투쟁, 12.16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보여진 국민대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진출이다. 87년에 폭발한 힘은 군부독재세력의 개량술책에 의해 패배했다. 그러나 지난 한해의 가열찬 투쟁은 군부독재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신식민지 사회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통치방식의 강압적 성격을 일정 포기하고 통치방식의 변화를 강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가 과거 독재정권들이 구사했던 개량술책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원인으로 강압적 통치방식의 후퇴는 지속될 것이지만 정권의 성격변화로 까지 볼수는 없다.

① 6월 민주화대투쟁

6월 민주화대투쟁은 현정세의 직접적 원인의 된 해방 이후 처음 있었던 대규모 투쟁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적으로 연인원 4-5백만 이상의 국민대중의 19일 동안이

나 지속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군부독재정권의 위기는 경제적 위기에서 발생된 정치적 위기의 폭발인 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폭발이라기 보다는 전두환정권의 반민주성, 폭력성, 기만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이 중산층 주도의 반군부독재 민주민권투쟁에 머물게 되었던가장 큰 이유였다.

비록 3저호황의 경제적 성장이 민중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고조시켰고 호황을 유지하기 위한 독점자본의 논리속에서 수입개방이 농민들의 대규모적인 진출을 이끌어 내었다해도 또한 3저호황에 따르는 임금인상의 기대가 4.13호헌 이후 정권의 임금인상 과정의 개입에 의해 무너지고 호황에 따르는 노동시간연장, 노동강도 강화의 결과로 노동자의 참여를 유발한 경제적 배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직접적 계기는 되기 어려웠다. 오히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폭로 및 이후에 있던 범인 은폐조작 사건의 폭로, 범양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민주당에 대한 전두환정권의 백색테러,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4.13호헌조치 등이 6월 민주화대투쟁의 원인이 됐다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건들은 가뜩이나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으로부터 모든 계급, 계층이 멀어져 가는 역할을 하였다. 신부, 목사, 교수 약사, 변호사의 시국선언을 출발로 진행된반군부독재투쟁은 곧바로 대중화되어 전개되었다. 이에따라 광범위한 자유주의적 민권운동세력과 온건보수 정치세력의 주도하에 반군부독재 전선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반군부독재전선은 군부독재정권은 고립시키면서 전국적 동시다발의 투쟁을 전개하였고 군부독재정권의 사회적 물리적 통제력을 파괴 이완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멀리는 80년 5월 광주민주 항쟁으로부터 가열차게 전개되었던 한국민중의 투쟁은 85년 2.12총선을 중간지점으로 하여 마침내는 87년 6월에 부분적 승리를 이루어 냈다. 비록 6월 민주화 대투쟁의 한계로 인하여 군부독재정권의 완전한 몰락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시군에서 총 4~5백만명이 19일간 참여한 6월 민주화대투쟁은 이후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발생시킨 원인이면 현재 정세를 규정하는 기본적 요소이다.

② 7.8.9월 노동자 대중투쟁

6월 민주화대투쟁은 주객관적 조건의 한계 때문에 부분적 승리에 머물고 말았다. 이는 6.29선언 이후에 급속도로 투쟁의 대열에서 이탈해간 투쟁의 주체들의 모습과 7.8.9월 노동자 대중투쟁에서 보여진 군부독재정권의 탄압이 보여진다. 이 당시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분열이 더욱 진전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인 한계는 이미 주어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6.29선언으로 군부독재정권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투쟁의 중심이었던 중산층에게는 개량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었으며 보수야당 에게도 집권의 가능성을 던져주었다. 이과정에서 군부독재정권은 재기의 시간을 벌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과 기만성을 뚫고 한국의 일천만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한다. 전국 각향 각지에서 터져나온 노동자들의 노동현장 민주화투쟁은 3,300여건이라는 우리 노동운동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87년 7.8.9월 노동자 대중투쟁은 6월 민주화대투쟁의 성과에 근거하여 그 부분적 성과를 보완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던 허구적인 '6.29선언'의 내용을 더욱 넓고, 깊게하여 보다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려는 투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7.8.9월 노동자 대중투쟁은 갖고 있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투쟁을 전개하였다. 주요하게는 현단계 노동운동의 한계에 기인하겠지만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분열과 중산층의 보수화등의 조건에도 원인이 있었다. 이러한 악조건하에서도 군부독재정권과 독점자본에 대해 물러서지 않는 투쟁을 전개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힘과 저력을 우리 역사의 전면에 새로이 부각시키며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하였다.

여기서 노동자 대중투쟁의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 및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겠다. 이는 우리 투쟁의 객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초를 주며 실천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글의 성격상 간략히 다루겠지만 몹시 중요한 투쟁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 하겠다. 노동자 대중투쟁은 아래와 같은 세가지 배경에 의해 발생한다. 그 첫번째는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과 세계에서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며 둘째로는 그간의 선진적 노동자와 노동운동세력의 헌신적 노력에 의한 노동운동역량의 성장과 6월 민주화대투쟁과 그투쟁의 부분적 승리과정에서 얻은 정치의식의 성장과 초보적이나마 계급의식의 각성과 같은 주체적 요인이다. 이러한 두개의 요인이 6월 민주화대투쟁에 의해 조성된공권력의 후퇴와 노동통제의 완화의 창출이라는 세번째 요인과 결합되어 엄청난 규모의 투쟁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6.29이후 8월 초순까지는 완만하게 증가되다가 8월10일 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한다. 이후 8월말과 9월초를 고비로 10월말까지의 냉각기 잠복기를 거치며 대중투쟁은 정리되기 시작한다.

지역에 있어서는 울산을 시작으로하여 부산, 창원, 마산등의 중화학 공업지역에서 폭발하여 대구, 구미, 서울, 인천등의 경공업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전체적인 전개과정에 있어서 울산, 마산 등의 지역이 전반적인 대중투쟁을 이끌어 갔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과 영세소기업에서 절대적으로 숫자는 압도적이었지만 예전과 다르게 총 사업체에 대한 비율로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 전자등 최근까지 노동운동을 주도해온 업종의 아니라 자동차, 조선, 기계, 금속, 석유화학등의 중화학공업이 대중투쟁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보았을때 현재 노동운동의 주축이 경공업, 중소기업에서 중화학공업, 대기업으로 여성노동자 중심에서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좀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현시기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변화과정과 그하에서 변화하는 한국자본주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후 자본주의 재편과정은 후진 자본주의 진영과 선진 자본주의 진영을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세계적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70년대이후부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산업의 중심을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으로부터 자본.기술집약적인 첨단기술산업 으로 이행했다. 이에따라 세계자본주의의 수직적 분업체계는 변화했고 그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자본주의는 산업의 중심을 변화시켰다. 즉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양산업이 되어버린 기계금속 자동차등의 중화학공업을 자신의 중심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고 그러한 과정의 이번 7.8.9월 노동자 대중투쟁에서 보여졌다. 그러나 노동자 대중투쟁은 단순히 산업구조의 중심의 변화라는 의미속에서만 파악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노동운동의 중심변화라는 문제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 협소한 평가이다. 아직 많은 한계와 낮은 차원에서의 진행이었지만 노동자 대중투쟁은노동자 자신들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권익실현을 목표로 전개되었으며 우리의 촛점은 여기에 두어져야 한다. 이는 한국 변혁운동의 기본 계급인 노동자들의 스스로의 힘을 확인했던 과정이며 한국 변혁운동의 중심이 빠른 속도로 이전되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이후 정세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력으로 자신의 면모를 세워나갈 것이며 한국 변혁운동의 토대를 이곳에서 세워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③ 12.16대통령 선거

대통령선거에서 민족민주운동진영을 포함한 범민주세력은 패배했다. 승리를 거둔 것

은 미국과 군부독재무리였다.

12 . 16대통령선거는 없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었다. 이것이 비록 6월 민주화대투쟁의 성과물이기도 하지만 벼랑끝으로 밀려난 군부독재정권의 회생을 위한 계기였고 결론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야권 단일화실패와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분열은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물론 선거에서의 패배는 군부독재의 종식및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권을 또다시 군부독재의 수중에 넘겨주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투쟁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얻는것이 많았다. 민중들은 훌륭한 정치학습을 하였고 민족민주운동진영 역시 실천경험속에서 이후 자신의 항방을 모색할 수 있게된 것이 투쟁과정에서 얻은 긍정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실천속에서 각각의 정치집단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군부독재전선만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범민주세력은 하나로 보였다. 각각의 계급적 기반을 확인하거나 본질을 인식하기가 어려웠었다. 그러나 확대된 공간을 제공한 대통령선거는 스펙트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는 이러한 덕택으로 보다 발전한 통일의 단초인 분리의 선을 얻을 수 있었다.

대통령선거시기 분열은 이러한 의미에서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보다 강고한 통일과 더욱 빠른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한번쯤은 겪어야 하는 일이었기에 그러하다.

둘째로는 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동의 주도권을 잡았던 중산층의 의식에 부합한 '민주화 운동'이 자기의 역사적 임무를 끝마쳤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기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후 민주화 투쟁은 보다 민중성을 강화한 기층민중의 요구를 담는 투쟁이어야 한다. 이렇듯 대통령선거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패배를 패배로만 그치도록 하지 않았다. 이와마찬가지로 군부독재정권의 승리를 승리로만 누릴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노태우정권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89.2%에서 36.2%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머물렀다. 또한 이정도의 지지마저도 독점자본의 막강한 세력과 군부독재정권의 물리력, 행정적, 조직력에 덧붙여 강력한 개혁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얻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노태우정권은 집권에 결정적 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동안에는 개량조치를 철처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 자기가 놓은 덫에 스스로가 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량조치를 선택해야 하는 그것 자체가 정권의 불가피한 위기의식의 반영인 것이며 개량조치를 뚫고 일어설 민족민주운동진영과 민중의 투쟁은 그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했던 군부독재정권의 판단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또한 개량의 선택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압의 칼을 들려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고 그것은 몰락의 길을 재촉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장황한 느낌을 줄만큼 많은 지면을 들여 국민대중의 진출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하였는가? 그것은 현정세의 기본동력이 군부독재정권의 구조적 위기에 따르는 정권의 성격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대중의 광범위한 진출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2) 총 선

4 . 26총선은 결과적으로 민주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승리가 되었다. 총선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이후의 정세를 복잡하고 미묘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민정당의 원내 과반수의석 획득실패와 평민당을 제1야당으로하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의 국회가 총선의 결과였다.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36%의 지지라는 불안한 정치적 기반밖에 갖지 못하고 있던 노태우정권은 총선을 통해 지지기반을 강화하려 하였다. 전체의석의 55 % 이상의 원내 절대안정의석 획득과 압승을 통한 야당의 군소정당화가 기존 통치세력의 안정적 재편과 더불어 총선의 목표였다. 그러나 총선의 결과는 노태우정권의 의도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가장 기본적 이유는 물론 기나긴 반독재 민주화투쟁에서 성장해온 우리국민의 정치적진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총선의 결과는 총선 또한 대통령선거의 재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통령선거의 투표성향을 좌우한 가장 일차적 요인은 지역감정이었다. 미국과 군부독재세력의 교묘한 분열책동은 양김씨의 동시출마를 이끌어 내었고 민중들의 반군부독재 의식을 지역감정으로 호도시켰다. 김대중씨의 대구 . 부산에서의 득표율과 그곳에 사는 호남인의 비율이 유사한 것과 광주에서 김영삼씨의 득표율이 그곳에 사는 경남 . 부산 출신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이러한 지역감정의 유발은 대통령선거에서 군부독재정권의 승리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지만 이것이 총선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정당의 참패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선거양상이 타락, 폭력으로 치달아 그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터져나온 서울 종로구의 통장사망, 권중동의 금품살포, 제주MBC의 개표 조작방송 등의 불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가장 커다란 이유는 대통령선거때 심어놓은 지역감정이었다. 호남과 광주에서의 평민당,민주당의 부산, 충남지역에서 공화당의 압도적 당선이 증거이다. 이는 민정당의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은 반군부독재의식을 호도하기 위해 조장한 지역감정에 있으며 대통령선거 승리의 다른 결과인 것이다. 4 . 26 총선 결과의 또 다른 특징중 하나는 국민대중에게 지탄을 받아온 기회주의적인 야당인사들이 준엄한 심판을 받은데 있다. 민주당의 제2야당으로의 전락 역시 중선거구제를 주장한 기회주의성에 대한 심판이었다. 평민당의 제1야당으로의 부상은 이러한 이유의 반대 경향이었다.

이러한 국민대중의 심판은 이들 야당의 동요성을 불드는 큰 힘이다.

결과적으로 총선의 결과로 강화된 의회권력속에서 노태우정권은 발목을 잡힌 꼴이 되었다. 비록 현재 야당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원내 다수의 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도속에서는 강력한 원내 투쟁이 전개될 것이며 이는 민중들의 진출정도에 따라 노태우정권의 운명을 더욱 어둡게할 것이다.

(3) 노태우정권의 의도

노태우정권은 현재 민주화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민중들의 민주화에 대한 진출때문에 이 역사의 흐름이 군부독재정권의 강압적 통치방식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태우정권이 민주화를 표방하는 것은 자신이 집권기반을 안정시키고 군부독재정권이 생존을 모색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있으며 이것은 정세를 역규정하기에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첫째로 제5공화국과의 관련속에서 감수해야할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이다. 이속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는통치방식의 변화인 것이며 대부분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외관상의 변화이지만 40년 이상 독재적인 권위주의적 강압적 지배방식에 억눌려 살아왔던 한국 민중들에겐 이것조차 신선한 느낌을 넘어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사 표시로 다가오는 것이며 전두환 세력과의 파워게임조차 민주화의지의 증거인양 선전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의 의도는 대중진출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즉, 민족민주진영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고 국민대중들과의 분리를 이루어내고 기층민중의 생존권투쟁을 매도하면서 중간층과의 분열을 획책하고 탄압을 자행하려는 것이다.

세째는 대중진출의 폭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를위해 민족민주진영과 보수야당 각각의 내부와 둘 사이의 분열을 이데올로기 공세와 더불어 획책하려 하고 있다.

이와같은 노태우정권의 의도가 그 초기에는 정확히 관철되었다.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분열과 야당의 분열이 국민대중에게 노태우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총선을 통해 야당이 대규모적으로 의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점을 되찾은 것과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

고 예전과 같은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는 민족민주운동진영에 의해 계속 막히고 있다.

이렇듯 노태우정권의 의도는 실질적 내용의 부재로 인해 민족민주진영의 단절과 그에 따른 반군부독재투쟁이 강화속에서 하나하나 분쇄되어가고 있으며 투쟁 과정속에서 한계를 드러내어 사라질 것이다.

2. 노태우정권의 성격

현정세가 개량적 성격, 즉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경향을 내포하면서 노태우정권의 성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듯이 현정세는 노태우정권의 성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노태우정권이 행한 민주화의 내용을 보아도 전두환정권과 별반 다른게 없다. 즉 가장 크게 선전을 했던 양심수 석방의 문제는 실제로 125명의 석방에 그쳤으며 오히려 현재 구속자의 수가 늘고 있다. 또한 평화적 집회, 시위의 보장 역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또한 새마을본부 부정사건은 전경환과 몇몇 개인의 잘못으로 시급히 조사를 마무리 지어 버렸다. 광주학살에 있어서도 정확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등에 대한 문제는 외면하고 형식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에 머물고 말았다. 이정도의 수준은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자신이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전개했던 기만조치 이상은 벗어나지 못한다.

6.29이후 대통령선거 과정은 거치면서 권력층내 "강경수구파"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온건개혁파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이는 민중의 급격한 진출을둘러싼 군부독재내의 의견차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전두환정권에서 노태우정권으로의 변화는 군부독재정권이 부르조아민주주의로의 변화가 아니다. 이는 전두환정권에 대한 민중의 광범위한 투쟁이 군부독재세력 전체에 대해 발전하자 더욱 강압적인 방식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통치방식으로 이행할 것인가의 선택상의 갈등이었을 뿐이다.

비록 6월 민주화대투쟁이라는 위기속에서 유례없는 계급, 계층의 이반과 내부 갈등속에서 등장하였고 많은 현상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태우정권은 본질을 바꾸지 않았으며 그렇게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제6 공화국 노태우정권 역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제1기초를 군부의 물리력에 두고 기존의 정보조직과 관료조직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으며 그 통치기구와 그를 구성하는 인맥 역시 제5공화국 시절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질론적으로 모든 점을 검토해 보았을 때 노태우정권의 부르조아적 성격은 그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부독재정권의 위기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후퇴이며 따라서 노태우정권은 하나의 본질적 변화도, 문제의 해결도 하지못한 군부독재정권이다. 이러한 정권에게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연목구어이다.

Ⅲ 이후전망

노태우정권은 현재 유화적인 제스츄어를 가능한한 지속시키려 한다. 그것은 앞에서도 살피보았듯이 민중의 진출에 의해 규정받는 것이지만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와 국민대중의 진출의 폭과 깊이를 가능한한 좁히고 진출방향을 왜곡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노태우정권이 자신의 본질을 어느 순간 들어내는지는 정확히 예견할 수 없다.

그러나 통치체제의 강압적 성격은 한국자본주의 구조상 불가피한 요구이므로 어느 순간이고 드러날 문제이다. 여기서는 한국경제의 전망속에서 문제를 살피보겠다.

1. 한국 자본축적의 특징

한국의 자본축적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는 제국주의하에서의 자본축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전후 미국을 정점으로 새롭게 재편된 세계 경제속에서 미국등 선진국의 의도에 순응하는 한에 있어서 발전가능한 자본주의의 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의도는 과잉적인 화폐자본 처리와 상품자본의 교환구조의 확립 혹은 산업간 국제 분업망의 형성이다.

이러한 이유로해서 미국의 초기 대한정책은 식민지 자본주의를 확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이것은 최소한의 물적자본 형성과 부르조아 육성책으로 나타났고 이 정책은 민족민주운동운영에 대한 탄압과 개량화정책과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한국자본주의는 이후에 있어서도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과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의도와 그의 국가에 의한 관철이라는 두가지 축으로 발전하여 왔다.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과잉적인 화폐자본을 처리하는 문제는 원조 차관이 형태로 수행되었고 이것은 한국자본주의의 취약성의 근거가 되었으며 독점성과 매판성을 이루는 배경이 된다. 또한 두번째 요구인 국제분업망의 형성과 부등가교환은 자본수출에 의해 이미 규정되었다.

선진제국의 요구에 부합되는 경제발전은국내산업 연관의 결여, 산업부분과의 불균형을 구조적 모순으로 정착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했던 민족민주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정책은 곧바로 한국자본주의 발전뿐이 아닌 존립근거로 되어 버린다. 즉 과잉자본 투하지로서의 안정성, 부등가 교환에서의 저임금 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전진기지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보장받기 위해 진행되는 민족민주 운동에 대한 탄압은 이자지불, 이윤송금 및 부등가교환에 의해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전가받는 한국자본의 존립조건으로 내재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수행하는 정권은 반민족적, 반민중적인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저곡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며 농민운동,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현상한다.

위에서 간략히 살피보았지만 한국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그 구조적 취약성은 정권의 강압적 탄압을 불가피하게 요청한다. 이는 구조적 모순의 극복과 자본의 질적변화가 수반되지 않는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노태우정권에 의한 통치방식의 변화는 그 한계상 일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제한적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작년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올해초 수입개방 반대 투쟁을 벌이는 농민과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동자에게 가하는 폭력적 탄압에서 노골적으로 보여지며 이는 한편으로 늘어놓은 개량조치에 비례하여 강력히 전개될 것이다.

2. 한국경제의 전망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적성장에 힘입어 질적인 변화의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사회보장제의 확대라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측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후 발전의전망은 어떠할 것인가? 이에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이글을 마치겠다.

현재 한국 경제성장의 배경은 좀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74~75년 경제공황이후 한국정부는 국제분업체계의 변화와 주로 경공업부분에 대한 수입규제를 행하던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다. 그것은 특히 일본과의 수직적 분업체계를 확립하는 것이기도하여 강력한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80~82년의 공황에서 과잉투자로 판명되었지만 제국주의의 정책에 순응한다는 의미에서 식민지 자본주의국인 한국에서는 유일한 선택이었고 자본의 입장에서 볼때는 올바른 것이었다. 이것은 86년의 호조건속에서 비약적 경제성장을 거두는 요인이 되었다. 또다른 경제성장을 배경이 되는것은 80~82년에 등장한 전두환정권의 폭력적인 노동통제 임금동결등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억압해왔다는데 있다.

부연설명을 하면 첫째 신국제분업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생겨난 중화학공업 중심의 전통산업부분의 NIC등으로의 이전, 둘째 과학기술혁명으로 인한 에너지, 원료절약과 전반

적 불황으로 인한 원료생산국및 산유국의 몰락과 외채위기, 세째 선진국간의 환율·무역전쟁으로 인한 미국등 주요시장에서 일본,서독의 상대적 후퇴, 네째 미국 경제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거대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3' 저의 합의가 대외부분에서 호조건을 이루었고, 대내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자본집중적 불황기의 노동통제 등으로 호조건을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일시적 호황은 내적모순의 극복이라는 측면보다 외부적 호조건의 존재라는 우연적인 요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호조건은 최근 사라져가고 있지만 올림픽특수,공산권과의 교류등으로 일정정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은 미국등 선진국과의 마찰을 야기 시키고 있고 이에대해 노태우정권의 정책은 전면적 시장개방이다. 세계경제체제로의 완전한 편입을 의미하는 개방화, 자율화정책은 곧바로 대기업의 비대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제반 모습들은 노태우정권의 기본적 본질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고 도산하거나 대기업의 계열화 되어야하며 농민의 몰락은 필연적이다. 또한 8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재의 모습은 노동대중의 무자비한 탄압으로만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사회보장제의 확대란 국제적 분업체제의 순응하려는 독점자본과 노태우정권의 개량화정책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경제성장의 의미를 살펴보았을때 이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해가는 과정이기 보다는 더욱 심화시켜가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제체제는 세계자본주의의 산업순환에 대단히 취약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경제는 87년 주가폭락 등에서 보이듯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성장에 암운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심화와 곧 다가올 세계경제위기는 노태우정권의 급속한 반동을 예견하며 민족민주 운동진영에서 일대결전의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N 맺 음 말

이제까지 현정세의 특징과 노태우정권의성격 그리고 이후 전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6월 민주화대투쟁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7.8.9월 노동자 대중투쟁, 12 . 16대통령선거, 총선까지 장황하게 언급한 것은 현정세를 규정하는 기본동력이 민중들의 진출에 있다는 확신때문이었으며 사실이 그러기에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부족과 주제의 미묘함 때문에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대략적인 서술에 그친것이 아쉽다. 특히 한국경제의 전망에 관한 부분에선 필자의 무지가 더욱 부끄러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정세를 인식하는 이유가 올바른 실천을 매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글은 현재 한국사회는 아무런 모순도 해결하지 못하고 점차 위기가 가속될 것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항상 위기가 진행되고 모든 정세가 혁명적시기라고 주장하는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경향성의 인식에서 투쟁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자유기고

정치경제학 방법론에 대한 일고찰

한 하 운
(경제학과 87년졸업)

목 차

Ⅰ. 머리말
Ⅱ. 정치경제학 방법론
Ⅲ. 상품장에서의 마르크스 방법
Ⅳ. 맺음말

Ⅰ. 머 리 말

정치경제학적 패러다임(paradigm)이 갖는 매력은 대개 두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총체성 또는 전체성(totality)에 대한 파악을 방법론적으로 전제하고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체(Substance)에 대한 분석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체성과 추상성에 대한 변증법적 출발과 회귀를 통한 연구의 방법과 서술 방법의 구별 자체가 바로 연구의 논리와 서술의 논리적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에서 방법론에 대한 문제는 도외시되거나 또는 사회전체의 구조와 세계관의 문제에 대한 파악을 잠정적으로 유보한 채 주로 경험적 목적을 가진 경험조사방법과 그것을 통한 계량모델구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 같다.

방법론적 문제는 경제학·사회학·정치학 등 개별과학뿐만 아니라 철학(존재론, 인식론, 논리학)이라는 큰 주제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며 단순한 경험조사방법에 국한되거나 계량모델구성이라는 기술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 미국의 경제학계와 한국의 경제학계를 휩쓸다시피 해온 사뮤엘슨(P.A.Samaelson)류의 신고전학파의 입장은 이름은 단순히 종합이지만 사실은 종합이 아닌 점묵 이상의 것은 아니다.

신고전학파의 이론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완전고용을 분수령으로 하여 완전고용이 달성되기 이전에는 유효수요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에 의한 개입이 필요하지만 일단 완전고용이 달성된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시작하므로 자유경쟁의 원리가 원활하게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완전고용을 분수령으로 완전히 두개의 이질적인 이론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는 사뮤엘슨이 신고전학파의 일반균형이론 체계내에 케인즈이론을 흡수·통합시킨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신고전학파 종합은 60년대말 70년대 초를 거치면서 국제통화제도의 위기와 높은 실업율과 만성적 인플레이션의 동시진행이라는 스래그플레이션하에서 케인즈 경제정책의 무력성을 노정하였다. 즉, 경제이론은 경제적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이른바 '경제학의 제2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경제학의 위기는 한편으로 통화주의자 및 그 극단적 형태인 합리적 기대가설론자와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의 전통의 부활을 초래하였다.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에 있어서 사상적 기초는 포퍼(K.R.Popper)류의 반증주의적 경험론인 논리실증주의이다.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몰역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적 생산양식으로서 자본주의사회를 분석하지 않고 그 존재를 주어진 것, 자연적인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그 발생, 전개 및 소멸의 역사적 과정은 배제되고 자본주의의 항구성, 영원성이 보장된다.

이는 균형론적인 접근방식에서 잘 나타나는데 왈라스를 태두로 하는 한계효용학파의 주요테마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조화적 균형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것은 애초부터 지극히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설정이었다. 일반균형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한(F.H. Hahn)은 일반균형은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결코 존재한적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는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석하는데 자신을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라고 말하였다.[1]

일반균형이론의 결정적인 약점은 그것이 정태적이며 시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즉 그것은 무시간적 균형에 불과하다.

몰역사성은 기본적인 개념(희소성, 효율, 합리성, 극대화…등등)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사회관계의 질이 상이한 사회에도 일반적으로 들어맞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하여도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개념장치가 특정한 사회관계를 사상한채로 구성되어 사회관계가 단지 부수적으로, 즉 응용의 차원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되고 있을 뿐이다. 생산과 교환, 분배, 소비의 제 관련을 인간과 인간의 상호관계, 즉 사회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인간과 사물의 관계로 보아 효용의 극대화와 이윤의 극대화를 말할 따름이다.

주류경제학의 몰역사성은 나아가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경제사회에 대한 역사관과 방법론적 인식기저도 없이 고도로 정치한 수학적 기법, 즉 이론없는 계측의 횡포를 낳는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경제사회와 내부적으로 독립된 그리고 고정된 개인을 완전히 독립된 구성인자로 인식한다. 이 개인('경제주체')은 경제현상은 본질을 희소성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서 구하며 절대적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한다.

사회구조를 개인의 총합으로 파악한다고 강변할지도 모르지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사회의 경제는 정치·사회·문화와 명쾌하게 (?) 분리되고 비현실적 가정 또한 모형의 현실설명력이란 방패뒤에서 현실을 자유롭게 재단한다.

이러한 비현실성과 이데올로기성은 과학의 중립이라는 객관성을 강조한다. 막스 베버류의 과학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함으로써 이러한 몰가치성이 과학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문제설정자체가 중립성이란 미명아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립성이 그 존재상황속에서 성립가능한가의 문제를 더 파고들어갈 생각은 없지만 그 어느것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성이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방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상의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하에서 이와는 상이한 방법론을 지닌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는 근대철학 및 고전학파 경제학 등 마르크스의 시대상황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으며 그의 방대한 저작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인 전제로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이글은 「자본」의 상품장(章)〔제1부제1장〕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으로 제한한다.

2장은 마르크스방법론을 일반적으로 서술하고 3장에서는 상품장을 중심으로 그 적용과 논점을 살펴볼 것이다.

Ⅱ. 정치경제학 방법론

여기에서는 주로 「자본론」을 중심으로 그 방법론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의 관심사가 방법론이지만 그렇다고 마르크스주의를 방법론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오류이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복잡한 자본제적 생산양식을 분석하고 이 구조와 운동법칙을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의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1) 탐구의 방법(The method of Inquiring)과 서술의 방법(method of Presentation)

「자본론의 방법이라 할 때의 '방법'이란 직접적으로 '서술의 방법'이다. 즉, 「자본론」이 대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관한 연구성과를 계통적·체계적으로 서술하고 논증하는 방법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2판의 후기에서 서술의 방법과 연구의 방법 사이의 관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물론 서술의 방법은 형식적으로 연구의 방법과 구별되어야 한다. 연구는 소재를 세부적으로 나눠 내것으로 하고(angueign app-opiatc), 소재의 다양한 발전형태를 분석하며, 이들의 발전형어의 내적 연관을 추적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현실의 운동을 적절히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소재의 생명이 이제 관념에 반영된다면, 하나의 선험적 구성이 마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연구의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연구성과를서술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술의 방법이 협의의 방법문제인 것이다.

마르크스가 「경제학비판요강(Gaundrisse)」 서설의 제3절에서 쓰고 있는 방법도 직접적으로는 서술의 방법인 것이 분명하다.

"예를들면 17세기의 경제학자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전체, 즉 인구, 국민, 국가, 다수의 국가 등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분석에 의해 몇가지의 규정적인 추상적·일반적 관계, 예를들면 분업, 화폐, 가치 등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들 계기가 많건 적건 고정화되고 추상화되기 때문에 노동, 분업, 욕망, 교환가치와 같은 단순한 것으로부터 국가, 제국민간의 교환, 세계시장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경제학의 체계가 시작된다. 후자의 방법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다.[2]

여기서 마르크스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상승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그것이 제규정의 총괄이며 다양한 것들의 동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것은 사유에 있어서는 그것이 현실의 출발점이고 따라서 직관과 표상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3]

유물변증법은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두개의 계기로 보고 있다. 추상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1) F.H.Hahn 'Some Adjustment Problems' 「Econmetrica」 Jan. 1970. p.1-17.

2) 「Grundrisse, Foundation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New Left Books, 1973, p.100.

3) 앞의 책, p.101.

위한 수단이다. 즉 구체적인 것은 단지 감성적 직관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무수한 추상적인 제규정의 총화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경우 카테고리는 주어진 사실의 분석에 의해 얻어진다. 따라서 추상적인 카테고리에서 구체적인 카테고리로의 서술·설명의 방법은 반대로 그 역의 연구의 방법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탐구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해결에 있어서 추상적 카테고리로부터 구체적 카테고리로 상승하는 경우의 상향은 개념의 자기전개과정이었으며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선험적 연역과 같은 구체적인 것의 표상없는 순수한 추리과정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그 이해에 도달하려는 구체적인 대상이 처음부터 우리의 표상에 떠올라 있고 이 표상이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차례차례 분석되어 표상에서 개념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상승과정이다.

구체적인 것의 표상을 분석해서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연구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술의 과정에서 표상과 그 분석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감성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을경유하여 사고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운동은 분석과 종합이라는 기능을 포함한다.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추상은 그것들이 성질, 관계, 부분, 발전단계 등으로 분해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사고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의 창조는 종합에 의거하여, 즉, 주어진 대상과 다른 대상들 모두에게 인정되는 다양한 성질과 관계의 통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2) 분석과 종합

① 마르크스의 분석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 보낸편지에서 자신의 「자본론」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곳이 어디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 책의 가장 우수한 점은, ① (사실의 이해가 모두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바로 제1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사용가치로 표현되었는가 또는 교환가치로 표현되었는가에 따른 노동의 이중성과 ② 이윤·이자·지대 등의 특수한 제형태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잉여가치의 취급이다. (「자본론에 관한 편지」 1867년 9월 24일)

마르크스 자신이 본 「자본론」의 가장 우수한 곳은 가치의 분석이며, 잉여가치의 분석이고 같은해 엥겔스에 보낸 편지에서 또 하나 추가한 임금의 분석이었다.

분석이란 주어진 사실의 분석이며 그 이외에 어떠한 것에 대한 분석도 분석이 아니라는 것은 분석은 주어진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개념과 정의와 가정, 약속으로 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배척한 것은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이것에 관해 이리저리 사면하고 무엇인가 심원한 것을 말하려 한 것인데 그는 머리속에서 쉽게 만들어낸 가치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이것에서 사면에 의해 경제적 카테고리를 이끌어낸 A.와그너를 비판한 것도[6] 주어진 사실로부터 출발이라는 유물론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아무리 귀중하다 하여도 단순한 사실의 지식은 또한 과학적 지식은 아니다. 사실로부터 거기에 현상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추출하였을 때만이 의미가 있다. 사실은 언제나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곧바로 분석할 수 없다. 자연과학자들이 현미경과 시약으로 살아있는 사실을 가능한 단순화한 다음에 본래적인 분석에 들어가듯이, 마르크스도 경제적인 제현상의 분석에 있어서는 언제라도 이것을 추상에 의해 가장 단순한 형태로 순화하는 폐지작업을 하였다.[7] 추상은 비본질적인 것의 사상이지만 그것은 단지 우연적인 것의 사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연적인 것의 사상도 분석에있어 필요한 전제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분석하려는 사태 그 자체의 보다 구체적인 제형태를 사상해서 사태를 단순화시킬것을 말한다.

사상된 것들은 당면한 분석에서는 비본질적이다. 그러나 한층 전개된 분석의 단계에서는 사상된 것들 모두가 본질적인 것이다.

즉, 이 단계에서 추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다른 단계에서는 분석으로 나타나는데 분석과 추상이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구별될 뿐이다.

② 마르크스의 종합

분석에 의해 카테고리가 획득되면 이번에는 상승의 과정이 시작된다. 그것은 전체의 구체적 표상을 머리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분석하면서 상승하는 과정이다. 마르크스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제현상의 필연성을 분명하게 하는 방법이며 또한 특히 사물의 유기적 통일과 발전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사실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종합적 방법이라고 구별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종합적 방법이 단순한 종합적 방법과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과학방법일반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연구=하향, 서술=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제2판 후기에서는 연구의 작업에 관해 '연구는 소재를 세부로 나눠 내것으로 하고, 소재의 다양한 발전형태를 분석하며, 이들의 발전형태의 내적 연관을 깊이 추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하향의 길이 아니라 풍부한 내용을 함축한 문장이다. 연구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하향의 과정이지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향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상향의 계기와 종합의 계기를 함축하면서 전체로서 하향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술도 무조건 상향하는 일방적인 상향과정은 아닌 것이다.

즉 그것은 일방적으로 절대적인 전제로부터 전제된 것으로 진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제 그 자체가 전제된 것에 의해 기초지워져 진전하는 과정이며, 논리적으로 전진의 과정이 있으면 후퇴의 과정이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진리는 구체적이다'라고 보는데 자본개념은 최초의 추상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진리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자본의 모든 현상과 형태가 설명되어지는 경우에만 진리이다. 즉, 추상적 카테고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사실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추상적이고 생명이 없는 개념일 수 밖에 없으며 사실로서의 구체적 제현상에 의해 진리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상승의 과정인 것이다.

③ 논리적인 방법과 역사적인 방법

「자본론」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관한 구체적 지식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역사적인 방법은 객체의 여러가지 발전단계를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 역사적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제형태로 살펴보는 것을 수반한다. 이 방법은 그것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특징을 포함한 모든 다양성 속에서 역사적 과정을 표현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장점이 있다.[9]

4)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상향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것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정신적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사유에 있어서 의식에 불과하다… 사유총체로서의 구체적인 총체는 결코 직관과 표상의 외부에서 또는 이것을 초월해서 사유하고 자기자신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개념의 산물이 아니며, 직관과 표상을 개념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의 산물이다' 앞의책, p.101.

5) 콘스탄디노프 「The Fundamentals of Marxist-Lennist Philosophy」 Progress Pub. 1982 p.177.

6) 「Marginal Note on Adolf Wagner」 D.Mclellan (ed) 「Karl Marx ; Selected Writings」 Oxford Univ.,1977.

7) 「자본론」 제1판 서문 참조.

8) 見田石介, 김정로(역) 「마르크스의 방법론연구」 지양사.

9) 콘스탄디노프, 앞의 책, p.177-178.

논리적 방법은 대상의 본질과 그 주요한 내용을 이론적 형식으로, 추상의 세계속에 재현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방법에 비해 객체를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연관속에 반영함과 동시에 객체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서 동시에 사고도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이후의진행은 추상적인 이론적으로 일관된 형식으로 역사적 과정을 단순히 반영하는 영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은 비록 수정된 반영이지만, 각각의 요인이 충분히 성숙하고 고전적인 형태에 다다른 발전단계에서 그 요인들을 고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역사적과정 그 자체가 부여해 주는 계법칙에 따라서 수정되고 있는 것이다.[10]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논리적 연구방법을 분석의 기초로 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역사를 연대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구조를 성숙한, 전형적인 형태로 고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적 방법은 주어진 대상의 구조에 관한 연구와 그 역사에 대한 이해 즉, 두가지 연구방법의 요소를 불가분하게 동일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연구방법과 논리적 연구방법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역사적인 방법과논리적인 방법의 동일에 기초하여, 우리는 대상이 발전해온 역사나 현재의 구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논리적 과정과 역사적 과정의 관계를 단절시킨 개념의 자기전개설등은 일면적이라 할 수 있다.

논리적인 것은 역사적인 것을 그 모든 것에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발전과정의 풍부한 본질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논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은 하나의 것이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논리적인 것은 역사적인 것이지만, 역사적 형태의 여러가지 우연성으로부터는 떨어져 있는 것이다.

논리=역사설의 변증법적 방법에 있어서 카테고리의 진행은 현실의 역사적 진행에 조응하며 또한 카테고리가 어디까지나 현실 자체의 과정인 것과 같이 살아있는 전체에서 살아있는 전체로, 역사적인 것에서 역사적인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경제학적으로 그 이상 분석을 허용할 수 없는 궁극적인 상품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화폐, 자본일반, 자본의 모든 구체적 카테고리로 내적, 필연적으로 상승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11]

역사적 발생적 전개방법이 마르크스방법의 최대의 특징이지만 그것은 조금도 논리의 진행이 원칙적으로 역사의 진행에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방법을 연구에 실행하는 것은 단지 현실의 희화를 초래할 뿐이다.[12]

또한 상품의 카테고리가 출발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표상과 그 분석이 출발점이 되며 가치, 교환가치, 분업, 욕망, 노동이라는 카테고리까지 분석하여 이것들로부터 상품으로 상승하고 있다.

10) K.Marx.「A Contribute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Progress, 1977. p. 225.
11) 富塚郎三「経費原論」有斐閣, 1976.
김무홍역,「경제학원론」천예원, p.27에서 재인용
12) '경제적 카테고리들을 그들의 역사적인 규정적 순서에 따라 차례로 배열한다는 것은 실행불가능하고 오히려 잘못된 일이기도 하다. 카테고리들의 순서는 그들이 부르조아사회에 있어서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관계는 카테고리들의 자연적 순서로서 나타나는 것과는 혹은 역사적 발전의 순서에 대응하는 것과는 바로 그 역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Grundrisse, p.107.

④ 변증법적 방법의 본질과 자본일반

이미 서술한"추상적 카테고리로부터 구체적 카테고리"라고 하는 방법은 유클리트기하학에서 그 전형이 보여지고 있듯이, 오랜 옛날부터 수학과 자연과학에서 이용되었던 방법이며 이것을 과학의 유일한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르크스에 의해 수용되었다. 그리고 분석 및 종합은 과학방법의 유물론적 원칙을 나타내는 바이 방법과 관념론의 입장에 선 헤겔방법사이의 근본적 대립은 이 방법이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상향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이 언제나 대상의 표상을 떠올리고 그것을 차례로 분석에 의해 개념으로 변화시켜간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분석적·종합적 방법, 즉 유물론적 원칙이 변증법적 방법의 기초라는 것이지 변증법을 분석으로 환원하고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분석·종합에서는 대상의 필연성을 포착하지 않는다. 즉 변증법의 방법이란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재현상과 재형태는 단지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거나 여건으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다양한 외적근거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모두를 자본개념의 필연적 현상형태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구체·특수속에서 추상·일반을 볼뿐만 아니라 추상·일반속에서 구체·특수를 보며 개별로서 일반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특수 혹은 개별로서 실재하는 자본일반이 전제하는 것의 한편 혹은 뒤얽혀 있는 것의 한편으로부터 다른 한편으로 진행하여 그 특수성과 개별성을 폭로하고 그것을 기초지우며 이렇게 하여 그것을 전면화하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특수·개별의 변증법에 의한 전개가「자본론」의 방법과 편성의 핵심이다.[13]

(유물론적) 분석적 방법과 변증법적 방법은 불가결하게 상호결합되어 있으며「자본론」의 서술에 있어서 종횡으로 구사되고 있다.

13) 견전석내, 앞의책.

이제 자본일반을 방법론과 관련해서 고찰해보자.

이에 앞서 마르크스의 계획을 살펴보면 마르크스는 경제학의 총체계를「정치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6개부분으로 밝히고 있다.

(I) 자본 - a. 자본일반 b. 경쟁 c. 신용 d. 주식회사

(II) 토지소유 (III) 임금노동 (IV) 국가 (V) 외국무역 (VI) 세계시장 및 공황

그런데「자본론」이 이 6개부분중 어느범위에 속하는가, 그리고 이 구상이 1,860년대 이래 변경없이 그대로 관철되었는가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여 이를 둘러싼 소위 '플랜논쟁'이 있었다.

이는 주로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구보간교조(久保間敎造)로 대표되는 플랜불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당초의 구상은 변경되지 않았으며「자본론」은 본래 플랜의 자본일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해온 반면에 일찌기 그로스만(H.Grossman)에 의해 제기되고 동구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일본에서 우야홍장(宇野弘蔵)으로 대표되는 플랜변경설은 본래의 구상은 1963년 이후에 지양되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는 '자본일반확장설'이 대체로 정설로 인정되고 있다.

즉,「자본론」은 내용적으로 당초구상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I) 자본 (II) 토지소유 (III) 임금노동의 주요부분이 사실상 포함되어 당초의 자본일반의 항목으로 상정된 것보다 훨씬 충실하고 완비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다시말해「자본론」은 자본일반(Copital in general)에 한정된 논리단계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적 구조와 그 법칙을 파악하기 위해 '이념적 평균(ideal auerage)'에 의거하여 서술되어졌다.

그렇다면 자본일반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자본일반이란 생산일반의 역사적으로 특수한 형태로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일반을 서술방법에 의해 제기하는 추상수준으로 사회총자본의 분과로서 산업자본의 특수한 소작인 직접적 생산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일반의 내포와 외연 및 그 추상수준의 의미와 그것을 보편(일반), 특수, 개별의 범주로 파악해 보도록 하자.

먼저 자본일반에의 한정은 자본들간의 경쟁과 신용체계를 배제한다.[14]

경쟁은 자본들의 다중성을 전제하며 자본에 대한 자본의 작용을 포함하고 신용에서 자본은 개별자본들간의 관련속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양자의 경우 이념적 평론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재로서 자본들의 실제운동이 서술될 수 밖에 없다.

단순한 가치 혹은 화폐와 구별되는 자본의 첫 특징은, 자본은 잉여가치를 낳는 가치라는 점과 자본은 역사적으로 결정된 특정한 관계(자본-임노동관계)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자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가치를 확대시키는 능력-그들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창조된 잉여가치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본일반의 분석은 생산과정의 연구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어떻게 화폐가 화폐라는 단순한 성격을 넘어 자본으로 되는가, 어떻게 자본이 인간노동의 소비를 통하여 잉여가치를 생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잉여가치의 생산이 자본과 자본관계 그 자체를 재생산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수자본들의 존재와 그들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고서도 전개될 수 있다.[15]

마르크스는 자본은 다수 자본들로서 존재하며 다수 자본들로서만 존재할 수 있고 다수자본의 경쟁이 필수불가결한 추진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자본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사상한 자본일반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즉, 자본일반의 연구를 통하여 자본의 내부본질이 명확히 된 뒤에 다수자본의 경쟁과 그것에 부수하는 현상형태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수(주요한 계기)로서의 일반 및 개별로서의 일반을 통해 자본일반의 추상수준속의 방법론을 살펴보자.

첫째, 특수로서의 일반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것은 특수적인 것 위에 존재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특수인 실재하는 것이다.

만약 특수와 별개인 일반이 존재한다면 일반은 특수와 현실적인 교섭을 갖지 않기 때문에 특수에 제약되며 제약할 수도 없고 따라서 특수를 현실적으로 포괄하고 통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자본론」의 편성을 보면 제1부와 2부는 자본일반의 특수한 한 형태인 산업자본을 고찰하고 있으며 3부에서는 마찬가지로 특화한 상업자본과 대부자본을 다루고 있다. 산업자본은 순환도식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상업자본과 대부자본 및 이들을 제약하며 포괄하는 특수한 계기로서의 일반이다.

또한 제1부는 자본의 생산과정을 제2부는 자본의 유통과정, 제3부는 자본제생산의 총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자본의 생산과정은 유통과정을 제약·포괄하므로[16] 자본일반의 분석은 산업자본의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로 개별로서의 일반을 살펴보자. 개별적인 것이란 그 자신은 하나의 대립의 통일이고 총체이지만, 이것이 다른 총체와 다시 대립의 통일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동등한 많은 총체와 나란히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별적인 것이 갖는 기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즉 개별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가도 분명히 하지 않고 개별적인 것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개별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기초이며 개별이란 모두 개별로 통한다는 의미에서도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별은 개별의 상호연관과 피전제성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지 못하며 단순한 일반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개별로서의 일반으로부터 개별적인 것의 상호연관과 전체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2부에서 개별적 자본으로부터 사회적 총자본으로의 진행하는 경우이다.

개별적 자본의 입장에서 제1부 전체와 제2부의 1, 2편이 전개되는데 이는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일반적 기초이고 전제이므로 일반적이지만 피전제성과 형식성을 갖는 일면적 자본개념인데 개별적인 것의 상호연관과 전체적 사회적 총자본으로 이행하게 된다.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방법에 있어서의 자본일반이란 자본의 특수적 계기의 하나이며 개별적 자본 또는 자본의 개별적 과정으로 실재하는 것이며, 자본일반으로부터의 변증법적 전개란 상호전제하고 상호연관되어 있는 한편으로부터 다른편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자본일반이 이와 같이 실은 특수 또는 개별로서 실재하는 것임을 안다면 변증법적 전개에 관한 합리적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상품장에서의 마르크스의 방법

「자본론」의 서술은 제1부 3편의 서두까지 가치, 상품, 화폐, 관매, 구매 등 단순상품유통의 카테고리와 임노동, 잉여노동 등의 카테고리로부터 자본일반의 개념에까지 도달하는 단계다. 그 이후 이렇게 획득된 자본의 개념으로부터 자본 그 자체의 제현상과 제계기를 내적·필연적으로 전개하는 단계라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앞의 단계는 대타적으로 단순한 화폐 또는 전근대적 자본과 구별되는 자본의 종차를 지적하고 자본이 대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며 뒤의 단계는 대내적으로 자본 그 자체의 구조와 운동법칙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즉, 변증법적 방법에 의해 자본제적 생산양식을 발생하고 발전하고 소멸하는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제적 생산양식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 단순한 종합적 방법에 의해 자본개념을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진다.

이러한 자본론의 편성은 각 단계 내부에서 동일한 편성의 방법이 보다 작은 규모로 반복되고 있다. 제1장은 상품의 개념 그 자체가 구성요소인 사용가치와 가치에서 종합되고 확정되는 단계이며 2장은 이 상품의 개념으로부터 화폐의 현실적 발생이 내적·필연적으로 전개되는 단계이다.

더우기 상품의 요소로서의 가치 그 자체에 관해서 보면 가치개념 그 자체가 요소인 추상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에서 종합되고 확정되며 그 가치개념에서 가치의 제형태와 화폐의 이론적 개념이 내적·필연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마르크스는 자본, 상품, 가치 그 자체에서는 모두 전제되고 주어진 각각의 표상을 분석하여 이들의 개념에 도달하고 있는데 비해 자본, 상품, 가치의 내부에 있어서 제계기에 관해서는 이것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지 않고 필연적 계기로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보통의 분석적·종합적 방법(유물론적 방법)을 사용하고 후자의 경우는 발생적 전개의 방법, 즉 변증법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도 (유물론적) 분석적·종합적 방법과 변증법적 방법이 불가결한 두방법, 두계기로서 서술에서 종횡으로 구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각각 상품의 분석, 가치의 분석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자.

---

14) Rosdalsky「The Making of Marx's Capital」Pluto Press, 1977. p.41.
15) R.Rosdalsky「The Making of Marx's Capital」Pluto Press. 1977. p.44-5.
16) '생산은 생산의 대립적 규정속에 존재하는 자기를 포섭함과 동시에 다른 체계도 포섭하고 있다. 과정은 언제나 생산에서 시작한다…… 그리므로 일정한 생산은 일정한 소비, 분배 : 교환 또한 이들의 다양한 계기상호간의 일정한 관계를 규정한다.' Grundrisse. p.99.

1) 상품의 분석

「자본론」은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세포인 상품을 주어진 전제로서 받아들여 그것이 우리에게 현상하는 자태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결코 완성된 상품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표상을 분석하여 상품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동일임을 밝혀낸 뒤 상품에 동일되어 있는 각각을 분리하여 사용가치는 사용가치 그 자체로서 추상하고 교환가치는 교환가치 그 자체로서 추상하여 상품을 고찰한다.

먼저 사용가치를 취급해 그것은 사물이 갖고 있는 인간욕망을 충족시키는 속성이며 유용성이고, 여기에 사회적인 것을 조금도 섞지 않은 순수히 자연적인 것, 다시말해 부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이 부의 소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다음에는 소환가치를 취급해 노동의 이중성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것이 한 분자의 자연적인 것도 포괄하지 않는 순수히 사회적인 것이고, 생산자들의 사회단계가 취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형태이며, 이것이 물자된 것이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분명히하고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구별을 모든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는 주어진 자본의 소산으로서 상품을 단순한 상품으로서 추상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단순한 상품도 사용가치와 가치의 결합체이며 자연형태와 가치형태라는 두형태를 갖는 이중물이다. 그러나 상품가치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가치의 측면은 조금도 관계가 없는 것이며, 그러한 이중물로서의 복잡한 형태인 상품을 취급하면 문제의 해결을 곤란하게 할 뿐이므로 상품은 사용가치의 측면을 사상해서 일면적으로 가치의 측면으로만 취급된다.

2) 가치의 분석

분석의 대상인 가치의 현상형태인 교환가치는 가장 추상적이고 단순한 형태-한 종류의 사용가치와 다른 종류의 사용가치가 적당한 비용도 등치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두개가 등치된다는 것은 다만 이들이 한쪽도 다른쪽도 아닌 제 삼의 것으로 환원, 즉 공통적인 것이 발견되는 한에 있어야 가능하다.

추상에 의해 순화된 사태는 공동의 제삼자를 발견하는 문제는 예리한 형태로 제기한다.

마르크스는 이들 서로 다른 두개의 사용가치속에 존재하는 공통의 제삼자는 구체적 노동이 아니라 모든 구체적 노동의 일측면을 이루고 동질·동등한 추상적 노동 즉 인간적 노동력이 지출되고 이것이 양자에 대상화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선 증명한다.

/그러나 노동이 일반적으로 한 측면으로서 갖고 있는 생리학적 사실은 추상적·인간적 노동은 동시에 한 사회가 각 산업부문에 분배하는 사회적 총노동력의 일분자라는 의미를 갖고 따라서 개개인의 노동이 갖는 사회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치란 이러한 일분자의 자연물도 포함하지 않는 사회적 실체의 대상화이며, 그것은 물적관계가 아니라 사회관계이며 물적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리하여) 인간의 노동은 어떠한 사회에서도 사회적 노동인 바, 그러나 상품생산사회 이외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추상성이 아니라 구체성이 그 사회성을 이루었고, 추상적 노동이 개개인의 노동의 사회성을 이루게 된 것은 개개인의 노동이 직접적으로 사적노동이 되는 상품생산사회에서만 그러하며 따라서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은 사회적 노동이지만 역사적으로 특이한 사회적 노동의 형태임을 말하고 있다/

즉, 노동일반은 추상적 노동과 구체적 노동의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사적생산이란 조건속에서는 이 추상적 노동이 대상화, 물화하여 가치가 된다. 이 가치의 실체인 추상적 노동은 조금도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의 영원한 속성 즉 추상적·인간적 노동으로서의 일측면인 것이다. 또 그 가치의 양을 규정하는 것도, 그 노동의 양 즉, 사회평균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지속시간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 역시 조금도 상품사회 특유의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노동이 처음부터 사회적 분업의 필연적 일환으로 규정되고 있던 사회에는 개개인의 노동의 구체성이 이미 그것의 사회성을 나타내고 또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사적인, 따라서 무정부적인 상품생산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어떠한 사용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 노동의 사회성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 동시에 여기서는 개개인의 노동이 추상적 노동으로서 다른 사람의 노동과 동질·동등의 것이며, 일정한 비율로 서로 등치되어 교환되는 것이란 점에서 출발하여 그 개인노동의 사회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추상적 노동이라고 하는 그 자신으로서는 생리적인 사실이, 단지 자연적 사실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 즉 하나의 사회적 실체가 된다. 따라서 가치는 영원한 추상적 노동이 취하는 한개의 역사적 형태이지만, 또 이미 영원한 사회적 노동의 역사적인 한 형태이다. 이처럼 노동일반의 속성, 그 영원한 생리학적 진리로부터 가치로 상승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노동이라는 사회적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이 이미 영원한 진리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한 개의 자연법칙으로, 가치로 상승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가치의 분석에 근거하여 가치의 현상형태인 최초의 교환가치로 돌아간다. 가치가 이와같이 물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인 이상, 상품은 그 가치를 자신의 신체에 의해 표현할 수는 없고, 자신을 사용가치로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를 등치시킴으로써 표현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한 상품과 다른 상품과의 관계라는 형태를 취하는 교환가치는 가치의 필연적 현상형태임을 증명하고 있다.

욕망과 사용가치로부터 상품으로, 추상적 또는 사리적 노동으로부터 가치로의 상승에서는 모두 각각의 추상적 카테고리가 구체적 카테고리를 함축하고 있지 않으며 이행의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종합과정이다.

이제 가치형태의 전개가 갖는 의의를 생각해 본다면,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가치형태 일반과 화폐로 가치개념 즉 가치의 본성과 아무런 연관을 갖지 않는 것이며 결국 단순히 발견되고 주어진 것으로 생각이 그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마르크스가 화폐를 포함한 가치 제형태를 가치개념에서 내적 필연적으로 이끌어내고 그 필연성을 증명하여 처음으로 가치형태일반과 화폐의 과학적 개념을 확립한 것이 그 전개의 의의이다. 즉, 가치형태의 전개는 가치의 실체의 분석, 가치개념의 확립과 분화할 수 없게 결부되어 있다. 가치형태는 가치개념으로부터의 전개이며 여기에 가치형태 전개의 생명이 있다. (가치분석에 있어서 그 형태의 확정은 그 실체의 분석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실체의 분석은 형태의 분석으로부터 어느정도 독립하여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최초의 가치개념에서 제 I 형태로의 전개를 고찰해 보자. 마르크스는 단순한 가치형태를 취급하면서 '일체의 가치형태의 비밀이 이 단순한 가치형태 속에 숨어있다'고 서술한다. /제 I 형태는 가치형태일반의 가장 단순한 가치형태이며, 일반적으로 가치형태이기 위한 필연적인 규정외에 어떠한 특수한 규정도 갖지 않는 가치형태, 즉 가치형태 그 자체, 가치형태 일반이다.

여기에 일반적인 것이 특수적인 것의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와 나란히 실재하고 특수한 것이라는 변증법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하고 특수한 역사적 형태의 고찰은 신에 화폐형에 자체의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본성의 고찰을 의미하며, 이 역사적 제형태의 순차적인 고찰은 화폐를 가장 추상적인 측면에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순차적으로 고찰을 진행해 가는 것인데, 이 범위내에서만 논리의 역사의 조응이 보여지고 있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화폐의 고찰을 위한 가치형태의 전개에 있어서 대부분을 제 I 형태의 분석에 치중하고 있는 이유이다.

상품가치가 사회적관계의 표현이므로 가치를 단독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상품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가치개념안에 가치형태가 함축되어 있는 것은 등기형태와 상대적형태로 나타난다.

마르크스는 우선 능동적인 상대적 가치형태를 취급하며 다음에는 수동적인 등기형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통일로서 단순가치형태 전체가 고찰된다. 상대적 가치형태, 등가형태, 이들 두 형태의 통일, 이것이 추상적 카테고리에서 구체적 카테고리로 진행하는 논리의 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상대적 가치형태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자신의 전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나 자신에 의해 전제된 것(등기형태)을 자신의 전제로서 나타내어 있으며 등기형태도 마찬가지이다. 가치형태의 한 극으로부터 한 극으로의 이행, 즉 필연적으로 연관하는 대립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다른 쪽을 전제하여 한 쪽을 고찰한 다음 그 전제에 입각해서 다른쪽을 고찰함으로써 처음에 한쪽이 가졌던 피전제성을 지양해서 전체의 보다 구체적인 개념에 도달하고 있다.

이상의 단순가치형태의 분석은 그것이 가치개념의 필연적 현상형태라는 것과 다음에 그들 내부에 존재하는 두극사이의 필연적 관계라는 것, 이 두 측면은 하나로 하는 것이다.

다음은 Ⅰ형태에서 Ⅱ형태의 상승과정을 고찰해 보자.

먼저 Ⅰ형태는 Ⅱ형태이고 Ⅱ형태는 Ⅰ형태로부터 구성되어진 하나의 전체이므로 Ⅱ형태는 Ⅰ형태를 함축한다. 또한 Ⅰ형태는 한 상품의 가치가 단지 다른 한 상품의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떠한 사용가치를 갖더라도 관계가 없는, 따라서 이미 잠재적으로는 동일한 상품의 가치를 다른 여러가지 상품으로 표현하는 Ⅱ형태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Ⅰ, Ⅱ 두 형태는 개별적인 표현과 전체적인 표현으로서 단순가치형태의 두극과 마찬가지 대립물이며 대립적 형태의 필연적관계를 가진다.

즉, Ⅰ, Ⅱ형태는 동일한 하나의 가치형태 발전의 두단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에 의해 필연적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Ⅱ형태는 단순한 극이 아니라 독자적 제특성을 가진다. 즉 Ⅰ형태와 비교할때 보다 완전한 가치표현양식이다.

Ⅰ형태에서 Ⅱ형태로의 이행은 Ⅲ형태로의 이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Ⅲ형태에서 화폐형태로의 이행은 Ⅲ형태에서 화폐형태로의 이행은 Ⅲ형태가 단지 귀금속으로 고착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여 주어진 화폐가 갖는 가치형태일반으로서의 성질과 관계로서의 독자적인 형태규정이 완전히 가치의 본성으로부터 부여되며, 완전한 화폐일반의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구체적 사물의 제계기는 한번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총체로서 해당의 사물자체도 처음부터 완성된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계기는 제각기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따라서 필연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나타난 제계기와 그들의 상호적, 전체적 관계는 발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물의 개념적 파악은 필연적으로 발생적 파악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대상의 진정한 개념적 파악을 서술하고 방법도 대상의 개념에 의한 발생적 전개방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Ⅳ. 맺 음 말

이상에서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방법론에 한정된 논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상수준이 높은 자본일반의 수준이므로 현실의 독점자본주의의 구체적 현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되고 있지 않은 불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 및 수정이 그의 방법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으며 상이한 방법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질적인 이론체계에 특정부분만을 떼어내어 환원시키는 상투적인 비판을 고려할 때 마르크스 방법론에 대해 미약하나마 그 이해를 진전시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도 있겠다.

자유기고

변혁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농업문제

한 호 연
(경제학과 88 년졸업)

목 차

Ⅰ. 머리말
Ⅱ. 본 론
1. 반봉건성의 일반적 문제와 개념
2. 한국의 토지소유관계
3. 농업문제 해결의 관점
Ⅲ. 결 론

Ⅰ. 머리말

현재 한국 사회의 변혁운동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지식인들, 이론가들이 참가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책으로 만들어져 쌓여 있는 높이도 이제는 꽤나 높은 것 같다. 하지만 그동안 논의에 소모되었던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생산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가 이글을 쓰는 목적은 이론의 영역도 이제는 단지 이론가나 학자의 영역으로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실천가들에 의해 실천적으로 고민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러기에 현 단계를 뛰어 넘는 논쟁의 한계란 결국은 '말자랑'쯤 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는 그간의 자칭 '교조주의'와 비과학성을 자기의 생명으로 하는 제반 이론과의 분리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설파하기 위한 것이다.

두가지의 목적을 이글이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해 낼 것인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두며 올바른 비판을 기대한다.

이글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반봉건성의 일반적 개념 속에서 한국의 토지소유관계를 살펴보고 올바른 해결의 관점을 세우기 위한 노력까지를 틀로 하고 있다. 다소 논의의 주제가 장황하기는 하지만 논점을 중심으로 논쟁형식의 글이 될 것이다.

"실천적 무기를 획득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쟁은 생명력을 지닐 수 있고, 그러기에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론은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

Ⅱ. 본 론

1. 반봉건성의 일반적 문제와 개념

우리는 먼저 논의의 풍부한 내용들을 배태하고 있는 조 진경씨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반봉건성의 가장 중요한 물적 토대는 신식민주의에 의해 온존·강화된 지주— 소작관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반봉건성=농업에서의 지주—소작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협애한 인식이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에 대립되는 모든 현상들이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

물론 지극히 타당하고 실천적 관점에 서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과학성, 치밀성만을 가지고 반봉건문제에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을 완전히 격퇴할 수는 없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농업에서의 지주소작관계 그 자체를 반봉건성의 물적 토대로 보는 조 진경씨의 자기 한계는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차후에 이점을 해명할 것이다). 즉 한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강조한 조 진경씨는 한국 자본주의의 양적 성장이 초래한 폐악(관료성, 천민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한국의 주요한 경제체도가 자본주의라는 점 그리고 한국사회는 과제 중심으로 보면 식민지 반봉건사회라고 하는 자신의 규정속에서 "실천적관점" 운운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런 실천적 유용성을 가지다 주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사회를 분석하고,규정한다. 하나 조 진경씨의 태도는 적절한 배합과 절충, 그리고 맹목적 화해를 강조하는 것이기에 만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 진경씨는 "식반사회라는 개념 규정이 어떤 일정한 표상을 가지면서 불필요한 혼동과 오해를 낳는다면 그 개념을 과감히 포기하고,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2]는 학자로서의 겸손에 만족하고있어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사심이 없이 출발해야 한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겸허한 자세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래서 이진경씨가 제기한 '반봉건제의 본질적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아니 그보다 앞서서 생산력, 생산관계, 생산양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생산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한 것이든간에 노동자와 생산수단은 언제나 생산의 요건이다. 그러나 그 어느 한쪽도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는 단지 가능적으로만 그러할 뿐이다. 무릇 생산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양자가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결합이 행해지는 특수한 방식 내지 양식이 사회구조의 다양한 경제적 시대를 구별짓는다.

"부불잉여노동이 직접 생산자로 부터 착출되는 독특한 경제적 형태는, 생산 그 자체로부터 직접 자라나면서 또한 자신도 규정적으로 생산에 반작용하는 바의 지배—예속관계를 규정한다. 또한 이 관계 위에서 생산관계 자체로부터 성장하는 경제적 공동체의 전체적 형태가 세워지며, 이로써 동시에 그것에 독특한 정치적 형태로 전속된다.

직접생산자의 생산조건소유자로의 직접적 관계—이 관계의 다양한 제 형태는 의당 노동의 방법, 따라서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한다.

1) 조진경 외, 「80년대 한국사회와 운동」, 공동체, 조진경 논문 P 32 , 33.
2) 조진경 외, 위의 책 P 28.
3) 자본론 제2권 1장2절, 이진경「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p 201 재인용.

이 관계야말로 항상 우리가 그 위에서 사회구조 전체, 따라서 주권—종속관계의 정치적 형태, 요약하면 그때 그때의 독특한 국가형태의 가장 깊은 비밀, 그 숨겨져왔던 기초를 발견하게 되는 바의 관계인 것이다."[4]

굳이 장황하게 '자본론'을 인용할 필요성은 과학적 개념정립의 필요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진경씨는 생산력=내용, 생산관계=형식이라는 규정속에서 이들의 통일체가 생산양식이라고 한다.[5] 그리고 "맑스는 특정한 생산관계를 역사적 맥락속에서 구분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관계 및 생산자와 생산수단 소유자의 직접적 관계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6] 라고 얘기하면서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한 최초의 논자인 듯 뽐내고 있다.

하나 맑스의 '자본론' 인용을 굳이 한 것은 독자들 앞에서 명확히 비교되어야 한다는 점, 바로 그것이다. 인용문[3]의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독특한 결합방식이 다양한 경제적 시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 원칙으로 이는 인류 전(全)사회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용문[4]의 '직접 생산자에 대한 생산수단 소유자의 직접적 관계'는 적어도 계급사회에 대한 적용이다.[7] 그런데 이 진경씨는 생산력=생산자와 생산수단과의 관계, 생산관계=생산자와 생산수단 소유자의 관계, 그리하여 이 양자를 산술적으로 하여 생산양식을 파악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8] 이것은 그가 천재적 발명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는 여러 가지 우클라드가 존재한다. 역사에서 존재했던 모든 사회에는 대체로 소경영 생산양식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구분되게 하는 지배적 우클라드를 가지고 있었다. 또 이외에도 그 사회가 사회발전 단계에서 처했던 독특한 처지에 의해 규정되는 우클라드를 지니고 있었다. 이때 여타의 우클라드는 지배적 우클라드의 운동에 포섭·제약되어, 해체되어 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지·온존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진경씨는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적 이해를 해석하는 차원에서 인용문[3]과 인용문[4]의 산술을 통해(인용문의 본래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맑스의 '생산자와 생산수단'과의 관계와 '생산자와 생산수단 소유자'와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산수단과 생산수단소유자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다.[9]

생산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규정할때 그 자체로 한 사회를 다른 사회와 규정 짓는 것일 수가 없다. 생산력은 단위 시간당 사용가치의 생산능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이를 규정하는 것은 노동용구와 노동자의 인지의 확대 두 요인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과정의 기술적·사회적 결합양식은 단지 '생산력'의 독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생산관계와의 관련성을 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회에 대한 과학적 규정은 '잉여노동이 직접생산자로부터 착출되는 형태[10]

4) 자본론 제2권 1장2절, 이진경「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p 201~202 재인용.
5) 이진경「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아침 p 195.
6) 이진경, 위의 책 p 202.
7) 한겨레 사회연구소, 「한겨레」 1988년 2월 통권2호 p 69.
8) 분명히 생산양식은 인간이 생산수단을 사용하여 자연을 개조한다고 하는 인간과 자연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과 자연을 개조할 때 인간과 인간이 맺는 사회관계라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허나 어디까지나 두 측면은 두측면일 뿐이다.
그런데 이진경씨는 생산양식=생산자와 생산수단의 관계+생산자와 생산수단 소유자의 관계로파악하여, 생산양식은 노동양식+(소유, 점유형태)로 봄으로써 자신이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총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발상속에서 이진경씨는 "부불잉여노동이 착취되는 형태"와는 무관하게 '지대'의 말만 나와도 분배주의, 유통주의라고 규정짓는 자본주의 병(病)에 빠져 있다.
9) 한겨레 연구소, 위의 책 p 72.
10) 자본론, 제1권 7장 1절, 이진경, 위의 책 p 202 재인용.

즉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직접 생산자와 생산수단 소유자 간의 착취·피착취 관계를 올바로 해석해내는 것이며, 이 글에서 주제로 설정하고 있고 매듭지어야할 반봉건성의 문제도 반봉건적 우클라드의 해명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우클라드로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적인가? 부차적으로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조 진경씨의 '주요한 경제제도는 자본제'이고 '과제중심으로 보면(이렇게 얘기하면 실천적인가?) 식민지 반봉건사회'라는 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잠시 '小谷'의 말을 빌어 보자

'식민지 반봉건사회는 '大上'이 말하듯이, 산업자본주의의 독립적 발전 및 농업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전혀 불가능한 사회라고, 고정적으로 파악되어서는 안되는, 자본주의의 발전·농민층의 일정한 자본주의적 분해를 불가결한 전제로 하여, 그것을 포섭하면서 형성되는 독자적인 前자본제적 사회구성체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봉건제 그 자체가 아니고, 또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에로의 단순한 과도기도 아니다. 자본주의가 바로 식민지·半식민지에 창출한, 인류사적으로는 부차적 종속적인 하나의 사회구성체제[11]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본주의가 형성하는 근대 세계는 결코 자본주의라고 하는 단일구조로 일원화되지 않고, 복합적인 구조를 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과제는 결국 객관적 실재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과제'와 '존재'가 다를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조 진경씨는 다음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이고 반봉건적 우클라드가 부차적으로 존재한다.'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구성체이고 그러므로 사회성격 혹은 과제도 反帝反封建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아주 당연스럽게 사회구성체는 자본주의이고 사회성격은 식민지 반봉건사회라는 논의(박 현채의 다수)[13]는 어불성설이 되는 셈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를 선언적으로나마 밝히고 풀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조 진경씨에게 선택을 강요한 두가지 내용중에서 前者를 선택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왜그런가는 한국에서 토지소유관계를 해명해야 하고, 흔히 '재생소작제'라고 하는 것의 근원도 따져져야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구체적 근거들을 제기하는 가운데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고 다만 여기서는 반봉건적 우클라드가 무엇인가?를 개념화하는 선에서 맺고자 한다.

"반봉건은 세계자본주의에 의한 규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한 과도기나 중간적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4) "반봉건제라 칭해지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부르조아적 제 관계—특히 상품유통이 광범하게행해지고, 명목상으로는 토지가 상품화되어매매의 자유가 존재하며, 농민도 또한 화폐경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제 조건 —하에서 중세 봉건적인 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반봉건체라는 규정을 법적,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제 관계하에서의 前자본제적 토지소유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농업에서의 생산관계를나타내는 규정이다.[15)

여기에서 우리는 반봉건적 우클라드가 맑스의 '부불잉여노동이 직접 생산자로부터 착출되는 독특한 경제적 형태' '잉여노동이 직접 생산자, 즉 노동자로부터 착출되는 형태' 등에 기초하여 농업에서의 토지소유를 둘러싼 관계, 즉 지주—소작관계라는데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반봉건성의 해명은 농업의 지주—소작관계의 해명이고, 이의 해명을 통해 반봉건성이 지배적, 규정적인가? 아닌가(?)의 문제, 그리고 반봉건성이 본질적으로 자본제적인 것인가? 봉건적인 것인가?를 확고하게 밝힐 수가 있다.

11) 그러므로 일제하 조선사회와 신민주주의 혁명 이전의 중국사회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구성체라 규정할 수 있고, 주요한 사회성격은 식민지 반봉건성이라 할 수 있다.
12) 장시원 편역, 식민지 반봉건사회론, 미래사 p 355.
13) 사회구성체와 사회성격은 변혁운동의 차원에서 설정하는 사회성격과의 괴리를 인정한다면 이는 무한한 실용주의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14) 장시원 위의 책 p 355.
15) 장시원 위의 책 p 355.

2. 한국의 토지소유관계

① 한국농업의 전반적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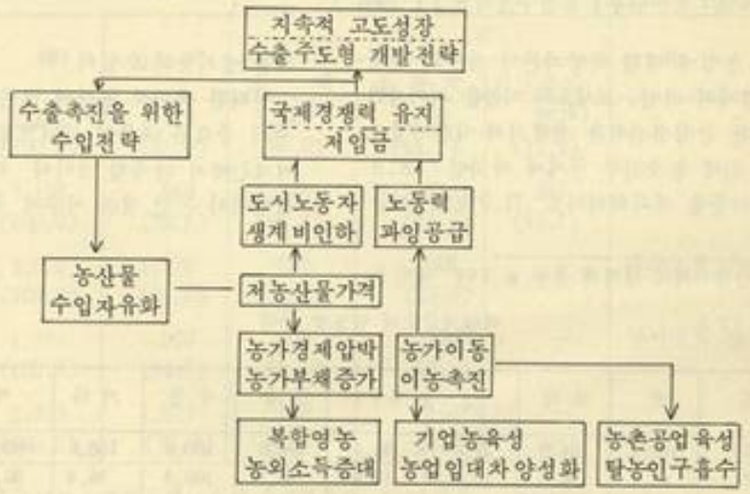
농업에 대한 내외독점자본의 지배양식은 저농산물 가격구조와 해외농산물 도입,부등가 교환 및 농업정책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16] 이의 구체적 내용은 표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을 진행하기 위한 저임금 구조, 그리고 이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도시 노동자의 생계비를 인하하고, 농가의 이농을 촉진하여 저임금 구조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입전략은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저곡가를 지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독점자본의 논리는 최근에는 생산력의 발전정도, 기타 자연적 제요인에 의해 상대적으로(여타 국가와 비교하여) 고미가(高米價)인 한국의 농업생산 구조를 바꾸어 나가려는 기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예가 바로 기업농 육성, 농지임대차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으로 현실화되고 있다.[17]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생산비에도 모자라는 저곡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매가격의 인상폭이 물가지수와 균형적인 비율로만 성장했다면 전체 농가에서는 81 ~ 85년 사이에 1조 4천억 이상의 소득을 더 얻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독점자본의 농업지배 방식은 비료, 농약 등 농업생산요소에 대한 독점 가격으로의 성립등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권력이 내외독점 자본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영세소농을 독점자본체제에 얽어매는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는 점이다.

개 방 농 정 의 기 본 구 조



* 자료 : 한국 농업경제연구원, 「80년대 새로운 농정의 모색」, 1980, 김 홍상

16) 조진경외, 한국 사회의 성격과 운동 p 146.
17) 86.12.31 제정 「농지 임대차 관리법」.

〈표2〉 쌀 수매 가격 및 생산비

(단위 : 원, 쌀 80㎏ 2등품 기준)

연 도	수매가격 (A)	생산비		A − B
		농수산부조사	가톨릭농민회 조사 (B)	
1980	45,750	40,238	71,057	− 25,178
1981	52,160	36,033	69,311	− 17,151
1982	55,970	36,853	76,997	− 20,027
1983	55,970	39,158	75,498	− 19,528
1984	57,650	39,124	77,889	− 20,239
1985	60,530	41,675	76,820	− 16,920

〈표3〉 쌀 수매가격의 억제에 의한 농가 손실액 추정 (1981 ~ 85)

연 도	물가지수 (1970기준)		쌀수매가격 (2원 원 / 80㎏)			수매량	증대가능액
	농가구입가격	쌀수매가격	실수매가	구입가격 수준의미가	차이 (A)	(B)	(A×B)
	(%)	(%)				(천석)	(억원)
1981	346.5	267.5	52,160	67,525	15,365	6,356	1,757.9
1982	388.9	287.0	55,970	75,842	19,892	7,577	2,710.3
1983	421.0	287.0	55,970	82,102	26,132	8,468	3,983.1
1984	404.6	295.6	57,650	78,908	21,258	8,436	3,228.0
1985	394.6	310.4	60,530	76,947	16,417	7,567	2,484.5

• 자료 : 농수산부『농정주요지표』(1986)

이러한 농업에 대한 독점자본의 침투와 지배는 농가경제의 파탄, 도시로의 이농을 야기시키고, 한국의 농업생산력을 정체시켜 식량자급도가 85년 현재 농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48.6%, 사료작물을 제외하더라도 71.9%로 자급성을 면치못하고 있다.[18]

이러한 객관적 현실에 대한 논의가 이 글에서의 주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개괄적으로 짚어보는데서 만족할 것이다. 다만 이 내용을 짧게나마 논한 것은 이후에 농업내부의 지주-

18) 한국사회의 성격과 운동 p 157 재인용.

〈표12〉 식량자급율의 연도별 추이

(단위 : %)

연 도	쌀	보리	밀	옥수수	두 류	서 류	기 타	계	사료제외 자급도
1665	100.7	106.0	27.0	36.1	100.0	100.0	100.0	93.9	98.8
1970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80.5	86.2
1975	94.6	92.0	5.7	8.3	8.3	100.0	100.0	73.0	79.1
1980	95.6	57.6	4.8	5.9	5.9	100.0	83.8	56.0	69.6
1984	97.5	103.9	0.6	3.1	3.1	100.0	10.1	48.7	72.3
1985	103.4	82.4	0.4	4.1	4.1	100.0	12.4	48.6	71.0

• 자료 : 농수산부, 「농정주요지표」, 1986.

소작관계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론했을 뿐이다.

② 한국에서 지주-소작확대의 추이와 요인

1985년 현재 한국에는 64.7%의 소작농가가 존재하며 소작지율은 30.5%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표1에 의하면 76년에 비해서

〈표4〉 소작농가 비율, 소작비율, 소작지-경영지 비율

(단위 : %)

연 도	소작농가비율	소 작 지 율	소작농에 있어서 소작지 / 경영지 비율
1960	16.4	12.0	45.5
1963	26.9[1)]	14.6	86.4[1)]
1964	28.4	15.1	53.2
1965	30.5	16.8	55.1
1970	32.5	17.2	52.9
1973	29.8	16.4	55.0
1975	26.9	13.8	51.3
1976	33.7	14.4	42.7
1977	36.1	16.5	45.7
1980	37.1	19.8	53.4
1981	46.4	22.3	48.1
1983	59.4	26.8	45.1
1984	62.8	28.3	45.1
1985	64.7	30.5	47.1

• 주 : 1) 소작농가 비율이 예외적으로 너무 적게 조사된 결과이다.
• 자료 : 김 홍상, 앞의 논문, 44쪽에서 인용

〈표5〉 농지개혁 전후의 소작면적 추이

(단위 : 1000정보)

	계	자작지	소작지			비 고
			소 계	소 작 지	귀속농지	
1945 [1)]	2,226 (100.0)	779 (35.0)	1,447 (65.0)	1,160 (52.1)	287[5)] (12.9)	
1947 [2)]	2,193 (100.0)	868 (39.6)	1,325 (60.4)	1,038 (47.3)	287 (13.1)	
1949 [3)]	2,071 (100.0)	1,470 (71.0)	601 (29.0)	601 (29.0)	—	귀속농지 분배
1950 [4)]	1,970 (100.0)	1,870 (94.9)	100 (5.1)	100[6)] (5.1)	—	농지개혁 실시
⋮ 1959	2,033 (100.0)	1,877 (92.3)	156 (7.7)	156[7)] (7.7)	—	

자료 : 1)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산업은행 10년사』, 1955년간(再)
2)3) 농림부, 『농지개혁기본참고자료』, 1949년간
4)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55년간
5) 농림부, 『농지개혁기본참고자료』, 1949년간.
6) 추정치

7) 농업은행, 『농가경제조사결과 보고』, 1960년간
김성호 외, 『농지제도 및 농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농경연, 1984. P. 69
에서 재인용

〈표6〉 농지개혁 전후의 농지소유형태별 농가구성비 변화

연 도	자 작	자소작	소자작	소 작	계
	..... 천호(千戶)				
1945 1)	185	..... 810		924	2,019
1947 2)	385	402	432	914	2,106
1949 3)	925	..... 1,023		526	2,474
1959 4)	1,816	279	129	43	2,267
	..... %				
1945	14.1	..... 40.1		45.8	100.0
1947	17.0	19.1	20.5	43.4	100.0
1949	37.4	..... 41.4		21.2	100.0
1959	80.1	12.3	5.7	1.9	100.0

자료 : 1)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 1948년
2)3) 농림부, 『농지개혁 통계요람』, 1951년
4) 농림은행,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60년
김성호외 (1984), P. 73에서 재인용.

거의 두배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증가요인에 대해 대략적인 두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19] '그 하나는, 농지개혁의 부분성, 기만성, 불철저성이 그 기초로 되었으며 농지개혁 후에도 잔존한 반봉건적 관계가 자기를 확대재생산해간다는 견해(박현채씨가 대표적)이고, 두번째는 독점자본의 농업지배, 즉 저임금을 위한 저농산물가격 정책이 농가경제를 파탄시키면서, 농업내부에 상대적 과잉인구를 창출해냄으로써 지주-소작 관계의 재생산의 경제적 기초가 된다는 견해(김 홍상씨등)이다'

먼저 첫번째 견해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후자를 지지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물론 농지개혁의 불철저함을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재생소작제와 관련하여 농지개혁의 불철저함이 그의 근원이라는 점에 대한 것이다.

" 1945년 소작농가비율이 85.9%, 자작농의 비율이 14.1%이던 것이(농지개혁이 거의 완료된 필자인용 표5.6참조) 1959년에는 소작농가비율이 19.9%, 자작농의 비율이 80.1%로 크게 변화하였으며 소작지 비율도 1945년 65.0%, 1949년 29.0%, 1950년 농지개혁 실시 직후는 5.1%로 크게 낮아졌다.

1945년 소작지면적, 1,447천(千) 정보중에서 1950년 6월 1,347천정보(94%)가 자작지로 변하였으며 소작지는 불과 6%만이 그대로 남았다.[20] 여기에서 현재 농업내부에 있어서 지주-소작제의 광범한 확대·재생산의 경제적 기초가 불과 1950년 6월 현재 6% 소작지가 자기를 재생산한 것, 지주의 명의변경토지, 토지대장에서 제외된 토지가 1985년 현재의 소작농가 비율, 소작지율을 결정짓는 주범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거의 40여년에 이르는 오랜기간에 있어서 농지개혁의 불철저함이 이후 소작지의 확대의

19) 한겨레연구소, 위의 책 p 82.
20) 김석민외 「한국 자본주의와 농업문제」 아침, 김홍상논문 p 173.

〈표7〉 소작인에 대한 지주의 경영상의 개입

개입한다	개입안한다	합 계
18 (6.9)	242 (93.1)	260 (100.0)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김홍상논문 재인용

〈표8〉 계 약 방 법 (건수별)

구두계약	서면계약	알수없음 대답없음	계
1,251 (93.2)	55 (4.1)	36 (2.7)	1,342 (100.0)

〈표9〉 소 작 기 간

정하지 않음	1 년	2~3년	4~6년	7년이상	알수없음 대답없음	계
907 (67.6)	349 (26.0)	39 (2.9)	11 (0.8)	2 (0.1)	34 (2.5)	1,342 (100.0)

8,9,10 한국농업 문제의 새로운 인식, 황한식논문 재인용
7,11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김홍상논문 재인용

〈표10〉 지 주 가 소 작 준 동 기

	노동력 부족족	농지가 많아서	수지가 안맞아서	전 업 이 농	공 직 취 임	덜어서	기 타	계
1981년 기준 1)	1,154 (34.3)	337 (10.0)	—	913 (27.1)	357 (10.6)	—	604 (17.9)	3,365 (100.0)
1983년 기준 2)	(73.1)	(1.9)	(7.8)	—	—	(11.5)	(5.7)	(100.0)
1985년 기준 3)	32 (62.7)	6 (11.8)	1 (2.0)	1 (2.0)	1 (2.0)	—	10 (19.6)	51 (100.0)

주 : 김영진 외(1982), P. 21 소작인을 통한 지주조사.
김성호 외(1984), P. 168 재촌지주 조사.
기사연(1987예정), 재촌지주 조사

출발로 표상될 수는 있어도 부차적 우클라드가 스스로 자기자신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다는 논설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농업에서의 지주—소작관계의 확대요인은 지배적 우클라드가 자신의 확대재생산 과정에서 여타의 우클라드에 대한 지배로부터 귀결된 것이라고 본다. 즉 위의 내용에 대한 참고를 서 일우씨의 논문에서 들어보자

"이농유형의 특성은 곧바로 소작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이농은 자본주의 전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농은 60년대 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에 따른 가격폭락과 각종 조세 및 잡부금으로 인해 재생산 기반이 붕괴된 50~60년부터 많은 영세소농이 전가구를 이끌고 농촌을 떠났다. 그리고 60년대에 이농 증대요인에 공업화의 흡인요인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63년, 64년을 전후해서 0.5 ha미만 농가감소, 70년대 초반 주곡증산 정책으로 가구이농보다 젊은 노동력의 단신이농이 특징적이다. 7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해외농산물의 대량수입, 상업작물등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인한 농가경제 악화, 부채증가는 전 가구의 이농을 촉진하게 되었다." (필자 축약) 21)

위의 인용을 통하여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한국농업의 지주 — 소작확대요인은 독점자본의 농업지배에 있는 것이고, 농민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여 70년대 후반 이후 순소작에 가까운 층의 탈농, 소자작, 자소작층의 소작지 확대, 자작농의 전반적 소작농화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비농민의 토지소유확대(투기적인)도 一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농업이 독점자본의 지배로부터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피규정 현상으로써의 소작지율 증가, 소작농가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속에서 일정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결론, (애초에 제기되었던 몇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얻어졌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아직 한국의 지주 — 소작관계가 본질적으로 자본제적이다./ 아니다./의 문제를 해명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얻어진 답은 한국 농업내부의 토지소유관계가 독점자본의 지배가 관철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주 — 소작관계의 본질, 변혁의 올바른 관점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못했고 이후에 우리는 이 문제들을 살펴 볼것이다.

② 한국에서의 지주 — 소작관계의 본질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반봉건성, 혹은 반봉건적 생산관계를 이야기할 때 떠올리게 되는것이 고율소작료, 소작료의 현물납, 경제외적 강제등이다. 그러면 이러한 세가지 표현으로부터 이들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의 본질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 흥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세가지의 '봉건파'의 논리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먼저 김 석민씨가 정리한 봉건파의 논리를 살펴보자

"첫째 '사업'등을 통해 법적(형식적)으로는 근대적인 토지사유제가 확립되었으나 종래 봉건제하의 중층적 토지소유와 관련하여 농민이 보유하고 있던 제 권리를 부정한 채 지주가 토지소유자로 확정됨으로써 착취관계뿐 아니라 생산관계에 있어서도 종래의 봉건적 제관계의 본질이 온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여 성립된 것이 반봉건적인 생산관계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들은 고율소작료, 소작료의 현물납, 경제외적 강제등을 들고 있다.

둘째 이렇게 재편된 반봉건적 생산관계 하에서는 자본주의적 농민층 분해가 현실화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세째 이렇게 재편된 반봉건적 생산관계를 제국주의가 온존·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확대·강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논리로 지주 — 소작관계의 양적 증대를 들고 있다.[22]

위의 인용 내용들은 김 석민씨의 개인적인 가치관단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듯 하므로 '봉건파의 논리'를 순수하게 정제하여 살펴보는 일(비판하는 일), 그리고 김 석민씨의 봉건파에 반비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먼저 봉건제의 본질이 온존되었다는 것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는 지주 — 소작 관계가 본질적으로는 봉건제라는 주장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는 '부불잉여노동이 직접생산자로부터 착출되는 독특한 경제적 형태'가 봉건제와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봉건제하에서는 지대가 잉여 가치의 일차적 본원적, 정상적이고 따라서 정당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며 지대가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한 반봉건제의 본질은 봉건적인 것이다.[23]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본제와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자본제에서 잉여가치의 일차적, 본원적, 정상적 형태를 취하는 것은 이윤이며 지대는 이윤의 파생형태, 分肢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윤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평균 이윤율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봉건제에서 잉여가치의 일차적 형태인 지대는 관습에 의해서 결정된다. 24)

그러면 한국의 지주 — 소작관계는 본질적으로 봉건적인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를 우리는 이미 얻은 셈이다. 김 홍상씨 논문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인용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무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율소작료의 '고율성'에 관해 엄밀한 규정없이 사용되고 있다. 현행 5할의 소작료는 지주의 입장에서는 토지에 투하한 자본(지가)에 비하면 은행금리보다 낮고, 소작농의 입장에서는 전 잉여가치 및 그 이상을 수취하는 것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 구조속에서 저임금에 따른 높은 착취율과 관련하여 직접생산자의 입장에서의 고율성을 의미한다."25)

흔히 한국의 지주 — 소작관계를 본질적으로 자본제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계급으로서의 지주의 부재' '저임금과의 관련속에서 직접생산자(소작인)의 입장에서의 고율성' 등으로 설명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본질파악에 있어서 많은 오류들을 노정시킨 대표적 방법론들이다.

물론 봉건파들의 고율소작료=봉건지대라는 파악은 오류이다.[26] 그러나 김 홍상씨의 말처럼 '지주의 입장에서 소작료는 지가상환 은행이자율보다 현격하게 낮다.' 27)

우리는 이 말을 통해 과연 한국농업에서 잉여가치의 일차적 본원적 형태가 무엇 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한국 농업에서의 지대크기가 사회적 평균이윤율에 경향적으로 수렴한다면 이는 명백히 본질적으로 '자본제적'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소 아이러니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심지어 은행금리보다도 낮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본제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본질적으로 봉건적인 것이다./)

그러나 직접생산자의 입장에서 고율성=봉건지대와 연결시키는 점에 대한 김홍상씨의 비판은[28]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 농업에 대한 독점자본의 논리관철을 설명하는 것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계급으로서의 지주범주의 부재, 농업내부에 대한 독점자본의 논리 관철 등으로 한국의 지주 — 소작관계가 자본제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려 들지만 이는 실제로 '부불잉여노동이 직접생산자로부터 추출되는 형태'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자본제적인 것, 봉건적인 것을 구분하는 근거가 '부불잉여노동이 직접생산자로부터 추출되는 형태'이고 그러므로 한국의 지주 — 소작관계에서 잉여가치의 일차적 본원적 형태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밝혔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언한다면 한국농업에서 대부분의 주곡생산에서는 지대가 잉여

21) 조진경 외 위의 책 p 165~167.
22) 김석민외 위의 책 p 52.
23) 자본론 3권 47장 1,2,3절 한거레연구소 p 75 재인용.
24) 봉건지대, 자본제적 지대의 자세한 내용은 정치경제학원론, 녹두, p 197 참조.
조진경씨의 경우에는 지주 — 소작내부의 자본제적 지주소작관계의 범주를 사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현재 한국농업에서 과수 경영이나 특용작물재배, 도시 근교 농업에서는 자본제적 지주 — 소작이 나타나고 있고 이때의 농민은 자본제적 차지농이라 불리어야 한다. 허나 대부분의 주곡재배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주 — 소작관계는 자본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25) 김석민외 위의 책, 김홍상논문 p 232.

가치의 일차적 본원적 형태이다.

다시 봉건파의 논리로 돌아가서 현물소작료에 대한 비판은 아주 간단한 것이라 생각된다. 봉건시대에도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노동지대, 생산물 지대, 화폐지대라는 흐름이 있었고 현물지대 그 자체로는 '생산 그 자체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개발사회의 가치관, 상품·화폐의 유통정도에 기인하는 것이지 '현물'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경제외적 강제에 대하여서는 이 진경써의 견해를 통하여 우리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리라 생각된다.

"(3)따라서 그는 명목적 지주에 불과하며 노동생산물에 대한 지주적 전유는 생산과정의 내부에서 행해질 수 없다. 즉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서만 잉여노동의 착취가 가능하다. 이는 소위 '신분적예속'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이렇게 착취된 잉여생산물은 봉건지대라는 형태를 취한다."

결국 이 진경써는 신분적 예속=경제외적강제, 그러므로 당연히 지금 한국에 인격적인 또는 신분적 예속이 어디 있는가 당연히 없다고 할 것이다.[30] 그러나 우리는 경제외적 강제를 신분적, 인격적 예속의 차원에서 협애하게 이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경제외적 강제는 시의적인 농민 속박, 집단적 책임, 처벌, 공공사업에의 강제노동, 관습법일 수도 있고 근대법적 외피를 쓴 民法일 수도 있다.[31]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에서 경제외적 강제가 이런 것이다라고 단정짓기 이전에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고 존재했던가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분명한 것은, 직접노동자가 아직 그 자신의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이나 노동조건의 '보유자(Besitzer)'로 남아 있는 곳에서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간에 소유관계는 동시에 직접적인 지배 — 예속관계로 나타나며, 직접생산자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부자유는 부역노동을 수반하는 농노제로부터 단순한 공납의무에 이르기까지 점차 약화되어 간다. 이 경우 직접적 생산자는 우리의 가정(假定)에 의하면

그의 노동의 실현 및 그의 생존수단 생산에 필요한 객관적인 제반 노동조건, 그 자신의 생산수단을 보유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농가뿐만 아니라 농촌 가내공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한다. 이 독립성은, 예컨데 인도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소농민이 많건, 적건 서로간에 자연발생적인 생산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의하여는 해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다만 명목상의 영주에 대한 독립성만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명목상의 토지소유자를 위한 잉여노동은, 다만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서만 그들로부터 강탈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강제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그러한 것이다. 그것을 노예경제나 플랜테이션 경제와 구별하는 것은, 노예는 여기에서는 타인의 생산조건으로 노동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노동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신적 종속관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것이든 인신적 부자유가, 그리고 토지의 부속물로서 토지에 긴박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 본래의 의미에서 예농제(隷農制)가 필요한 것이다.[32]

결국 경제외적 강제는 직접생산자의 생산의 독립성(노동의 실현, 제반 노동조건, 생산수단의 보유)이 존재하는 속에서 반봉건적, 봉건적 토지 소유에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일부에서 논하는것처럼 '경제외적 강제는 매각적 계기' 혹은 "반봉건적 토지소유가 본질적으로 봉건적인한, 이러한 토지소유는 경제외적 강제의 강약과 관계없이 지대법칙을 관철"등의 논의[33]가 그릇된 것이라 생각한다. 반봉건적 토지소유가 본질적으로 봉건적이라고 할 때 봉건제에서 잉여수탈의 필수적, 관건적 요소를 무시하거나 의미없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경제외적 강제의 개념을 인격적, 신분적 예속정도로 한정짓는 이 진경써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항간에 떠도는 '국가권력의 폭력성과 강제'(예를 들면 60년대초의 재건대, 80년대초의 삼청교육대, 새마을 취로 사업, 경찰의 폭력 구타, 가두검문, 군대징집)를 경제외적 강제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과학적 무지를 개탄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계급사회 일반에서 항상적으로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폭력과 강제들을 해왔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외적 강제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외적 강제란 농업에서의 생산과정에 있어 강제는 아니되 잉여의 착취·수탈에 있어 필연적 계기이므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지주 — 소작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를 느낀다.

표7에 의하면 지주의 소작인에 대한 경영상의 개입은 거의 전무하고, 표8에 의하면 계약방법의 대부분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표9에 의하면 소작기간은 대체로 정하지 않거나 1년이 93.6%에 달한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서 소작인이 소작료를 지불하지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좀더 면밀하게 풀기 위해서 우리는 지주가 소작을

---

26) 소작료율의 고저는 그 지역의 노동력의 많고 적음, 노임의 수준, 지가수준, 농외취업기회여부 기계화 여부등과 관련되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절대기준에 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실은 소작료율의 고저를 가지고 반봉건을 논하기가 힘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겨레연구소, 위의 책 p 82.

〈표13〉 소작지주의 규모별 소작료수입

소 유 규 모	평균면적	소유자수	임대료수입	자가한원[1]이 자 율	도시근로자소득에 해당하는개월수[2]
평	평	인 (%)	원	%	개월
~ 500	254	1,063 (41.3)	59,238	4.9	0.14
500 ~ 1,000	723	788 (30.6)	222,151	6.4	0.53
1,000 ~ 2,000	1,397	505 (19.7)	440,925	6.6	1.06
2,000 ~ 3,000	2,425	139 (5.4)	780,718	6.7	1.88
3,000 ~ 4,000	3,515	50 (1.9)	1,008,194	6.0	2.42
4,000 ~ 5,000	4,566	16 (0.6)	1,223,505	5.6	2.94
5,000 ~	6,959	13 (0.5)	1,783,515	5.4	4.28
평 균	863	2,574(100.0)	255,952	6.2	0.62

주 : 1) 전답평균지가=평당 4,785 원 기준.
2) 1983년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 4,990.5 천원 기준.
김성호외 (1984), p 167.
김홍상 논문 p 221.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재인용.

28) 반봉건제 사회란 "저급한 형태로 생산을 하고 있는", 즉 봉건적 형태로 생산을 하고 있는 민족이 세계시장에 끌려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여기에서는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의 쪽이 더 큰 중요성을 띠면서, 질적으로는 무차별하고 양적으로만 차이를 갖는 교환가치의 본성때문에 착취는 무한히 강화되는 것이고 따라서 고율소작료로 되는 것이다. 이점은 지대의 본질, 즉 "생산 그 자체의 성격"과는 절해 무관한 것이다.(한겨레 연구소 위의 책 p 76)
29) 이진경 위의 책 p 209.
30) 이진경, 위의 책 p 237,8.
31) 한겨레 연구소, 위의 책 p 78.
32) 이진경, 위의 책 p 207.
33) 이진경, 위의 책 p 231, 한겨레 연구소 위의 책 p 77 각각 재인용.

주는 동기와 소작인이 소작을 하는 동기를 살펴보자. 표10에 의하면 지주가 소작을 주는 이유는 대부분이 노동력 부족이며 62.7%, 여기에 농지가 많아서 11.8%까지 포함 한다면 76.5%가 노동력 부족을 빌미로 하고있는데 노동력 부족이 가장 솔직한 표현은 아닌 것이고 사실상의 경제적 목적이다. 즉 타인노동 고용보다는 소작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소작인의 소작동기를 표11에 의해 보면 생계난 해소, 이촌농가 농지인수, 경영규모 확대, 경제적 여유로 포괄되고 이들의 합은 86%에 달한다. 결국 대부분 약70%의 지주가 영세지주임을 감안하더라도 지주의 기본성격, 즉 부불잉여노동을 수취하는 기생성을 부정될 수 없다.[34]

위의 인용과 도식을 통하여 명백해진 것은 지주의 소작동기는 경제적인 것이고 부불잉여노동에 기생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농업에서 경제외적 강제는 어떠한 것들인가? 첫째로는 근대적인 民法의 형태로 지주의 부불잉여노동수취를 보장하는 것이고,[35] 둘째로는 사유재산 제도를 골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땅의 소유에 대한 댓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심리적 요인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봉건파의 논리로 김 석민씨가 정리한 내용으로 돌아가자. 그는 장 시원씨의 〈식민지하 조선의 반봉건적 토지소유에 관한 연구 — 1920~30년대를 중심으로〉를 인용하여 장 시원씨가 "세계자본주의에 의해 규정되는 한 자본주의적 농민층 분해의 형태를 띨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었지만 여러 복합적 요인에 의해 현실화 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내용을 소심하게 받아들여 장 시원씨가 마치 가능성조차도 없다고 한 것 같이 '색다른 주장' 운운하고 있다. 결국 김 석민 씨는 봉건파일반을 비난하다가 보니 장 시원씨의 글을 왜곡한 것 같다.

아무튼 양자간의 논전이 언제까지 진행된다 하더라도 명확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반(半)봉건적 우클라드는 해체의 길을 가는 것이 명확하나, 김 석민씨는 역사적으로 우월한 생산양식이 성립되면 그 즉시 여타의 우클라드가 사라져간다는 도식적 사관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때로는 지배적 우클라드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서 부차적 우클라드가 유지·온존 확장될 때도 있다는 것을 김석민씨는 유념해야 한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봉건파의 마지막 온리로 김 석민씨가 정리한 것을 검토함으로써 이 단원을 마칠 것이다. '반(半)봉건적 생산관계를 온존·유지, 확대, 강화하는 것이 제국주의'[36]라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것은 일제하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식민지이고 반봉건적 지주 — 소작관계가 한때 감소하기도 했지만(기만적 농지개혁에 의해서)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봉건제의 운동이 그것의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운동에 방해가 될 때는 식민지의 토착자본과 더불어 반봉건제의 운동을 변형시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든다'[37]는 김석민씨의 말이 훨씬 과학적(?)이다.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항상적으로 유지·확장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식민지 경제에 부착된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토착매판자본가 집단과 결탁하더라도, 그리고 자본제가 지배적 우클라드인 사회라 하더라도 반봉건적 지주 — 소작관계에 병립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그 어디에도 과학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배적 우클라드의 제법칙이 여타의 우클라드에 관철된다는 말이 봉건적, 半봉건적 우클라드가 완전히 파괴·소멸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 그런 일은 한국에서 변혁에 의해 완수되거나 아니면 훨씬 먼 미래의 단정할 수 없는 일에 속할 것이다.

또 김석민씨는 하나의 첨언을 통해 자신이 이진경씨와 지주 — 소작관계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봉건지대를 단지 자본주의적 지대와의 대비속에서 도출하려는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착취되는 잉여생산물의 양적인 문제로 즉 지대율로 해결되며 이는 생산관계를 보지 않은 채 분배관계를 보는 것이다."[38]

이 진경씨는 이러한 인용의 끝에 이것은 '분배주의, 유통주의적 오류'라고 목청높여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봉건적 지주 — 소작관계에 관해 충분히 논해왔고 그것이 유통주의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이 진경씨는 잉여가치의 양적인 문제, 지대율의 문제로 논하는 사람들(지대가 잉여가치의 유일한 혹은 통해적, 지배적 형태라고 하는 박현채, 황 한식씨[39]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우리같은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많은 신조어(新造語)를 통해 비판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농업문제 해결의 관점

한 사회에 대한 분석에 관한 논의는, 그 사회구조속에 속한 대중에 대한 사랑과 사회변혁에 참가하고 있다는 참여적 열정이 부재한 가운데에서는 결국 관념의 유희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위의 두가지 내용에 관한 것들을 얼마나 내화시키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직은 미약하고 서툴더라도, 우리는 '참여자의 열정'으로 문제해결의 관점에 관해 서술해 나가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 굳이 문제해결의 관점정도로만 논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제시가 결국은 현재의 운동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래서 끝내는 관념의 유희로 전락하게 되고 말 비극을 막기 위함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농업 문제의 실천적 극복을 위한 관점정립에 있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운동의 제반 다른 부분과의 관계가 고려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여타의 제반 사회강령의 관련성 속에서 농업강령의 관점이 고려되긴 하지만 그것이 글로 표현되는데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표 11〉 소 작 인 의 소 작 동 기

	생계난 해 소	이촌농가 농지인수	경영규모 확 대	경제적 여 유	경제작물 재 배	교육비 조 달	위토보존 (기타)	계
1981년 기준[1]	189 (33.4)	42 (7.4)	—	206 (36.4)	23 (4.1)	75 (13.3)	31 (5.5)	566 (100.0)
1983년 기준[2]	—	(30.8)	(58.7)[4]	—	—	—	(10.5)	(100.0)
1985년 기준[3]	135 (49.1)	43 (15.6)	22 (8.0)	37 (13.4)	7 (2.6)	—	31 (11.3)	725 (100.0)

주: 1) 김영진 외(1982), P. 136
2) 김성호 외(1984), P. 168
3) 기사연(1987년 간행예정)
4) 다른 조사와 비교하면 생계난 해소 및 경영규모확대가 구별없이 포함됨.

34) 황한식「현행 소작제도의 성격」"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35) 농지임대차 관리법 6조3항.
36) 임차료의 지급방법 및 임차료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조○항,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임차료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자.
36) 김석민외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김석민 논문 p 53.
37) 김석민외 위의 책 p 58.
38) 이진경, 위의 책 p 209.
39) 박현채씨나 황한식씨는 지대가 잉여가치의 유일한, 지배적 형태라는 사고 속에서, 현행 소작료가 이윤의 형성을 배제한 정도의 고율소작료이며 따라서 잉여가치의 유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반봉건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관점정립의 내용성으로 몰입해가자.

(1)농업문제를단지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계급의 입장, 전체 운동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농업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가능하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농민의 小소유자로서의 이중성이 고려되어야 하고("그러므로 노동자들은 그들 스스로 단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농민이 하나의 단일한 노동계급으로, 뭉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반봉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봉건유제의 억압하에 있는 쁘띠부르조아지로서의 농민층 대부분이 혁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40] 이러한 원칙하에서 구체적 제 상황속에서 혁명의 객관적 과제에 따라 동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농민층의 성격과 범주를 구분하는 현실성을 지녀야만 한다.

현재 한국농민의 대다수는 미국의 잉여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반대하며, 저곡가 정책에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농민중에서 가장 혁명적일 수 있는 세력은 토지로부터 소외된 채 부불잉여노동을 수탈 당하는 농민이다.

(2) 농업문제를,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농민운동가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서 더욱 명확히 질 수 있다.

"농민운동이란 고통받는 농민들의 보다나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잘사는 농민들보다는 못사는 농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그동안 내가 시도했던 방법들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우리 부락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가 처해 있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두번째 시도했던 교육에서 쌀값 문제를 이야기 하니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시큰등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나, 청년들의 학습을 유도하는 과정에서의 실패도, 내가 '마을을 위해서'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너무 그들의 실정을 무시한 채 다짜고짜로 덤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각 농가들의 농사규모나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쌀값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직접적으로는 서로의 입장들이 다르게 제시될 정도로 계층간의 대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41]

그러므로 이후의 농민운동, 농업문제 해결의 주체는 농업에서 직접생산자여야 하고(소작, 자소작, 소자작, 자작) 경지규모상으로는 약 94%에 달하는 2 ha미만의 농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저곡가의 문제인 경우 대다수 농민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나 이렇다고 하여 문제해결의 주체를 농민 일반으로 상정할 경우 이는 올바른 변혁의 관점이 아니다. 이는 보통 가격문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인데, '토지문제의 해결이 없는 가격문제의 해결은 농촌내부의 계급관계의 고착화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42]

(3) 경자유전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물론 박 현채씨 같이 "직접적 생산자에 의한 토지소유만이 농업생산의 발전에 가장 좋은 토지소유제도이다"[43]라는 견해는 박영현씨의 비판(일정한 조건하에서만)이 타당하다 하나 박 영현씨는 "균등이라는 이념은 그것이 봉건적이고 농노적인 불평등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을 표현하는 한에서만 쁘띠부르조아 농민에 대해서 적합하고 진보적이다"라는 명제를 들어 '한국의 지주소작관계는 반봉건적 관계가 아니다'(자신들의 교조적 판단 속에서)하는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아침〉의 일관된 논지를 견지하고 있지만, 적어도 박 영현씨는 자신의 말처럼 '대안없는 무책임한 비판'을 남발한 것이다. 참여자의 열정을 상실한 박영현씨는 '소작쟁의가 거의 없었다'는 주장을 통해서, (토지문제는 논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인가?) 개조해 나가야 한다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즉 박영현씨는 경자유전의 과도한 일반화를 반대한 것인지 아니면 농업을 한국자본주의 발전 수준에서는 사회주의적 협동농장으로 만들자는 것인지 알길이 없다.

물론 우리는 경자유전의 과도한 일반화를 반대한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지닌 농민(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 에게 경자유전의 원칙이야 말로 그를 농민들을 변혁의 편에 서게하는 가장 명백한 강령이다. 이것이야말로 농민들의 의식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향우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박 영현씨가 얘기하고자 했던(그러나 표현되지는 않았던) 협동농장식의 개조는 지리적 조건과 소작인의 의식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박 현채씨의 경자유전의 과도한 일반화에 반대한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논한 지리적 조건이란 매판독점재벌 혹은 정상모리배에 의한 대토지 소유지와 정책적 필요성(즉 지리적 요충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소작인들 의식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커다란 의미보다는 해악이 미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4) 영세지주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비농민 지주의 경우 72%가 1千坪 이하의 소유지주이고 있는 농지의 규모가 적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요하는데 비농민지주, (도시에서빈민이거나 노동자, 중소영세상인인 경우)인 경우에도 직업 알선이나 유산물수등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재촌농민지주의 경우에는 지주의 생존조건, 노동력등을 고려하여 직접 경작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소작인에게 양도하고, 지주의 경우 다른 차원에서 생존권 보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원칙으로써 정립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이다. 이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글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실증적 근거제시가 미약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론적 성격을 띠게 된 점, 다양한 주제와 폭넓은 내용을 다루면서 나타나는 산만함등이라고 할 수 있다. 허나 이글은 새로운 지향과 올바른 통일을 위한 하나의 유익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 접근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있는 점에서 우리의 자위를 구한다. 차후에 독자제현들의 실천적 비판과 모색속에서 우리 운동은 날로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

는 원칙으로 지켜져야하나 영세지주라고 하는 점들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에는 엄청난 좌경적 오류를 범하게 되고 대중이탈을 필연화시키게 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는 이상의 논의에서 권위에 억눌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성격론자, 그리고 반봉건성을 영주가 군림하던 먼 옛날의 이야기로 생각해버리는 〈아침출판사〉 류의 논설, 양자 모두를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에 관념의 유희로써 (인텔리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더 이상의 논쟁이 진행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올바른 이론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으며 실천으로서 완성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더이상의 舌戰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무기들을 가지고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실천의 장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끝으로 이글의 대략적 내용과 한계를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농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주소작관계는 봉건제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반봉건제이다. 흔히 제생소작제의 원인을 들어 지주—

---

40) 김석민외 위의 책, 박영현 논문 p 251 ~ 2.
41) 김석민외 위의 책, 박영현 논문 p 242.
42) 한겨레 연구소, 위의 책. p 83.
43) 박현채「토지문제의 역사적 전개와 인식」〈한국 자본주의와 민족운동〉, 김석민외 위의 책 p 267 재인용.

1. 여성운동에 관한 일고찰
2. 여학생 활동에 대한 일제언
3. 고학년 여성의 취업문제

여성들이여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그대 삶의 주변에서 기웃거리고 있기만 하지는 않은가?
그대는 누구인가?
억눌린 삶 속에, 주입된 가치속에
스스로를 매몰시키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위하여
스스로 깨뜨리는 괴로움이 있더라도
옥죄여 오는 모든 억압에 항거하기에는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굳게 설 땅을…

여성운동에 관한 일고찰

김 은 경
(경제학과 4 학년)

목 차

Ⅰ. 머리말
Ⅱ. 여성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과정
Ⅲ. 한국변혁운동과 여성운동
1. 한국사회의 여성문제
2. 한국변혁운동속에서의 여성운동
3. 한국여성운동의 당면과제
Ⅳ. 글을 마치며

Ⅰ. 머 리 말

운동은 인간이 자신의 억압적 현실을 느끼고, 그러한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목적의식의 실천행위이다. 그리고, 올바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본질적 모순을 인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올바른 이론만이 올바른 실천을 내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하의 소위 '여성운동'을 평가했을 때, 그 실상은 어떠한가?

한국에서 여성운동이 맹아적으로나마 시작된 것은 식민지식대와 해방직후를 제외하더라도 벌써 3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재하고, 전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한 부문으로서의 자리매김도 못한 채,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불필요한 운동취급까지 받으면서, 장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70년대까지 한국여성운동은 거의 그 이론적 토대나 실천적 행위들이 부재하였다. 또한 '여성운동'이 아직까지도 여성의 지위향상, 중산층 여성들의 여가선용활동 등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한국여성운동사를 살펴보았을 때 당연하다. 즉 파쇼정권의 정책의 일환으로써, 소수의 특권적 여류인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여성운동,국제대회에 참가하고 파쇼정권의 민주성(?)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단체, 여성분과들. 이러한 여성운동단체들은 이승만정권하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선봉자로, 5·16 군정때는 재건국민운동, 제3공화국때는 새마을 부녀운동을 주도하여, 계속되는 파쇼정권의 토대 강화에 자랑스럽게(?) 남성들에게 뒤지지 않고 봉사했다. 또한 제5공화국하에

서는 여성개발원을 중심으로 정권의 괴뢰은 보조금으로 충효사상을 유포하며 여성대중들의 의식을 개량화시키면서, 소위 여성인력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활동하였다.

이렇게 어용여성운동이 판을 치면서 전개될 때, 한국변혁운동론의 발전에 발맞추어 새롭게 여성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즉 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새로운 질적변화를 겪는 전체운동과 사회과학이론의 발전속에서, 기존의 서구여성 해방운동론의 정립을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또한 기존의 개량주의적, 체제유지적 여성운동을 비판하며, 새롭게 그 질적변화를 꾀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의 세력간에 조직적 연대를 이루어 나가며,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여성해방쟁취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념과 목적을 가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발족이다.

이러한 80년대이후 여성운동의 질적변화는 여성운동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과감히 부술 수 있는 계기는 주었지만 아직도 요구되는 것은 무척이나 많다. 특히 여성문제의 인식차원이 경험적인 사실의 나열이상을 못 넘는 현재, 올바른 여성운동론의 정립은 시급하다.

이 글에서는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여성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해결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일반적으로 서술하고, 다음으로 한국변혁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을 자리매김해 보고자 한다. 이는 보편적인 여성문제가 한국사회의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관철되며 그리고 한국여성운동의 궁극적 지향점이 전체변혁운동과 발맞추어 나갈 수 밖에 없는 그 객관적 필연성을 도출해 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운동의 당면과제를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Ⅱ. 여성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과정

왜 소위 '여성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남성과의 차이속에서 여성의 차별대우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여성억압에 대하여 정당화하며, 소수 극렬여성의 여성해방의 주장을 일축한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억압적 상황을 여성이기에 할 수 없다는 체념속에 스스로 자신이 해방되기를 포기한다. 억압자는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피억압자는 억압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그럭저럭 남녀가 어우러져 있는데, 왜 '여성문제'라는 것을 부각시키려 하는가?

이는 명확히 인간해방의 관점속에서 바라보았을 때만이 그 해답은 가능하다.

여기에서 필자는 이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해방의 관점에 서 있다는 전제하에 '여성문제'의 본질을 밝혀보겠다.

어떤 사람은 여성차별적 관습이나 제도때문에 여성문제가 생기며, 따라서 그 해결방법은 제도개선, 또는 교육이라고 보고, (자유주의적 여성해방운동론) 또 어떤 이들은 남녀의 생물학적차이에서 생겨나므로,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진적 여성해방운동론)

우선 첫번째 견해의 문제점을 보면, 서구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19세기에서 20세기초에 걸쳐 광범위한 여성참정권운동이 벌어져, 여성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고 해서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적 불평등과 남성지배적 인식이 여성문제의 근원이라고 보았을 때 그 해결은 법적, 제도적 권리를 획득하였다는 형식에 그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법과 제도는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여성의 법적 권리확보도 일부 지배계급 여성의 권익보호에 그치고 대다수 여성들의 불평등상황은 그대로 유지된다.

두번째 관점은, 여성이 어머니이기를 강요당하는 것과 남성의 성적 노예이며 따라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격목표는 억압적 성관계와 사회관계를 창출하는 가족이 된다. 이 관점은 서구, 특히 미국에서 유행이되었던 것으로, 가족의 파괴와 나아가 과학의 발전을 근거로 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해소를 여성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관점은 여성억압의 근원자체를 생물학적 차이에 두는 것부터 오류이다. 원시사회에서는 여성이 출산기능 때문에 오히려 주도권을 장악한 모친제 사회가 있었다. 즉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성별분업은 그 자체가 차별을 야기시킨 것은 아니었다. 차이가 차별화하는 것에는 사회적 원인에 있다. 현재의 가족제도가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으로 가족제도를 거부하거나, 출산을 거부한다 하여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현재의 불평등한 가족제도를 유지시키는 힘이 무엇인가가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전제속에서 여성문제의 본질을 규명해야 하는가? 첫째는, 여성문제의 본질이 각각의 사회구성체 속에서 나타나는 계급지배질서의 총체로서 파악되어져야 한다는 것(계급지배와 피지배계급내의 여성과 남성의 분할지배라는 양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둘째는, 여성문제가 각각의 사회구성단계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이용, 수탈방식이 가부장제 가족을 매개로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성문제의 본질을 규명하여 보자. 엥겔스는 『가족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의 증대에 비례하여 한편으로는 가족내에서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상속의 전통적인 질서를 타도하기 위해서 이 강화된 지위를 이용하려는 충동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것은 모권에 따른 가계가 인정되는 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모친은 타도되어야 하고 또 타도되었다. ……앞으로 남자성원의 자식들은 그의 부족에 속해야 하며 반면 여자성원의 자식들은 그들의 아버지부족에 양도되었으므로 그녀의 부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법령만으로 족했다. …… 모친의 전복은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였다." "……일부 일처제가 역사상 최초로 나타났을때,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조화의 최상의 형태로서 나타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일부일처제는 어느 한 성에 의한 다른 성의 예속으로서 나타나며, 그것은 그 이전 역사에서는 미증유였던 양성간의 투쟁을 알리는 것이다" "… 역사상에 나타난 최초의 계급대립은 일부일처제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사이의 모순의 발전과 일치하며, 또한 최초의 계급억압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위의 귀절들속에서 사유재산제의 발생=계급의 발생이 일부일처제 가족의 발생=여성종속의 발생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원시공산제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은 채취였고, 남성의 노동은 수렵이었는데, 당시는 채취가 보다 확실한 생산수단이었으며, 이는 모친제의 물적토대가 된다.

이러한 분업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역할분담이었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채취하는 여성의 노동이 생산물획득과 노동수단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던 반면에, 남성의 노동영역에서 사용되는 노동수단은 무한히 발전하였고 생산물획득량이 여성보다 월등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남성에 의한 생산력 장악을 낳았고, 이는 노동영역상의 성별분업관계가 차별화되고 생물학적 분업관계까지 구조적으로 차별화시켰다. 결국 생산수단을 독점하게 된 소수의 남성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남성일반과 여성일반을 지배하게 되는 계급사회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여성은 생산수단의 소유를 배제당하고 남성의 경제적 우위에 지배적 종속을 당했기 때문에 계급이 발생한 후에도 피지배 계급으로 남을 수 밖에 없으며 또한 피지배계급의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가 나타났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자에 대한 착취, 성에 기초한 자연적 분업이 사회적 차별로 존재하는 지배관계가 발생하면서, 계급지배질서의 총체적 표현, 계급대립의 비화해성의 산물인 국가가 성립된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지배권력은 바로 소유형태를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 상속제도 및 가족제도까지 자기 지배질서하에 두게 된다.

계급사회속에서 지배계급은 계급질서의 재생산을 위해 일부일처제를 택하고 이를 통해 자기계급의 재생산=지배계급의 상속자가 피지배계급의 재생산=노동력 재생산을 수행한다. 이로써 여성일반의 노동영역은 가정이라는 재생산영역에 한정되고 지배계급은 생산영역에서의 피지배계급남성을 착취하고 동시에 그를 통해 재생산영역의 여성에 대한 대리지배를 관철한다.

결국 지배계급은 완벽한 지배방식으로써,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 착취, 억압을 행하면서 피지배계급내의 성을 매개한 분할지배까지 포함하여 그 계급적 지배의 영속성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계급지배질서의 총체로써 여성문제가 파악되었을 때, 그러면 각각의 사회구성단계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통하여 관철되는가 살펴보자.

고대노예제사회에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는 지극히 노골적이었다. 피지배계급인 노예는 말하는 도구로써, 가족을 가지지 못했으며 단지 지배자의 가부장제 가족의 일구성원으로 포함되었을 뿐이다. 가족(=패밀리)의 어원인 '파밀리아'는 그 우두머리가 아내와 자녀, 그리고 다수의 노예를 다스리고 이들 전체에 대한 모든 권리, 심지어 생사권까지 포함하는, 늘 가지는 새로운 사회 조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이 당시의 제도를 반영한 단어이다. 결국 노예제하에서는 하나의 가정속에서 가족제도가 지닌 역할(상속자의 생산과 노예노동력의 재생산)과 계급제도가 동시에 체현되어 있다.

봉건제하에서는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대가족제도라기보다는 소경영형태에 맞는 가족제도가 유지되었다. 그리고 하녀나 노예를 제외하고는 피지배계급=농노 역시 자신의 가족을 유지했다. 지배계급의 가족제도는 상속자를 낳는 역할을 제외하고는 피지배계급여성의 노동에 의해 유지되었다. 반면에 여성농노는 일차적으로 농노계급 노동력의 재생산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생산단위이기도 했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생산노동에도 참여했다. 따라서 피지배계급 가족의 기능은 생산단위와 소비단위로서의 기능이 같이 부과되어 있었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종속과 차별적 착취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무보수 가사노동과 저임금노동력의 고착으로 나타난다. 즉 생산과 소비가 가족이란 공적영역에 의해 행해졌던 전자본제사회와는 달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소비만이 가족의 영역하에 남게 되고 생산영역이 사회화되면서 사적노동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가사노동은 개별적 자의적으로 행해지며 교환가치로 계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측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남게되어 주변적, 부차적 영역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것은 결국, 가사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전화된 청소부, 파출부등의 노동가치를 최하위의 노동으로 취급, 절대적인 저임금으로 간주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객관적으로는 사회적 노동의 일영역인 가사노동은 이를 여성이 담당하지 않았을 때,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자본가는 여성일반을 이에 묶어놓음으로써 막대한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을 축적하게 된다.

결국 자본가계급은 이윤축적의 필요가 강할수록 여성을 가사노동영역에 국한시키려는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단순 숙련노동량이 증가하므로 자신의 이윤축적 필요에 따라 여성노동을 저임금으로 고용하여 생산노동속에 진입시킨다. 즉 자본제사회에서 여성에게 있어서 생산영역은 2차적인 노동영역으로 간주되고(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이다.) 결국 여성의 임금을 가계보조적 임금수준으로 낮추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이 여성노동력에 대한 가치절차는 남성노동자의 저임금책정을 통한 자본가계급의 착취근거가 되고 이는 노동자계급의 빈곤의 악순환을 낳는다. 결국 노동자계급에게 장시간노동은 불가피하게 되고 노동강도는 더욱 강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자본가계급은 많은 이윤을 획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남성노동자의 체제불만을 가정내에 해소시키는데 있어서 정당성의 장치로서(노동자들의 아내 구타)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로 된다.

이상에서 여성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각각의 사회구성단계에서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매개로 진행되는 것을 살피보았다. 여기서 잠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감시 언급하자. 이 이데올로기는 노예제때 가부장이 가족전체를 노예로 지배했던 방식의 일환으로 자본가계급에 의한 피지배계급남성과 여성일반에 대한 지배, 이 양자의 분할지배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착취·억압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이것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통치인을 통해 대립물이 남성일반으로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계급적인 본질 자체를 왜곡 변질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소위 변혁을 주장하며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운동을 하는 남성들에게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자신의 주관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배계급의 통치질서에 객관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우리는 여성문제가 가부장제 가족을 매개로 하여 구체화되면서 그 착취, 억압의 총체적 메카니즘의 한 표현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발현되지만, 문제의 근본은 바로 생산의 사적형태와 사적소유에 근거한 사회체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즉 계급차별과 가족제도를 매개로 한 성차별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토대에 근거한 상부구조의 한 형태로서 그 사회 인간의 정신에는 물론 모든 총체적 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배계급의 도구인 정치권력에 의해 계급지배질서의 심화 및 강화로 표출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했을 때 여성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성문제의 근본적 해결과정은 그 근본원인의 제거로서 시작된다. 즉 계급지배와 그속에서 성을 매개로 한 분할지배의 물적토대인 경제체제의 해체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완전한 철폐를 획득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근본적 변혁운동으로서만 해결가능하며 이것은 각시대, 나라의 특수성에 따라 문제본질을 총체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지배구조의 표현물인 국가권력과의 직접적인 투쟁속에서 물적토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본질적 인식과 그 변혁의식은 사회모순과의 직접적 접촉속에서 더욱더 증폭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성이기주의적 관점이 아닌 전체 사회변혁적 관점으로 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은상부구조 자체가 기계적인 토대의 반영이 아니라 자신의 능동적인 힘으로 토대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급지배질서가 해체된 사회에서도 여성문제의 미해결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노동의 분할지배를 고착시키는데 기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잔존이다. 이는 현재 그래도 가장 여성해방이 진전되었다고 이야기되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여성들의 생활실태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다.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은, 일부 사람들의 계급모순만 해결되면 여성모순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인식의 오류와, 실천상에 있어서 소위 혁명적이라는 여성들의 '선 계급모순 해결, 후 여성모순 해결'이라는 단계론적이고 기계론적인 인식하의 여성운동의 독자적 부문구축의 필연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입증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문제는 보편적인 해결과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각나라의 특수성과 결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이제까지의 기본적 인식하에 구체적으로 한국변혁운동속에서의 여성운동을 살펴보자.

Ⅲ. 한국변혁운동과 여성운동

1. 한국사회의 여성문제

한국사회는 미제에 의해 규정을 받으면서도,

즉 신식민지성이 관철되면서도, 자본의 내적 운동 메카니즘에 의해 국가독점자본주의 발달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라고 규정할 수 있다.

값싼 원조물자, 금융특혜, 그리고 노동운동의 탄압하에 절대적, 상대적 잉여자치의 안정적 착취, 미제의 잉여농산물 도입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인하, 하강분해하는 농민층을 통한 광범한 산업예비군의 형성등 국가 권력의 힘에 의존하면서 진행된 독점자본의 축적구조는 국가와의 강력한 결탁을 필요로 했고, 미제국주의 역시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적인 안정적 성장이 자신들의 금융독점자본의 착취에 필수적이었으므로,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에 강력한 지지를 물심양면으로 보낸다. 독점자본의 성장은 계급지배의 도구로써의 국가권력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특히 독점자본의 물적토대가 취약함에 따라 한국의 국가권력은 폭력성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파쇼정권이 될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사회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격은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가?

독점자본의 착취와 수탈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한국 노동자계급은,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도 수출산업의 역군이라는 미명하에 지금도 땀을 흘리며 그 살과 뼈를 깎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상황속에서 여성노동자는 어떠한가?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자체가 여성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에 근거한 경공업부문의 수출드라이브정책에서 시작된 것은 바로 60·70 년대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이 심어놓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자신의 노동자의 계급적 의식과 여성으로써의 인간해방의 의지를 가지기보다는 자본가들의 성적 폭력앞에 무기력하게 놓여져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변혁의 의지를 가지고 투쟁의 전선에 나섰을 때도, 구사대의 폭력과 심지어는 같은 공장의 남성노동자들의 폭력에 그 의지를 꺾여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땅의 여성노동자는 계급적, 성적억압을 동시에 받고 있다.

현 한국사회에서 농민은 독점자본의 일방적 수탈속에 급속한 하강분해가 계속되면서 전 농민의 반수가 여성농민으로 구성된다. 농민운동의 주체로서, 그리고 여성운동에서 노동자의 강력한 동맹군으로서의 여성농민의 문제는 한국자본주의의 파행성 및 외세의존성에서 발생한 계급적 억압과 봉건적 유제의 온존으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계속되는 농·축산물의 수입은 농가경제의 파탄을 가져왔고 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저곡가등 농민의 희생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자라는 농촌인력을 메꾸기 위한 여성농민의 농업생산에의 참여는 무보수 가사노동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고, 농촌공동체에 남아있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여성농민으로 하여금 계속 가내노예의 상태로 있기를 강요하여, 결국 여성농민의 농업생산에의 참여는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고, 성적차별의 가장 열악한 상태에 빠뜨렸다.

다음 빈민여성은 남편이 대부분 무능력자로서 자신이 직접 생계를 담당하면서, 강한 생활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주입된 남편들의 성폭력에 시달리고, 또한 소위 도시재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독점재벌과 파쇼권력이 행하는 철거속에 권력에 의한 생계의 위협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

또한, 윤락여성들은 국내의 남성들에 의한 노리개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밀천들지않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관광자원의 하나로 취급되어 국가권력에 의한 공공연한 매춘을 통한 애국행위를 강요받고 있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각 계급, 계층의 여성들은 성적억압과 계급적 억압을 동시에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의 신식민지성에 의한 민족적 억압까지 3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모순을 가진 한국사회에서 여성운동은 어떻게 변혁운동속에서 자리매김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2. 한국변혁운동속에서의 여성운동

'여성운동'이란 단순히 '남녀차별만을 없애는 운동'이 아니라 여성이 받고 있는 억압·착취현실전체, 즉 남성과 달리 받고 있는 억압, 착취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계급남성과 함께 받고 있는 억압·착취까지를 포함한, 사회구조적 변혁을 함께 수행하는 운동이다. 즉 여성문제의 본질상 이러한 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과제부터 서술한다면, 한국은 앞에서도 규정한대로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써, 제국주의 자본에 예속된 국내독점자본의 취약한 물적 토대에 기초하여 미제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폭압적 파쇼체제가 민중의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도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본제적 발전을 가로막히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할 때 노동자계급을 비롯하여 억압받고 있는 민중들은 미제를 축출하고 파쇼를 타도하여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여 새로운 사회의 물질적, 사상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한국의 변혁주도세력들은 미제와 파쇼권력, 강요된 분단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중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땅에서 외세와 파쇼를 몰아냈을 때만이 민족의 통일은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사회변혁운동과정에 여성운동은 어떻게 자리매김되겠는가? 여성문제의 본질이 계급모순을 떠나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그대로 여성운동의 지향점을 밝혀주고 있다. 즉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여성의 모순에 파쇼권력의 폭력성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반여성적인 작태로써 파쇼권력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운동의 궁극적 과제인 여성해방, 인간해방은 생산수단의 사회화, 생산의 완전한 사회화 차별적인 분업관계의 철폐이며, 이는 결국 절대적인 계급대립의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의 변혁운동과 그 나아갈 바가 같은 것이다. 결국 여성운동은 총체적 계급지배질서에 대한 정치권력투쟁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들 것이다. 같은 지향점을 가지면서 따로이 여성운동이라는 부문운동을 설정하는가? 그것은 변혁운동이 운동주체의 해방을 궁극적 과제로 한다고 했을때, 여성은 성을 매개로 한 지배계급의 분열 및 분할지배를 계급적 억압속에 덧붙여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혁주체인 자기계급의 임무수행과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성운동의 독자적 영역확보가 필요로 되는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에서 여성운동은 전체운동의 관점속에서 그 역할을 위치지우면서도 결코 그 부문운동의 독자성도 잃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결코 성이기주의적 관점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3. 한국여성운동의 당면과제

파쇼타도, 미제축출을 통한 계급해방과 여성해방의 동시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한국여성운동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첫번째로, 노동계급의 관점속에서 여성운동을 정립해야 한다. 여성들이 가사노동이나 생산노동을 통해 이루어낸 경제적 잉여의 종국적 수취자는 현재의 지배계급이기 때문에 여성운동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모순관계는 한줌도 안되는 반동지배계급과 여성민중과의 대립관계이고, 부차적 대립관계는 피지배계급과의 관계이다. 이에 따라, 지배계급과 가장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 있는 세력은 완벽한 무소유자, 가장 억압받는 노동여성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이인 계급이 노동자이듯, 여성모순의 해결에 있어서도 노동자로서의 혁명성을 가진 여성노동자계급이 여성운동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여성운동이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변혁운동속에 위치지워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번째로, 한국의 현실에 근거한 여성운동

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즉 여성해방을 위한 뚜렷한 방향성속에서 체제를 변혁하는 방향정립이 요구되고, 여성운동이 변혁운동의 주체로써 이론을 구체화시키고 이론과 실천에 입각한 장기전략과 전술을 세워 체계적으로 운동을 진행시켜 나갈 이론수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여성운동의 전개와 보조를 맞추면서, 여성운동에 방향을 제시하는데 앞장서서 일조해야 한다.

세번째는 여성운동의 대중성 획득이다. 이는 의식화와 조직화의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먼저 의식화의 측면부터 보면, 계속적으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주입속에서 여성억압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속에서 여성운동의 정치운동화가 필요하다. 즉 여성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개량적 여성운동의 정치적 어용성을 폭로하며, 여성대중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이다. 정치를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며, 계급역관계의 표출이라고 할때, 당연히 여성문제도 정치이슈화 할 수 밖에 없다. 결코 대중성은 대중의 자생성에 굴종하는 대중추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조직화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전체변혁운동이 요구하는 전체운동의 지도부 건설의 과제와 여성대중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여성문제의 인식을 통하여 많은 여성운동가를 배출하고 이는 변혁운동역량 강화에 기여하면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대중조직을 각 계급, 계층 여성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여 건설해야 한다. 여성운동이 주체인 여성대중을 혁명적 여성의식으로 무장시켜 반제반파쇼전선에 떨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해방의 첩경이라고 할 때, 여성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그 확산, 심화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Ⅳ. 글을 마치며

이제까지 여성운동에 대한 간략한 고찰을 해보았는데, 여기서는 제반 여성문제해결의 잘못된 방식에 대하여 언급하고 글을 마치고 싶다.

이른바 지식인 여성들에게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경향으로, 여성문제를 단순히 여성 개인이 겪는 차별과 편견의 문제로만 인식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다. 즉 이해심 많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편을 만나 자기나름대로의 자아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슈퍼우먼'이 되어 남성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얻고자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호조건속에 있는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여성문제에 대한 무관심, 무비판적 인식으로, 여성문제가 분명 사회구조속에서 파생된 집단주체가 풀어야 하는 것임을 자각하지 못한 태도이다.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은 비적대적 대립관계이므로 대남성투쟁은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보자. 물론 생물학적 관계로서의 남녀는 적대적 관계도 비적대적 관계도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남녀관계는 분명 이면 위치를 점하든, 혹은 정도의 강약은 있을지라도 분명 지배와 피지배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관계의 타파를 위하여 우리는 그 물적·이데올로기적 기반을 허무는 투쟁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남성투쟁으로 외화될 수도 있다. 즉 여성운동에서의 대남성투쟁은 남성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분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이 수행될 때만이 진정한 인간해방은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흔히 여성문제는 현재에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이므로 주요문제만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잘못된 견해는 본문속에서 비판되었기에 생략한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성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적 대안을 내오는 것이 바램이었으나 능력의 부족과 시간의 촉박함으로 전혀 손도 댈 수 있었다. 단지 바라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깨어 일어나 여성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남성들이 인간해방의 관점속에서 여성운동을 올바로게 이해하고 그야말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추동시켜 주는 것이다. 하늘의 절반인 여성이 부자유스러운데 어찌 인간해방이 이루어지겠는가?

이땅의 여성해방이 이루어 지는 날은 진정 계급해방, 민중승리의 그날일 것이다. 또한올바른 여성운동은 한국변혁의 신새벽을 앞당기는 커다란 자기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글을 정리한다.

〈참 고 문 헌〉

여성 1, 2 (창작과 비평사)
석순 5호 (고려대학교 석순편집위원회)
이화 41, 42 (이화여자대학교)
정정헌 16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녹두서평
민주화의 길 16호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여학생 활동에 대한 일제언

김 영 현
(경제학과 4학년)

목 차

Ⅰ. 머리말
Ⅱ. 여성대중조직의 위상과 역할
Ⅲ.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Ⅳ. 글을 마치며

Ⅰ. 머 리 말

여성문제 해결의 주체는여성이라고 할 때 이러한 모순의 담지자인 여성들의 힘의 결집이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즉 투쟁에 있어서 가장 강유력한 무기가 조직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여성운동의 역량강화도 이러한 조직화의 정도로 측정될 수 있다.

또한 여성운동이 전체변혁운동의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독자적 운동영역이 있는 것은 이제까지의 여성운동론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고, 이에 여성들의 독자적 조직이 필요로 되는 것이다.

이글에서는 여성대중조직에 대한 언급과 이를 통해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겠다.

Ⅱ. 여성대중조직의 위상과 역할

여성착취의 물적토대인 '지배질서총체'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분할지배방식이며 이러한 지배체제는 지배계급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온존, 강화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여성의 억압착취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신이 갖는 억압의 특수성을 통해서 일반적 변혁운동의 과제를 풀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운동조직의 근간이 여성대중조직이다.

여성대중조직이란 여성대중을 조직대상으로 하고있다. 즉, 변혁운동내의 각각의 부문운동속에서의 여성조직을 일컫는다. 그러면, 여성대중조직은 부문운동조직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는가?

첫째, 여성대중조직은 철저하게 부문운동의 방향성속에서 자기운동의 내용을 통일시킴으로써 올바른 내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

둘째, 부문운동조직과 여성대중조직은 조직자체의 상대적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직력이 상호결합되어서 만이 자기들의 통일되고 강력한 힘을 표출할 수 있다.

세째, 각각의 부문운동내의 여성대중조직들은 상호연대를 통한 공동의 투쟁을 지향하며 이때의 지향점은 여성문제의 본질을 이루는 총체적 계급지배질서에 대한 정치투쟁의 성격이다.

그러면 이러한 위상을 갖는 여성대중조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성대중이 처해있는 억압과 착취의 내용에 따라 조직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타조직과의 관계 또한 탄력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여성대중조직의 역할은 조직대상인 여성운동의 주체로써의 여성대중의 계급적 기반과 변혁운동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시에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추상적으로 여성대중조직의 역할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첫번째는 여성대중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실행하면서 광범위한 여성대중을 인입하는 것이다. 즉 후진여성대중까지 포괄하여 조직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이후 변혁운동의 한부문운동으로써의 여성운동을 지향해가는 여성운동가의 발굴이다. 셋째로는 활동속에서 여성문제의 본질을 교육시키면서, 모든 여성대중들이 혁명화되고, 조직이 전투화되어 여성문제해결의 정치투쟁화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학생회에 대하여 알아보자

Ⅲ.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한국사회에 있어서 여대생의 위치는 여성일반의 사회적 위치와 동일하면서도 청년학생으로서의 존재적 본질성을 갖는다.

즉 한국의 여성이 파쇼하에서의 계급적, 성적억압과 신식민지국가의 민중으로서의 민족적 모순 등 3중의 모순을 받고 있다고 할때 여대생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학생이라는 신분은 계급성을 갖지 않으므로 경제적 토대가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학문에 대한 진리에의 추구열과 정의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 결국 여대생은 여성이자 청년학생으로써의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한국의 여대생은 전통적 유교관습인 남존여비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 위축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대생은 올바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일어서기 위해 20년간의 억압된 교육과정을 극복하고 진리와 정의에 대한 추구열과 인간으로서의 자기회복을 위해 자신과의 투쟁을 통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 주체화와 함께 이세계 절반이며 역사발전의 주체인 여성의 조직이 필요함과 같은 의미에서, 청년학생이자 여학생인 총여학생회의 의미가 설정된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대중들을 그 조직적 기반으로 하면서, 여학생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대표조직이자, 여학생대중들의 자치조직이다. 즉 총학생회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으면서도, 앞에서 계속 언급된 한국 여대생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그리고 여성운동의 과제속에서 부여받는 바가 일정정도 독자적 영역이 존재하므로써, 그 존재의 필연성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총여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로, 여학생대중을 그들의 존재조건에 맞게, 그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그들이 담지하고 있는 모순의 질과 형태에 맞게 교육, 조직하고 여학생의 이해에 기반한 투쟁과정을 통해서 여학생대중들이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깨뜨리고 진정으로 자기모순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추동하는 것이다.

둘째로, 대중적 기반이 제대로 꾸려져 있지 못하고 노동여성이 여성운동의 주력부대로 꾸려져 있지 못한 현재의 여성운동의 수준에 비추어 볼때, 대중속에서 올바른 관점으로 단련된 여성운동가를 발굴해 내야 한다.

세째로, 총학생회와 함께 유기적 연관속에서, 남녀학생대중 모두를 주인으로 하는 조직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그 의식화 조직화 정도를 높여서,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전투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것은 곧 한국변혁운동에 있어서의 부문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을 동시에 강화시켜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부여받은 총여학생회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 들아갈 것인가?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은 여성문제의 본질에 대한 여학생대중과의 인식 공유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의 모습을 아무 거리낌없이 받아들이며 여성억압의 현실을 강화시키는 데 알게 모르게 기여하고 있는 여학생대중들에게 광범한 문제제기와 해결의 주체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제반 싸움과정에서의 후진여학생대중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양식의 개발이다. 아직까지는 자신의 의식속에서 학내의 실천활동등이 폭력적으로만 느껴지는 여학생대중들에게, 자기의 한계를 차례로 깨쳐나갈 수 있는 실천은 의식수준의 성장과 함께 여성으로써의 실천한계도 깨쳐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토대가 미약한 총여학생회는 그 사업에 있어서 각 단대의 여학생회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가져야 한다. 즉 총여학생회의 매 사업마다 단대 여학생회를 적극 추동하여 참가시키고, 모든 사업에 단대와 중앙의 관계를 긴밀히 엮어 나가야 한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Ⅳ. 글을 마치며

천박하나마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간략하게 적어보았다.

103년 연세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출범한 제1대 총여학생회는 74%의 투표율과 90%여의 지지율을 가졌다. 이는 아직 여성문제에 대하여 체계있는 본질적 이해는 되지 않았으나, 연세 오천여학우가 누구나 감각적으로나마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의 반증이다.

총여학생회의 주인은 오천여학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총여학생회의 조직적 발전은 여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비판적 지지속에서만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총여학생회도 항상 오천여학우와 함께 올바른 여성운동적 관점속에서 그 사업을 전개했을 때만이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고생각한다.

인간해방은 하늘의 절반인 여성이 해방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방의 주체는 여성모순의 담지자인 여성들의 자각과 실천속에서만이 가능하다. 아직까지도 여성운동의 역량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미약한 지금의 상황속에서, 연세여학생들의 실천적 자각과 총여학생회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가장 진보적인 양 하면서도 지배계급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 알게 모르게 여성억압을 하고 있는 남학생들의 인간해방적 관점속에서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느낀다.

여성해방의 신새벽이 밝아오는 그날, 이땅의 모든 여성과 남성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그날을 그려보며 이글을 맺는다.

고학력 여성의 취업문제

편집위원회

우리 나라에서의 여성 고등교육이 「이화학당」을 통한 공식적 교육으로 처음 시작된지 100여년이 지났다.

이후,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직업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유교의 전통아래 엄격하게 속박되어 왔던 여성의 직업활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수정되었다. (과거 봉건사회내에서 여성의 직업이라고 한다면 광대, 무당, 침모, 궁중의 나인등 천민들이 종사하던 것들이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여자 사무원을 모집했던 것은 1900년대 말의 日韓瓦斯會社에서 14~18세의 고등여학교 졸업정도의 여자 사무원을 모집했으며, 1912년 총독부 토지조사국에서도 모집한 바 있다. 그 이후,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와서, 1986년 전체 고등교육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6.6%에 이른다. 또한 1951년 연세대학교의 문과대학에서 여자 졸업생을 2명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남녀 공통의 전문 분야에서 교육을 받아 온지도 45년이 되었다.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스스로 자기의 개발이나 경제적 자립 등을 목적으로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사회 참여에의 희망율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1975년 이후, 남녀평등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여성의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그당연성을 인정받은 데에도 기인하는 듯 하다.

그러나 실제로, 남성과 여성 과의 생리적 조건의 차이 외에 마땅히 동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해 누적되어온 편견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능력과 신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업무, 영업, 총무 등 일반 사무직이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무직 중에서 회화나 타자의 기능이 요구되는 외국인 회사, 무역업체의 비서나 무역직 등의 특정직종, 영양사, 간호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등의 여성적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여자의 경우 취업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여건 中에서 무엇보다도 외모를 중시해서 뽑

는 경향이 있으며, 결혼과 동시에 퇴직이 강요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모 대기업의 회장비서 1명을 뽑기위해 거의 모든 여자대학에 추천 의뢰를 하여 학교마다 4~5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비서실에서 직원이 직접 나와서 한명 한명 면접을 한 다음 한 명을 뽑은 일도 있다. 또한, 모 회사에서는 자동교환기의 도입에 따라, 감원사유가 생겼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기계가 들어온 날, 기혼여성 3명에게 아무런 보장없이 사표를 종용했으며, 어느 병원에서는 한 간호원이 임신을 하자 기혼인 간호원 전원에 대해서 일괄 사표를 요구해 와,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미술교육을 전공한 화가 지망생의 경우, 미술교사로 부임하였다가 미술교육외에 타과목도 가르쳐야 하는 과중한 부담으로 전공을 계속할 수가 없어 퇴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갑작스러운 경제사정의 악화로 취업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으로 직업을 찾고 있었으나, 구직 3개월 만에 기본급 13만원의 전자회사 생산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같은,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으로 말미암아 대학 과정동안 전공보다는 오히려 외국어 회화, 속기, 타자 등의 기능을 익히는 것이 중요시되어, 대학 본래의 사명인 진리탐구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마치 대학이 기능인 양성소화 되어가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어쨌든 이러한, 남녀간의 고용 불평등 문제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의식이 나날이 높아가는데 비해서, 사회에서의 성차별적 의식구조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여성 스스로도 졸업후 취업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있으나, 구체적인 직업에대한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남녀 공학의 경우에 남학생 위주의 운영과, 여대의 경우에도 전문적 취업알선 인력의 절대 다수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 여학생의 취업 정보 루트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취업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별은 사회의 구조적 여성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것이 그 주된 원인이라 하겠다.

또, 성차별적 사회구조이외에 여성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중에는 여성 스스로의 문제점도 없지 않다. 대부분 직장 여성의 경우에 자신의 능력 발휘의 여부를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하며 남성들이 실제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 개발의 측면에 대해서는 체념하는 형태가 된다.

한편, 고학력의 여성일 수록, 법에 규정된 보호 조항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따라서 보호 조항을 소홀히 하더라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자적 활동이 보장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일수록(교수등) 남녀 차별적 문화속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며, 각 개인이 뚜렷한 직업관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서 남자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추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歷別 法的 保護條項에 對한 認知度

〈표1〉

	아주 잘 알고있다	대 충 알고있다	잘모른다	전혀 모르고있다	無 答	計
국교중퇴	18명	33명	7명	5명	0	83명
	21.7%	32.5%	32.5%	6.0%		100%
국 졸	50명	173명	135명	18명	1명	377명
	13.3%	45.9%	35.8%	4.8%	0.8%	100%
중학중퇴	12명	35명	21명	2명	0	70명
	17.1%	50.0%	30.0%	2.9%		100%
중 졸	51명	311명	304명	36명	8명	710명
	7.2%	43.8%	42.8%	5.1%	1.1%	100%
고중퇴	14명	82명	67명	10명	0	173명
	8.1%	47.4%	38.7%	5.8%		100%
고 졸	143명	1,662명	1,625명	272명	21명	723명
	3.8%	44.6%	43.6%	7.3%	0.6%	100%
초급대·전문교졸	8명	59명	41명	5명	1명	114명
	7.0%	51.8%	36.0%	4.4%	0.9%	100%
대 졸	8명	42명	26명	7명	1명	84명
	9.5%	50.0%	31.0%	8.3%	1.2%	100%
무 학	1명	3명	1명	2명	0	7명
	14.3%	42.9%	14.3%	28.6%		100%
無 答	0	4명	5명	1명	1명	11명
		36.4%	45.5%	9.1%	9.1%	100%
計	305명	4,404명	2,252명	358명	33명	5,352명
	5.7%	44.9%	42.1%	6.7%	0.6%	100%

資料 : 組織女性勤勞者의 勤勞實態에 關한 調査硏究報告書, 1978.

〈표2〉

1. 취업동기

응답내용	상 경 대
교육받은만큼 사회에 기여	4(26.7)
자아실현·자기발전	8(53.3)
경제적인 자립	2(13.3)
결혼전까지 사회생활을 경험	0(0.0)
부모나 주위의 권유와 기대때문	0(0.0)
기 타	0(0.0)
무 응 답	1(6.7)
계	15(100.0)

2. 희망하는 취업경로

응답내용	상 경 대
공개채용	9(60.0)
교수의 추천	3(20.0)
친지등의 소개	0(0.0)
학교의 취업주선	2(13.3)
기 타	1(6.1)
무 응 답	0(0.0)
계	15(100.0)

3. 취업희망율

응답내용 \ 단과대	상 경
무조건 구할 예정	4(28.7)
알맞은 직장이 있으면 구할예정	7(50.0)
취업계획 없음	1(7.1)
아직모름	1(7.1)
무응답	1(7.1)
계	14(100.0)

〈표3〉

	졸업자수	취업학점			대학원진학	취업율(취업+진학/졸업수)
		회사원	은행	기타		
경제학과	7	2	2	1	2	100%
경영학과	8	3	1	3	1	100%
응용통계	8	3			5	100%
소 계	23	8	3	4	8	100%

우리 대학교 상대 여학생의 경우, 취업동기나 희망하는 취업의 경로는 위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라서 거의 취업이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히 취업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 또한, 학부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여성의 문제를

더욱 개인적 시각에서 바라 보게 되는듯하다.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의해 고급 인력이 사장된다는 이유 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노동,할 권리를 뺏긴다는 인권 침탈적 문제라는 점에서도 조명되어져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지극히 높은 교육열과 교육제도 자체의 맹점으로 인해, 고학력 인구가 넘쳐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엄연히 존재하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여성 전체의 집단적 노력에 의해 가능해 진다고 본다.

앞으로, 주요 대기업들이 대졸 여성의 채용계획을 조금씩 늘려 잡고 있다고 하므로, 그간의 여성 인력 채용이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여성 스스로 이같은 차별들의 철폐를 사회적으로 계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것이 아니라 여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쟁취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별들이 시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권리로써 찾은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고밖에는 생각되어 지지 않을 것이다.

자료 : 「리크루트」「남녀공학과 여성의 직업」(이 영) 「여성과 사회」(이효재)

상•경•논•단

1.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대처방안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2. 중심극한 정리와 정규성 검정에 대한 연구
3. 제3세계 부등가 교환론에 대한 고찰
4. 농가부채의 개선을 위한 농외소득 증대 방안에 관한 모색
5. 우리나라 도급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保險市場 開放에 對한 對處方案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박 성 진
경영학과87졸업

目 次

第Ⅰ章 序 論
第1節 問題의 提起 및 研究目的
第2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第Ⅱ章 國內 生命保險市場의 分析
第1節 販賣商品
第2節 마케팅經路
第3節 廣告 및 弘報
第4節 販賣方式
第5節 募集人力
第6節 價 格

第Ⅲ章 美國生保社의 競爭戰略分析
第1節 商品
第2節 마케팅經路
第3節 廣告 및 弘報
第4節 販賣方式
第5節 募集人力
第Ⅳ章 國內生保社의 對應方案
第1節 商品開發
第2節 마케팅經路
第3節 廣告 및 弘報
第4節 販賣方式
第5節 募集人力
第6節 價 格
第Ⅴ章 結 論

第Ⅰ章 序 論

第1節 問題의 提起 및 研究目的

1986년 7月 21일 韓美通商協商에서 1986年末까지 美國의 1個 生命保險會社가 國內에 進出하고, 1987年末까지 다시 2個 會社가 進出하도록 合意함으로써 國內 生命保險市場은 開放時代를 맞이하였으며, 1987年 11月現在 CIGNA係列의 LINA社, AIG 係列의 ALICO社 그리고 American Family社가 進出하여 있는 狀態이다.

여기에 1987年9月10日 韓美保險協에서 1988年1月부터 外國生命保險會社의 國內合作進出을 許容하기로 合意함으로써 바야흐로 國內 生命保險市場은 完全開放을 앞두고 있다고 하겠다.[1]

生命保險市場을 開放하라는 直接的인 開放要求는 1983年11月 레이건大統領의 韓國訪問時 美國係 生命保險會社의 進出을 要求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후 1984年11月 第3次 韓美經濟協議會에서 生命保險會社의 進出意思를 表示했고 1985年7月 第4次 韓美經濟協議會때 1986年1月 以前까지 生命保險市場 開放計劃을 發表해 달라는 要求가 있었으며 1985年9月7日에는 레이건大統領이 韓國保險市場의 不公正行爲를 調査하도록 指示하였다. 이에 따라 9月16日에는 USTR(美國通商代表部)가 韓國保險市場에 대한 調査를 開始하였고 1986年9月까지는 USTR 調査團의 調査가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그 過中에서 1986年7月의 通商協商에서 美國係 生命保險會社의 國內進出이 合意된 것이다.[2]

그동안 國內保險產業은 1962年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始作되면서 이룩한 經濟의 高度成長에 힘입어 1962年부터 1984年까지 年平均 保有契約伸張率 141.5%, 收入保險料伸張率 144.8%의 超高度成長을 이룩하여 1984年에는 收入保險料面에서 生命7位, 損保17位, 生·損保 全體로는 11位로 浮上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量的 팽창 爲主의 計數競爭에 치중한 나머지 質的인 面에서는 상당히 落後하여 對外競爭力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962年 國民貯蓄組合法의 制定과 이의 施行에 따라 生命保險會社가 貯蓄企關으로 指定된 以來 管主導下의 안일한 經營은 관료적인 經營方式을 배태하게 되어 生命保險會社는 自生力을 倍養하고 마케팅技法을 開發하는데 등한히 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오히려 政府의 保險政策이 生命保險發展을 저해한다고 企業 스스로 比判하고 있는 실정이다.

美國 生命保險業界가 國內市場에 進出하고자 하는 것은 國內 生命保險市場의 與件이 良好하고 國內業界에 比해 經營管理面이나 技術面에서 優位性을 確保하고 있으므로 成功할 수 있다는 動機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있는데, 이와 같은 與件에서 美國保險社가 進出하게 되면 競爭이 過熱하게 되고 既存企業이 被害를 입을 可能性이 매우 높으며, 販賣面에서는 技術優位를 點하고 있는 美國保險社의 保障性保險과 高所得層의 潛在市場에 對한 先點이 豫想된다.

美國이 1次的으로 保險市場의 進出에 成功하면 2·3次로 다른 서비스市場의 開放을 要求하게 될 것이 豫想되므로 政府·保險協會 등 各分野에서 다양하게 對處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政府가 國內 生命保險會社를 적절히 育成하고 保險會社는 經營의 內實化와 合理化 그리고 마케팅技法의 開發과 商品開發에 注力하여 美國保險會社와 競爭할 수 있는 態勢를 確立하는 것이 시급히 要請된다.

이에 本 論文에서는 開放에 대한 對策의 일환으로서 個別保險會社가 企業次元에서 市場開放에 對處하는데 必要한 마케팅 競爭戰略 方案을 模索해 보기로 한다.

第2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1) 英生保社 합작 進出허용, 매일경제신문, 1987년 9월 11일자.
2) 申守植, "保險環境變化 對應方案 I", 損害保險 (1986.10), 97.

本 論文은 市場開放과 關聯을 지으면서 國內 生命保險市場의 마케팅의 特徵과 問題點을 分析하고, 美國 生命保險會社가 騙使할 것으로 豫想되는 마케팅競爭戰略을 推測, 分析하며 이에 對應하는 國內 生命保險會社의 對處方案을 模索하는 것으로 範圍를 局限시켰다.

硏究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는 保險調査月報, 生命保險協會의 刊行物, 保險 學會誌 等에 發表된 論文 및 資料를 活用하였으며 주로 文獻硏究에 置重하였다.

第Ⅱ章 國內 生命保險市場의 分析

第1節 販賣商品

生保商品이 지닌 基本的 機能은 保障機能과 貯蓄機能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傳統的으로 貯蓄性商品이 選好되고 있다. 그동안 高度의 經濟成長으로 國民所得이 向上되어 왔으나 대다수의 國民들은 長期貯蓄의 餘力이 없고 結婚資金, 子女學費마련, 財産形成의 慾求等 계속하여 發生하는 生活資金所要에 對備하여 短期貯蓄商品을 많이 購買하였으며 또한 高度의 經濟成長의 副産物인 인플레이션으로 因한 長期的 貨幣價値保存에 對한 國民들의 不信도 短期貯蓄商品選好를 부채질 하였다.

反面 죽음이나 疾病 等의 危險을 確率的으로 보기보다는 宿命的으로 받아들여서 自身이 危險을 당할 可能性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自身은 危險과 無關하다는 생각이 支配的이며, 政治, 經濟, 社會與件이 急變하여 먼 將來를 내다보고 未來를 合理的으로 設計하는 生活態度가 定着되지 못한 理由로 保障性保險이 選好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商品開發實績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解放以後 1984年까지 生保商品은 總458種이 開發되었는데 이 가운데 保障性商品은 137種으로 30%를 차지하였고 貯蓄性商品은 321種으로 70%를 차지하였다. 保有契約高는 84會計年度에 保障性 39%, 貯蓄性 61%, 收入保險料面에서는 保障性이 6.4%로 나타나 保障性保險의 底調를 나타내고 있다.[3]

이렇듯 短期貯蓄性商品의 販賣에 注力하는데 따르는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4]

첫째, 短期的 目標達成을 위해 保險料가 많은 短期貯蓄性商品을 우선하여 販賣함으로써 國民들에게 生命保險制度에 대한 本來의 効用性을 바로 認識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商品內容이 간단하여 販賣員의 商品說明能力 및 서어비스에 대한 質的向上을 期待하기 어렵다.

셋째, 短期貯蓄性商品의 注力販賣는 결과적으로 滿期支給日이 長期契約에 비해 빨리 到來하기 때문에 資産增加에 둔화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계속해서 注力하여 販賣해야 하는 惡순환을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

國內 保險商品의 또 다른 特徵은 團體保險의 不振이다. 1960年代 初에는 國民貯蓄組合의 制定으로 團體保險의 開發이 活性化되어 全體生保契約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높았으나 婦女子를 中心으로 한 販賣組織의 擴充等에 힘입어 個人保險이 크게 活氣를 띠어 그 比重이 漸增하여 現在는 個人保險爲主의 市場이 되었다.

게다가 國內 實情은 企業主들이 保險을 통한 從業員의 福利增進의 絕對必要性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從業員 福利厚生이 給與와 退職金 기타 直接給付의 形態와 使宜施設提供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勞組가 아직 先進國처럼 成熟되어 있지 못하여 從業員의 代表로서 보다 높은 次元의 福利厚生을 主張할 만한 位置에 있지 못하고, 政府의 稅制惠澤 等의 支援이 不足하여 團體保險市場이 不振하다.

1960年 保有契約額에 대한 團體保險의 比重은 63.8%였으나 70年 65%, 80年 14.3%, 83年에는 11.8%로 계속 下落하였다.[5]

3) 韓國保險公社, 生命保險商品史, 1985.
4) 朴種杰, 保險市場開放과 그 對應方案", 保險調査月報 (1986.7), pp.21 ~ 22.
5) 梁熙山, "生保市場開放에 따른 마아케팅 競爭戰略에 관한 硏究", (서울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pp.49 ~ 50.

國內 生保商品을 對外競爭的 次元에서 보았을 때 가장 特徵的으로 부각되는 것은 共同商品과 單獨商品의 構成이다. 共同商品은 지금까지 船團行政體制를 持續해온 監督行政의 所産으로서 그 目的은 過當競爭을 排除하고 契約者를 保護하며 保險會社를 均等하게 發展시키는데 있다. 解放後 1984年까지 開發된 458種의 商品中에서 共同商品이 108種으로 23.6%를, 單獨商品은 350種으로 74.6%를 차지하였다.[6]

이와 같이 國內生保社들의 特徵인 貯蓄性商品과 共同商品의 政策들이 市場開放後에도 그대로 維持, 發展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第2節 마케팅經路

保險을 募集할 수 있는 者는 保險會社의 任職員, 保險募集人, 保險代理店, 保險仲介人이 있는데[7], 대부분의 會社가 募集人爲主의 마케팅經路를 가지고 있다

會社 밑에 營業局과 總局이 있으며 各 營業局 아래에 募集人을 直接 指揮, 監督하는 營業所, 支所가 있는 支社制度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生保社는 本社直營中心의 外野組織을 마케팅組織으로 構成하여 强力한 統制體制를 構築하였는데 이로 인해 損保보다는 괄목할 만한 成長을 한 反面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露呈되고 있다.[8]

첫째, 外野組織의 모든 管理要員들을 職員으로 雇傭하여 過重한 職格를 떠맡기는 反面 權限의 委讓은 되어 있지 아니하여 合理的인 管理機能遂行이 困難하다.

둘째, 지나친 店鋪增設로 監督當局이 要求하는 設置基準을 達成키 위해 架空契約實績 非勤募集人 等의 變則運營이 試圖되고 있다.

第3節 廣告 및 弘報

生保社는 1.當該會社의 이미지를 大衆에게 심고, 2.새로운 商品이나 서비스를 紹介하고 3特定 保險問題에 대한 一般大衆의 意思를 具體化하기 위하여, 4商品을 販賣하는 募集人에 對한 士氣振作을 위하여, 그리고 5 保險會社의 募集人이 商品販賣를 위하여 訪問時 募集人에 대한 理解度를 提高시키기 위하여 商品廣告, 企業廣告를 行하며[9] 주로 利用하는 廣告媒體는 新聞, 雜誌 等의 印刷媒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屋外媒體廣告, 電波媒體廣告의 順이다.

國內 保險社들은 販賣促進을 하는데 있어서 人的販賣에 대한 依存度가 높으며 따라서 廣告費用面에서 國內 6個 生保社와 生命保險協會가 1983年 支出한 總廣告費用은 收入保險料對比 0.31%를 차지하는 아주 미미한 數値를 보이고 있다.

弘報란 企業이 代金을 支拂하지 않고 營業上의 意義가 있는 뉴스를 出版物이나 放送, 劇長舞臺 等에서 公表되도록 하는 活動이다.[10]

保險에 있어서 弘報와 廣告의 効果에 대하여 營業所長 및 募集人 1,500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에 의하면 表1에서 보는 表1

구 분	뉴스등 기 사	해설	광고	세미나	計
1983	51.4	3.9	37.2	7.5	100.0
1984	48.2	4.9	40.0	6.9	100.0

바와 같이 뉴스 및 기사 등의 弘報가 약50%내외로 廣告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11] 이 結果는 國內의 경우 弘報가 특히 重要함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겠는데 이와 같은 結果가 나온 것은 韓國民의 保險에 對한 認識水準이 낮은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6) 韓國保險公社, 前揭書.
7) 保險業法 第144條
8) 朴種杰, 前揭論文, p.24.
9) 李在凱, "生命保險市場開放에 따른 대처방안, "保險調査月報 (1987.3), pp.56 ~ 57.
10) 金元 , 마아케팅 管理論 (서울: 山山版社, 1980) p.114.
11) 秋岩大, "保險 報活動의 效率化에 關한 小考", 保險調査月報 (1984.11), p.19.

第4節 販賣方式

前記했듯이 保險을 募集할 수 있는 자는 保險會社의 任職員, 保險募集人, 保險代理店 保險仲介人이 있는데 의 가운데 保險事業者의 任職員은 거의 活動하지 않고 있으며 保險仲介人制度는 法에는 規定되어 있으나 아직 施行되지 않고 있다. 保險代理店制度는 1983年11月 1日字로 募集體係의 多樣化를 기하고자 導入·實施하고 있으며 最近에는 數그 比較的 增加[12](87年9, 10月間 31個 增加하여 10月末 現在 6個人 代理店數는 98個)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그 營業實的이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生保商品販賣는 募集人에게 거의 依存하고 있는 狀態이다. 募集人들은 緣故·紹介 等을 通하여 可望顧客을 찾아서 家庭, 職長을 訪問하여 販賣하는 訪問販賣方式을 採擇하고 있는데, 이 訪問販賣方式은 그 目標市場, 收入 및 身分에 따라 프로퍼시스템(proper system), 데비트시스템(Debit system), 블럭시스템(block system)으로 分類된다.

第5節 募集人力

募集人의 身分은 社會와의 使用從屬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고 新規保險契約의 請約과 集金의 일을 完成할 것을 約定하고 그 結果에 對하여 報酬를 받기로 委任契約下의 自由職業人이다.

募集人의 法令上의 地位는 保險契約締結을 仲介하는 者일뿐 會社를 代理하여 保險請約의 意思表示를 受領할 權限이 賦與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募集人에게는 保險契約締結權 告知義務受領權 및 保險料受領權이 없는 것이다.

國內 生命保險業界의 募集人의 特色은 다른 業種의 販賣員에 比해 定着率이 相對的으로 낮다는 것이다. 1979年부터 1984年까지 6年동안의 脫落率은 平均83.8%에 達하고 있어 大量導入·大量脫落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最近 들어서는 全體募集人의 數가 오히려 減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募集人의 數는 1985年末 17만3천명으로 最高水準을 보인 以來 갈수록 줄어 1987年 9月末 現在 6個 生保社와 2個 外國生保社의 募集人數는 15만8천263명이다.[13]

募集人은 契約者와의 接點이고 生命保險을 國民들에게 바르게 利用하도록 하는 役割을 擔當하는 位置에 있기 때문에 大量脫落은 社會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一般的으로 募集人의 定着率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要因들은 募集人選擇時 使用되는 採用基準, 訓練方法과 營業所분위기·募集人에 대한 再敎育과 監督維持, 販賣能力 그리고 競爭 等이 있다.

第6節 價 格

生命保險價格의 算出에 있어 豫定死亡率과 豫定利率은 核心的인 要素일 뿐 더러 그 比率의 根據가 一般國民全體의 死亡率이나 公金利와 密接한 關係가 있으므로 世界各國은 거의 모두가 法으로 規制하거나 國家의 承認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死亡率, 利子率 等이 各國에 따라 特有하게 形成되므로 國家間의 比較는 큰 意味가 없다.

우리나라도 生保價格은 保險監督當局에 의하여 철저히 統制되고 있으며, 各社는 當局이 定해 준 豫定死亡率, 災害率, 退職率, 豫定利率, 豫定事業費率 等에 따라 各 商品의 料率을 定하고 있다.

第Ⅲ章 美國生保社의 競爭戰略分析

第1節 商 品

美國生保社의 國內進出을 國內生保業界가 念慮하는 것은 그들의 蓄積된 노우하우(know how)때문이다. 특히 商品開發面에서의 노우하우는 進步的이며, 契約者의 必要에 부응해왔고, 經濟變動에 따른 消費者의 要求하는 바를 認知했다고 보아진다. 美國生保社가 國內消費者들에게 첫번째로 선보일 것은 그들의 固有한 商品이라고 할 수 있다.

美國生保社가 商品開發面에서 優秀한 點을 들어보면[14]

첫째로 保險商品開發에 있어서 가장 基礎가 되는 統計의 發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發展된 數理에 의하여 經驗生命表가 잘 整備되어 있고 더불어 職業別, 團體別로 死亡率의 統計가 完備되어 있어 保險料가 合理的으로 決定된다. 우리의 實情은 '85 簡易經驗生命表를 使用하고 있어 定期保險의 경우에는 保險料가 너무 높고, 反面 年金保險의 경우에는 너무 低價일 수가 있어 非合理的이므로 美保險社의 低保險料를 앞세운 國內市場 攻略은 쉽게 豫想할 수 있다.

둘째, 失効·解約防止를 위해 契約者가 保險料를 納入하지 못 할 경우를 對備하여 保險料自動貸付·納消保險으로의 轉換·延長定期保險으로 轉換 等의 方法을 사전에 選擇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失効·解約率이 83年부터 85年末까지 3個年 平均이 40.5% 에 이르는 것을 考慮할 때 美國生保社는 失効解約防止를 위해 商品開發에서 이를 考慮, 保險認認의 提高를 圖謀할 것이다.

셋째, 健康保險·信用生命保險의 分野에서 接近을 試圖할 것이다. 健康保險은 國內에서 成人病保險·암保險 等이 販賣되고 있으나 對象 및 商品構造가 單純하다. 그러므로 專門職業人 等 醫療保險惠澤을 못받는 사람 難治病으로 治療費가 高價인 點에 對備한 高所得者의 美國商品에의 加入은 쉽게 豫想할 수 있다. 信用生命保險의 경우는 信用카드會社와의 業務提携를 通하여 販賣할 수 있을 것이며, 長期的으로 볼 때 信用生命保險의 展望은 밝은 편이다.

넷째, 商品開發에서 經濟變動에 敏感하게 反應한다는 것이다. 變額保險(vaviable life)이나 유니버설保險(universal life)은 인플레이션하의 長期性保險을 기피하는 契約者들을 保險으로 끌어들이는 役割을 할 것으로 豫想된다. 물론 美國生保社들이 이 保險을 開發·販賣하는데는 統計, 우리나라 證券市場의 不安定, 高度로 訓練된 募集人의 確保問題 等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 商品의 매력과 國內經濟가 인플레이션의 壓力에 시달리는 點을 考慮할 때 이들의 開發·販賣에 注力할 것으로 보인다.

第2節 마케팅經路

美國生保社의 마케팅經路는 本國에서 하는 것처럼 募集人을 中心으로 한 經業組織을 育成해 갈 것이다. 美國生保社는 機關長의 大部分이 募集人出身機關長이고 募集人을 거쳐야 機關長이 되기가 容易하다.

美國의 경우 生命保險을 크게 하는데 奇與한 總代理店制度(general agent system)하의 총대리점이 獨立된 事業體로서 募集人을 雇傭하여 運營하므로 下位運營組織이 强化되어 있고, 契約者에게 保險加入時 有利한 쪽을 알선해 주는 仲介人制度(broker system)가 普遍化되어 있어 下位組織이 튼튼하다.

이러한 獨立的인 地位의 組織에 本社에서 直接 관장하는 直屬代理店·支社가 並用되면서 募集人을 中心으로 마케팅活動이 이루어진다.

또 國內保險募集人은 保險契約締結權·告知義務受領權 및 保險料受領權이 없어 保險紛爭의 施發點이 되고 있으나, 美國에서는 直屬代理點·支社所屬 募集人에게는 勿論 仲介人·總代理店에 屬한 募集人에게도 사실상 주어지고 있다.

國內保險業法의 規制를 받으므로 募集人에게 3權을 주기는 어렵겠으나 실제적으로는 賦與할 것이므로 營業組織보다는 募集人 中心을 强化할 것으로 보인다.

第3節 廣告 및 弘報

日本에 進出한 美國生保社는 廣告內容에 「解約還給金이 한푼도 없는 保險」 이라고 게재한 적이 있는데, 이는 日本生保社들이 밝히기 꺼렸던 內容을 美國生保社들이 오히려 과감하게 실어 保險紛爭의 소지를 없앴고

12) "代理店조직 擴大", 한국경제신문, 1987년 11월 12일자.
13) "生保社 모집인 격감", 한국경제신문, 1987년 10월 28일자.
14) 金種國, "外國社 國內進出에 관한 對應 勢研究(Ⅱ)", 生協(1986.10), pp.13~14.

신선한 이미지를 傳達해 주었다고 評價되었다.

國內에 進出할 美國生保社들도 이러한 類의 廣告文句를 使用할 것을 豫想할 수 있다. 國內市場이 量的 成長은 하였으나 質的인 面에서 市場이 完全치 못한 點을 考慮할 때 美國 生保社의 企業이미지는 다른 마케팅 戰略과 함께 쉽게 傳達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에 進出한 美國系 會社는 어떤 產業이건 日本產業과의 競爭에서 뒤지고 있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어떤 美國企業이건 亡하고 있지 않다는 社會經濟的與件을 생각할 때 美國生保社의 企業이미지傳達은 큰 저항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國內에서 美國生保社는 弘報보다는企業廣告나 商品廣告에 치중할 것이며, 日本의 美國系 生保社들이 그랬듯이 高所得者나 上流層에 對한 商品廣告도 豫想된다.

第4節 販賣方式

美國生保社는 日本에 進出했을 때 백화점과 業務를 提携하여 店頭販賣하고 버스터미날, 空港에서 旅行者保險을 自動販賣나 店頭販賣하였다. 이러한 販賣는 募集手當이 支給되지 않으므로 保險料가 저렴하다. 이렇듯 美國生保社는 訪問販賣方法에서 벗어나 簡便한 保險은 店頭販賣나 書信을 利用하는 直接郵便販賣, 廣告欄의 一部를 利用하는 쿠폰販賣 等의 方法으로 募集人을 直接 만나지 않고도 保險을 利用하도록 大衆속으로 파고들 것으로 豫想된다.

保險料納入方式도 直接受金, 銀行GIRO 利用, 給與控除 等으로 多樣化시키고 保險料를 納付하지 못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保險料自動貸付로 便宜를 봐 줄것으로 豫想된다.

目標市場도 底, 中底, 中, 高所得者로 나름대로 區分하여 所得에 맞는 商品을 購入하도록 生活設計까지 도와주며 販賣하는 것은 물론 한번 맺은 契約者와의 關係를 꾸준히 維持하여 販賣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15) 金種國, 上揭論文, p.15.

第5節 募集人力

募集人은 保險會社의 組織에서 最一線의 組織因子이다. 歐美와 아시아(특히 韓國과 日本)의 保險經營에서의 가장 큰 差異는 募集人의 人的 構成과 報酬實態라고 할 수 있다. 歐美의 募集人은 男性爲主로 되어 있지만 韓國과 日本은 婦女子로 되어 있으므로 歐美는 專業募集人이고 生產性이 높으며, 韓國과 日本은 파트타임이고 生產性이 극히 低調하다.

美生保社는 約 1,800個, 募集人數는 約45만명인데 45만명 중에 22만명은 專業募集人으로서 保險販賣活動으로 生活을 100-50%까지 營爲하며, 23만명은 保險販賣로 50%以下의 收入을 獲得한다.[15]

美國生保社가 國內市場에 導入할 때에 旣存募集人을 스카웃하려 하거나, 日本에서와 같이 大卒男子社員을 採用하여 훈련을 시키거나 두가지 方法을 混用하는 政策을 擇할 수 있다.

첫째, 方法으로 旣存募集人을 스카웃하려고 할 때는 國內業界의 內部規定에 의해 어려운 問題가 있겠으나 技術的으로 充分히 克服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方法은 大卒男子社員을 採用하는 것이다. 美國生保社의 募集人이 되기란 쉽지가 않다. 美國生保社는 募集人을 選拔한 後 1年동안 所要經費가 훈련비, 報酬, 貸貸料 等을 包含하여 1人平均 약 23,000달러라는 엄청난 投資를 하고 있다. 이렇게 投資된 募集人과 大量生產에 의해서 量產된 募集人과의 差異는 크다고 하겠다. 現在 國內 事情으로 볼 때 大卒就業率이 40%에 머물고 있어 充分한 經濟的 補助를 해 준다면 優秀한 頭腦를 確保하기 어려운 問題가 아니며 現在 營業中인 라이나社와 알리코社는 實際로 募集社員으로 全員 大卒을 採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 方法은 旣存募集人(특히 募集人出身 機關長)을 스카웃하면서 大卒社員을 選拔하는 것이다. 이 方法은 旣存募集人을 스카웃해서 營業活動을 하는 것이 效果的이나,처음부터 大卒社員을 選拔하여 育成하는 것이 效果的이냐를 시험할 수도 있다.

第Ⅳ章 國內生保社의 對應方案

第1節 商品開發

(1) 保障性商品의 開發

美國生保社가 進出하게 되면 國內社와의 競爭을 피하고 政府와 企業을 刺戟하지 않기 위해서도 貯蓄性商品보다는 保障性商品의 開發·販賣에 注力할 것으로 보인다. 定期保險等의 保障性保險은 生命保險의 本來機能에 더 接近하는 商品이고 高所得層이 選好하는 商品이므로 新規會社로서는 市場創出力이 어느 種目보다도 클 것으로 判斷되며 收益性과 效率側面에서도 無視할 수 없는 商品이다. 또한 純粹保障性商品을 外國社가 오랜 노우하우를 가지고 職業別 危險度를 따라 開發하여 절실히 必要로 하는 階層에 訴求한다면 豫想하기 어려운 狀態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國內生保社가 國內市場占有率의 最少配分만을 指向한다면 保障性商品을 積極 開發해야 할 것이다.

(2) 先進國 保險商品開發

오늘날 美國經濟는 貨幣價值의 下落으로 保險加入者나 貯蓄者들이 未來의 貨幣價值에 對한 회의로 인하여 短期의 利益을 追求하는 傾向이다. 이러한 現象으로 長期에 該當하는 保險이 더욱 매력을 잃게되자 이들을 保險에 붙들기 위해서 유니버설 라이프保險, 變額保險 調整生命保險이 開發된 것이다. 또한 加入者 自身이 經濟與件變化에 따라 이러한 保險을 利用하도록 하기 위해 內容을 變更, 轉換할 수 있도록 開發되었다.

우리經濟도 最近 몇년동안을 除外하고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貨幣價置變動이 심했던 것을 보면 이렇듯 彈力的이고 經濟變動에 對應하는 商品을 開發해야 할 것이다.

(3) 彈力的인 商品開發

美國保險商品의 特性은 容易한 更新性(re-newability), 轉換性(convertibility) 및 變更性(changeability)等으로 表現된다.[16]

更新性은 被保險者의 選擇에 의해서 언제든지 更新이 可能함을, 轉換性은 特定種目에서 다른 種目으로 바꿀수 있음을 그리고 變更性은 대체로 契約途中에 保險金額을 增減할 수 있는 것을 意味한다.

原則的으로 保障商品은 保險契約者의 意思에 따라 언제든지 更新·轉換 및 變更이 可能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國內保險市場與件처럼 起伏이 심한 경우에는 더욱 이 세가지 特性의 賦與가 要望되므로 國內生保業界는 이들 特性이 考慮된 商品을 開發하여 失効·解約率을 줄이고 保險契約者에게 서어비스를 提供, 美國社의 進出에 對應해야 할 것이다.

(4) 健康保險商品開發

美國保險市場의 가장 두드러진 特徵의 하나는 어느 나라보다도 健康保險이 고도로 發達되어 있다는 點이다.

健康保險의 內容은 우리나라의 醫療保險과 所得保障保險을 합친 形態라고 할 수 있다. 健康保險이 導入될 경우 醫療保險의 惠澤을 받지 못하는 階層은 물론이고 醫療保險에 加入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補完的 機能을 할 것이다.

國內社들도 各種疾病에 대한 所要醫療費를 정확히 豫測하고 保障內容을 細分化하여 契約構造를 向上시킨 다양한 健康保險을 開發해 市場發展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團體保險의 開發

生保分野에서 團體保險의 比重이 漸增하고 있는 것은 世界的 추세이나 韓國은 오히려 減少하고 있다. 그러나 產業化에 따른 企業들의 團體保險 加入與件의 成熟, 勞組의 團體交涉權에 의한 團體保險加入壓力의 加重, 社會保險의 開發에 따른 民營保險의 補完必要性提高 等으로 볼 때 世界團體保險市場은 계속 높

16) 梁熙山, 前揭論文, pp.18~19.

은 伸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團體保險이 國民貯蓄組合法에 의한 國民貯蓄의 흡수방편에 不過하여 團體保險商品이 團體保險으로서의 性格이 미미하고 特定한 保險效用을 達成할 수 있는 商品도 開發되지 못하였다. 最近에는 企業의 保險加入에 대한 稅制惠澤 等 團體保險加入을 위한 市場環境이 好轉되고 있고 勞組의 團體交涉이 活發히 이루어질 展望이므로 效用性있는 商品이 開發된다면 團體保險의 比重이 提高될 수 있을 것이다.

第2節 마케팅經路

生保市場의 開放化와 保險經營의 現代化를 위해서는 消費者指向의 經路體制構築이 要請된다.

生保加入의 一連環現象에 따라 成熟期의 保險企業活動으로서 追加販賣를 해야 하며, 또 未開拓領域인 高所得層에 對한 販賣와 複雜한 構造의 新種商品을 導入하기 위해서는 募集人의 數에 의한 販賣戰略과 지금까지의 婦女子 中心의 낮은 商品知識의 保險販賣體制로는 困難하다. 새로운 市場의 開拓과 新種商品의 販賣를 위해서는 專門募集人이 必要하다.

뿐만 아니라 代理店制度, 直接販賣制度 等도 導入, 活成化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給與體係도 改編해야 하고 事業費에 대한 規制方式도 좀 더 自律的方向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第3節 廣告 및 弘報

美國生保社의 廣告에 對應하여 國內生命保險協會는 保險에 無關心한 購買者에게 保險에 肯定的인 認識을 갖게 하는 基本的 廣告를 하고, 各個別社는 商品에 관한 情報를 提供하여 可望購買者에게 購買意欲을 積極的으로 자극하여 自社의 商品을 選擇, 購買토록 하는 選擇的 廣告를 해야 할 것이다.

廣告媒體面에서는 保險商品이 外形도 없고 形態도 없는 無形의 商品이므로 實物展示와 같은 效果를 얻을 수 없는 텔레비젼보다는 訴求地域이 全國的이고 廣告文案의 變更이 容易한 라디오廣告가 有利할 것이다. 印刷媒體廣告에서는 대상이 特定階層에 限定되지 않는 新聞은 基本的 廣告를 해야 하는 生命保險協會에 알맞고 視覺的 訴求가 可能하고 充分한 商品說明이 可能한 雜誌廣告는 商品廣告에 적합하다고 하겠다.

國民의 意識水準이 向上되고 知識水準이 높아짐으로써 保險에 대한 一般的인 意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弘報보다는 廣告의 效果가 次後로는 높아지리라 생각되며, 포스터와 廣告塔에 의한 屋外廣告의 效果도 提示해 봄직하다.

第4節 販賣方式

美國의 生保社들은 各各 自己特性에 맞는 目標市場을 찾아내어 그에 맞는 마케팅計劃을 樹立하고 마케팅活動을 展開한다. 이와 같은 販賣方式은 오늘날에는 顧客의 欲求가 매우 多樣하므로 획일적인 商品이나 販賣經路 및 廣告戰略으로는 全體市場을 浸透할 수 없다는 데서 由來한다.

그러나 國內生保社들은 市場의 모든 部分을 確保하고자 하며 어느 한 部分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國內社는 市場細分化技法이 매우 落後하여 어느 部分市場에 自社가 취약한가를 잘 알지 못한다. 같은 理由로 廣告活動 역시 訴求할 目標階層이 어떤 階層인지를 把握하지 못하고 遂行되고 있는 實情이며, 募集人別 對象顧客의 割當에도 合理的인 方案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마케팅活動의 效果를 十分 發揮하기 위하여는 市場細分化技法과 各各의 部分市場에 맞는 販賣方式을 고안해 내는 能力이 절실히 要望된다.

뿐만 아니라 募集人에게만 依存한 訪問販賣方式 外에 直接郵便販賣, 店頭販賣, 무존販賣 等의 새로운 販賣方式을 導入하며, 訪問販賣에 있어서도 現在 募集人의 90%以上인 婦女子募集人에서 脫皮하여 男子募集人 開發 精銳化에 힘쓰는 等 男女混成販賣方式인 블럭시스템을 硏究하여야 하겠다.

第5節 募集人力

國內生保業界는 各社間의 過當競爭에 의한 架空募集人을 登錄시켜 實績을 높이려는 計數的 競爭을 하고 있으므로 選拔에 대한 基準없이 募集人을 마구 採用하고 있으며, 敎育도 形式的으로 實施되고 있는 實情이다.

美國生保社가 進出함에 있어 國內社들의 競爭力을 强化하기 위해서는 計數的 競爭을 脫皮하고 적정한 募集人採用 適性테스트를 開發하고 潛在市場을 겨냥한 高學歷의 募集人을 積極開發하여 不適當한 選拔에 따른 費用의 過大支出을 抑制해야 하겠다.

採用後 敎育은 初期敎育은 各社와 協會에서 實施하고, 美國의 CLU와 맞먹는 高級프로그램을 開發하여 業界의 共同硏修金關인 保險硏修院이 擔當하는 等 敎育의 體係를 整備하여 初期에 募集人이 定着할 수 있는 供給體係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의 一環으로 現在의 手當體係를 簡單, 明瞭하게 하고 固定性 手當中 最底手當保險制度는 架空契約이나 不實契約의 原因이 되므로 폐지하고 基本手當은 新契約實績보다는 保有契約者數로 하는 方案을 檢討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募集人의 法的 地位도 保險料의 受領權이나 告知義務受領權을 賦與하여 向上시키고 이로 因한 保險紛爭을 줄이도록 할 것이며 向後 募集人의 專門化 發展에 따라 保險契約締結代理權의 認定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第6節 價　格

生命保險商品의 價格은 高度의 數理的 確率計算에 依하여 算出된다. 근본적으로 商品價格의 根據가 되는 各種統計가 不適正하면 價格도 결국은 틀리게 된다. 勿論 豫定値를 使用하므로 實際値와 差異가 發生할 경우 이를 契約者에게 還元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主張도 있을 수 있지만 現實的으로 豫定死亡率이 높게 算定되어 많은 死差益이 發生하여 왔지만 契約者에게 配當하지 않았다. 最近에 와서는 一部契約者配當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積極的이지 못한 實情이다. 美國生保社가 進出하면 양상이 많이 變化될 것으로 보이며 契約者配當도 좀 더 活氣를 띠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價格 算出自體는 科學的인 方法에 의해서 行해지므로 算出基礎만 實際와 近接한다면 過不足이 없는 料率이 結定되지만 國內에는 死亡率, 傷害率, 入院率 等의 災害率 그리고 退職率 等의 經驗値가 거의 없는 實情이다.

美國生保社의 경우는 國內生保社보다 多樣한 각종 統計資料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統計資料는 保險會社의 經驗統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反面 國內生保社는 '85簡易經驗生命表를 使用하고 있다. 그러므로 美國生保社가 進出하면 保險價格面에서 競爭을 하지 않을까 豫想이 되는데 國內社들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차 國內保險會社 自體의 經驗統計를 使用할 수 있도록 이를 蓄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높게 策定된 死亡率은 年金保險에 있어서는 不利하게 作用한다. 相對的으로 生存率이 낮게 策定되어 結果的으로 年金保險의 價格은 實際로 必要한 金額보다 낮게 算出되었을 可能性이 높다. 美國의 경우에는 死亡表와 다른 年金表를 使用하여 이 問題를 解決하고 있다. 國內生保社도 하루속히 別途의 年金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事業費問題인데 美國生保社가 國內에 進出하면 國內社는 이 部門에서 競爭優位를 갖도록 해야 한다. 美國生保社는 募集組織의 構築과 施設確保를 위하여 많은 資金이 一時에 所要되므로 競爭上의 脆弱點을 不得已 갖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國內生保社는 放慢한 經營을 止揚하여 超過事業費를 抑制해 나가야 할 것이다.

第V章　結　　論

國內 生命保險會社는 國內外 經濟與件의 惡化로 그 成長이 鈍化되고 있으며 反對로 企業間의 競爭은 深化되고 있다. 이와 같은 對內的인 競爭關係는 保險監督當局의 秩序維持努力으로 큰 問題없이 發展을 促進하는 肯定的인 次元으로 昇化될 수 있었다.

그러나 最近 生命保險業界는 市場開放의 過中에서 美國 生命保險會社의 支店의 國內進出과 外國合作保險會社의 進出이라는 새로운 外

部變數의 登場에 直面하게 되었는데, 從來 政府의 保險政策下에서 經營의 體質强化를 通한 對外競爭力을 培養하지 못한 國內 生命保險會社로서는 保險經營의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는 外國生保社의 國內進出이 큰 負擔이 아닐 수 없다.

이미 3個社가 進出해 있는 美國 生命保險會社가 向後 既存市場에 미칠 영향은 매우클 것으로 豫想된다. 우선 6個社에 의하여 寡占되어온 國內 生命保險市場을 교란시킬 것이다. 國內에는 存在하지 않는 新種商品을 導入하여 새로운 經路를 통하여 斬新한 促進活動을 動員, 마케팅活動을 展開함으로써 既存市場을 잠식하고 潛在市場을 先占할 可能性이 높다.

既存 國內市場의 교란자이자 國內生保社에게는 强力한 排戰者가 될 美國生命保險會社의 進出에 對備하여 여러 利害關係集團이 各己 나름대로 對應戰略을 樹立할 수 있겠으나 가장 時急히 競爭戰略을 樹立해야 할 當事者는 말할 것도 없이 國內 6個 生命保險會社이다.

美國生命保險會社의 進出은 經濟의 開放化에 따른 하나의 事例로서 具體化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面에서 보면 國內社들이 그동안 量的인 成長에만 置重하여 內實을 기하지 못한채 外形的으로 成長하여 그結果가 世界市場에 알려지고 外國에게는 好條件의 市場으로 비쳐서 進出을 알당긴게 아닌가 생각된다.

어쩌되었든 國內社는 마케팅技法이 卓越한 美國生保社를 맞이하여 競爭하여 市場占有率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發展을 追求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本 論文에서는 美國生命保險會社의 國內進出과 關聯지어 第2章에서는 國內社의 마케팅實態를 分析하고, 第3章에서는 美國生命保險會社의 豫想되는 競爭戰略을 分析하였으며, 第4章에서는 美國生命保險會社의 進出에 對應하는 마케팅競爭戰略을 個別企業的 立場에서 提示하였다.

마케팅믹스別로 美國生保社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保險商品을 多樣化하고 保險經路를 多角化할 것을 主張하였다. 또한 美國生保社가 先占할 것으로 豫想되는 領域을 國內社가 먼저 차지하기 위하여 그에 맞는 商品을 開發하고 保險募集人을 專業化하여 顧客과의 類似性을 提高토록 하였다. 또한 統計에 관하여서는 그것이 生命保險產業의 가장 基礎임을 認識하고 蓄積에 힘쓸 것을 主張하였다.

國內生保社들이 美國生保社와 對決하기 위해서는 經營의 體質强化를 通하여 國際 競爭力을 培養해야 한다. 그러나 이 國際競爭力은 現在와 같은 劃一化된 規制일변도의 管理監督과 船團行政體制下에서는 培養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한편으로는 이러한 體制가 國內에 進出하는 外國生保社로 하여금 容易하게 國內 生命保險市場에 定着할 수 있도록 作用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따라서 管理監督方法을 多樣化하고 船團行政을 緩和하여漸次的으로 個別化政策을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保險商品價格 및 配當 等에서 競爭을 促進하게 되어 利益基盤을 擴充, 經營의 內實化를 圖謀할 수 있고, 營業規制를 緩和하는 等 自律性을 擴大하여 經營의 效率性을 十分 提高시킬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중심극한 정리와 정규성 검정에 관한 연구

곽 민 정
(응용통계 학과 88 년졸업)

목 차

Ⅰ. 서론
Ⅱ. 중심극한 정리
Ⅲ. 정규성 검정
1. 정규성 검정의 목적
2. 정규성 검정에 관한 제 이론들
2.1 Normal Probability Plot에 의한 정규성 검정
2.2 막대그래프에 의한 정규곡선의 적합
2.3 카이자승 적합도 검정
2.4 콜모고로프-스미노프검정
2.5 카이자승 검정과 콜모고로프-스미노프 검정의 비교
2.6 릴리휘스 검정
2.7 쉐피로-윌크 검정
Ⅳ. 실제자료를 이용한 정규성 검정
Ⅴ. 결론

Ⅰ. 서 론

정규분포는 경험치의 분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즉, 물리현상, 천문기상의 관찰치 분포, 동일사상에 대한 측정오차의 분포, 생물체 측정치의 분포 또는 대량 생산에 있어서의 품질의 분포등이 모두 정규분포를 한다. 이와같이 단순히 경험치의 분포가 대체로 정규분포한다는 점에서 이 확률모형이 중요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정규분포가 이론 분포 모형의 극한형으로써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이항분포나 포아송분포 또는초기하분포는 표본크기를 무한으로 접근시킴에 따라 정규분포에 수렴하게 된다. 또 표본분포의 이론모형인 x^2 분포나 t분포도 이들의 극한은 모두가 정규분포가 된다. 뿐만 아니라 중심극한정리의 핵심이 바로 정규분포에 수렴한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많은 통계적 절차가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출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관한 고찰과 정규성검정(Normality test)은 통계적 연구의 중요한 영역이다.

중심극한정리로는 Lindeberg-Lévy 정리, Lapunov정리, 그리고 Erdős와 Rényi정리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정규성검정에는 Normal Probability Plot

과 막대 그라프(histogram)에 의한 간단한 주관적 검정방법이 있으며 카이자승 적합도 검정(Chi-Square Goodness of Fit test), 콜모고로프-스미노프(Kolmogorov—Smirnov)검정, 쉐피로-윌크(Shapiro-Wilk) 검정, 그리고 릴리휘스(Lilliefors) 검정과 같은 구체적 검정방법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검정방법에 대한 고찰과 비교분석을 시도하고 이들 검정방법을 통하여 실제자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중심극한정리 (Central Limit Theorem)

중심극한정리는 여러 다른 형태들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몇몇의 확률변수들이 정규변수로 접근되어 진다는 조건의 언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 이론들은 몇몇의 확률변수들의 합에 대한 분포함수가, 더해진 확률변수들의 갯수가 커지게 됨에 따라 그리고 어떤 다른 일반적 조건들과 부합될 때 정규분포함수로 접근해 감을 나타낸다. 이들 '다른 일반적 조건들'은 중심극한정리에 대한 여러 형태들을 제시하면서 많은 다른 방법들로 표현되어 진다.

Y_n을 n개 확률변수 $X_1, X_2, \cdots, X_n$의 합이라 놓고 μ_n을 Y_n의 평균 그리고 σ_n^2을 Y_n의 분산으로 놓는다. 확률변수들의 수, n이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 확률변수의 분포함수 $(Y_n-\mu_n)/\sigma_n$은 다음에 제시되는 조건들 중 하나를 만족시킨다면 표준화 정규분포함수(Th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function)에 접근하게 된다.

1) Lindeberg-Lévy정리

X_i들이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하며 $\infty > Var(X_i) > 0$이다.[1]

2) Lapunov정리

X_i들은 독립적이지만 꼭 동일한 분포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E(X_i^3)$은 모든 i에 대해서 존재한다.[2]

3) Erdős와 Renyi의 정리

X_i들은 독립적으로 분포하지도, 동일한 분포를 갖지도 않는다. 그러나 N개의 크기를 가진 유한 모집단으로 부터의 비복원 방법에 의한 연속적 추출이다. 여기서 N은 2n보다 크다.[3]

$$\frac{1}{S_n^{2+\delta}}\sum_{k=1}^{n} E(|X_k-\mu_k|^{2+\delta})\to 0 \text{이다.}$$

($\delta > 0$ 대해서)

실제에 있어서 더해진 확률변수들의 수는 무한대로 접근해 갈 수 없다. 그러나 중심극한정리의 값은 이 정리가 만족되는 상황에서, 정규접근이(Normal approximation) 보통 표본크기 n이 '크게'되는 한 '타당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표현된 '타당하게'그리고 '크게'등의 용어는 다소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Ⅲ. 정규성 검정

1. 정규성검정의 목적

비록 정규성으로 부터의 약간의 이탈이 모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정규성에서 크게 벗어남은 정규성 가정에 의존하는 t나 F통계량 그리고 신뢰구간과 예측구간(Prediction Interval)에 잠재적으로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그 오차(error)들이 정규분포보다 더 꼬리가 두터운 분포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최소자승법에 의한 적합(least square fit)은 소수의 자료에서 더 민감(Sensitive)하게 된다. 그러므로 통계검정의 가정사항조사에서 정규성검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Fisz, 1963, p.197
2) Fisz, 1963, p.203
3) Fisz, 1963, p.523

2. 정규성검정에 관한 제 이론들

2.1 Normal Probability Plot에 의한 정규성검정

정규분포가정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의 하나는 정규확률지에 잔차(residuals)를 그리는 것이다.

즉, 정규분포곡선의 그래프위에 수직규모를 불균등하게 변형시킴으로써 직선의 모양을 갖는 누적정규분포곡선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누적정규분포가 직선이 되게 그려지도록 고안된 그래프지이다.

잔차들을 증가되는 순서로 다음과 같이 배열한다.

$$e_{[1]} < e_{[2]} < \cdots\cdots < e_{[n]}$$

누적분포 $P_i=(i-1/2)/n$, $i=1, 2, 3\cdots\cdots n$에 대해 정규확률지에 $e_{[i]}$들을 그리면 결과로 보여지는 점들은 직선에 근접하게 놓여진다. 그 직선은 보통 극단값들 보다는 중심값들을 중점으로 하여 시각적으로 결정된다. 직선으로 부터의 실질적 이탈은 그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Normal Probability Plot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세워질 때 순위가 매겨진 잔차 $e_{[i]}$는 보통 기대정규값(Expected Normal Value) $\Phi^{-1}[(i-1/2)/n)]$에 대해서 그려진다. 여기서 Φ는 표준화정규누적분포에 대한 표기이다. 이것은 $E(e_{[i]})\simeq \Phi^{-1}[(i-1/2)/n]$이라는 사실을 따른다.

그림 1은 정규확률지에 그려진 누적정규분포곡선을 나타낸다. 다음의 그림 2a는 이상적인 Normal Probability Plot을 나타낸다. 그려진 점들은 직선을 따라 근접하게 놓여져 있다. 그림 2b, c, d와 e는 다른 전형적인 문제들을 나타낸다. 그림 2b는 양 극단의 기울기가 위로 그리고 아래로 가파르게 된 곡선으로써 이 분포의 꼬리가 정규분포보다 너무 두텁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2c는 양 극단이 평평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규분포보다 꼬리가 얇은 분포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그림 2d와 e는 각각 오른쪽과 왼쪽으로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규분포로 부터 뽑혀진 표본들은 정확하게 직선으로 그려질 수 없기 때문에 Normal Probability Plot들의 해석에 대한 경험이 요구되어 진다.

2.2 막대그라프(histogram)에 의한 정규곡선의 적합

주어진 자료에 대한 정규분포적합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위에서 언급한 Normal Probability Plot이외에도 잔차들의 막대그라프를 그려봄으로써 정규성가정을 체크할 수 있다.

주어진 자료와 동일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고 정규분포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적합도를 시각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막대그래프위에 정규분포곡선을 그린다. 그림 3은 적합된 정규곡선(fitted. normal curve)의 막대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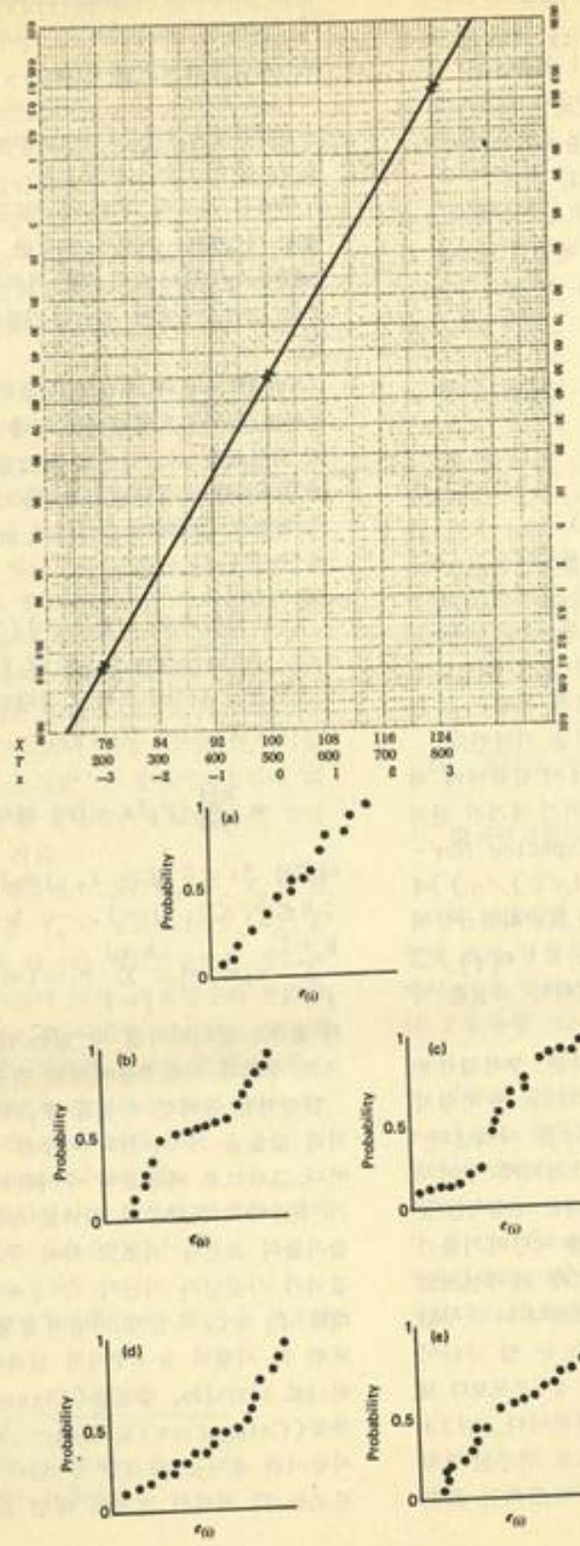
2.3 카이자승 적합도검정(The Chi — Square goodness of fit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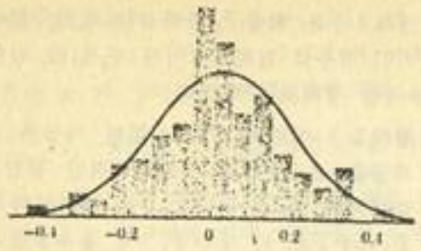
모집단이 다항분포를 가진다면,

$$f(X_1, \cdots, X_k; P_1, \cdots, P_k) = \prod_{j=1}^{k+1} P_j^{x_j} \text{—①이 된다.}$$

여기서 $x_j=0$ 또는 1, $j=1, \cdots, k+1$; $0\le P_j\le 1$, $j=1, \cdots, k+1$; $\sum_{j=1}^{k+1} x_j=1$이고 $\sum_{j=1}^{k+1} P_j=1$이다. (k+1개의 분류로 분리되어질 수 있는 개개의 모집단으로 부터의 복원추출에서의 경우와 같다.)

일반적인 문제는 확률들 P_j가 특정된 수치적 값들을 가지는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들어 주사위를 던진 결과가 6개의 그룹가운데 하나로 분류되어지고 관찰치들의 표본을 기초로 하여 주사위를 던진 결과가 사실인지 아닌지 즉 $j=1, \cdots, 6$에 대해 $P_j=1/6$인지 아닌지 검정하고자 한다. 또한 각 시행이 k+1개의 결과들중의 어떤 하나로 나타나는, 종별들(Classes) 혹은 부류들(Categories)로 불리는 독립, 반복된 시행이란 용어를 생각할 수 있다. ①식에서 분포는 각 시행의 결과에 대한 분포를 가리킨





다. 시행의 결과는 다항변수 $(X_1, \cdots, X_k)$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X_j는 시행의 결과가 j 부류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된다. P_j는 시행의 결과가 j 부류로 나타날 확률이다. 이제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반복하면 다항변수 $(X_1, \cdots, X_k)$의 n개 관찰치를 갖게 된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X_{11}, \cdots, X_{1k}), (X_{21}, \cdots, X_{2k}), \cdots,$
$(X_{n1}, \cdots, X_{nk})$

$N_j = \sum_{i=1}^{n} X_{ij}$로 놓으면 확률변수 N_j는 n번의 시행중 j 부류가 나올 수이다.
여기서 $(N_1, \cdots, N_k)$는 다항분포를 가진다.

귀무가설 $H_0 : P_j = P_j^0$, $j = 1, \cdots, k+1$을 검정하기 위해서 일반화된 우도비(ralized likelihood ratio)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 = L(P_1, \cdots, P_k ; X_{11}, \cdots, X_{1k} \cdots X_{n1}, \cdots, X_{nk}) = \prod_{i=1}^{n} \prod_{j=1}^{k+1} P_j^{X_{ij}}$$

그리고 모수공간(parameter space) $\overline{\Theta}$는 k차 공간을 갖는다. ($k+1$개의 P_j들중 k개가 주어지고 나머지 한개는 $\Sigma P_j = 1$에 의해서 결정된다.) 반면에 $\overline{\Theta}_0$는 한점이다.

L은 $P_j = \sum_{i=1}^{n} X_{ij}/n = n_j/n$일때 $\overline{\Theta}$에서 최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n_j는 확률변수 N_j의 값이다. 그러므로

$$\sup_{\overline{\Theta}} L = 1/n^n \prod_{j=1}^{k+1} n_j^{n_j}$$ 이 된다.

$\overline{\Theta}_0$에 대한 L의 최대값은 $\prod_{j=1}^{k+1} (P_j^0)^{n_j}$이고 일반화된 우도비 $\lambda = n^n \prod_{j=1}^{k+1} (P_j^0/n_j)^{n_j}$이다. 일반화된 우도비검정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ambda < \lambda_0$ 이면 H_0을 기각한다.

여기서 상수 λ_0는 제 I 종 오류(type I error)의 요구된 확률을 주도록 선택된다. 적은 수의 n에 대해 일반화된 우도비의 분포는 λ_0를 결정하기 위하여 바로 표로 만들어 졌다. 큰값 n에 대해 $-2\log\lambda$가 자유도 k의 카이자승분포를 근접하게 가진다는 이론을 사용한다. 카이자승근사값은 n이 작다하더라도 매우 타당하다. H_0을 검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검정은 칼 피어슨(Karl Pearson)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다음의 통계량을 사용한다.

$$Q_k^0 = \sum_{j=1}^{k+1} \frac{(N_j - nP_j^0)^2}{nP_j^0}$$

이 값은 귀무가설이 사실일때 작게 되고 귀무가설이 거짓일때 크게 된다.

여기서 N_j는 j 부류의 결과를 내는 관찰된 시행의 수이고 nP_j^0는 귀무가설이 사실일때의 기대수이다.

$$E[Q_k^0] = \sum_{j=1}^{k+1} \frac{1}{nP_j^0}[\, nP_j(1-P_j) + n^2(P_j - P_j^0)^2 \,]$$

여기서 P_j는 참모수값이다.

H_0이 사실이면 $E[Q_k^0] = \Sigma(1 - P_j^0) = K+1-1 = K$이다. 다음의 정리는 귀무가설 H_0이 사실일때 Q_k^0에 대한 limiting distribution을 제시한다.

〈정리 1〉 어떤 임의의 실험(random experiment)의 가능한 결과들이 $k+1$개의 배타적인 집합들, 말하자면 $A_1, \cdots A_{k+1}$로 나누어졌다고 할때, $P_j = P[A_j]$ $j = 1, \cdots, k+1$로 정의한다. 임의의 실험을 n번 독립적으로 반복함에 있어 $\sum_{j=1}^{k+1} N_j = n$이 되기 위하여 그때 $Q_k =$

$\sum_{j=1}^{k+1}(N_j-nP_j)^2/nP_j$는 n이 무한대로 접근해감에 따라 limiting distribution으로써 k개의 자유도를 갖는 카이자승분포를 갖게 된다.

위에 정리에 대해 $k=1$일때 증명을 보이고자 한다.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독립변수 x, $F_{Q_k}(x)$에 대해 $n\to$ 에 따라 $F_{X^2}(k)(x)$도 수렴(Converge)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F_{Q_k}(\cdot)$은 임의의 양(random quantity) Q_k의 누적분포함수이고 $F_{X^2}(k)(\cdot)$는 k개의 자유도를 갖는 카이자승분포 확률변수의 누적분포함수이다. (그들의 수 $k+1$은 고정된 것이고 표본크기 n은 증가한다.) $k=1$이면 그때

$$Q_k=Q_1=\frac{(N_1-nP_1)^2}{nP_1}+\frac{(N_2-nP_2)^2}{nP_2}$$
$$=\frac{(N_1-nP_1)^2}{nP_1}+\frac{(n-N_1-n+nP_1)^2}{n(1-P_1)}$$
$$=\frac{(N_1-nP_1)^2}{nP_1(1-P_1)}\text{ 이다.}$$

여기서 N_1은 모수n과 P_1의 이항분포를 갖고 $Y_n=(N_1-nP_1)/\sqrt{nP_1(1-P_1)}$ 은 limiting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 정규확률변수의 제곱은 자유도 1의 카이자승분포를 가지므로 $Y_n^2=Q_1$은 자유도 1의 limiting Chi-Square분포를 갖고 그러한 것은 $k=1$에 대한 〈정리 1〉의 증명을 제공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정리 1〉은 귀무가설 $H_0: P_j=P_j^0$, $j=1, \cdots, k+1$이 사실이라고 할때 $Q_k^0=\sum_{j=1}^{k+1}(N_j-nP_j^0)^2/nP_j^0$에 대한 limiting distribution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H_0: P_j=P_j^0$, $j=1, \cdots, k+1$은 유의수준 α하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Q_k^0 > x^2_{1-\alpha}(k)$이면 H_0을 기각한다. $x^2_{1-\alpha}(k)$은 자유도 k를 갖는 카이자승분포의 $(1-\alpha)$번째 quantile이다.

〈정리 1〉은 확률P_j들이 미지의 모수들에 의존적인 경우로 일반화되어질 수 있다. 일반화는 다음 정리로 주어진다.

〈정리 2〉 어떤 임의의 실험의 가능한 결과들을 $k+1$개의 상호배타적인 집합들 말하자면 $A_1, \cdots, A_{k+1}$로 분리한다. $P_j=P[A_j]$, $j=1, \cdots, k+1$로 정의하고 P_j가 $P_j=P_j(\theta_1, \cdots, \theta_r)$, $j=1, \cdots, k+1$, 이 되도록 하는 임의의 실험의 n번 독립적 반복에서 N_j를 $\sum_{j=1}^{k+1}N_j=n$이 되도록 하는 집합A_j $j=1, \cdots, k+1$에 속하는 결과들의 수로 놓는다. $\hat{\Theta}_1, \cdots, \hat{\Theta}_r$은 $N_1, \cdots, N_k$에 기초된 $\theta_1, \cdots, \theta_r$의 BAN추정량들(Best Asymptotically normal estimators)이다. 그때 P_j들에 대한 일반적인 일정조건하에서 $Q_k=\sum_{j=1}^{k+1}(N_j-nP_j)^2/nP_j$는 자유도 $k-r$의 카이자승분포를 하는 limiting distribution을 갖게 된다.

여기서 $P_j=v_j(\hat{\Theta}_1, \cdots, \hat{\Theta}_r)$ $j=1, \cdots, k+1$이다.

〈정리 2〉에 주어진 limiting distribution은 단지 자유도의 갯수에서 〈정리1〉과 다르다. 〈정리 1〉은 k개의 자유도를 〈정리 2〉는 $k-r$개의 자유도를 갖는다. 〈정리 2〉에서의 자유도는 자료로 부터 추정된 각 모수에 대해 하나씩 감소되었다. 이 정리의 결과가 적합도 검정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자 한다.

임의의 표본 $X_1, \cdots, X_n$은 밀도함수 $f(x;\theta_1, \cdots, \theta_r)$로 부터 뽑혀졌다. 여기서 $\theta_1, \cdots, \theta_r$은 미지의 모수들이나 함수f는 알려져 있다. 귀무가설은 x_i가 어떤 $\theta_1, \cdots, \theta_r$에 대해 밀도함수 $f(x:\theta_1, \cdots, \theta_r)$을 가진다는 복합가설이다. 귀무가설은 임의의 표본이 $f(\cdot;\theta_1, \cdots, \theta_r)$에 의해 특정지워진 밀도함수들의 모수집단(parametric family)으로 부터 뽑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변수 x_i의 범위가 $k+1$개의 부분집합, 말하자면 $A_1, \cdots, A_{k+1}$로 나누어 지고 $P_j=P[x_i \in A_j]$이고 N_j는 A_j에 속한 x_i의 수라고 하면 정리2에 따라 $Q_k^1=\sum_{j=1}^{k+1}(N_j-nP_j)^2/nP_j$은 n이 크고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 자유도 $k-r$을 갖는 카이자승분포로 접근하게 된다. 여기서 $P_j=P_j(\hat{\Theta}_1, \cdots, \hat{\Theta}_r)$이고 $\hat{\Theta}_i$은 통계량 $N_1, \cdots N_i, \cdots N_k$로 부터 얻어진 θ_i, $i=1, \cdots, r$의 최우추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이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α하에서 Q_k이 $x^2_{1-\alpha}(k-r)$보다 크게 되면 H_0을 기각한다. 여기서 $x^2_{1-\alpha}(k-r)$은 자유도 $k-r$을 갖는 카이자승분포의$(1-\alpha)$번째 quantile이다. 이러한 검정이 관찰치 $x_1 \cdots, x_n$들이 밀도함수 $f(x;\theta_1, \cdots, \theta_r)$로 부터의 관찰치들이라는 가정과 부합되는지 혹은 적합되는지의 여부를 검정하므로 적합도 검정이라고 부른다.

2.4 콜모고로프-스미노프검정 (Kolmogorov-Smirnov test)

둘이나 그 이상의 표본들이 미지의 같은 분포에 의해 통제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알기 위해 그 표본들의 경험적 분포함수(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함수들의 불일치에 대한 측도가 필요하다. 콜모고로프와 스미노프는 이 함수들간의 닮은 정도의 측도로써 이들 함수들간의 최대 수직거리를 사용한 과정을 발전시켰다.

콜모고로프-스미노프검정에 적용될 수있는 자료는 $F(x)$로 표기되는 미지의 분포함수와 연관된 크기n의 임의의 표본 $X_1, X_2, \cdots, X_n$으로 구성된다. 가정사항은 이 표본이 임의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귀무가설은〈$-\infty$에서 ∞까지의〉모든 x에 대해서 양측검정일 경우 $F^*(x)$를 특정하게 가정된 분포함수로 놓을때

$H_0: F(x)=F^*(x)$

이고 단측검정의 경우에

$H_0: F(x)\geq F^*(x)$

또는

$H_0: F(x)\leq F^*(x)$

이다. 대립가설은 적어도 x의 한 값에 대해 양측검정은

$H_1: F(x)\neq F^*(x)$

이고, 단측검정의 경우는

$H_1: F(x)< F^*(x)$

또는

$H_1: F(x)> F^*(x)$

이다. 검정통계량 D_n은 $S(x)$와 $F^*(x)$ 사이에 최대수직거리로 놓는다. 여기서 $S(x)$는 $X_1, X_2, \cdots, X_n$에 기초를 둔 경험적 분포함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X_1, \cdots, X_n$을 임의의 표본이라고 할때 $S(x)$는 $(-\infty, \infty)$범위를 갖는 각 x에 대해 이 보다 작거나 같은 X_i들에 대한 분수로 나타내어지는 함수이다. 즉

$$C(u)=\begin{cases}0, & u<0\text{일때}\\ 1, & u\geq 0\text{일때}\end{cases}$$

로 정의하고

$$S(x)=\frac{1}{n}\sum_{i=1}^{n}C(x-Xi)$$

가 된다.

그러므로 양측검정인 경우,

$D_n=\sup_x|F^*(x)-S(x)|$

가 되고 단측검정에 대해서는 각각

$D_n^+=\sup_x[F^*(x)-S(x)]$,

$D_n^-=\sup_x[S(x)-F^*(x)]$의 통계량을 사용한다. 이때의 판단기준 (Decision)은 유의수준α하에서 적절한 통계량 D_n, D_n^+ 또는 D^n-가 다음의 표1에 주어진 $W_1-\alpha$ quantile을 넘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 표는 $F^*(x)$가 연속적인 경우 정확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이 quantile들은 보수적인 검정으로 이끌게 된다.

2.5 카이자승검정과 콜모고로프-스미노프 검정의 비교

카이자승적합도검정이 자료들을 불연속화하고, 때때로 집단들로 분류함을 통하여 정보를 손실하는 반면에 콜모고로프-스미노프검정은 직접적으로 개개의 관찰치들을 다룬다. 더구나

이 검정은 매우 작은 표본의 경우에도적용가능하나 카이자승검정은 큰 표본에 대해서 검정통계량의 분포에 대한 좋은 근사치를 제공한다. 반면에 카이자승검정은 자료들로 부터 모수들의 추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콜모고로프-스미노프검정은 이러한 유연성을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콜모고로프-스미노프검정은 분포함수의 연속성을 가정한다. 이것은 콜모고로프-스미노프검정이 좀더 정확한 자료분석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포가 실제 자료가 불연속성인 경우에 콜모고로프-스미노프검정은 귀무가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보수적(Conservative)이 된다.

어느 검정이 더 검정력이 크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 있어서는 콜모고로프-스미노프검정이 카이자승검정보다 검정력이 크다.

〈표 1〉

One-Sided Test	p=.90	.95	.975	.99	.995	p=.90	.95	.975	.99	.995
Two-Sided Test	p=.80	.90	.95	.98	.99	p=.80	.90	.95	.98	.99
n= 1	.900	.950	.975	.990	.995	n=21	.226	.259	.287	.321	.344
2	.684	.776	.842	.900	.929	22	.221	.253	.281	.314	.377
3	.565	.636	.708	.785	.829	23	.216	.247	.275	.307	.330
4	.493	.565	.624	.689	.734	24	.212	.242	.269	.301	.323
5	.447	.509	.563	.627	.669	25	.208	.238	.264	.295	.317
6	.410	.468	.519	.577	.617	26	.204	.233	.259	.290	.311
7	.381	.436	.483	.538	.576	27	.200	.229	.254	.284	.305
8	.358	.410	.454	.507	.542	28	.197	.225	.250	.279	.300
9	.339	.387	.430	.480	.513	29	.193	.221	.246	.275	.295
10	.323	.369	.409	.457	.489	30	.190	.218	.242	.270	.290
11	.308	.352	.391	.437	.468	31	.187	.214	.238	.266	.285
12	.296	.338	.375	.419	.449	32	.184	.211	.234	.262	.281
13	.285	.325	.361	.404	.432	33	.182	.208	.231	.258	.277
14	.275	.314	.349	.390	.418	34	.179	.205	.227	.254	.273
15	.266	.304	.338	.377	.404	35	.177	.202	.224	.251	.269
16	.258	.295	.327	.366	.392	36	.174	.199	.221	.247	.265
17	.250	.286	.318	.355	.381	37	.172	.196	.218	.244	.262
18	.244	.279	.309	.346	.371	38	.170	.194	.215	.241	.258
19	.237	.271	.301	.337	.361	39	.168	.191	.213	.238	.255
20	.232	.265	.294	.329	.352	40	.165	.189	.210	.235	.252
Approximation for n > 40			$\frac{1.07}{\sqrt{n}}$	$\frac{1.22}{\sqrt{n}}$	$\frac{1.36}{\sqrt{n}}$	$\frac{1.52}{\sqrt{n}}$	$\frac{1.63}{\sqrt{n}}$			

콜모고로프검정통계량의 quantiles

Source. Adapted from Table of Miller(1956)

2.6 릴리휘스 검정(Lilliefors test for Normality)

콜모고로프-스미노프검정은 가설로 세워진 분포함수가 완전하게 특정지워질 때만, 즉 표본에서 추정되어져야 할 미지의 모수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되어 진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검정은 보수적(Conservative)이 된다. 카이자승검정은 모수들에 대해 자료로부터 추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이 있다. 각 추정된 모수들에 대해 간단하게 자유도 하나씩을 제외하면 된다. 그러나 전술된 바와 같이 카이자승검정은 자료화 그룹화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그 검정통계량의 분포는 단지 근사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때때로 이 검정은 검정력이 좋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적합도 검정이 특별히, 자주 검정될 분포들에 대해 구해진다. 콜모고로프-스미노프검정은 모수들이 자료로부터 추정되어져야 할 몇몇 상황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수정되어 왔다. 실제로 검정통계량은 바뀌지 않은 채로나 임계치에 대한 다른 표들이 사용된다.

릴리휘스검정이 가능한 자료들은 $F(x)$로 표기되는 알려지지 않은 분포함수와 연관된 크기 n인 임의의 표본 X_1, X_2, …, X_n으로 구성된다. μ에 대한 추정치로써의 표본평균 $\bar{X}$를 계산하면

$$\bar{X}=1/n\sum_{i=1}^{n} X_i$$

이다. 그리고 σ에 대한 추정치로써의 표본분산 S는

$$S=\sqrt{\frac{1}{n-1}\sum_{i=1}^{n}(Xi-\bar{X})^2}$$

로 계산한다. 표준화된 표본값들 Z_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Z_i=(X_i-\bar{X})/S \qquad i=1, \cdots, n$$

검정통계량은 원래의 임의의 표본대신에 Z_i들로 부터 계산된 것이다.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 있다.

H_0 : 임의의 표본은 특정되지않은 (unspecified) 평균과 분산을 갖는 정규분포를 한다.

H_1 : X_i들의 분포함수는 정규분포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검정통계량은 X_i들의 경험적 분포함수와 평균$\bar{X}$와 표준오차S를 갖는 콜모고로프-스미노프 양측검정통계량이다. 그러나 다음에 계산된 검정통계량은 좀더 간편하다. 표준화된 정규분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F^*(x)$로 정의한다. 또한 정규화된 표본 Z_i들의 경험적 분포함수의 그래프를 $F^*(x)$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좌표를 이용하여 그린다.

즉, 릴리휘스검정통계량 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sup_x |F^*(x)-S(x)|$$

이 검정통계량 T와 콜모고로프-스미노프검정통계량간의 차이는 콜모고로프-스미노프검정에서 경험적 분포함수 $S(x)$가 원래의 수정되지 않은 관찰치에 기초한 반면에 위의 경험적 분포함수 $S(x)$는 정규화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이다. 판단설정기준(decision rule)은 유의 수준 α하에서 검정통계량 T가 표 2에서 주어진 $1-\alpha$ quantile을 넘으면 귀무가설 H_0을 기각한다.

2.7 쉐피로-윌크검정 (The Shapiro-Wilk test)

먼저 자료들은 어떤 미지의 분포함수 $F(x)$를 가진 표본크기 n의 임의의 표본 X_1, X_2 …, X_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검정의 사용시 표본이 임의표본이어야 한다는 가정사항이 필요하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 있다.

H_0 : $F(x)$는 확정되지 않은 평균과 분산을 가진 정규분포이다.

H_1 : $F(x)$는 정규분포가 아니다.

이에 따른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먼저 분모에 D를 먼저 계산하면

$$D=\sum_{i=1}^{n}(X_i-\bar{X})^2$$

이다. 여기서 $\bar{X}$는 표본의 평균이다. 그리고 표본을 작은 것에서 부터 큰 것으로 순위를 매긴다.

$$X^{(1)} \le X^{(2)} \le \cdots\cdots \le X^{(n)}$$

$X^{(i)}$는 i번째 순위통계량으로 표기한다. 다음에 관찰된 표본크기 n에 대해서 표3을 통해서 계수 a_1, a_2, …, a_k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k는 n/2에 근접한다. 이때의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T=\frac{1}{b}\left[\sum_{i=1}^{k} a_i (X^{(n-i+1)}-X^{(i)})\right]^2$$

판단설정기준은 표4에 의해 유의수준이하에서 검정통계량 T의 값이 α quantile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쉐피로-윌크검정의 유용한 양상은 몇개의 독립적인 적합도 검정들이 하나의 전체적 정규성검정으로 결합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능한 몇개의 다른 모집단들로 부터 뽑혀진 몇개의 소규모 표본들이 정규성가정에 대한 가설을 기각하기에 불충분할 때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이 결합된 증명은 정규성에 대한 가정을 논박하기에 충분하다.

〈표 2〉

Sample size n =	p = .80	.85	.90	.95	.99
4	.300	.319	.352	.381	.417
5	.285	.299	.315	.337	.405
6	.265	.277	.294	.319	.364
7	.247	.258	.276	.300	.348
8	.233	.244	.261	.285	.331
9	.223	.233	.249	.271	.311
10	.215	.224	.239	.258	.294
11	.206	.217	.230	.249	.284
12	.199	.212	.223	.242	.275
13	.190	.202	.214	.234	.268
14	.183	.194	.207	.227	.261
15	.177	.187	.201	.220	.257
16	.173	.182	.195	.213	.250
17	.169	.177	.189	.206	.245
18	.166	.173	.184	.200	.239
19	.163	.169	.179	.195	.235
20	.160	.166	.174	.190	.231
25	.142	.147	.158	.173	.200
30	.131	.136	.144	.161	.187
Over 30	.736/$\sqrt{n}$	.768/$\sqrt{n}$	.805/$\sqrt{n}$	.886/$\sqrt{n}$	1.031/$\sqrt{n}$

Quan tiles of the Lilliefors test Statistic for normality

〈표 4〉

i \ n	2	3	4	5	6	7	8	9	10
1	0.7071	0.7071	0.6872	0.6646	0.6431	0.6233	0.6052	0.5888	0.5739
2	-	0.0000	0.1667	0.2413	0.2806	0.3031	0.3164	0.3244	0.3291
3	-	-	-	0.0000	0.0875	0.1401	0.1743	0.1976	0.2141
4	-	-	-	-	-	0.0000	0.0561	0.0947	0.1224
5	-	-	-	-	-	-	-	0.0000	0.0399

i \ n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0.5601	0.5475	0.5359	0.5251	0.5150	0.5056	0.4968	0.4886	0.4808	0.4734
2	0.3315	0.3325	0.3325	0.3318	0.3306	0.3290	0.3273	0.3253	0.3232	0.3211
3	0.2260	0.2347	0.2412	0.2460	0.2495	0.2521	0.2540	0.2533	0.2561	0.2565
4	0.1429	0.1586	0.1707	0.1802	0.1878	0.1939	0.1988	0.2027	0.2059	0.2085
5	0.0695	0.0922	0.1099	0.1240	0.1353	0.1447	0.1524	0.1587	0.1641	0.1685
6	0.0000	0.0303	0.0539	0.0727	0.0880	0.1005	0.1109	0.1197	0.1271	0.1334
7	-	-	0.0000	0.0240	0.0433	0.0593	0.0725	0.0837	0.0932	0.1013
8	-	-	-	-	0.0000	0.0196	0.0359	0.0496	0.0612	0.0711
9	-	-	-	-	-	-	0.0000	0.0163	0.0303	0.0422
10	-	-	-	-	-	-	-	-	0.0000	0.0140

Coefficients for the Shapiro - Wilk test

Source. Reprinted from person and Hartley (1972), with permission from Biometrika Trustees

〈표 5〉

n	0.01	0.02	0.05	0.10	0.50	0.90	0.95	0.98	0.99
3	0.753	0.756	0.767	0.789	0.959	0.998	0.999	1.000	1.000
4	0.687	0.707	0.748	0.792	0.935	0.987	0.992	0.996	0.997
5	0.686	0.715	0.762	0.806	0.927	0.979	0.986	0.991	0.993
6	0.713	0.743	0.788	0.826	0.927	0.974	0.981	0.986	0.989
7	0.730	0.760	0.803	0.838	0.928	0.972	0.979	0.985	0.988
8	0.749	0.778	0.818	0.851	0.932	0.972	0.978	0.984	0.987
9	0.764	0.791	0.829	0.859	0.935	0.972	0.978	0.984	0.986
10	0.781	0.806	0.842	0.869	0.938	0.972	0.978	0.983	0.986
11	0.792	0.817	0.850	0.876	0.940	0.973	0.979	0.984	0.986
12	0.805	0.828	0.859	0.883	0.943	0.973	0.979	0.984	0.986
13	0.814	0.837	0.866	0.889	0.945	0.974	0.979	0.984	0.986
14	0.825	0.846	0.874	0.895	0.947	0.975	0.980	0.984	0.986
15	0.835	0.855	0.881	0.901	0.950	0.975	0.980	0.984	0.987
16	0.844	0.863	0.887	0.906	0.952	0.976	0.981	0.985	0.987
17	0.851	0.869	0.892	0.910	0.954	0.977	0.981	0.985	0.987
18	0.858	0.874	0.897	0.914	0.956	0.978	0.982	0.986	0.988
19	0.863	0.879	0.901	0.917	0.957	0.978	0.982	0.986	0.988
20	0.868	0.884	0.905	0.920	0.959	0.979	0.983	0.986	0.988

Quantile of the Shapiro - Wilk test - Statistic

N. 실제 자료를 이용한 정규성 검정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키, 몸무게, 콜레스테롤의 양 등을 조사한 자료[1]를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 정규성 검정을 실시해 보았다. 〈그림 1〉은 Chapman자료중 콜레스테롤변수에 대한 Normal Probability Plot을 컴퓨터로 뽑아본 것이다. Normal Probability Plot에 의한 정규성 검정은 다소 주관적 의미를 담고 있으나 〈그림 1〉에서 볼 때 거의 직선에 가까운 모양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자료가 정규분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는 Chapman자료중 몸무게에 대한 Normal Probability Plot을 그려본 것으

로 직선에서 약간의 이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은 콜레스테롤자료의정규화된 잔차들에 대한 막대그래프를 그려본 것으로 '* '은 각 수준에서의 빈도수를 ' · '은 정규곡선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때 이 자료는 정규곡선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 〉은 콜모고로프 - 스미노프 검정을 SPSSX로 풀아본 것으로 평균과 표본분산은 추정치를 사용했다. $F^*(x)$를 정규분포한다고 하면

$H_0 : F(x)=F^*(x)$

$H_1 : F(x)\neq F^*(x)$

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이 검정은 양측검정이므로 검정통계량 T의 값은 0.07457이고 이에 해당하는 P값은 0.216이므로 유의수준 $\alpha=0.05$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자료는 정규분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정규분포의 특성과 여러 형태로 표현되어진 중심극한정리 그리고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많은 통계적 절차에서 선행되어져야 할 정규성 검정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정규성검정에 관한 이론들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카이자승적합도 검정은 기본적으로 명명형자료의 적합도를 검정하는 절차이고, 콜모고로프 - 스미노프 검정은 순위형이나 연속형 자료의 적합도를 검정하는절차로 개발되었다. 또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적합도 검정을 했을 때 콜모고로프 - 스미노프 검정은 모수가 완전히 알려졌을 때 사용되어야 한다. 물론 모수가 자료로 부터 추정될 경우에도 콜모고로프 - 스미노프류의검정을 할 수 있지만 검정통계량의 분포가 틀려지게 되며 이런 경우는 릴리휘스검정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 반면에 카이자승 적합도 검정을 할 경우 자료로 부터 정규분포 모수가 추정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나 연속형 자료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야 하는 자의성이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간의 수를 몇개로 하느냐에 따라 검정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콜모고로프 - 스미노프 검정은 소표본에서도 정확한 분포에 기초되어 기각력이 설정되는 반면 카이자승 적합도 검정은 대표본 분포로 조사하여 기각역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합도 검정문제에서 소표본일 경우는 콜모고로프 - 스미노프 검정이 카이자승 적합도 검정보다 더 선호되며 쉐피로 - 윌크 검정은 몇개의 결합된 소표본에 대해 높은 검정력을 보이고 있다.

참 고 문 헌

김병수, 안윤기, 윤기중, 윤상운. SPSS를 이용한 통계자료분석. 서울 : 박영사, 1987.

엄종석. 정규성 검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윤기중. 통계학. 서울 : 법문사, 1985.

Conover, W. J. . Practical Nonparametric Statistics.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80.

Dixon, Wilfrid J., Massey, Frank J.. Introduction to Statistical Analysis. New York : McGraw - Hill, 1983.

Mood, Alexander M. .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Statics. Auckland : McGraw-Hill, 1974.

Rohatgi, V. K. . An Introduction to the Probability Theory and Mathematical Statistics.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6.

第三世界 不等価交換論에 대한 一考察

서 병 기

(경제학과 88졸업)

목 차

Ⅰ. 序論

Ⅱ. 從屬理論의 理論構造

Ⅲ. Emmanuel과 Amin의 不等價交換論

Ⅳ. E－A의 不等價交換論에 대한 비판

Ⅴ. 從屬理論의 意義와 限界

Ⅰ. 序 論

기나긴 민족해방운동의 열기 위에서 제2차 대전의 종결을 계기로 식민지 상태로부터 독립한 Asia, Africa와 Latin America의 이른바 제3세계[1]제국은 政治的 自主·經濟的 自立을 위해 국제적으로는 독립적인 정치기구(예컨데 비동맹회의)를 결성하여 대외적인 政治的 同質性을 표방하여 제1세계의 군사적·경제적 위협에 대처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近代化'에 전력투구하였다. 이러한 近代化 과정에서 제3세계 자체의 發展論理가 존재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서구발전이론을 비판없이 적용한 결과 식민지적 구조의 온존,선진국과의 격차확대, 경제적 대외의존성, 불평등 구조의 심화등 복잡한 사회문제가 나타났다. 이에따라 民族主義·民衆主義(populism)라는 ideology적 요소에 의한 계급연합이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近代化理論에 입각한 제3세계발전Model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제3세계 사회과학계 일각에서 나타났으며 이들은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이라는 이름으로 제3세계 자체의 發展論理를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2]

1) 제3세계(third world)란 용어가 사용되는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경제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부 제국가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러한 정의는 P. Jalee가 그의책〈The pillage of the Third World〉에서 사용한 것으로 세계체제를 자본주의·사회주의집단으로 양분하고 자본주의 집단을 제국주의 지대와 제3세계로 구분한다. 이하에서는 Latin America를 L.A.로 표기한다.

2) J.Petras가 분류한 자본축적을 위한 계급연합의 유형중 대중주의적 모델(national popular model)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본가, 쁘띠 부르조아, 노동자, 농민으로 이루어지는 민족적·대중주의적 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국유화 등을 통해 민족적 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족경제의 잉여를 재투자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다. 이러한 학문적 노력은 주로 L·A(Latin-America) 경제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1965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L.A. 경제학자대회의 獨自性 宣言으로 까지 나타났다.

"L.A. 및 기타 後進國에 맞는 社會理論이 가능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것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러한 理論은 외국의 현실에 입각한 接近方式·理論·方法論등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L.A.의 발전문제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理論이 필요하다.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에서 정립된 發展理論은 L.A.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3)

L.A. 경제학자의 자주화운동은 다음해인 1966년 9월 Ande'r Gunder Frank의 「低開發의 開發」이란 논문이 출간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 Frank는 남미의 정체성을 低發展(under development)으로 자각하며 그 원인을 외부경제에의 종속에서 추구하는 그 핵심적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데,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세계 자본주의발전에 있어서의 統一性과 不均等性의 모순구조를 파악하는 일련의 社會分析理論이 從屬理論(dependency theory)이라 불린다.

여기서 L.A. 상황에 기반을 둔 從屬理論은 近代化運動의 실패라고 하는 제3세계일반의 상황을 배경로 제3세계 低發展의 실상에 근접하는 제3세계 이론으로서의 일반성을 획득한다. 從屬理論의 기본시각은 세계사를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 사이에 일어나는 릴레이 경주와 같은 것으로 파악한 과거 독일 역사학파의 경제발전론[4]과 W.W. Rostow의 경제발전의 제단계설과는 달리 세계 자본주의체제는 그것을 구성하는 두 범주인 中心과 周邊間의 有機的 結合體로서, 이 결합의 방식에 의해 中心과 周邊의 社會·經濟構造의 性格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低開發'의 원인을 中心에 의해 經濟剩餘가 독점되는 세계자본주의체계에서 찾는데 있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 발전해 온 從屬理論을 종래의 서구사회에서 형성·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의 주요개념 및 방법론까지도 제3세계의 주체적 입장에서 새롭게 개념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제3세계의 經濟發展과 社會變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종래의 제3세계 近代化 및 經濟發展論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발전Model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글의 목적은 ①보다 급진적인 경향을 띤 이론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경제학도로서는 이것을 선진적 구호로 사용하기 이전에 정확한 理論構造와 理論의 論理的 妥當性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從屬理論의 分析視覺과 方法論(理論構造)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②周邊의 低開發과 從屬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계기의 하나로서 周邊에서 中心에로의 價値移轉mechanism중 기존의 제국주의론 및 식민지경제론[5]에서는 무시되어온국제상품교환 과정에서의 不等價交換을 통한 價値收奪에 대한 Emmanuel과 Amin의 견해를 소개하고 다른 연구자의 평가에 기초하여 그러한 견해를 비판하는데 있다.

이하의 논술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다양한 從屬學派의 分派中 가장 큰 흐름을 이루는 A.G.Frank, T.Dos Santos, S.Amin – 이들은 J.F.Petras와 K.Trachte의 분류[6]에 따르면 A.Emmanuel과 I.Wallerstein과 함께 세계체계접근(World System Approaches)을 시도한 – 등의 分析視覺과 理論構造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低開發과 從屬을 재생산하는 관건적 변수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체계 내에서의 周邊으로부터 中心에로의 價値移轉의 중요한 mechanism인 不等價交換에 대한 Emmanuel과 Amin의 견해를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勞動價値論의 價値法則에 기초하여 Emmanuel과 Amin의 不等價交換에 대한 견해를 다른 연구자의 評價에 기초하여 分析·排判한다. 제5장에서는 세계자본주의의 總體的 構造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低開發을 이해하려는 從屬理論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3) Ian Roxborough, 「종속이란 무엇인가」 박종수譯, (서울: 청아, 1980) p.5에서 재인용
4) 예를 들면 Friedrich List의 「미개→목축→농업→농·공업→농·공·상업」의 5단계론과 Karl Bucher의 「가족경제→도시경제→국민경제」의 3단계론 등이다.
5) 여기서는 자본수출을 통한 초과이윤만을 강조하고 부등가교환을 통한 수탈과정은 경험적·현상분석적인 서술의 백락에서만 언급하였다.
6) 종속이론의 다양한 이론적 경향을 이들은 구조주의적 접근(structural approaches; Galthung Prebish)과 세계체제 접근, 그리고 계급분석(class analysis ; Sklar)으로 구분한다.

Ⅱ. 從屬理論의 理論構造

從屬理論의 대전제는 세계자본주의체제를 각 국민경제의 산술적인 총합 이상의 獨自的인 運動法則을 가진 단일의 實體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分析視覺의 선구인 A.G.Frank는 당시 통념화되어 있던 二重社會論(the theory of dual society)에서 그 정점에 도달한 부르조아적 近代化論과 일국사회주의적 Marxist의 2단계혁명론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L.A.는 16C초기 이래로 資本主義社會였다고 파악하고 低開發을 세계사의 흐름에서 봉건적 잔재나 자본의 부족때문이 아닌, 낳았던 바로 그 과정, 즉 資本主義 자체의 發展過程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며 아직도 계속만들어지고 있다[7]고 파악하여 低開發이 世界資本主義 發展의 하나의 적극적인 측면임을 밝혔다. 또한 Frank는 칠레 국민경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世界資本主義體制를 구성하고 있는 先進國과 低開發國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資本主義의 3가지 內的矛盾을 지적하고, 이것이 低開發의 원인이며 구체적 기제라고 제시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經濟剩餘[8]의 착취와 수용의 모순'으로 經濟剩餘의 獨占的 構造로 정형화되는 世界資本主義體制 內에서는 국가간의 착취관계가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 中心의 中心에서 周邊의 周邊으로까지 적용된다고 파악하여 이러한 국가간의 착취관계를 經濟剩餘를 周邊部에서 中心部로 移轉시키는 mechanism으로 보고 현재의 低開發의 原因이라고 했다. 따라서 Frank에게 있어서는, 周邊部의 性格은 기본적으로 외부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社會構造 變動의 原動力도 생산관계가 아니라 외부적 관계이다. 이 점이 Marx와는 근본적으로 다른점이다. 둘째, 中心과 周邊은 世界資本主義가 안고 있는 內部矛盾의 필연적 결과이자 동시적 표현으로 周邊部로부터 中心部로의 지속적인 잉여유출의 결과로써 中心과 周邊의 兩極化 矛盾이 일어난다. 이것은 資本主義 發展에 있어 본질적인 것이다. 세째, 中心部와 周邊部의 兩極分化의 資本主義體係는 16C이후 변화없이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는 '變化의 連續性의 矛盾'으로 위의 두가지 矛盾이 資本主義의 本質임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第3世界의 近代史는 先進資本主義國家의 商品市場에 편입되어온 과정이며 國內의 階級構造의 變動에 의한 社會經濟的 發展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Frank의 주장을 요약하면, 低開發國의 內部的 社會構造가 世界資本主義의 支配라는 外的 條件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므로 低開發國 社會構造의 연구는 일차적으로 中心部와의 외부적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方法論에 입각하여, 周邊은 世界資本主義體制로 편입된 이래 世界資本主義體制의 일부이고, 따라서 二重構造가 아니라 완전한 資本主義이며 世界資本主義體制는 經

7) A.G.Frank 〈저개발의 개발〉 최완규譯 (서울: 세발, 1980).p 17.
8) 경제잉여란 P.A.Baran과 P.M.Sweezy에 의하면 어떤 사회가 생산한 상품가격과 실제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비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잉여의 규모가 그 사회의 생산성과 富의 지수이다. P.A. Baran & P.M.Sweezy, 〈Monopoly Capital〉 (Harmonds 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 1966) p.23. 자세한 설명은 P.A.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N.Y.MRP.1957)의 2장을 참조하시오.

두드러진 結合(articulated cosbinatior)이 周邊部 國民經濟의 生産構造이며, ②와④의 두드러진 結合이 中心部 國民經濟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周邊部 社會構成體를 특징짓는 분절의 특색은 분절의 생성과 발전의 外部指向性으로 인해 周邊部의 經濟構造가 獨自的인 再生産構造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周邊部는 中心部에게 본원적 축적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外部指向性—國內市場에 기반을 두지 않고 外部市場에 의존하는 經濟—때문에 國民的 分業에 있어서 工部門(生産材生産部門)과 Ⅱ部門(大衆消費材 生産部門)의 결여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周邊資本主義는 ①部門間 生産性의 不均衡 ②部門間 相互關聯性의 결여(disarticulation) 및 ③外國資本의 지배라고하는 經濟構造의 왜곡과 한계화[17]와 같은 內部構造를 갖게 된다. Amin에 의하면 위와같은 國民經濟의 內部構造를 갖는 周邊部는 그 다양한 기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18] ①國民的 部門(national sector)에 있어서의 '農業資本主義'의 우세 ②帝國主義的 資本의 지배와 그에 예속하는 지방적(주로 상인적 매판적 성격을 가진)資本의 창조 ③國家資本主義的· 관료자본주의적 발전의 경향 ④불완전하고 특수한 성격의 proletariat화의 제현상=한계화. 이 네가지 일반적 특징은 바로 周邊資本主義의 移行과 發展의 特殊性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며, 이는 제3세계제국의 國民經濟의 파행성과 종속성을 잘 표현해 주는 것으로 크게 (半)植民地 혹은 新植民地 性格과 半封建的 性格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Amin의 周邊資本主義論의 업적은 現代世界의 기본모순은 中心 대 周邊의 矛盾이 아니고 帝國主義 獨占資本 대 周邊民衆間의 矛盾이라고 전제하고 周邊의 從屬的發展을 周邊社會構成 內部의 생산제양식의 분절적 접합과 세계체제와의 접합이라는 두가지 수준에서의 결합에 의해 규정함으로써 低開發의 本質이 周邊資本主義 社會構成의 歷史的 性格에 의해 드러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밖에도 從屬理論의 범주에 포함되는 주장이 많이 있지만 개괄적인 從屬理論의 分析視覺과 理論構造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글의 범위를 벗어남으로 생략하기로 한다.

Ⅲ. Emmanuel과 Amin의 不等價交換論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世界的 規模에서의 축적을 中心의 發展과 周邊의 低開發의 發展의 상호규정적 擴大再生産 과정이며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世界的 規模에서의 본원적 축적과정, 즉 中心部에 의한 周邊部의 經濟剩餘의 收奪過程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經濟剩餘收奪mechanism은 무엇인가? 이것은 크게 資本輸出을 통한 收奪과 貿易을 통한 收奪,두가지로 구분된다. 물론 中心에 의한 周邊收奪의 구체적 현실은, 특히 收奪의 帝國主義 段階에 있어서는 양 收奪過程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帝國主義論 및 植民地經濟論에서는 資本輸出을 통한 收奪만 강조되었을 뿐 2차大戰 이후의 經濟剩餘 收奪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貿易을 통한 經濟剩餘 收奪은 무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世界資本主義體制를 商品 및 資本의 世界的 性格(자유로운 국제이동성)과 勞動의 非移動性으로 추상화하고, 이에 기초해서 中心—周邊間의 價値移轉問題의 分析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이것이 프랑스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論爭이다.

이 논쟁에 참여한 학자로는 A.Emmanuel을 필두로 S.Amin, C.Palloix, J.Saigal, O.Braun 등이 있는데, 각각 不等價交換 槪念의 정의가 다르고 理論構成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보이긴 하지만 모두 국제적 평균이윤율을 근거로 해서 不等價交換을 分析한다는 점에서 「프랑스파」 혹은 國際的生産價格理論이라 불리워진다.

이 章에서는 처음으로 貿易을 통한 周邊收奪의 mechanism을 정식화한 Emmanuel과 그와 동일선상에서 그의 결점을 비판·보완한 Amin의 不等價交換論을 소개하겠다.

A.Emmanuel은 不等價交換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不等價交換은 剩餘價値率이 制度的으로 상이한 지역들 사이에서 이윤율의 균등화를 통해 형성된 均衡價格간의 비율이다. 여기에서 '制度的으로'라는 용어는 이러한 剩餘價値率이 어떤 이유에서든 要素市場에서 競爭的 均等化作用으로부터 보호되어 相對價格과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19] 즉 Emmanuel은 勞動도 국제적으로 자유이동이 가능했더라면(국제적으로 剩餘價値率도均等化될 수 있다면), 형성될 가상적인 國際的生産價格과 勞動의 非移動性에 기인한 국제적 임금격차의 존재하에서 형성된 現實的인 國際的 生産價格間의 差異로 그가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不等價交換을 정의했다. 이러한 不等價交換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Emmanuel은 資本의 完全競爭을 인정하면서도 賃金 및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차이로 특징지워지는 獨自的인 不等價交換 理論을 구출하는데 그의 理論構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世界資本主義體制에서는 資本은 자유로운 移動이 가능하지만 국경을 넘어서는 勞動의 移動에는 제도적인 장애가 따른다. 國際交易에 있어 勞動은 國際間의 非移動性으로 인해 각국간의 剩餘價値率이 달리 나타나지만 資本은 國際間의 자유로운 移動이 가능하므로 競爭을 통해 이윤율이 균등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이윤율의 균등화 과정—需要와 供給의 變化에 의해 均衡價格의 성립—에서 價値와 均衡價格間의 거리가 생기는데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 이하에서는 O.C.C.로 표기—가 社會的 平均보다 낮은 부문의 商品의 경우 均衡價格이 價値보다 낮게 나타나 타부문의 상품과 交換될 경우에 타부문으로의 剩餘流出이 발생한다. ②각국의 賃金은 독립변수이어서 國際貿易에 의해서 이윤율이 균등화된다고 할지라도 각 국간의 임금격차는 계속 존재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등하더라도 임금격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不等價交換이 발생한다.

이것을 不等價交換이 일어나는 두가지 경우 즉 交易相對國間의 O.C.C.만 다른 경우와 임금격차가 존재하는(잉여가치율만 다른)경우를 비교해서 살펴보자.

먼저 〈표1〉[20]은 A.B양국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조건을 동일하다고 보고 O.C.C.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같은 양의 直接·間接勞動을 포함한 A와 B國의 生産物이 等價로 交換되지 않고 190 B=150 A로 交換된다.

(즉 $\frac{170}{170} > \frac{150}{190}$)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단위의 剩餘價値가 B國에서 A國으로 移轉된다. 이렇게 두 國家間의 O.C.C.의 상위의

---

16) 湯淺赳男, 第三世界 經濟構造, 조용범譯, (서울:풀빛, 1981) pp.78~79.
S.Amin은 1973년의 논문「현대세계의 축적과 경제사회발전의 이론적 모델」에서 세계자본주의의 분업구조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중심부 분절 ← ① 수출품 생산부문, ② 대중소비재 생산부문, ③ 사치소비재 생산부문 → 주변부 분절
④ 생산재 생산부문 ←

17) S.Amin(1976)pp.201~206. 한계화 혹은 빈곤화의 mechanism의 하나로서 저임금과 과잉인구를 들고 있다.

18) S.Amin (1976) p.333 이하 참조.

19) A.Emmanuel, Unequal Exchange : A.Study of the Imperialism of Trade (N.Y.: MRP, pp.61~64) 여기서 Emmanuel은 "상품시장의 불완전경쟁의 결과로 가격에서의 어떠한 변화에 관계없이"라는 술어를 덧붙였다.

20) A.Emmanuel, Unequal Exchange : A Study of the Imperialism of Trade (N.Y.:MRP) p.59.

産諸力 發展水準과 勞動力價值사이의 均衡은 周邊構成體의 水準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통합되어 있는 世界體制의 수준에서 발전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周邊에 있어서의 現代的 技術(높은 생산성)과 低賃金의 공존이라는 특수한 현상에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min은 Emmanuel의 不等價交換論이 資本主義 生産樣式間의 交易만을 다룬 것이라고 비판하고 資本主義 生産樣式과 前資本主義 生産樣式間의 不等價交換의 문제를 제거, 설명하고 있다.[28]

資本主義 生産樣式이 前資本主義와 관계를 가질 때는 資本의 본원적 축적의 mechanism — 不等價交換 —의 결과로써 前資本主義 生産樣式에서 資本主義 生産樣式에로의 價值移轉이 발생하는데 이 mechanism은 자본주의 前史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즉, 不等價交換을 資本主義 生産樣式과 前資本主義 生産樣式을 지속적으로 결합시키는 기본적인 계기로 생각했다.

Emmanuel에 대한 위의 세가지 비판을 행한 후에 Amin은 不等價交換을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 勞動에 대한 보수의 차이가 生産性의 차이보다 더 클 때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29] 그리고 이러한 國際的 不等價交換이 세계자본주의의 獨占段階(帝國主義 段階)에서는 中心 — 周邊계관계의 결합을 매개시키는 중요한 mechanism 이라고 보았다.

Amin은 그의 不等價交換에 대한 견해에 입각하여 周邊資本主義諸國은 世界市場과의 관계를 단절해야만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30]

N. E-A의 不等價交換論에 대한 비판

앞에서 살펴본 E-A의 不等價交換論은 경제잉여의 개념에 의해 추상적으로 이해되었던 中心의 開發과 周邊의 低開發이라는 세계체제의 양극적 발전과정과 세계규모의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세계가치의 국민적 가치에 대한 우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不等價交換이란 구체적인 mechanism을 밝혀내어 貿易을 통한 價值(잉여가치가 아닌) 移轉을 직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통일적이고 보다 명확한 이해에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世界資本主義의 周邊의 低開發의 문제의 해명이라는 문제의식은 일국의 경계를 넘어 世界資本主義에 수정되어 관철되는 價值法則에 입각한 총체적 분석에 의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E-A의 不等價交換論은 지나치게 유통관계(가격기구)를 통한 價值移轉의 차원에 집중하여 오히려 기존의 자원배분 및 소유관계의 효율적 재생산을 촉진하는 도구인 價格機構에 의존하여[31] 低開發의 문제를 규명하려는 아이러니를 보인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취약점을 안고있는 E-A의 不等價交換論을 체계적으로 검토·비판한다.

먼저 E-A의 理論構造에서는 전제가 非현실적이다. 국민경제에서는 價值法則의 작용이 국민적 평균이윤율 및 국민적 생산가격체계를 성립시키지만 이러한 價值法則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적 경제관계에 적용될 때는 적당한 수정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E-A는 교역상대국의 이윤율이 상이할 경우, 資本의 論理에 의해서 높은 이윤율을 찾아 資本이 이동함에 따라 국제적 평균이윤율이 성립한다는 國民經濟內의 價值法則을 무비판적으로 국제간의 交易에 확대시켰다. 이에 대해 E.Mandel은 E-A의 국제적 평균이윤율의 성립이라는 전제가 합당하다면 資本이 周邊部로 대량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론적·경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資本의 國際的 移動性이라는 이들의 전제는 不均等한 發展을 그 內在的 法則으로 하는 現代資本主義 發展法則에 어긋난다.

또한 경험적으로도 1970년, 1971년 그리고 1972년에 美國 海外 投資의 公式利潤率은 각각 반식민지에서 20.1%, 21.8%, 22.3%, 제국주의 국가에서 13%, 13.5%, 15%로 國際的 平均利潤率이 존재한다는 가설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한다.[32]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세계적 규모에 있어서는 利潤率의 均等化 경향보다는 국경을 넘어서는 資本과 勞動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어서 利潤率의 差別化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不均等한 國際的 利潤率의 분포는 中心에서는 낮고 周邊에서는 높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E.Mandel에 따르면 ① Emmanuel 의 설명과는 반대로 中心에서의 O.C.C.가 周邊보다 높으며 ②周邊의 剩餘價值率이 일반적으로 높으며 ③周邊에서는 방대한 과잉인구의 현존으로 勞動力 商品의 價格이 그 價值以下로 저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3] 그리고 앞에서 Amin에 의해서도 비판되었지만 Emmanuel이 설정한 賃金이 독립변수라는 전제는 消費와 賃金이 항상 生産면에서의 변화에 의해 규제되어진다는 의미에서 타당하지가 않다.[34] 또한 賃金이 독립변수라고 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Amin 역시 Emmanuel과 같이 賃金의 격차가 不等價交換의 원인이라는 데는 주장을 같이 한다. 이들의 주장대로 19C 중반부터 賃金이 低開發國과 中心國의 상이한 발전과정에 종속되었고, 또 이러한 임금격차가 國際經濟發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의 격차가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의 發展法則과는 독립적으로 世界經濟構造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賃金格差의 增大 그 자체는 資本主義的 世界經濟發展의 일반적 경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다음 E-A의 理論構造는 논리전개에 있어 전제와 거기서 도출된 결과사이에 내적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다. E-A의 不等價交換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國際的 賃金格差가 不等價交換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앞에서 누차 지적했다.

그렇다면 國際的 賃金格差와 國際的 平均利潤率 및 國際的 不等價交換이 완전히 競爭的 自由貿易의 조건下에서 동시에 병존할 수 있을까? Amin이 분석한 동종상품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완전경쟁적 자유무역下에서는 동종상품에 대해서는 一物一價가 성립한다. 따라서 周邊의 賃金이 낮다고 하더라도 生産性이 동일한 동종상품의 경우에는 一物一價의 원칙에 따라 價格差別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賃金格差에 따른 不等價交換은 발생하지 않는다. Emmanuel이 다룬 고유상품의 경우에는 단기에 있어서는 그의 설명처럼 賃金格差에 따라 中心部에서 周邊部로 資本이 이동함에 따라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不等價交換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Emmanuel의 고유상품의 交易에 대한 견해도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資本의 자유로운 國際的 移動(競爭)은 장기적으로 賃金의 格差를 해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 周邊部로의 資本의 流入을 통해 — Emmanuel 자신이 말하는 不等價交換의 근거가 없어진다.

따라서 利潤率의 國際的 均等化라는 가정은 장기적으로 賃金의 國際的 均等化라는 극히 非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한 周邊의 低開發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28) S.Amin,Unequal Developmeat.(1977).p.213.

29) 부언하면, Amin은 불평등한 국제분업에 의해 불균등한 착취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불균등한 착취가 부등가교환에 의해 표현된다고 보며, 불평등한 국제분업이 수요구조를 왜곡시키고 중심에서의 자기중심적 축적과 주변에서의 종속적·외향적 축적을 촉진시킴으로써 불균등 발전의 재조건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본다.

30) S.Amin,Accumulation on a world scale.(1974). p.136.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제3세계제국의 집단적 자력의존(collective self-Reliance)을 주장하는데, 이것도 사회구성체의 구조적 변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본다.

31) Emmanuel의 경우는 가치법칙을 자본주의의 체제법칙이 아닌 단순상품교환의 법칙으로 본다.

32) 이 통계들은 공개된 이윤들에 기초한 것으로 은폐된 이윤까지 포함한다면 양자의 격차를 훨씬 벌어질 것이다.

33) E.Mandel, Late Capitalism pp.343～344.

34) Bettelheim, A.Emmanuel 앞의 책. pp.287～293.

마지막으로, 國際的 生産價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E－A는 國際的 生産價格을 均衡價格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均衡價格이 사용된 생산요소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均衡價格이란 개념자체가 순환적이며 價値法則에 있어 Adam Smith까지 후퇴하여 지배노동가치설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E－A의 不等價交換論을 분석·비판하였는데 이상의 비판이 E－A의 理論이 무의미함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의 不等價交換論은 앞에서 다룬 몇가지 면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勞動力 移動의 不自由, 오히려 그 차별을 본질적 조건으로하는 世界資本主義에 있어서 中心과 周邊의 生成·擴大再生産의 mechanism을 世界資本主義 현실에 입각해서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不等價交換이란 구체적인 mechanism으로 규명한 것은 第3世界의 低開發의 分析에 있어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된다.

V. 從屬理論의 意義와 限界

앞에서 우리는 從屬理論의 分析視覺과 理論構造의 골격을 살펴보았고 周邊의 從屬과 低開發 문제를 해명하는 구체적인 논의되고 있는 不等價交換에 대한 Emmanuel과 Amin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봤다.

從屬理論은 기존의 發展理論이 서구의 社會構造에 입각하여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低開發의 문제를 규명하는데 가지는 한계와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그것의 ideology적 성질을 규명함으로써 서구이론에의 맹목적 답습을 거부하고 그것의 허위의식을 타파하고 제3세계가 처한 실존적 상황에 기초한 자아준거적 분석이론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학자간에 많은 차이점을 가지지만 從屬理論이 가지는 意義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從屬理論은 제3세계의 주체적 입장에서 자신들이 안고 있는 社會問題와 世界資本主義體制에 편입되어 擴大再生産되고 있는 低開發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Tony Smith의 다음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從屬理論은 일반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歷史的 分析의 형태라는 제약속에서 '南'의 民族主義者들이나 Marxist 들과 결합된 일종의 강력한 ideology적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結合의 중요성은 그 내부에 존재하는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從屬理論은 단순한 학문적 활동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從屬理論家들은 대부분 그들의 思想을 어떤 정치적 행동의 형식과 관련시키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ideology 이며 중요한 정치적 행동을 동기화할 수 있는 주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잠재적으로 地域史나 世界史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하나의 勢力, 즉 금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歷史的 勢力(Marxism과 '南'의 民族主義')을 실천적·구체적으로 통일하려는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35)

둘째, 理論의 發展이 개념적 정교화에 의해서라기보다 기본적으로 현실의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內部的으로 生成된 認識論的 斷絶에 의해 일어난다면, 從屬理論이 第3世界의 特殊性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理論이라는 피상적인 이유만으로도, 제3세계 사회과학의 입장에서는 理論의 發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세째, 從屬理論이 가지는 분석시각은 歷史認識의 새로운 分析視覺이란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즉, 世界體制的 分析視覺에 입각해 Europe的 歷史發展法則을 世界史的 普遍性으로 인식한 기존의 서구이론의 Europe中心的 인식체계를 지양하고 資本主義로의 移行을 세계적 규모로 파악하고 그 양상을 周邊部 資本主義로의 移行과 中心部 資本主義로의 移行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그 移行mechanism까지 규명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從屬理論이 제3세계 사회과학계에서 가지는 의의가 큰 것이지만, 반면에 분석도구와 분석방법 등에 있어서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從屬理論이 가지는 限界와 問題點을 살펴보면, 첫째, 從屬理論은 社會構造의 중요한 本質(Essence)을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변수가 사상됨으로 인해 社會諸理論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일반화했기 때문에 독단적인 社會分析理論이란 비판을 받는다. 사실상 변화와 다양성의 범위가 굉장히 큰 低開發社會에 대해 하나의 모형으로 각국의 모든경우를 分析할 수 있다는 가정은 각 나라의 역사적 경험의 특수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볼 때 몰역사적이다.

둘째, 從屬理論에서는 각 학자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中心과 周邊, 그리고 양자의 유기적 결합체인 世界體制의 性格을 지나치게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론으로 흐르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脫從屬의 노선을 몇가지 제시하지만 그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논리적 비약이 많아 적절한 代案의 제시가 결여되어 있다.

세째, 從屬理論에서는 종래의 자본주의 연구에 있어 간과되었던 조건과 과정들을 지적함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확고하게 분리하지 않아서 '從屬'이란 것이 개념화에 있어서 순환적이며 동어반복적인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從屬理論에서는 경험적 검증을 통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가진 정확한 理論構造로 형성된 부분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 개념들이 조직화되지 않았거나 경험적 준거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검증될 수 없는 형태의 논술이 많고 아직도 많은 부문이 가설의 상태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몇 가지 결점은 從屬理論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3세계 각국에서는 이것을 실천적 대안이나 선전적 구호로 사용하기 이전에 各國의 歷史的 經驗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정확한 理論的 分析·批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이 從屬理論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연구과제로 남는다.

35) T.Smith, The Underdevelopment of Development Literature ; The Case of Dependency Theory, 염홍철편저, 제3세계와 종속이론(서울. 한길사) p.301에서 재인용.

參 考 文 獻

① T.S.Kuhn, 과학혁명의 구조
② 염홍철편저, 제3세계와 종속이론
③ M.Rodinson, 아랍의 거부(임재경譯)
④ D.Colman & F.Nixson, Economies of Change in Less Developed Countries
⑤ E.Mandel, The Marxist Economic Theory(Ⅰ.Ⅱ)
⑥ E.Mandel, Late Capitalism
⑦ 합건식편저, 국제무역론
⑧ 湯淺赳男, 第三世界 經濟構造(조용범譯)
⑨ 변형윤&김대환, 제3세계의 경제발전
⑩ P.A.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⑪ P.A.Baran & P.M.Sweezy, Munopoly Capital
⑫ P.Jale, The Pillaqe of the Third World
⑬ Ian Roxdorouqh, 종속이론이란 무엇인가(박종수譯)
⑭ 백산서당 편집부, 아시아의 농촌과 공업화 현실
⑮ 윤석범, 성장·체제·빈곤의 경제학
⑯ M.Dobb, Theories of Valne and Distribution Since Adam Smith
⑰ J.Petras, Politics & Social Structure in L.A.
⑱ 정경문화(80年)
⑲ S.Amin,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⑳ S.Amin, Unegual Development
㉑ A.Emmanuel, Unequal Exchange
S.Amin, Imperialism and Unequal Development
A.G.Frank, 저개발의 개발(최완규譯)
A.G.Frank, 세계경제의 구조(최민譯)

농가부채의 개선을 위한 농외 소득 증대방안에 관한 모색

박 정 식
(경제학과 4년)

목 차

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範圍 및 方法
2. 本論
1. 韓國 農業問題의 現況
2. 農家의 所得 構造
3. 農家負債의 實態
4. 農外所得의 增大方案
Ⅲ. 結論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韓國經濟는 開放經濟體制 아래에서의 持續的인 高度成長의 結果 1人當 國民 總生産이 1963年의 100억 달러에서 1986年의 2,300억달러로 늘어날 만큼 획기적인 發展을 이룩하는 同時에 國民經濟의 貿易依存度 또한 같은 期間에 21.2%에서 약 82%로 높아짐으로써 對外與件의 變化에 매우 敏感한 經濟體質을 지니게 되었다.

1960年代를 통해 比較的 有利했던 國際經濟의 環境이 70년대에 접어 들면서 石油波動을 계기로 表面化된 資源民族主義의 擡頭, 食糧武器化로 나타난 食糧輸入市場 및 價格의 不安定化, 自國의 國際收支惡化를 막기 위한 先進諸國의 보호무역주의 傾向의 登場으로 急速히 惡化되었다. 또한 이와 때를 같이 해서 國內的으로는 제1차 石油波動이래 계속된 放漫한 國內經濟運營으로 인하여 1980年대 初의 韓國經濟는 前例없는 負의 成長을 記錄하였으며 3低現狀으로 因한 最近의 經濟活氣도 그 基調가 흔들리고 있는 實情이다.

農業部門에 關해서 보면 1950年代와 1960년대를 통해 無償 또는 現地通貨베이스 및 長期延拂昔款이라는 有利한 방식으로의 食糧 및 原資財 輸入可能性이라는 條件과, 國內農業의 生産力 擴充보다는 物價安定이라는 政策優先順位에 밀려 農業部門은 매우 不振하였다. 70年代 前半의 數年間 지속되었던 高米價政策과 統一系 多收穫 新品種의 擴大補給으로 比較的 有利한 經濟的 地位를 확보하는 듯도 싶었지만 70年代 後半 以來의 이른바 「農業開放論」의 등장과 함께 農業의 地位는 또다시 急速히 惡化되었다. 더구나 1980年의 異常氣候와 新品種 補給에 따른 技術的 盲點으로 因해 크게 失敗한 農業政策은 全面的인 轉換이 必要하게 되었으며 最近의 農産物 輸入開放壓力은 우리 農業의 體質改善의 必要性을 切感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對內外的인 狀況下에서 農村經濟는 많은 문제점에 直面하고 있다. 그 中에서도 農村經濟의 現實을 가장 端的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農家의 부채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認識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前提에서 始作하고자 한다.

ㄱ. 農家負債의 發生原因은 根本的으로 韓國農業의 基本性格인 小農經營樣式에서 由來된다.

ㄴ. 農家所得의 低位性과 農家負債의 增加에는 農政의 方向轉換이 要求된다.

ㄷ. 農村人口의 流出은 都市의 人口集中을 가져와 都市貧民層의 形成, 犯罪發生의 增加 등 都市問題 社會問題化 되므로 過度한 離農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ㄹ. 在村 勞動力의 機會費用을 높임으로써 農家所得을 增大시키고 農村人口의 脫農을 防止할 수 있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檢討함으로써 오늘날 韓國農村의 現實을 올바르게 理解하고 農家負債問題의 解決을 通하여 農村經濟의 安定과 發展을 爲한 可能한 方法을 考察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글의 目的이다.

2. 硏究範圍 및 方法

이 글은 오늘날 韓國農業이 直面하고 있는 多數의 問題點 가운데 하나인 農家負債 問題를 다루고자 하며 그 過程의 結果로서 農家所得을 增大시킬 수 있는 方案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서론의 1절에서는 硏究의 目的을, 2절에서는 硏究範圍 및 方法을 記述하고자 한다. 본론의 1절에서는 韓國農業의 現況으로서 現在 直面하고 있는 主要한 農業問題를 槪括하고자 하며 2절에서는 農家의 所得構造를 分析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農家負債의 實態를 몇 가지 側面에서 考察하고자 하며 4절에서는 農家所得의 增大方案으로서 農外所得을 增大시킬 것을 提示하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以上의 內容을 要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使用된 方法은 주로 文獻調査 方法으로서 農家所得과 農家負債 그리고 農産物 價格에 關한 硏究論文등의 文獻分析과 可能한 限 最近의 各種 統計資料를 使用하였다.

Ⅱ. 本 論

1. 韓國農業問題의 現況

經濟發展이란 生産函數의 變動을 通한 生産力의 增大이며 이의 窮極的인 目的은 經濟的 厚生의 增進에 있다. 農業의 經濟的 厚生의 增進에 寄與하는 程度는 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減減하고 있으나 아직도 所得水準이 낮고 엥겔係數가 높은 社會에서는 農業生産의 增大가 直接的으로 經濟的 厚生增進에 가장 큰 影響을 줄 것이며 所得水準向上은 經濟發展의 餘力을 蓄積하는 源泉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發展에 있어서 農業의 役割은 첫째 食糧供給 둘째 工業原料生産 세째 勞動力 提供 네째 輸出農産物 生産 다섯째 資本形成 여섯째 國內市場 擴大 등을 들 수 있다.[1]

그러나 우리나라 農業은 꾸준한 發展을 繼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後進性을 脫皮하지 못하여 低生産과 低所得을 되풀이 하고 있다. 즉 農業生産이 人口 및 國民所得水準의 增加에 따른 食糧需要 增加를 充足시키지 못함으로써 食糧導入을 위하여 莫大한 外貨를 消費케 하고 있고, 農業所得의 低位性은 國內需要 市場으로서의 充分한 役割을 沮害하고, 農工間 不均衡成長의 深化는 持續的인 經濟成長에 대한 沮害要因이 되며, 地域間·産業間의 隔差를 深化시켜 社會的 問題까지도 惹起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農業이 經濟發展의 沮害要因으로서가 아니라 經濟成長을 促進하는 要素로써 그 役割을 充分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國民經濟가 要求하는 當面 重要課題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農業의 開發과 近代化 問題가 提起되고, 이것은 國民經濟의 成長을 위하여 時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農工間의 均衡的인 成長을 通하여 農業의 低生産과 低所得을 脫皮하여야 한다.[2]

現在 韓國農業이 直面하고 있는 代表的인 問題點을 몇 가지 指摘해 보면 첫째 對外依存的 輸出主導型 工業化를 통한 農業比重의 減少現

1) 박기혁, 현대농업경제, 박영사, 1983, p.25.
2) 박병우, 농가저축과 공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영대학원, 1982, p.25.

狀으로써 이는 農業就業人口의 減少로써도 나타나고 있다. 즉 農業이 國民總生産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年대의 40% 水準에서 75年 21.7%, 83년 14.4%로 減少하였다.[3] 그리고 農業人口는 1971년 14,711,428명에서 82년 末 現在 9,688,222명으로 11년 사이 약 5백여만명이 減少하였다. 農業人口의 減少는 71년에서 76년 사이 10여만명씩 줄어 들었으나 77년 이후에는 해마다 人口減少幅이 30~80만명 수준으로써 農村人口는 急激히 減少하고 있다.[4] 이에 따라 農村에서는 深刻한 勞動力 不足 및 勞動時間의 延長 勞賃上昇 등으로 農家所得이 減縮되며 農業勞動力의 高齡化, 女性化, 營農後繼者 問題 등 農業勞動力의 質的 低下를 가져 오고 있다.

둘째 농경지의 減少와 耕地利用率의 低下이다. 1983年 末 現在 우리나라의 總耕地 面積은 216만 7천 ha로 干拓 등에 의해 國土面積은 擴大되었으나 耕地는 70年 이후 每年 8,700 ha씩 줄어 든 셈이다. 그리고 耕地面積이 減少했음에도 불구하고 耕地利用率이 65年의157.8%에서 83年의 123.8%로 減少하는 등 遊休地가 增加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세째 現在 우리나라의 農業生産은 部門間, 作木間, 地域間의 심한 不均衡과 不安定이 深化되고 있다. 즉 穀物등 輸入農産物 部門에서는 生産 및 生産力의 停滯내지 後退가 進行 되어 食糧自給率이 顯著히 떨어지고 있는 反面에 菜蔬·畜産등의 部門에서는 地域的 集中과 함께 過剩基調에 直面하고 있다.

네째 小作의 增加이다. 82年 末 現在 小作農은 全體 農家의 46.6%로 折半에 肉薄하고 小作農地의 面積도 全體農地의 22.3%로써 지난 70年의 33.5%와 17.6%, 60年의 26.4%와 13.5%에 비하면 小作農家 戶數는 10年에 10%씩, 農地는 4~5%씩 增加한 셈이다. 또한 農地 所有主의 分布를 보면 賃貸借 契約件數의 45.4%가 農業, 21.8%가 高業, 11.6%가 公務員, 7.9%가 一般 會社員 그리고 5.2%가 無職者로 나타나며 都市 居住者 즉 不在地主가 24.7% 정도로 나타났다.[5]

다섯째 農家經濟의 惡化와 負債의 累增이다. 1980年代에 들어와 農家經濟의 두드러진 特徵은 農家交易條件이 계속 惡化되는 가운데 都農間 所得格差는 擴大되고 있으며 農家負債는 繼續하여 累積·增加한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問題點들은 國民經濟의 高度成長 過程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農業의 地位低下와 같은 正常的·經過的 現狀이 아니라 農業의 矛盾이 深化·擴大된 結果 發生한 構造的 危機를 反映하는 것이다.더구나 이러한 危機的 狀況은 은 單純히 農業의 再生産만을 危殆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非農業部門에도 波及되어 國民經濟全體의 成長·發展을 沮害하기 때문에 問題는 더욱 深刻한 것이다.

2. 農家의 所得構造

모든 經濟主體들과 마찬가지로 農家의 經濟活動도 窮極的으로는 成員의 厚生을 增進시키는데 그 目標가 두어진다. 農家의 經濟的 厚生水準을 端的으로 보여주는 指標가 農家所得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農家所得의 絶對的·相對的 地位가 高度成長 過程에서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農業構造變動을 說明함에 있어서 不可缺한 要素로 될 것이다.

農家所得은 農業粗收益에서 農業經營費를 差減한 殘餘額인 農業所得과 兼業收入에서 兼業支出을 差減한 殘額인 兼業所得, 그리고 勞賃·地代·給料·配當利子·被增補助 및 家事收入등의 事業以外 收入을 加算한 合計額을 말한다.[6]

우선 農家所得의 構成과 그 推移를 〈표1〉에서 보면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의 첫해인 1962年에 農家戶當平均 所得이 67,885원에서 1972年에는 429,394원으로 6.3배 늘었으며 1979年에는 2,274,483원으로 1972年 보다 5.2배가 늘어났다.

또한 農家所得을 構成하고 있는 農業所得, 兼業所得 및 事業以外 收入의 增加推移를 보면 農業所得이 1962년의 54,026원에서 1972年에는 353,381원, 1978年에는 1,355,658원을 나타내어 1962年 보다는 약 25培 정도의 增加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同期間 동안 都賣物價上昇率은 9培나 되므로 實質所得 上昇率은 2.5培에 不過하다.

한편 耕地規模別 農家所得의 構成化를 보면 〈표2〉에서와 같이 耕地規模가 큰 階層일수록 農業所得의 比重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反面 耕地規模가 작은 階層은 農外所得의 比重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79年 우리나라 農家중에서 0.5정보 미만인 農家의 農業所得은 農家所得의 약 40%에 不過하고 事業以外의 收入이 切半以上을 차지한다.

그러나 農家所得이란 農家가 全部 消費할 수 있는 所得은 아니다. 農家所得 中에서 租稅公課諸負擔金 및 借入金 利子를 差減한 殘餘額이 農家可處分所得이 된다. 農家可處分所得 水準의 推移를 槪觀하여 보면 〈표3〉과 같다.

그러면 農家의 可處分 所得은 어떻게 使用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표4〉와 같이 可處分 所得은 農家消費로서의 家計費를 充當할 정도에 不過하다. 비록 農家經濟剩餘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貯蓄=投資(農業에 대한 投資)로서의 機能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活用할 수 있는 모든 農業統計資料에서 나타나는 結論이다. 그러므로 農家는 오래도록 그들의 可處分 所得을 全額 消費(家計支出) 함으로써만이 農家를 維持하여 왔으며 더우기 其他 收入中의 負債部門을 累積시키면서 持續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農家所得 中 絶對多數를 나타내는 農業所得을 살펴 보기로 한다. 農業所得은 農業粗收益에서 農業經營費를 差減한 殘餘額이며, 農業粗收益은 農家가 當該年度의 農業經營結果로서 얻은 總收入으로써 農産物의 販賣收入, 現物支出分 評價額, 農産物의 自家消費 評價額, 動植物의 年度內 價値增殖額 및 年度末 農産物 在庫額을 合計한 增加額을 말한다. 그리고 農業所得을 農業粗收益으로 나누었을 때 그 比率을 農業所得率이라고 한다.[7] 〈표5〉에서 보듯이 農業所得이 1972~1975年과 1975~1978年 期間동안 무려 2배가 增加하였지만 農業經營費의 絶對的인 增加로 因하여 農業所得率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耕地規模別로는 〈표6〉과 같이 農業所得率이 0.5정보 미만인 경우는 71.8%에서 0.5~2.0정보까지는 增加하지만 2.0정보 以上이 되면 農業經營費의 比率이 높아짐으로써 農業所得率은 오히려 떨어진다.

農業所得과 家計費와를 比較하여 보면 〈표7〉과 같이 農産物 價格 支持政策이 維持되더라도 1979年을 基準으로 하여 볼 때 農家所得의 絶對를 차지하는 農業所得만으로는 全國平均農家의 家計費에도 不足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0.5정보 미만의 農家家計費가 1,285,745원인데 비하여 농업소득은 580,277원으로 705,468원이나 不足한 狀態이다.더구나 農家의 相當數를 點하고 있는 1.0정보 미만의 경우에도 農業所得만으로는 家計費를 充當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표7〉에서 보듯이 1정보 미만의 農家에 대해서는 農家所得에서 農業所得以外의 所得 즉 兼業所得이나 事業以外의 所得을 增大해야 한다.

다음은 農家所得의 相對的인 地位變動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8〉에서 보듯이 農家購入價格指數로 디플레이트한 1975年 價格表示 農家 1戶當 實質所得은 1965年의 45만원 으로부터 70年의 58만원 75年의 87만원, 80年의 100만원, 81年의 101만원으로 緩慢한 上昇을 보여 왔다. 이에 비하여 全都市 家口 年平均 實質所得(1975年 價格 表示)은 1965年의 41만원, 70年의 78만원, 75年의 86만원, 80年의 145만원, 81年의 140만원으로 比較的 急激히 增加해 옴으로써 1965~80年 間의 年平均 實質所得 增加率은 農家가 5.5%, 勤勞者 家口가 8.9%로써 農家等에 不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위에서 살펴 본 農家所得의 支出側面

3) 조선일보, 1984.4.14.
4) 한국일보, 1984.5.25.
5) 한국일보, 1983.11.25.
6) 박병우, 앞의 책, p.27.
7) 위의 책, p.32.

〈표 1〉 農家所得의 構成과 增加推移 (戶當平均)

(단위 : 원, %)

年度別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計	農外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事業以外收入	都賣物價指數
1962	67,885	54,026 (79.6)	13,859 (20.4)	2,597	11,262	16.1.61
1963	93,179	76,542 (82.2)	16,637 (17.8)	2,281	14,356	19.4
1964	125,692	103,745 (82.5)	21,947 (17.5)	4,480	17,467	26.2
1965	112,201	88,812 (79.1)	23,389 (20.9)	3,897	19,492	28.8
1966	130,176	101,430 (77.9)	28,746 (22.1)	5,308	23,438	31.4
1967	149,470	116,359 (77.9)	33,111 (22.1)	6,604	26,505	33.4
1968	178,959	136,936 (76.5)	42,023 (23.5)	8,433	33,590	36.2
1969	217,874	167,128 (76.7)	50,746 (23.3)	8,090	42,656	38.5
1970	255,804	194,037 (75.8)	61,767 (24.2)	9,599	52,168	42.0
1971	356,382	291,909 (81.9)	64,473 (18.1)	11,152	53,321	45.7
1972	429,394	353,381 (82.3)	76,013 (17.7)	14,529	61,484	52.0
1973	480,711	390,320 (81.2)	90,391 (18.8)	15,400	74,991	55.6
1974	674,451	541,902 (80.4)	132,549 (19.6)	22,234	110,315	79.0
1975	872,933	714,838 (81.9)	158,095 (18.1)	21,863	136,232	100.0
1976	1,156,254	921,193 (79.7)	235,061 (20.3)	28,523	206,538	112.1
1977	1,432,809	1,036,136 (72.3)	396,673 (27.7)	39,371	357,302	122.2
1978	1,884,194	1,355,668 (71.9)	528,526 (28.1)	43,971	484,555	136.5
1979	2,227,483	1,521,275 (68.7)	696,208 (31.3)	44,177	652,031	162.5

資料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73, pp 44～45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0, p 70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81, p 4
註 : ( )은 構成化

〈표 2〉 耕地規模別 農家所得의 構成 (戶當平均), 1979年

(단위 : 원)

구분 / 경지면적	농가소득	농업소득	겸업소득	사업이외수당
0.5 정보미만	1,517,096	580,277	97,491	839,328
0.5～1.0	1,905,895	1,255,534	38,276	612,085
1.0～1.5	2,467,073	1,862,744	33,854	570,475
1.5～2.0	3,049,298	2,429,325	21,265	598,708
2.0 정보이상	4,041,819	2,386,077	10,689	645,053

資料 : 농협중앙회,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0, p 70

〈표 3〉 農家可處分所得推移 (戶當平均)

(단위 : 원)

年度別	農家所得	租稅公課諸負擔金	借入金利子	可處分所得
1962	67,885	1,476	054	69,905
1966	130,176	3,366	2,142	124,668
1967	149,470	2,615	2,210	144,645
1971	356,382	4,137	2,855	349,390
1972	429,394	4,282	3,387	421,725
1976	1,156,254	19,540	9,604	1,127,110
1977	1,432,809	26,723	19,345	1,386,741
1978	1,884,194	31,590	26,795	1,825,809
1979	2,227,483	46,862	33,114	2,147,507

資料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0, p 55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73, p 45

〈표 4〉 農家의 可處分所得, 消費支出 및 貯蓄率 (戶當平均)

(단위 : 원, %)

구분 / 년도	可處分所得 (A)	消費支出 家計費	消費支出 其他支出	消費支出 計 (B)	農家經濟剩餘	消費性向 (B/A)	貯蓄率 (100-C)
1962	65,905	55,739	—	55,739	10,166	84.6	15.4
1966	124,668	109,878	1,719	111,597	13,071	89.5	10.5
1967	144,645	127,667	2,819	130,486	14,195	90.2	9.8
1971	349,390	244,463	3,778	248,241	101,149	71.1	28.9
1972	421,725	309,665	8,859	318,524	103,201	75.5	24.5
1976	1,127,110	749,183	10,042	759,225	367,885	66.5	33.5
1977	1,386,741	976,407	9,508	985,915	400,826	70.4	29.6
1978	1,825,809	1,320,508	20,600	1,341,108	484,701	72.3	27.7

資料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79, p 70

〈표 5 〉 農 業 所 得 (戶當平均)

(단위 : 원)

구분 / 년도	농업조수익 (A)	농업경영비 (B)	농업소득 (C)	농업소득율 (C/A) (%)
1962	73,416	09,390	54,026	73.6
1966	131,407	29,977	101,430	77.2
1967	150,995	34,636	116,359	77.1
1971	356,567	64,658	291,909	81.9
1972	427,994	74,613	353,381	82.6
1976	1,165,956	244,763	921,193	79.0
1977	1,333,586	297,450	1,036,136	77.7
1978	1,769,116	413,448	1,355,668	76.6
1979	2,027,162	495,887	1,531,275	75.5

資料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73, 1980, p 54

〈표 6 〉 耕地規模別 農業所得 (戶當平均) (1979 年)

(단위 : 원)

구 분	농업조수익 (A)	농업경영비 (B)	농업소득 (C)	농업소득율 (C/A) (%)
0.5정보미만	808,622	228,345	580,277	71.8
0.5～1.0	1,655,611	400,077	1,255,534	75.8
1.0～1.5	2,418,669	555,925	1,862,744	77.0
1.5～2.0	3,223,037	793,712	2,429,325	75.4
2.0정보이상	4,546,049	1,159,972	2,386,077	74.5

資料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0, p 64

〈표 7 〉 農業所得과 家計費와의 比較 (戶當平均), 1979 年

(단위 : 원)

구 분	농 가 소 득	농업소득 (A)	가 계 비 (B)	A － B
전국 평균	2,227,483	1,531,275	1,662,168	△ 130,893
0.5정보미만	1,517,096	580,277	1,285,745	△ 705,468
0.5～1.0정보	1,905,895	1,255,534	1,488,683	△ 233,149
1.0～1.5	2,467,073	1,862,744	1,776,696	86,048
1.5～2.0	3,049,298	2,429,325	2,095,424	333,901
2.0정보이상	4,041,819	3,386,077	2,680,959	705,118

資料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0, p 65
註 : △ 감소

〈표 8 〉 農家所得의 相對的 地位變動

(단위 : 원, %)

	가구당명목소득		가구당실질소득 (1975 년가격)			1 인당실질소득 (1975 년가격)		
	농 가	근로자	농가 1) (A)	근로자 2) (B)	(A)/(B)	농 가 (C)	근로자 (D)	(C)/(D)
1965	112,201	112,560	447,016	409,309	1.09	71,068	73,882	0.96
1966	130,176	161,520	464,914	526,124	0.88	74,745	102,763	0.73
1967	149,470	248,640	493,300	733,451	0.67	80,605	134,332	0.60
1968	178,959	286,960	527,903	760,532	0.69	87,602	139,804	0.63
1969	217,874	333,600	561,531	788,652	0.71	93,745	145,508	0.64
1970	255,804	381,340	580,054	776,456	0.75	97,982	145,404	0.67
1971	356,382	451,290	715,627	811,346	0.88	122,749	153,664	0.80
1972	429,394	517,400	761,337	831,833	0.91	133,334	157,843	0.84
1973	480,711	550,200	780,375	857,009	0.91	136,429	163,240	0.84
1974	674,451	644,520	835,751	807,669	1.03	147,699	155,023	0.95
1975	872,933	859,330	872,933	859,320	1.02	155,050	166,858	0.93
1976	1,156,254	1,151,760	925,744	998,925	0.93	167,102	197,807	0.84
1977	1,432,809	1,405,080	980,034	1,106,263	0.89	177,542	232,429	0.76
1978	1,884,300	1,916,280	991,163	1,318,844	0.75	184,231	281,804	0.65
1979	2,227,483	2,629,556	1,030,288	1,529,701	0.67	198,132	329,677	0.60
1980	2,698,110	3,205,152	999,299	1,447,329	0.69	195,558	319,015	0.61
1981	3,687,856	3,817,224	1,005,139	1,398,763	0.72	199,037	310,836	0.64
1965～70	—	—	5.3	13.7	—	6.6	14.5	—
1970～75	—	—	8.5	2.0	—	9.6	2.8	—
1975～80	—	—	2.7	11.0	—	4.8	13.8	—

資料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註 : ① 농가구입가격지수 (1970 = 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② 전도시 소비물가지수 (1975 = 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을 보기로 하자 農家의 消費支出은 家計를 維持하기 위해서 支出되는 消耗的 費用으로서 飮食物費, 主食物費, 調味料, 嗜好品, 外食費, 住居費, 家計光熱費, 被服費, 敎育費, 家計雜費, 등의 合計額이며 後者는 家計費에 包含되지 않는 消耗的 費用으로서의 偶發的 支出 즉 紛失, 盜難, 災害, 損失 및 分家등의 支出을 말한다.[8]

그런데 우리나라 農家戶當 消費支出 構造를 〈 9 〉에서 보면 家計費를 構成하는 飮食物費가 약 40 % 이상을 나타냄으로써 엥겔 係數가 相當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飮食物費가 해가 지날수록 점차 줄어 드는 반면 學校敎育費가 家計費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漸次 增大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 9 〉에서와 같이 家計費 構成에 있어서 飮食物 (엥겔계수)의 構成化가 약간씩 減少하는 것은 결코 所得水準 增加의 結果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飮食物 價格과 其他 家計用品 價格의 〈不等價 變化〉에서 由來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우기 66年 以後 農村의 敎育費의 繼續的인 上昇은 66年 以後 農村의 敎育熱이 繼續的으로 높아진 것을 反映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敎育費가 다른 價格보다 上昇率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實質所得의 上昇없는 엥겔係數의 減少는 그만큼 다른 支出의 壓力이 크다는 것이다.

8) 위의 책, p.34.

〈표 9〉 農家家計費 支出構造(戶當 平均)

(단위 : 원)

구분 / 연도	가계비	음식물비	광열비	주거비	피복비	학교교육비	가계잡비
1962	55,739 (100)	31,149 (55.9)	5,501 (9.9)	1,877 (3.4)	4,349 (7.8)	2,034 (3.6)	10,829 (19.4)
1966	109,878 (100)	55,138 (50.2)	9,065 (8.2)	4,454 (4.0)	9,517 (8.7)	6,350 (5.8)	25,354 (23.1)
1967	127,667 (100)	62,623 (49.1)	10,211 (8.0)	5,503 (3.9)	11,488 (9.0)	17,945 (6.2)	30,347 (23.8)
1971	244,463 (100)	115,851 (47.4)	19,520 (8.0)	10,353 (4.2)	18,561 (7.6)	18.363 (7.5)	61,815 (25.3)
1972	309,665 (100)	149,255 (48.2)	20,791 (6.7)	17,651 (5.7)	22.662 (7.3)	20,382 (6.6)	78,924 (25.5)
1976	749,183 (100)	342.651 (45.7)	46,153 (6.2)	57,184 (7.6)	53,590 (7.2)	58,404 (7.8)	191,201 (25.5)
1977	976,407 (100)	418,046 (42.8)	56,498 (5.8)	76,977 (7.9)	65,975 (6.8)	79,252 (8.1)	279,659 (28.6)
1978	1,320,508 (100)	505,253 (38.3)	60,875 (4.6)	114,183 (8.6)	92,470 (7.0)	105,358 (8.0)	442,369 (33.5)

資料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73, p 62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79, p 70
註 : ( )은 구성비

그 實例로써 經濟企劃院 調査에 의하면 1985年 現在 우리나라 大學生의 1人當 敎育費는 年間 3백 10만원(公敎育費 1백 30만원, 下宿交通費 1백 80만원) 水準으로써 이는 85年 都市 勤勞者 所得(年間 6백 5만원)의 51%에 해당되며 年間 農家所得(5백 74만원)의 54%, 農家負債(家口當 2백 2만원)의 1.5培가 되는 水準이다.

한편 耕地規模別 家計費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으며 0.5정보 미만인 零細農의 家計費가 2.0정보 以上의 大農의 家計費에 비해 ½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人間生活의 絶對的이라고 할 수 있는 飮食物費에서도 耕地規模가 큰 農家일수록 많은 費用을 支出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消費面에서 본 農家經濟는 그들의 所得이 家計費 充足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그러므로 家計費 以外의 支出은 거의 못하고 있다. 즉 家計費 以外의 支出인 營農을 위해서는 그들의 所得에서가 아니고 거의 負債에 의해서 持續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農家負債의 實態

農家經濟가 어떠한 狀態에 있는가를 端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農家經濟 諸指標의 結論이라할 수 있는 負債의 增減現狀이다. 앞서 農家經濟의 狀態를 所得面에서, 消費面에서 살펴 보았듯이 農家經濟는 繼續的으로 萎縮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現狀은 바로 農家負債의 累積으로 나타난다.

資本主義下의 金融資本이란 銀行資本이 産業資本에 癒着하여 이를 支配하는 것으로써 生産者는 반드시 銀行資本에 依支하면서 經濟活動과 資本蓄積의 自己增殖을 기하는 것이 그 本質이다.[9] 그러나 農業의 경우 農産物 價格은 利潤은 고사하고 自家勞賃마저 充分히 實現하지 못하는 低農産物價格이고 自家勞賃이 基本인만큼 資本이 勞動을 支配하여 剩餘價値를 生産하는 機會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近代産業의 大部分이 利潤을 生産하는 資本으로 機能하여 그 利潤의 一部로 貸付資本의 利子를 支拂하는 것과는 對照的이다.

農家負債는 消費金融의 色彩가 强하고 近代的인 金融 즉 資本의 資本으로서 借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은 本來 零細小農民에게 있어서 剩餘價値가 利潤으로 實現되는 일이 거의 없고 따라서 貨幣나 生産手段도 資本의 機能을 遂行할 수 없으며, 負債의 元利金금도 大部分 生活費 또는 財産的 負擔으로 支拂되기 때문이다. 利潤實現이 不可能한 農業을 對象으로 하는 金融의 貸付資本은 農業生産의 全體 剩餘를 收奪함으로써만 元利金의 回收가 可能하다.

그런 意味에서 貸付資本이 아무리 肥料나 農器具와 같은 直接的인 生産에 利用된다 하더라도 總體的으로는 消費資金의 性格이며, 利子가 아무리 낮더라도 實質利子率의 높고 낮음에 關係없이 高利貸의 利子와 同質的인 것이 된다.[10] 이것은 오직 小農經營의 前資本主義的 生産樣式에 起因하는 것으로서 小農社會에서는 一但 債務가 發生하면 農業生産 만으로는 償還이 어려워, 결국 負債償還으로 因해 農民은 苦痛을 받게 되는 것이다.

〈표 10〉 耕地規模別 家計費(戶當平均)

(단위 : 원)

구 분	가계비	음식물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학교교육비	가계잡비
0.5 정보미만	987,573	422,489	96,909	50,470	72,811	59,788	285,116
0.5～1.0 정보	1,160,520	479,394	105,610	58,726	82,526	79,318	354,946
1.0～1.5 정보	1,440,169	540,577	121,967	64,724	99,558	124,226	489,117
1.5～2.0 정보	1,805,456	598,805	133,499	72,763	128,782	161,604	710,003
2.0정보이상	2,213,504	674,274	167,599	78,110	143,441	269,463	880,617

資料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79, p 70.

우선 農家의 負債額과 借入處別 負債額의 構成比를 보기로 하자. 〈표 11〉에 보듯이 農家負債額은 繼續 增加趨勢이며 負債의 借入處로는 차츰 農協에 依存하게 되는 傾向이다. 1986年 財務部가 國會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1985年 末 現在 農家의 家口當 負債는 2백 2만 4천원이며 그 中 私債는 58만 3천원으로 28.9%를 차지하고 農協·市中銀行등 制度金融으로부터의 負債가 1백 44만 1천원으로써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11]

그러면 이렇게 增加하고 있는 農家負債 問題를 全體 農民 中 負債農家의 構成比에서 살펴보자 〈표 12〉에서 보듯이 借入農家의 比率도 全國農家 平均이 71年에는 75.7%였던 것이 76年에는 79.2%로 增加했고 82年에는 89.6%로 增加하였다. 이것을 다시 零細農·小農·中農·大農別로 分析해 보면 零細農의 增加率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는 大農層의 負債增加가 小農이나 中農層보다 많이 增加한 것은 近來 農機械의 導入등 農業經營費의 增加와 더불어 資金調達에 自己資本蓄積의 機會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農家負債를 耕地規模別로 보면 〈표 13〉 과 같다. 여기에서 보면 零細農일수록 私債에의 依存度가 높고 大農일수록 農協에의 依存度가 높아 零細農일수록 利子가 싼 農協의 惠澤을 못받

9) 나상기, 「한국농업문제의 현황」, 『한국 경제의 현단계』, 사계절, 1985, p.88.
10) 위의 책, p.88.
11) 조선일보, 1986.11.7.

고 利子가 비싼 私債에 依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들 借入金은 어떤 用途로 使用되고 있는가를 〈표 14 〉에서 보기로 한다. 〈표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負債의 用途는, 農業生産에 使用된 것이 80年, 81年, 82年 各各 53.6%, 53.4%, 57.0%이며 나머지는 家計費 또는 負債償還 및 其他에 支出되고 있다. 이 中에서 더욱 重要한 事實은 全體 負債額의 거의 8%정도가 負債償還을 위하여 또다시 負債를 얻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負債用途의 構造에서는 農家負債는 오직 累積될 뿐 그것이 적어질 可能性은 期待하기 困難하다.

그리고 借入金의 家計費 支出內容을 보면〈표 15 〉에서 볼 수 있듯이 飮食物의 構成比가 急激히 減少하는 反面 敎育費 支出이 增加趨勢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農家資産과 借入金과의 構成比를 보자 年度別 農家資産의 變化와 借入金과의 關係를 살펴 봄으로써 借入이 갖는 農家資産과의 比率의 趨勢를 알 수 있으며 農家의 借入金 增加趨勢를 알 수 있다.

〈표16 〉에서 보면 全體 農家資産에 對한 다른 資産의 構成比는 별다른 變化가 없는데 오직 借入金의 構成比率만 增加하고 있다. 비록 流動資産이나 流通資産(現金, 準現金)이 絶對額의 面에서 增加하였다 해도 이것으로서는 農業經營이나 生計維持가 안되어 借入金額이 每年繼續하여 增加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立證한다 하겠다.

〈표 11 〉 借入處別 農家負債(당년 7. 31현재)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별	합계		농협		타금융기관		사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1971	29.5	100.0	9.8	33.2	0.1	0.3	18.4	62.4
1976	170.6	100.0	61.8	36.2	2.0	1.2	103.7	60.8
1980	808.4	100.0	558.0	69.0	12.9	1.6	226.2	28.0
1981	1,044.0	100.0	735.4	70.4	15.8	1.5	264.4	25.3
1982	1,381.5	100.0	983.9	71.2	15.5	1.1	346.9	25.1

資料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 1982, p 35
註 : ① 타금융기관에는 더울금고 포함
② 사채에는 계 포함

〈표 12 〉 全體農家中 借入農家의 比率

(단위 : %)

년도	평균	연세농	소농	중농	대농
1971	75.7	70.4	76.1	79.4	76.9
1976	79.2	68.0	82.9	80.5	81.6
1978	85.3	84.8	88.4	84.4	78.8
1979	88.8	85.6	91.5	88.8	86.4
1980	85.6	84.1	85.1	85.7	87.5
1981	87.3	81.0	88.5	90.0	83.9
1982	89.6	91.8	88.1	89.0	91.1

資料 :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83, 7.

〈표 13 〉 耕地規模別 農家借入金(81. 8. 1 ~ 82. 7. 1)

(단위 : 천원)

구분 / 경지규모별	합계		농협		타금융기관		사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0.5ha 미만	1,064.2	100.0	645.3	60.6	44.3	4.2	367.9	33.6
0.5 ~ 1.0	1,055.7	100.0	714.5	67.7	18.9	1.8	321.6	30.5
1.0 ~ 1.5	1,090.6	100.0	780.5	71.6	17.3	1.6	255.1	23.4
1.5 ~ 2.0	1,284.5	100.0	939.6	73.1	22.0	1.7	273.7	21.3
2.0 ha 이상	1,585.0	100.0	1,275.3	80.4	22.2	1.4	288.2	18.2
평균	1,159.1	100.0	812.8	70.1	24.2	1.2	302.2	26.1

資料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 1982, p 38

〈표 14 〉 負債의 用途

(단위 : 천원)

	1980		1981		1982	
	금액	%	금액	%	금액	%
농업생산	365.8	53.6	436.3	53.4	661.1	57.0
가계비	157.6	23.1	229.3	28.1	320.2	27.6
부채상환	55.9	8.2	64.4	7.9	91.8	7.9
기타	103.3	15.1	86.8	10.6	86.1	7.4
계	682.6	100.0	816.9	100.0	1,159.1	100.0

資料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 1982, p 38
註 : 기타는 검업지출, 조세공과, 건물신개축에 충당한 것.

〈표 15 〉 借入金의 家計費 支出比率

(단위 : %)

년도	합계	음식물비	교육비	의료비	기타
1964	36.2	35.7			0.5
1971	34.9	17.5	10.3		7.1
1979	28.6	4.0	12.7	4.5	7.4
1982	27.6	1.6	14.4	4.1	7.5

資料 ;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837, 7.
註 : ① 기타는 주거비, 피복비, 관혼상제비, 내구소비재 구입비, 교육오락비 등임
② 1964년의 교육비 및 의료비와 1971年의 의료비는 이용 자료상의 미분류로 기타에 포함.

〈표16〉 農家資産과 借入金(戶當平均)

(단위 : 원)

구분 / 년도	자산								차입금[3]		2)/3)
	총계		고정자산		유동자산		유통자산[2]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3)/1%	%
1978	10,011,014	100.0	8,900,577	88.9	734,067	7.3	376,370	3.8	111,061	1.1	338.9
1979	11,816,320	100.0	10,430,057	88.3	911,527	7.7	474,736	4.0	173,154	1.4	274.2
1980	18,383,522	100.0	11,795,347	88.1	962,838	7.2	625,337	4.7	338,465	1.8	184.8
1981	16,602,649	100.0	14,680,663	88.4	1,218,847	7.4	703,139	4.2	437,143	2.6	160.8
1982	18,804,389	100.0	16,555,220	88.0	1,364,002	7.3	885,167	4.7	829,666	4.4	106.7

資料 ; 농수산부, 농가경제 조사결과 보고서, 1983.
註 ; ①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대농기구, 대동식물
② 유동자산은 미판매 현물, 미처분 농업생산자재, 소동물
③ 유통자산은 현금, 준현금

以上으로 農家負債의 實態를 몇 가지 側面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農家負債의 原因은 무엇인가? 더구나 80年代에 들어와서 負債는 急激히 增加하고 있다. 農村水産部의 公式統計에 의하더라도 79年 末 以後 85年 末까지의 6年 사이에 農家負債는 11.7培나 늘었고 年平均 50.7 %의 速度로 增加하고 있다.[12]

이러한 農家負債의 根本的인 原因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農業이 갖는 小農經營樣式을 指摘하지 않을 수없다. 즉 그 根本性格이 前資本制的 農業인 小農經營樣式으로서 全體資本主義의 經濟秩序 속에서 農業外 資本에 의하여 支配·收奪 당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 外部的인 要因이 作用하여 그 狀況을 더욱 惡化시키고 있다.

그러한 要因으로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첫째 低農産物價格 政策이다. 즉 政府의 低收買價政策과 이의 維持를 위한 無分別한 農産物 輸入政策이다. 이러한 低農産物價格 政策의 持續은 農家所得의 主種을 이루는 農業所得을 낮은 水準에 머물게 함으로써 農家所得의 向上을 가로막는 最大의 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둘째 外形的 實積爲主의 强制農政이다. 즉 營農資金, 農機械資金, 소入殖資金 등의 無責任한 所得增大事業權奬과 政策金融의 支援 및 最近의 소위 '複合營農' 施策이다.

세째 過重한 租稅負擔이다. 農民이 負擔하는 主要稅金은 住民稅, 財産稅, 農地稅 등으로 이 中에서 가장 큰 負擔이 되는 것은 農地稅이다. 그런데 甲類農地稅의 경우 粗收益(總收入)에 대해 稅金을 賦課하는 것으로서 生産에 投資한 費用(經營費 生産費 등)까지 稅金을 賦課하는 것이다. 이것은 農業投資를 增大시켜 粗收益을 올리면 累進的으로 稅金이 賦課되는 累進稅率의 適用으로써 投資增大에 대한 比例的 利益保障없이 稅金負擔만 增大하게 된다.[13] 더우기 農民에게 賦課되는 稅金은 衡平의 原則과 租稅法律主義에도 어긋나는 性格의 것이다.

네째 農家의 無計劃的인 設備投資와 消費風潮의 만연이다. 그리고 最近의 두드러진 現狀으로서 敎育費 支出의 增加를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4. 農外所得의 增大方案

以上의 論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늘날 農家負債의 解消問題는 當面한 重大課題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農家經濟의 側面에서 뿐만이 아니다. 國民經濟에 있어서 農業이 갖는 機能의 最大限의 役割을 지킴으로써 食糧自給度를 向上시키고 農産物 導入으로 因한 外貨를 節約하며 破綻된 産業構造의 改善을 通한 自立經濟 構造에로 接近한다는 經營的 側面을 考慮할 때, 또한 急激한 離農·都市集中에서 發生하는 都市問題, 勞動問題, 公害問題, 農村과 都市의 社會文化的 兩極化에서 發生하는 國民相互間의 위화감의 問題點 등 社會的 側面 및 政治的 側面을 考慮할 때 時急히 改善되어야 할 重大問題인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農家負債의 原因에 대한 改善策을 簡略히 提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低農産物價格 政策과 無分別한 農産物 輸入政策은 是正되어야 한다. 그대신 生産者와 消費者를 同時에 保護한다는 立場下에서 最小限 農産物의 生産費는 補償하면서 農業生産 및 農産物價格變動의 不安定性을 最小化하는 農産物價格의 安定化와 適正化가 實施되어야 한다. 特히 農業所得의 大部分을 構成하는 農作物 輸入中 米麥輸入이 57.5 %를 차지하는 만큼[14] 米麥價格의 安定化와 適正化는 더욱 重要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物價安定爲主의 輸入自由化論은 國內再生産基盤을 破壞시켜 長期的으로는 輸入依存度만 높여서 國際與件의 變化에 國內物價가 크게 左右됨으로써 오히려 安定을 해칠 수 있으므로 農産物輸入은 國內的으로 農業의 再生産基盤擴大를 위한 價格安定帶가 設定·運營된 후 一時的인 物價調節政策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5]

둘째 外形的인 實積爲主의 强制農政에서 脫皮하여 合理的이고 體係的인 長期計劃下에 農業및 農家經濟의 發展을 이룰 수 있는 實質的인 農政으로의 根本的인 方向轉換이 必要하다. 특히 農業政策은 農民의 70 %를 차지하는 1정보 미만의 零細農民들의 權益向上에 基礎하여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農地稅의 改善이 있어야 하겠다. 즉 甲類農地稅의 課稅標準을 現行 收入 金額에서 所得金額으로 하며 甲類農地稅의 基礎控除는 現物로 하고 그 控除額은 引上해야 한다. 또한 農地稅에도 綜合所得控除와 같이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 障碍者控除 制度를 適用해야 하며 乙類農地稅의 基礎控除額도 引上해야 할 것이다.[16]

네째 農家에서는 設備投資에 愼重을 期하여야 할 것이며 程度에 어긋나는 消費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不可避한 消費資金으로서의 醫療費, 敎育費 葬禮費 등 特殊資金에 대해서는 特殊金庫의 制度化가 政府側에 의해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農家負債 發生의 原因이 除去된다 해도 우리나라 農業의 基本性格이 小農經營인 以上 農家所得의 增大를 爲한 새로운 對策이 必要하게 된다. 즉 一般的으로 農家所得을 決定하는 主要因은 勞動과 資本의 效率, 農家當 耕地面積, 經濟組織의 形態와 企業化流通組織의 合理化,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의 比率등 5가지이다. 그리고 이들 要因을 合理的으로 調節한 所得增大策은 1. 農業生産性 2. 農村人口의 適正化, 3. 農外所得의 增大 4. 農業의 企業化 5. 農産物 流通過程의 改善등이다.[17]

그런데 農業生産性 提高나 農村人口의 適正化, 農業의 企業化, 農産物 流通過程의 改善등을 通한 所得增大策은 반드시 必要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農業의 基本 性格上 所得增大策으로서는 그 限界가 있음에 反하여 農外所得의 增大를 通한 農家所得增大는 助成施策의 成果如何에 따라 그 效果가 廣範圍하게 期待 될 수 있으므로[18] 窮極的으로 農家所得의 增大를 위해서는 農外所得의 增大를 꾀해야 하리라 믿는다.

12) 조선일보, 1987.1.15.
13) 나상기, 앞의 책, p.85 ~ 86.
14) 박기혁, 앞의 책, p.39.
15) 김종호, 농산물가격의 안정과 적정m 정책에 관한 고찰, 한양대, 1980, p.28 ~ 29.
16) 국립농업경제연구소, 농업세제에 관한 연구, 1976, p.8 ~ 9.
17) 박기혁, 앞의 책, p.297 ~ 298.
18) 강태웅, 농가소득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영대학원, 1974, p.90.

農家所得 의 劃期的 增大를 期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農業內의 所得에만 依存할 것이 아니라 農外所得의 擴大를 꾀해야 하며 여기에는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이 要望된다.

즉 農村勞動力의 機會費用이 增大되는 方向에서 農村地域에의 工場誘致 및 副業團地 造成을 위해서는 1. 國內에서 生産되는 原料를 使用하는 中小企業을 地方都市에 分散 立地케 하기 위한 措置가 講究되어야 하며 2. 地方에 分散 立地되는 企業에 對해서는 原料供給의 優先權과 減稅措置를 就하며 3. 中小企業銀行의 地方店鋪를 擴充하며 資本供給을 圓滑히 하고, 4. 地方中小企業의 生産活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技術供給을 政府가 支援하며 5. 動力 供給과 交通施設의 完備를 위해 政府는 外部經濟 創造를 積極 推進해야 한다는 것이다.[23]

이상과 같은 諸 方案이 이루어질 때 農村地域으로의 工場誘致와 副業團地造成은 效果를 거둘 수 있으며 이로써 國民經濟에 대한 農業部門의 役割이 負에서 積極的인 役割로 轉換되어 安定的인 經濟成長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23) 위의 책, p.300 ~ 301.

참 고 문 헌

- 강태웅,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영대학원, 1974.
- 국립농업경제연구소, 농업세제에 관한 연구, 1976.
- 김종호, 농산물 가격의 안정과 적정화 정책에 관한 고찰, 한양대, 1980.
- 나상기, 「한국농업문제의 현황」, 『한국 경제의 현단계』, 사계절, 1985
- 박기혁, 한국 농협경제, 박영사, 1983.
- 박병우, 농가저축과 공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영대학원, 1982.
- 정영일, 「외향적 경제발전과 농업정책」,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한국 농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업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1984.
- 조선일보, 1986. 11. 7.
  1987. 1. 15.
-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84년 농촌사회 사정, 1985.

우리나라 도급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박 헌 규
(경영학과 4년)

목 차

1. 서론
2. 도급제도의 이론적 분석
   가. 도급제도의 개념과 본질
   나. 도급거래의 종류
   다. 도급거래의 특징과 경제적 이익
3. 우리나라 도급제도의 현황
   가. 수급 의존도
   나. 도급거래의 이유
   다. 재도급의 현황
   라. 모기업의 지원 현황
   마. 향후 도급계획
   바. 매출 현황
   사. 기술개발의 추진
   아. 종업원 규모별 수급기업수 및 도급거래의 추이
4. 우리나라 도급제도의 문제점
   가. 불공정 거래
   나. 일반적 문제점
5. 우리나라 도급제도의 개선 방향
   가. 기본 조건
   나. 도급 거래의 확충방안
   다. 정책의 개선 방향
6. 결론

1. 서 론

우리 경제는 그동안 정부의 주도적인 개발정책과 국민들의 근면성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왔고 앞으로 1980년대의 제2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공업화와 국민소득의 극대화라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오는 가운데 산업구조적으로 몇가지 불균형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새로운 성장을 제약하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함으로써 그 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제 문제 중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조립기업과 부품공업간의 불균형문제가 본 연구소에서의 논의의 중심이다. 1960년대 이후 설비투자와 생산의 확대등 산업활동은 주로 완제품조립위주의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또한 급속한 수출증대로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축적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결과, 대기업이 불균형적으로 비대하여지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화학공업의 하부구조인 기초소재부문과 부품공업부문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발전, 특히 기계공업의 생산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부품의 자급도가 낮고 이에따라 원자재및중간재 수입으로 경제개발 효과의 해외 누출과 국제수지의 악화가 나타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대가 장애를 받으며, 나아가서 경제발전 자체가 제약을 받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부품공업의 육성과 발전없이 국민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는 것은 힘든 노릇이다. 그런데, 부품공업의 발전은 중소기업 자체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대기업과의 구조적인 분업체제내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조립공업과 부품공업의 연계적 발전의 요소인 도급제도의 합리적 발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급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급계열화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도급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서 모기업측에서는 부품의 최종완성을 담당하고 수급기업은 이를 위한 부품이나 부속품을 생산하는 기업분업적인 도급형태를 기본으로 삼고 300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 수급기업과 대기업인 발주기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나라라는 장소적 상황과 198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도급제도에 관한 본 연구를 전개하겠다.

2. 도급제도의 이론적 분석

가. 도급제도의 개념과 본질

경제기획원고시에 따를 때[1], 하도급거래(下都給去來)라 함은 "하도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물품,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자재의 제조나 수리, 건설공사의 위탁을 받고 이를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그 위탁의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급거래는 일반적으로 발주기업이 제품, 반제품, 부품, 부속품 등의 제조 또는 소재가공을 수급기업(受給企業)에 위탁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도급거래의 특징적인 면은 발주기업(發注企業)과 수주기업이 존재하고 양자간에 위탁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1) 경제기획원 고시 제59호 :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 지정 고시 제6항을 참조할 것. 한편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계열화라 함은 제조업자, 가공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부속품 및 원료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상호 분업적 협력 관계를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

각 기업이 필요부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2] 첫째의 구분은 내제(內製)에 의한 조달과 외주(外注)에 의한 조달이다. 필요부품을 기업자체에서 만들어 낼 때 이를 내제라고 하고, 다른 기업의 공급에 의존할 때 외주라고 한다.

둘째의 구분은 외주에 의한 조달을 다시 구매(Purchasing)와 도급(Subcontracting)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때 내제에 의한 조달은 필요부품을 생산하는 과정들의 수직적통합에 의하여 가능하고, 구매에 의한 조달은 시장기구를 매개로한 사회적 분업에 의하여 가능하다. 도급은 산업조직상 수직적 통합과 사회적 분업의 중간형태로서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기업간의 분업이 수평적 대등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매매관계를 기초로 형성되지 못하고 발주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위치에 놓여지게될 때 이를 도급거래라 하며 이와같은 도급거래가 계속적으로 형성될 때 이를 계열화라고 한다.[3]

따라서 어느 대기업이 다른 대기업의 부품을 발주하는 것과 같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거래를 구매라한다면 도급거래는 지배종속관계를 수반하는 부등가교환(不等價交換)을 하는 것이며 발주기업을 정점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밑에 존재하는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나. 도급거래의 종류

(1) 모기업의 기능에 의한 구분

이것은 모기업이 최종생산물의 제조와 판매를 모두 담당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이는 수급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형태와 생산단계에서 따라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4] 첫째, 상업적 도급으로 이는 모기업은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직 제품의 판매망만을 가지고 수급기업은 모기업의 상표로 판매될 완제품을 생산하여 모기업에 납품하게 된다. 이와같은 상업적 도급거래는 상업자본이 산업자본화한다는데 큰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둘째, 기업분업적 도급으로 모기업측에 부품의 최종완성을 담당하고 수급기업은 이를 위한 부품이나 부속품의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분업적 도급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도급거래란 이를 칭한다.

(2) 재화의 흐름에 의한 구분

첫째, 국내기업간 도급으로 이는 도급거래가 국내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둘째, 국제기업간 도급으로 도급거래가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국적은 동일하여도 서로 다른 국가의 영토내에서 활동하는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국제기업간 도급은 직접적인 도급과 간접적인 도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5]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도급이란 수급기업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가 타국 소재의 모기업에 납품되는 경우이고, 간접적인 도급은 수급기업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가 외국의 다국적기업의 수급회사가 존재하는 국가에 설치한 자회사에 납품되는 경우로서 국가내에는 위치하나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이 외에도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간에 도급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3) 도급동기에 의한 구분[6]

첫째, 생산능력 도급거래로 이는 일시적인 수요증가에 의하여 생산의 증가가 필요할 때 시간의 근무나 시설확장보다는 도급을 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

2) 양해성, '우리나라 도급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육사 논문집 제30집, 1986, 128쪽 - 129쪽
3) 유세준, '도급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청주 대학교 경영학 논집 제6집, 1984, 28쪽
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도급 거래의 현황과 개선 방향', 1983, 14쪽
5) 한국 산업 기술 연구원, '국제 도급 거래 양상과 실제', 1983.3쪽
6) 유세준, 앞 책, 31쪽

다. 둘째, 비용절감 도급거래로 이와같은 비용절감은 여러 모기업이 도급을 주는 기본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비용절감이 도급거래를 통해 가능한 이유는 중소기업 수급기업들이 대개의 경우 이윤율을 낮게 잡고 있으며 노무자들에 대한 부가급여가 낮고 관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세째, 한계 도급거래로 이는 특정의 전문적 생산설비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기업에 대하여 모기업이 특정부품의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도급거래이다.

(4) 특정 모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에 따른 분류[7]

첫째, 전속형 도급으로 여기에서는 수급기업의 특정 모기업에서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발주모기업은 정보수집, 기술지도, 자금원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수급기업은 발주모기업의 생산공정상의 특정 부문제조를 담당하게 된다.

둘째, 분산형 도급은 기술적으로 보통정도의 부품을 제조하고 한 기업에의 판매 의존도가 낮은 경우를 말한다.

발주모기업의 입장에서 전속형 도급은 강력한 통제, 원활한 내적 연락,설계 비밀 등의 유지에 유리한 거래관계이나 반면에 불황시 수급기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수급기업의 입장에서 전속형 도급은 불황시 모기업에 의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발주모기업에 순응해야 한다는 불리한 점도 있게 된다.

다. 도급거래의 특징과 경제적 이익

(1) 도급거래의 특징

수급기업이 모기업의 주문에 의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활동과 구분되는 것은 첫째, 모기업이 소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자는 수요자의 독특한 기호를 충족시켜야 하는 즉 제품의 디자인이 모기업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다는 점이고 둘째, 수급기업이 독자적으로 시장개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특징은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밀접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수급기업이 모기업과 거래관계에서 불리한 지위를 갖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급기업은 시장개척의 노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재화의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어느 특정의 부품생산에 전념할 경우 전문화가 쉽게 이루어져서 모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2) 도급거래의 경제적 이익

모기업과 수급기업의 수직적및 수평적 결합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생산시설을 근대화하는데 용이하며, 전문적 경영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기업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규모의 비경제를 초래하게 된다.[8] 왜냐하면 특정 생산공정에서 과잉시설을 초래하게 되고, 경제적인 비경제가 따르게 되며, 독점에 대한 사회경제적 압력등이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수급기업들은 모기업에 비하여 임금율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생산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기업이 도급거래를 함으로써 이점은 노동비용과 자본감가비용의 저렴, 생산비 절감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급을 받는 수급기업은 판매의 안정과 전문화의 용이, 모기업으로부터 기술경영지도와 원자재와 지원, 금융지원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도급거래의 증진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이익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수입대체가 용이해져서 대외경쟁력이 강해지며 산업의 분업적 분산이 이루어져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기대할 수 있고 근대적 기업경영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활발하게 된다는 점이다.

7) 김재원, '도급 제도의 현황 및 도급 거래의 증진 방안', 한국 개발 연구원, 1983,20 쪽 - 24 쪽
8) 김재원, '도급 조직의 실태와 대책', 한국 개발 연구원, 1982,190 쪽

3. 우리나라 도급제도의 현황

가. 수급 의존도

수급 의존도(35년)

(단위 : %)

종업원 수	60% 미만	60 - 80%	80 - 95%	95% 이상
5 - 19	25.0	6.3	-	68.7
20 - 99	14.4	4.5	6.1	75.0
100 - 199	21.1	9.9	12.7	56.3
200 - 299	17.4	8.7	10.9	63.0

수급 의존도란 수급기업의 연간 총매출액 중 모기업에서 도급을 받아 납품한 금액의 비중을 말한다.[10] 즉 수급기업이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도급거래의 의존하고 있는 비중을 의미한다. 위의 표 I 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업체중 70%이상이 매출액중 80%이상을 수급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수급 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기업간의 확대 심화된 데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나. 도급거래의 이유

(표 2) [11]

도급 거래의 이유(85년도)

종업원수	거래의 안정성	매출의 증 가	제품의 다양성	기 술 지 원	자 금 지 원	자 재 공 급	모기업 요 청	기타
5 - 19	62.5	12.5	18.8	-	-	6.2	-	-
20 - 99	53.1	12.1	4.5	0.8	1.5	6.8	19.7	1.5
100 - 199	42.3	19.7	4.2	-	-	4.2	26.8	2.8
200 - 299	47.8	6.5	2.2	2.2	-	6.5	34.8	-

수급기업이 모기업과 도급거래를 하는 이유를 보면 거래의 안정성과 모기업의 요청에 의한 것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도급거래가 경영활동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수급기업의 매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도급거래를 하며, 또한 수급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된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다. 재도급의 현황

(표 3) [12]

재도급 현황(85년도)

	5%미만	5 - 10%	10 - 30%	30 - 50%	50%미만
구 성 비	14.3	19.5	44.1	11.7	10.4

9) 중소기업은행, '도급거래실태조사', 1986, 13 쪽
10) 중소기업은행, 위 책, 14 쪽
11) 중소기업은행, 앞 책, 15 쪽
1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 종합 집계표', 1984, 19 쪽

도급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일반적인 도급거래 형태는 모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1차도급을 발판으로 재도급, 또한 재도급을 발판으로 3차 도급등으로 전개되어 모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밋형의 분업적 생산업체 또는 생산의 시스템화가 형성되는 것이다.[13]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급거래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1차 수급기업의 외한 재도급은 크게 전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 모기업의 지원 상황

(표4) [14] 모기업의 지원 상황(85년도)

	기술지원	원자재공급	설비제공	경영제도	금융지원	없 다
비 율	80.5	48.8	19.5	14.6	12.2	2.4

모기업의 지원상황을 보면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업체가 80.5%를 차지하고 있어 모기업이 수급기업의 기술문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비제공이나 금융지원 등 수급기업의 경영에 직결되는 적극적인 지원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향후 도급 계획

(표5) [15] 향후 도급 계획(85년도)

종업원 수	확 대	현수준 유지	축 소	기 타
5 - 19	37.5	37.5	12.5	12.5
20 - 99	50.8	43.2	3.0	3.0
100 - 199	53.5	40.9	2.8	2.8
200 - 299	69.5	26.1	2.2	2.2

수급기업의 경우 도급거래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적은 반면, 현상태 유지나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압도적인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도급제도는 점차 증가하여 기업간 분업이 심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바. 매 출 현 황

(표6) [16] 수 출 현 황

구 분	86년 1/4	2/4	3/4	4/4	87년 1/4	2/4
L/C직접수취	28.2	29.0	29.6	39.2	31.9	32.4
L/C대행	8.7	9.0	8.9	8.7	9.9	9.7
Local L/G수취	45.9	44.8	43.8	44.0	41.3	40.8
단순하청	17.2	17.2	17.7	17.1	16.4	15.5

13) 일본의 경우는 기계 공업에 있어 수급 거래의 약 80%가 재도급에 의존하고 있다. 김재원, '도급거래 현황 및 도급 거래의 증진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3 참조.
14)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앞 책, 21쪽
15) 중소기업은행, 앞 책, 26쪽
16)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연구', 1986,1987.140쪽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약9% 이상을 도급에 의하여 생산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7에서도 나타나 듯이 거의 지속적인 추세로 보인다.

수출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L-ocal L/C 수취와 단순하청을 합하여 약 60% 정도를 하청 생산, 판매하고 있다.

사. 기술개발의 추진

(표7) [17] 내 수 현 황

구 분	86년 1/4	2/4	3/4	4/4	87년 1/4	2/4
시 장	28.4	28.1	27.5	27.1	29.3	29.5
도 급	8.6	8.5	8.6	9.5	9.5	9.3
주 문	48.3	47.3	48.2	47.6	45.0	44.6
기 타	1.6	1.4	0.9	1.0	1.6	2.0
판 납	13.1	14.7	14.8	14.8	14.6	14.6

(표8) [18] 기술 개발의 추진 현황(83년)

기 술 개 발 체 제 현 황	표본의 크기	응답 기업수	비 율
독자적으로 전문체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	492	328	66.7
독자적으로 전문체제와 전문요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	492	136	27.6
연구비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	414		
0.5%미만		255	61.6
0.5-2%		113	27.3
2-3%		15	3.6
3%이상		31	7.5
모기업과의 기술협력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			
신제품 개발	295	255	85.4
품질 개선	296	263	90.1
원가절감	287	221	77.0
신공정 도입	279	212	76.0
공정 개선	283	225	79.5
모기업과의 협력외에 기술협력방안 자사 단독으로	504	323	64.0
수급기업들의 희망하는 모기업과의 기술협력방안	286		
기술자 파견		66	23.1
기술인 교육		56	19.6
설비 대여		55	19.2
해외 연수 주선		54	18.9
품질 검사		38	23.8

17)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연구, 1986,1987.103쪽
18) 김재원, 도급 조직의 현황과 도급 거래의 증진 방안', 1983.78쪽-82쪽

표본의 크기	응답 기업수	비 율
314	160	51.0
267	46	17.2
	121	45.3

모기업에서의 생산계획 불안정이나 무계획성이 수급기업의 기술개발을 무의미하게 한 경우
수급기업에서 수입대체제품을 개발하였을 시 모기업은 적극적으로 수입대체에 노력
가격, 품질이 현저해야 가능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우선 생존이 기업경영의 주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이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지만 못할 것 같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체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매출액의 0.5%미만인 경우가 61.1%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체제는 형식적인며 별로 효과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모기업으로부터 기술자 파견이나 기술 인력훈련과 같은 직접적인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모기업과의 장기계약에 의한 안정적생산계획이가능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따라서 정부와 모기업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원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기업에 대한 기술정보의 제공,도급의 알선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것이다.

아. 종업원 규모별 수급기업수 및 도급거래의 추이

(표 9) [19] 종업원 규모별 수급 기업수 (1984)

종업원 수	㉠ 중소기업체 수	㉡ 수급기업 수	㉠/㉡	구 성 비
5 - 19	23,167	8,335	36.8 %	26.4 %
20 - 99	12,153	6,165	51.3 %	52.7
100 - 199	1,990	1,004	50.5	6.3
200 - 299	774	336	41.6	2.1

(표10) [20] 도급 거래의 추이

(단위 : 10억원)

연도	㉠중소기업체수	㉡수급업체수	㉡/㉠	㉢제조업총출하액	㉣중소제조업체	㉤도급거래액	㉣/㉢	㉤/㉢	㉤/㉣
76	23,166	4,556	19.7%	11,463	3,067	626	26.8%	5.5%	20.4%
78	25,631	4,666	18.2	20,898	6,789	1,052	32.5	5.0	15.6
80	30,688	9,224	30.1	35,277	11,979	3,067	34.0	8.7	25.6
82	35,798	12,149	33.9	51,292	19,532	7,071	38.1	13.8	36.2
84	38,084	15,840	41.6	70,369	28,073	11,678	39.9	16.6	41.6

19) 상공부, '중소기업실태보고서', 1984.
20)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중소기업실태 종합 집계표', 각년도

중소기업에서 도급거래를 하는 업체는 76년에는 19.7%에서 84년에는 41.6%로 늘어났다. 이와같은 도급거래 비중의 증가는 국민경제상의 분업의 확대 또는 분업이 심화되었음을 나타낸다.

4. 우리나라 도급제도의 문제점

가. 불공정 거래

우리나라는 경제적 집중과 독점적 구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영세 중소기업과의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불공정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대한 제소가 없었던 것인가[21]하는 문제와 현실적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는 것보다 대기업 상호간의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힘은 상호경쟁관계에서 있는 대기업 뿐이기 때문인가 하는 점이 의문시 된다. 그러므로 중소수급기업은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어서 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거래의 혜택도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으로 당국에 제소도 하지 못하고 자체에서 소화하지 않으면 거래처 상실로 인하여 도산하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대기업의 선처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밝히기 위하여 우리나라 수급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애로사항의 실태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불공정 거래의 원인이 되는 전반적인 애로 사항을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표11) [22] 도급거래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단위%)

연 도	까다로운 품질검사	저렴한 주문단가	대금회수기간의 장기	불안정 한 발주	납품기일의 촉박	기 타
1981	11.1	31.1	36.9	15.0	5.7	0.2
1982	14.3	34.6	25.7	15.7	9.2	0.5
1983	11.4	38.0	31.4	9.4	9.2	0.1
1984	12.6	38.3	22.3	19.6	6.0	1.2

표 1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수급기업 들은 도급거래에 있어서 저렴한 주문단가와 대금 회수기간의 장기를 가장 큰 문제 및 애로사항으로 삼고 있다.

(1) 도급 계약서의 작성

(표12) [23] 도급 계약서의 작성 여부(1985년)

	작성한다	작성안한다
비 율	77.7	22.3

(표13) [24] 계 약 서 기 간(85년)

(단위%)

	매 건 별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 - 2년	2년 이상
비 율	55.3	8.3	18.8	14.6	3.8

21) 한국산업경제 기술 연구원, '국제도급 거래의 양상과 실제', 1983.16쪽
2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중소기업실태종합 집계표', 1982.1984.
23)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연구', 24쪽
24) 중소기업은행, 앞 책, 24쪽

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수급기업이 77.7%로 나타나 계약서 작성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는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서 수급기업은 계약서 내용대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받는다 하겠고 모기업은 적기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균 도급기간을 보면 연도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한 기업은 55.3%로 가장 많으며, 6개월 이상 2년 미만이 33.4%, 그리고 2년이상 장기계약은 불과 3.8%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계약의 장기화는 수급기업의 경영안정화를 기하게 할 뿐 아니라 모기업의 안정적인 부품 확보를 보장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장기계약의 미비는 도급제도의 문제점의 하나이다.

(2) 납품가격의 결정방법

(표 14) [25] 모기업 측면 (85년)

	모기업 일방적	입 찰	상호 협상
비 율	2.4	2.5	95.1

(표15) [26] 수급 기업 측면(85년)

	모기업일방적	입 찰	모기업일방적	상호협상
비 율	1.5	4.5	15.9	78.1

도급거래시 납품가격의 결정방법을보면 모기업 측면에서 95.1%가 수급기업과의 상호협상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수급기업의 경우에도 78.1%의 업체가 모기업과 상호협상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납품가격의 결정은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상호협상에 의하여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수급기업이 도급거래시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 저수익성을 지적한 업체가 19.2%로 나타나[27] 가격협상시 모기업의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모기업과 상호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수급기업이 83.4%를 차지하고 있으나 57.1%의 업체가 모기업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여[28]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납품가격 결정시 모기업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급기업의 시장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기술의 개발 및 전문생산체제의 확립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3) 납품대금의 결제조건

(표16) [29] 어음 수취율(85년)

	전액현금	30%미만	30 - 50%	50 - 80%	80 - 100 %	전액어음
비 율	12.1	6.0	4.2	18.2	27.9	31.7

25) 중소기업은행, '도급거래실태조사', 1986.26쪽
26) 중소기업은행, 앞 책, 26쪽
27) 중소기업은행, 앞 책, 25쪽
28) 중소기업은행, 앞 책, 25쪽
29) 중소기업은행, 앞 책, 27쪽

(표 17) 어음의 평균 결제 기간 (85년)

	30 일 이내	30 - 60일	60 -90 일	90 - 120 일	120 일이상	평균기간
비 율	1.7	16.3	27.9	44.2	9.9	78 일

(표 18) 납품후 어음을 받기까지 소요기간(85년)

	10 일 이내	10 - 20일	20 - 30 일	30 - 50일	51일 이상	평균소요기간
비 율	12.0	24.5	40.8	7.3	15.4	39.9일

도급거래에 있어서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 납품대금을 결제조건을 보면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 있는수급기업이 12.1%로 나타났으며 납품대금의 80%이상을 어음으로 받고 있는 수급기업이 59.6%, 50 - 80%미만인 수급기업이 18.1%로 나타나 수급기업의 외상매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보인다. 또한 어음의 평균결제기간을 보면 60일 이상인경우가 18.0%로 나타났으며, 60일 - 89일 27.9% , 90일 - 119일 44.2%, 120일 이상이 9.9%로 1사 평균 결제기간은 78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납품후 실제로 어음을 받는 기간을 보면 10일 이내인 경우가 12.0%에 불과하며 11일 - 30일이 65.3%, 31일 - 50일 7.3%, 51일 이상이 15.4%로나타나 1사 평균 소요시간이 약 40일로 나타나 수급기업이 납품후 실제로 대금을 받는 기간은 118일가량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납품대금에 대한 외상매출 비중이 높고 대금 결제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모기업측에서는 어느 정도 자금난을 수급기업에 전가시킬 수 있겠지만 자금력이 미약한 중소 수급기업에 있어서는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수 있겠다.

(4) 발 주 상 황

(표 19) [30] 모기업으로 부터의 발주 상황 (85년)

(단위 %)

종업원수	발주량이 일정하고 정기적이다.	발주량은 일정하나 비정기적이다.	발주량은 일정하지 않지만 정기적이다.	발주량도 일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이다.
5 - 19	18.7	18.7	31.3	31.3
20 - 99	13.6	15.2	39.4	31.8
100-199	16.9	14.1	33.8	35.2
200-299	37.0	10.9	30.4	21.7
전 체	18.9	14.3	35.9	30.9

모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발주는 수급기업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모기업으로부터의 발주가 안정적인 수급기업은 원자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으며, 생산시설의 투자 및 노동력의 확보를 계획성있게 추진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기업으로부터의 발주량이 일정하

30) 중소기업은행, 앞 책, 28쪽

고 안정적이라는 수급기업은 18.9%에 불과한 반면 30.9%의 수급기업에서는 발주량이 일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불안정한 발주가 수급기업의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200-299인 규모의 수주기업에서는 발주량이 일정하고 안정적인 업체가 37.0%로 나타난 반면 19인 이하의 소기업에서는 18.7%로 나타나서 소규모 업체일수록 모기업으로부터의 발주가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일반적 문제점

(1) 모기업의 지원능력 미비

바람직한 중소 수급기업의 육성은 모기업이 수급기업들에 대하여 기술, 자금및 시설지원을 직접 담당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모기업이 수급기업에 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축적된 기술이 부족하고 모기업 자체의 재무구조의 취약으로 수급기업에 대한 자금, 시설, 원자재에 대한 지원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기업의욕의 저하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이 타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보다 소득이 높거나 기업경영에서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제여건으로 인해 기업의욕이 크게 침체되어 있다. 특히 단기의 고이윤율만을 기대하는 나머지 장기투자 경영개선을 통한 이윤율제고, 장기계획에 의한 기술 축적및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등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3) 경제 정책간의 상충

오늘날까지의 성장 정책이 수출에 크게 의존하여 왔고 또 수출증대를 위하여서는 수출상품의 품질향상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32] 그러나 국내의 부품 전문 생산기업이 미발달된 상태에 있는 데다가 소재산업의 취약으로 수출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부품이나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33]

그러므로 수출의 증진 정책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중소기업 특히 수급기업의 육성과는 상충적인 입장에 있는 셈이다. 즉 수출정책이 최우선으로 놓여 있어 중소 수급기업의 육성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져 있는 실정이다.

(4) 수급기업간의 협력기반 미약

생산의 분업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어느 한 기업제품의 질적실패는 전체의 질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이는 분업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급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의식의 고취는 도급거래 확충의 매우중요한 요소이다.[34]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경제력이 약하므로 기업적 협력을 통하여 원료의 공동구매, 기술개발, 공동투자, 생산설비의 공동이용등을 이루어 생산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1) 김재원, '도급 조직의 현황 및 도급 거래의 증진 방안', 1983. 88쪽
32) 한국산업경제기술원, '국제도급 거래의 양상과 실제', 1983.58쪽
33) 중소기업 학회, '중소기업연구', 1983.76쪽
34) 중소기업은행 조사부, '도급 거래의 문제점-한국의 중소기업', 1978.58쪽

(5) 모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점

(표 20) [35] 모기업의 도급시 애로 사항(85년)

(단위%)

	품 질	납 기	적절업체의부족	물 량 확 보	수급기업의불안정한 경영
제 1 순위	68.3	19.2	12.2	-	-
제 2 순위	26.8	43.9	14.6	9.8	4.9
제 3 순위	4.9	31.7	19.5	29.3	14.6

모기업은 도급거래를 통하여 수급기업의 전문기술 이용, 과다한 시설투자의 억제, 원가절감등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거래조건도 수급기업에 비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수급기업에 대한 발주시 제품의 품질불량 납기불이행 등으로 많은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업이 제1순위로 지적한 애로사항을 보면 품질불량이 68.3%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기업이 가장 중시하는 부문이 부품의 품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모기업은 수급기업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한층 강화하며 품질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는 문제를 제기된다.

또한 납기불이행도 모기업이 겪는 큰 애로사항의 하나인데 이에 대한 모기업의 대처방안을 보면 수급기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는 업체가 6.1%, 타기업에 주문한다는 업체가 2.4%, 재고품을 비축한다는 업체는34.2%로 나타났다. 이를 1970년에 조사한 자료와 비교하여 보면[36] 모기업이 강경세제에서 점차적으로 수급기업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우리나라 도급제도의 개선방향

도급거래는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계약에 의하여 모기업의 주문에 대한 수급기업의 생산,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 분업체계가 형성되는 거래이므로 독자적 시장개척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도급거래도 하나의 경제거래이므로 도급시장의 균형은 모기업에 의한 수요와 수급기업에 의한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도급거래량의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증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가. 기본 조건

도급거래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은 우선 시장조건과 기술조건의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모기업이 도급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의 확립도 필요하다.

(1) 시장조건과 기술조건

시장조건이란 충분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기술조건이란 기술축적이나 혁신의 결과로서 도급거래가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위의 두조건은 상호의존적인 것이다.[37]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와같은 조건에서 저위에 머물게 된다. 그 이유는 먼저 시장조건면에서 중소기업 상호간의 과당경쟁, 모기

35) 중소기업은행, '도급 거래 실태 조사', 1986.33쪽
36) 중소기업은행, '주요 업종의 하청 실태', 1970.
이 자료에 의하면 거래 중지가 47.8%, 발주량 감소가 34.8%, 단가 인하가 13.0%로 나타나 강경하게 제재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37) 전국 경제인 연합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적 육성방안', 1977.103쪽

업의 도급단가인하나 대금지불 지연, 대기업의 시장독점, 시장조사나 각종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예측의 불확실성, 판고 선전이나 서어비스 등의 판매능력의 부족등의 요인을 들수 있겠다.

다음에 기술조건의 면에서는 근대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것과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기술혁신만이 기업의 경쟁력과 이윤율을 높이는 최선의 방도가 되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상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가면 전문 수급기업의 육성을 통해 도급거래가 증진되며 제품의 품질향상과 가격인하가 이루어져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수출증대와 수입대체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2) 모기업의 도급기업의 선정기준

도급거래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기업은 수급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파악하고 그 기준에 알맞게 수급기업을 육성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보면 품질, 납기, 가격, 경영능력, 지리적위치등이 중요한 기준

(표 21) [38] 외국의 모기업의 수급 기업 선정 기준

미	국	서 구 (자동차 산업)	일 본
기 본 적 기 준	부 차 적 기 준		
○ 부품의 제조경험 풍부	○ 공장의 장소나 시설, 노동	○ 품질의 적정	○ 품질관리 또는불량율
○ 경영능력의 우월	○ 지리적 위치 (모기업에의접근)	○ 납기의 준수	○ 납기의 확보와 공정관리
○ 재력가 통재가적정	○ 도급공장의 규모	○ 가격의 주도권 (가격교섭의여유)	○ 설비능력
○ 모기업과협력하는 능력과 의욕			○ 경영의신뢰도 및 경영자의 능력
○ 노무비와 간접비의 적정			○ 가격에 대한 협력도

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급기업은 이 선정기준에 적응해 가면서 품질, 납기의 엄수와 기술성능의 향상 그리고 원가절감등 경영 관리능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모기업의 일방적 강요사항이 될 수 없고 등가교환과 공정거래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나. 도급거래의 확충방안

(1) 공정거래의 확립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공정거래 확립을 결과적으로 도급거래의 증진을 가져오며 하도급거래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같은 공정거래없이 지속적으로 도급거래를 계속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이윤축적을불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존립과 성장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우세한 힘을 가지고 수급기업에서 단가의 부당한 인하, 대금지불의 지연, 지나친 엄중한 결사 전속화의 강요 등으로 수급기업을 당혹케 하는데 [39]이의 해

38) 중소 기업 학회, '중소 기업 연구', 1983 .25 쪽
39) 이오범, '중소 기업 계열화의 확립 과정과 증진 방안', 중소 기업 학회, 1983.35 쪽

결을 위해서는 첫째, 가격결정은 수급기업의 원가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도급 수량도 수급기업의 생산준비비를 흡수할 수 있는 최적로트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겠고, 둘째, 대금지불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에 의하여 (60일 이내)적기에 지불되어야 하며 또한 검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여 대금지불 지연의 방편으로 삼는 일은 근절되어야 하겠고 세째, 하도급 물품의 검사시에 객관성을 가진 독립된 제3 기관을 채택하여 부당한 검사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수급기업의 공급능력의 강화

첫째, 재력이 빈약한 중소 수급기업들에 대하여 시설투자나 시설교체나 개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위험이 큰 첨단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도급증진을 위하여 수급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도급거래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수급기업간의 시설과 원료의 공동이용과 공동구매, 그리고 기술의 공동개발등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세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그 적응력이 강하고 민첩하다. [40]

그러므로 이 중소기업들이 끊임없이 생성변모하여 가는데 이를 더욱 활발히 움직이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과 전업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게 있다.

(3) 중소기업 영역 확보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은 기업간 불균형 성장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 분야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오고 있다. 대기업의 기업결합을 통한 중소기업 분야로의 침투는 독립중소기업의사업의욕을 축소시켜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지시켜 온바 재벌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 또는 소규모 시장을 가진 업종에까지 진출해 있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41] 이와같은 독과점 대기업의 출현은 국민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제적 집중을 가져올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창업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경쟁능력을 제도적으로 약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전문 기계업종 중소기업 계열화업종, 고유중소기업형 업종 등의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특화업종을 지정하면서 중소기업을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계열화에 있어서도 지정업종이나 품목을 고시하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2]

그러므로 우선 지원업종이나 계열화업종과 품목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고 또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작업은 계열화촉진 장기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미 선정된 업종이나 품목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침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하도급 계열화 증진정책

내제화(內製化)부품 생산의 이전과 도급증진정책으로 대기업이 자체생산 내제화하고 있는 부품이나 중간재 생산의 전문 중소기업에의 위양, 기존 부품 중간재 생산업체의 모기업과의 계열화, 새로운 부품이나 중간재생산업체의 육성과 수입대체를 들 수 있다. [43]

현행 중소기업 정책상 부품및 중간재 생산업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도급거래 증진책으로 처음 두가지에 한정하고 있으며 세번째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중소기업 진흥법상 창업자 지원제도가 있을뿐이며 다만 대기업이 내재화하고 있는 부품이나 중간재의 중소기업에의 생산이전이나 계열화 관계증진 및 기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도급 계열화 관계의 형성의 유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새로운 부품개발 중간재 생산에 수

40) 이 전, '하도급 거래 공정화 추진 실적 향후 운용 방향', 1983.48
41) 중소기업 협동 중앙회, '중소기업 연구 논집', 1983.77-78 쪽
42) 중소기업 협동 조합 중앙회, '중소기업 당면 문제 및 종합 대책', 1982.118 쪽
43) 김광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 한국 개발 연구원, 1982.88 쪽

입대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도급거래의 형성을 위한 정책적인 입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정책의 개선방향

(1) 기술및 경영지도 확대

도급거래의 확충및 심화를 위해서는 기술및 기술인력의 육성과 경영지도의 필요성이 최우선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여러 선진공업국에 비하여 이와같은 기술의 전승이 잘 이루어 오지 못했으며 더구나 중소 수급기업들의 창업역사가 일천(日淺)하여 축적된 기술도 없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급속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을 입수 소화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정부의 기술경영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44]

그러므로 기술및 경영지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첫째, 국내적으로는 전문지도 요원에 역점을 두고 해외로부터 경험이 풍부한 퇴역 기술인을 초청하여 그들의 축적된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이다. 둘째, 전국에 지도센터의 지부망을 설치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도를 하여야 하며 지도방법은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2) 도급 주선기구의 설립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에 도급정보의 제공은 도급시장의 확대뿐아니라 기업간 경쟁을 제공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새로운 생산기술의 파급에도 효과가 크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기구로 중소기업 협동중앙회에 계열화촉진 협의회가 설치되어 계열화 촉진을 위한 대정부건의, 기업적 경쟁의 조정, 도급거래에 관한 애로사항 청취및 해결 그리고 도급거래의 주선, 지도및 알선 홍보등을 하고 있다.[45]

그러나 그 효과는 별로 크지 못하므로 중소 수급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도급 주선수단으로는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거래를 직접 알선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기대되는 효과는 산업의 지방분산을 도모하는 한편 생산의 분업을 촉진하여 도급거래를 확대 발전시키는 동시에 수급기업간 경쟁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3) 금융 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제도금융에 의한 혜택을 적게 받고 있으며 금융의 관행이 담보확보 위주이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 할당된 자금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6] 제도의 개선방향은 금융관행을 담보위주에서 신용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기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육성을 뒷받침하는 소규모 지방은행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은행이 담당하고 지역내에서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만을 고객의 대상으로 제한하여 그 지역에서 육성된 예금은 특정지역의 중소기업만을 지원토록하면 생산 분업을 위한 도급조직의 확대도 크게 촉진되게 될 것이다.

(4) 중소기업 금융방식의 개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의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1항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의 총보유한도는 대출잔액의 0.3%씩 출연(出捐)하도록 되어 있다.[47] 그러므로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에 의한 보증능력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며 또 모기업의 재무구조가 허약하여 모기업으로부터의 수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회수가 확실한 생산자금에 대하여서는 지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은 자금의 신속한 유통이 중요하므로 자금지원 대출의 형성보다는 어음 할인의 방법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5)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증진책 강화

중소 전문 수급기업 육성의 중요한 애로 요임의 하나는 해외 시장의 개척문제인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중소기업 제품 전담 수출기구를 강화하여 국제도급을 확충시키는 것이다.

6. 결 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자립경제의 달성을 지향하는 우리의 의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사회적 분업을 확립하여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도급거래가 촉진되어 수급기업이 모기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시장의 독과점구조 심화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시장지배력 방지,경제력의 격차로 인한 불공정거래 문제의 해결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격차와 대기업의 부품과 중간재의 자체생산에 따른 도급관계의 부진타개와 협력증진에 의한 산업 구조의 근대화문제 해결 세째, 부품공업과 전문중소기업 육성에 의한 분업 생산체제의 확립을 통한 효율성제고 등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도급거래의 문제는 비단 경제력 집중에 따른 독과점적 대기업과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업정책, 대외무역정책, 금융정책등 거의 모든 경제정책과의 관련을 가지는바 도급거래의 증진과 공정거래의 확립은 중소기업의 지위향상 시장구조의 개편과 표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도급거래의 확대는 부품과 중간재의 양적, 질적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상 부가가치 비중의 증대, 국제수지의 개선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호보완 관계를 의미하는 도급거래의 개선과 확대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근대화와 지위향상, 공업구조의 이중구조 탈피와 고도화, 국제수지개선, 소득향상, 고용증대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도급거래를 조성할 수 있는 기본원리인 기술조건과 시장조건을 충족해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이상에 적합한 계열화의 발전방향을 장기 전략적인 면에서 모색하여야 하겠다.

이와같은 기본방침위에 대기업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확립하고 다음에 수급기업의 전문화를 위한 자주적 적응능력을 조성하여 주는 강력한 지원이 정책적 측면과 모기업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부품공업의 육성이 촉진되어야 한다.

끝으로 오늘날 우리가 도급거래 촉진을 통한 수급기업의 육성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이유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도급거래의 대한 정책개발이나 제도개선의 효과는 모기업과 수급기업에 다같이 돌아가도록 하는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

44) 김광두, 앞 책, 45-46 쪽
45) 중소기업활동 중앙회, '중소기업 계열화 시책 설명회 자료' 1983.13-14 쪽
46) 전국 산업 경제 기술 연구원, 앞 책, 48 쪽
47) 중소기업 협동 조합 중앙회, '중소기업 관계법 해설' 1983.23 쪽

보고 I

"광주 순례를 다녀와서"

장 정 훈
(경제학과 1년)

일주일 전부터 총학생회에서 마련한 '광주항쟁 계승실천 주간' 행사의 하나로 광주순례를 간다고 했을때 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다. 광주에 가서 과연 얻는게 무엇일까. 가는 것이나 안가는 것이나 별 차이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들로 나의 머리속은 어지러웠다. 또 광주를 다녀와서 내 자신이 급격히 변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기우로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느끼는 것보다 직접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그들의 생생한 소리로 듣고 느끼는 것이 나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나의 좁은 시야를 넓혀보고 싶은 마음에서 광주로 떠나기 전날 비로소 마음을 정할 수가 있었다.

광주로 가는 날 나는 과동료들 사이에서 이번 순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림을 느꼈다. 광주만의 상처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아픔인 것을 이땅의 대학생들로서 어느정도 마음속 깊이 느끼고 광주로 떠나는 이마당에 뭔가 말하고 싶은게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날, 내 귓전에 들리던 얘기들은 '야 오늘 농구경기 있는데 보러 가자' 등이었다. 오전 수업을 받고서 오후에 출정식을 갖고 버스에 타면서도 못내 아쉬웠던 것은 내 과친구들하고 이번 광주순례의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고 떠나는 현실이었다.

광주에 들어선 시각은 10시를 훨씬 넘겼다. 전남대에 들어서면서 나는 뭔가 서울과는 분위기가 다름을 느꼈다. 대학교정에 깔린 어둠속에서 나트륨등이 발하는 주홍색의 빛과 그 빛을 받고 서서 우리들을 지켜 보고 있는 광주시민들 때문인 것 같았다. 전대생과 우리는 각각 지도부 소개를 마치고 전대 부총학생회장님의 충고가 담긴 말씀을 들었다. 그 중에 '여기서 온 사람들과 그외의 사람들도 광주민중항쟁의 촛점을 단지 학살면에만 두어서는 안될 것이고 광주시민이 왜 총을 잡고 일어서야 했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말에 깨닫는 바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역사의 현장에 앉아 있다고 했을때에는 그 참혹한 일들이 바로 이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게 실감이 안갔다. 그리고 전대 학우들의 구호와 동작 하나 하나가 매우 생소하여 한편으로는 재미있었다. 그 이후에 많은 연대 학우들이 구호나 동작을 흉내 내면서 하는 행동들이 내게는 기분을 상하게 했다. 잠시 우리들이 이 곳에 왜 왔는가를 잊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좀 더 진지했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광주의 학우들이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까 하는 생각 이전에 이번 광주방문의 목적을 되씹어 봐야 옳은 자세였을 것이다.

다음날 우리는 피곤한 몸을 재촉하여 일어났다. 광주 방문의 중요한 부분인 망월동묘역에 참배하기 위함이었다. 망월동을 향하면서 차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우리에게는 광주항쟁의 희생자와 더불어 이한열 학형이 잠든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또한 이 땅의 대학생으로서 며칠 전에 할복 자살한 조성만 열사가 묻혀 있어 더욱 우리들을 침울하게 만들었다. 망월동으로 향하는 차 속에서 나는 결코 그들의 무덤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마음 먹었다. 그러나 모습들이 오히려 그들과 광주시민에게는 안좋게 여겨질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묘역에 들어서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다. 이한열 학형의 어머님이 말씀하실때 이곳 저곳에서 우는 듯 했고 희생자들의 묘를 둘러보다가 한 희생자의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얘기들을 들을 때 가슴에 못이 박히는 듯 했다. 그 어머님은 '이런 자리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너희들이 장하다' 하시고 여기에 죽은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실때 나는 눈이 붉어져 묘역을 빠져 나와야 했다. 이 것은 광주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 그 어머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님인 것이었다. 망월동에 묻힌 수 많은 死者들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 것이고 진정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 지는 날 다시 부활하리라 하고 생각했다.

1박2일의 광주방문에서 남대협 학우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내게 가슴깊이 뿌리박혔다. 그들은 언제나 시민들과 같이 행동했다. '그들의 주장이나 행동이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말을 들었을때 느끼는 바가 많았다.

서울로 향하며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다. '광주항쟁은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 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광주만의 일이 아니고 이 땅, 한반도 모두의 일이라고' 빛 고을 광주는 계속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보고Ⅱ

전방을 다녀와서

이 병 권
(경제학과2년)

'조금은 힘들었던 전방 부대에서의 생활이 이제 모두 지나가고 내일이면 퇴소하여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화, 수, 목요일은 정말 지옥같은 생활이었다. ×사단 ×소초에서 철책 경계 근무를 섰던 날이었다. 몸에 익숙치 않아서 그랬는지 정말 견디기 힘든 3일이었다. 그러나 힘들었던 만큼이나 얻은 것도 많았다. 분단 조국, 말로만 거침없이 해댔던 '분단조국'을 몸으로 부대끼며 느꼈다. 한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놓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토록 애끓는 우리 한민족의 염원을 짓누르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모 재벌의 회장이 자금을 대어 새로 만들었다는 높고 튼튼한 새 철책 155마일에 한오라기 명주실로 그어 놓았어도 가슴 아플 원한의 휴전선에, 행여나 무너질까 다시금 찢어 놓은 한반도의 가슴이여……'

전방에서 생활하면서 갈겨 써 놓았던 쪽지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잠시 손을 놓고 앉아 그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만져 본다. 86년 이재호·김 세진 열사님들의 분신으로 한층 가열차게 타올랐던 전방 입소 거부 투쟁의 불길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다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미 전방 입소 교육의 본질을 알고 있는 여러 학우들을 중심으로 과토론회가 열리고 의견 수렴과 함께 여러 자료집을 통해 홍보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전체 차원에서의 거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출발 당일 아침, 출발 장소인 야구장에서는 출발시키려는 세력과 거부하는 세력간의 치열한 (?) 신경전으로 매우 혼잡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몇몇 학우들만이 계속 거부하기로 한 상태에서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은 결의에 찬 그들을 뒤로한 채 전방행 버스에 몸을 실어야 했다. 나도 그 대다수에 속해 있었고 남아있는 학우들을 돌아보며 전방에서 많은 것을 얻어 오겠다고 다짐했다.

원래 일정보다 훨씬 늦게 도착한 우리는 먼저 와 있던 다른 학우들과는 다르게 이름이 체크되고 상대적으로 더욱 힘든 소초를 배당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겐 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이미 난 주체적인 입장에서 분단 조국을 가슴에 안으려고 왔기 때문이었다.

난 아직도 잊지 못한다. 둘째날, 소초를 향해 행군하던 도중, 덜컹거리는 트럭 위에서 처음 보았던, 가시가 되어 가슴에 박히던 철조망을 가도 가도 끝없이 이어지던 날카로운 가시가 돋힌 철조망은 내 눈을 찌르고 가슴을 찔렀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해 놓았는가? 왜 우리는 해방 이후 40년이 넘어 지나도록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미 이 땅 한반도는 전쟁을 위해 핵기지화 되어 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한반도 어느 땅 어느 구석에서도 살아 남을 수 없는 핵 전쟁은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철모를 쓰고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은 모두 우리의 형제들이었으나 이미 그들은 우리를 위한 군대가 아니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었다. 전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명백했다.

모든 교육 일정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올 무렵, 거리엔 이미 어둠이 찾아들고 있었다. 환영해 주는 선·후배들과 함께 나온 신촌의 밤거리에서, 홍청거리는 네온사인들 사이로 차갑게 번뜩이는 철조망의 가시가 보이는 것 같아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소 설

우상(遇像)의 실종

조 규 남
(경제학과2년)

I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었다. 침침한 형광등의 불빛이 반사되는 창문으로 온통 잿빛하늘이 들어서 있었다.

"박선생, 전화 왔어요. 아주 예쁜 여자 목소린데요."

뚱뚱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서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상념을 깨웠다.

"선생". 스물 둘의 나이에 따라 붙어 마치 일계급특진 후의 계급장처럼 부담과 약간의 허세를 갖다 준 이 호칭, 그러고 보니 야학에 뛰어든지도 벌써 두 달이 흐른 것이다. 서무 책상으로 걸어가며 답안 채점으로 피곤해진 목덜미를 뒤로 한번 힘껏 재꼈다.

"여보세요, 전화 바꿨읍니다."

"저어…… 박준혁씨 동생 박상혁씨 맞죠?"

순간 둔탁하게 형의 이름이 머리속을 때렸다.

"예, 바로 제가 박상혁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준혁씨 동……, 아니 학교 친구예요."

"혹시 형의 소식을 알고계신 분은 아닌지요?"

"아니요, 저도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다만 만나서 전해드릴 물건이 있어서요."

"여보세요, 전화로 할께 아니라 제가 나가겠읍니다. 그 곳이 어디 쯤이죠?"

내 다급해진 목소리가 느껴졌는지 저쪽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다.

"여기, 근무하시는 학교앞 까페예요. 제가 까페 앞 전화박스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전화기를 놓자마자 서둘러 교무실을 나섰다. 무언가 형의 실종에 대한 단서가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성급하게 만들고 있었다.

형이 실종된 것은 대략 이주일 전이었다.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형이 휴가를 얻어 나온지 이틀만에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었다. 처음에는 친구들 만나느라 며칠 외박을 하는가 싶어, 식구들중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는데 일주일이 거의 다 되어가도록 형으로 부터 잘 있다거나, 어디 있다는 전화 한 통도 없었다. 부모님들은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형의 흔적을 찾을만한 심증이 가는 곳을 들쑤시듯이 찾아다녔지만 형은 어디에도 없었다.

일말의 단서도 남기지 않은 완전한 증발이었다. 결국 지친 식구들은 보름간의 휴가가 끝나기 전에 형이 돌아오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느정도 형의 실종에 대한 심증을 잡고 있었다.

형이 부모님의 반 강제와 눈물에 못이겨 군대에 입대하면서부터, 무언가 알 수 없던 불안이 이런 사건으로 터져버린 것이었다. 어쩌면 형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뇌리를 스쳤다.

핼쑥한 얼굴, 지쳐 멍해진 눈초리, 축 처진 어깨, 휘청거리는 걸음걸이…….

날개 잃은 새처럼 집으로 돌아온 휴가 첫날 밤, 형은 무표정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나는 조련당하고 있어, 아주 거대하고 은폐된 힘에 의해. 나는 점차 너의 적이 되어가고 있어." 그리고, 다음 날 형은 사라져 버렸다.

형은 나에게 있어서 우상(偶像)이었다. 쉽게 말해서 형은 의식화된 학생의 전형적인 모범같은 사람이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님이 속해있던 부르죠와 계급을 증오하기 시작하더니 점차 줄기찬 독서를 통해 흡잡을데 없는 이론과,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실천을 겸비한 열렬한 투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집에서 그런 형의 변화를 눈치 못챌 리가 없었다. 집안의 장남이 용공좌경이라 불리는 무리들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형이 가두시위 주동 인물로 참혀가 한동안 구속된 틈을 타서, 손을 써 형을 군대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끌려갔던 형이 전투경찰로 차출되어, 내가 2학년에 다니고 있던 Y대 앞으로 배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던가!

"안녕하세요, 이 소희에요."

까페 앞 전화 박스에 서 있던, 가날픈 체구의 여인이 이쪽으로 다가오며 인사를 해왔다.

"안녕하세요, 박상혁입니다. 자, 들어가시죠."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인지 까페는 북적거리고 있었다. 희미한 조명, 자욱한 담배연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대화들. 바깥이 내다 보이는 구석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약간 놀라셨지요? 사실은 준혁씨와는 썩 친구예요. 아니, 친구라기 보다는 동지라고 하는게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겠군요. 아까는 아무래도 야학 전화가 나름대로 도청장치가 되어 있을 것 같아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가 없더군요."

야학 전화가 도청되어 있다는 사실은 나도 짐작하고 있던 바였지만, 순간적으로 내 목소리와 야학이라는 상황을 통해 그런 사실을 추측해낸 그녀의 치밀함이 형과 일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형을 만나 보셨읍니까?"

"한 이주일전 그가 모임장소에 나타났었어요. 많이 변했더군요. 나약해 졌다고나 할까요. 아물든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그는 아무말 없이 술만 마시더니 많이 취해서 후배 등에 업혀 갔어요.

후배가 그러는데 밤새 노트에 무언가를 계속 쓰더니, 새벽에 어디론가 나가 버렸다더군요. 그 후로 우리도 그를 만나지 못했어요."

잠깐 숨을 돌리려는 듯 그녀는 담배 한대를 거내 물었다.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담배를 피우는 그녀의 모습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였다. 형은 저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았을까? 엉뚱한 생각을 깨우듯, 그녀가 말을 이었다.

"대충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돌아온 그는 무언가에 의해 조련 당하고 있는 사람같았어요. 아물든 무언가 결정적인 사건이 그를 집단속에서 탈출하게 만들었을 거에요. 아마 여기에 해답이 있을 거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한 권의 책과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래, 바로 저것이다. 형은 항상 이상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적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형이 한때 소설가를 지망했던 문학 지망생이였다는 사실이 다시금 떠올랐다. 아마도 형은 나에게 흔적을 남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사라지기 전 날 잤던 방의 후배가 저에게 가지고 온 거에요. 아무래도 제가 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를 파괴시킨 것을 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해서요. 어쨌든 그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로써는 보고 싶지 않군요. 그래서 전해 드리러 온거에요."

책과 노트를 넘겨주며 그녀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제 형의 실종에 대한 단서를 잡은 것이다.

"그럼, 전 전해드릴 것을 전해 드렸으니 그만 가보겠읍니다. 급히 할 일이 있어서요." 그녀가 갑작스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왜 벌써?" "아니에요. 꼭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어쩌면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거에요, 그리고 지금 계시는 희망 야학과 희망실업 노조와의 관계를 경찰에서 의심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럼, 안녕히……."

훌쩍 몇 마디를 던지고는 그녀는 까페를 나가 버렸다.

어떻게 그녀가 희망 노조에 관한 일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쩌면 다시 만날거라는 말뜻은 무엇일까?

시계가 2시를 알리고 있었다. 점심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다.

얼른 까페를 나섰다.

II

1987년 6월 10일

삐삥, 탄이 날아갔다. 대열이 흩어지고 잠시 쌍방의 간격에 팽팽한 침묵이 드리워졌다. 흰색 분말이 여기저기 뇌질러진 땅위에 초여름 햇살이 한가롭게 풀려 내렸다. 그 사이를 비집고 거리를 지나는 먼 곳의 차량 소음이 칙칙하게 늘어져왔다. 가끔씩 몸을 비트는 열풍에 땅바닥의 탄가루가 나지막히 공중으로 흩날리는 사이로 아지랑이가 물결을 그으며 피어 올랐다. 다시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대열 쪽에서 플라타너스 주위를 동그렇게 에워싸고 한 동안 웅성거림이 일더니 곧 이어 몇몇 학생들이 다친 학생들을 들쳐업고 병원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투구의 보호경 밖으로 보였다. 대열은 노래와 함께 다시 정비를 하더니 스크럼을 짜고 교문으로 질주해 왔다. 불덩이와 돌덩이가 날아왔다. 돌맹이를 받아내는 동료들의 방패소리가 툭툭 들렸다. 발사! 손을 아래로 긋는 신호와 함께 중대장의 명령이 차량스피커를 통해 떨어졌다. 삐삐삐삥…삥. 탄은 교문 양편에 늘어서 있는 플라타너스 키를 넘어갔다. 탄 한발을 다시 장전하고 장갑낀 손가락을 방아쇠에 건채 학교 뒤의 아슴한 산을 바라다 보았다. 장갑속의 손이 젖어 있었다.

1987년 6월 12일

1조의 발사가 끝났다. 다시 학생들이 달려 나왔다. 발사 준비! 명령이 내렸다. 플라타너

스를 겨냥하며 방아쇠에 장갑낀 손가락을 걸었다. 가슴이 울렸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때마다 함께 매달리는 어떤 주저감. 주저할 수 없는 주저감. 시위 기미를 알고 관할 구역인 Y대 앞에서 아침부터 진을 치고 있을 때, 경멸스러운 표정을 던지며 교문을 들어서는 그들 앞에서 속을 교차하는 긍정과 알지 못하게 나를 부정하는 힘을 느끼고 있었다. 너희가 나같은 처지라면 ……그래, 나는 너희의 적이다. 발사! 동료들의 탄이 평평하며 허공으로 튀자 나도 방아쇠를 당겼다. 주먹만한 돌을 아무리 빨리 던져도 땅에 다 닿을때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최류탄도 그랬다. 학생들은 난무하는 가스 속에서도 날아오는 탄을 피하며 반사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내가 쏜 탄이 허공을 힘차게 그으며 선회하다가 최고점에서 꺽이더니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며 교문입구의 플라타너스 뒤로 향했다. 탄은 아직 터지지 않은 채로 나무뒤로 숨고 있었다. 순간 누군가 흩날리는 가루 속으로 실루엣을 그리며 넘어졌다. 그의 모습은 완벽하게 유연했다.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었다. 부자연하거나 저항의 티가 걸러진 우아한 순수, 그것은 하나의 부드러운 선이었다. 다친것은 분명했다. 제발 경상이기를…….

1987년 6월 13일

신문은 아무런 감정도 싣고 있지 않았다. 어제 Y대 시위 도중 한 학생이 최류탄에 맞아 양쪽 눈을 실명했으며 시신경이 파괴되어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차갑게 쓰여져 있었다. 오! 하나님…….

1987년 6월 20일

며칠 내내 의식을 흘라매는 고문의 계속이었다. 또 그때의 광경이 다시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다. 그날 이후 실명이란 두 글자가 뾰족한 창이 되어 밤낮으로 내 눈을 찔러온다. 악령같은 느낌을 떨쳐버리기 위해 날마다 그 사고의 객관성에 적용하여 내 자신을 얼마나 변호했던가!

나는 하나의 집단 소속원으로서 어디까지나 근무중이었다. 더구나 사건은 의도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예정시간 보다 늦게 터진 탄이 그쪽으로 날아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완전범죄는 나에게는 종신형이 될 것이다. 형사법에도 저촉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이 범죄는 오직 내 자신만이 범인을 알고 있고 내 자신의 마음만이 저촉되는 완전 범죄인 것이다. 따라서 더욱 나를 끝없이 환영에 시달리는 형벌에 처할 것이다.

그 학생을 만나러 가야 한다. 내가 쏘았다고 말해야 한다.

형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고 있었다.

형을 얽매고 조련시키던 조직의 힘으로부터 탈출할 수 밖에 없게한 사건을 형은 남겨준 것이었다. 정말 형에게 그 사건은 종신형이 될 것이다.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 형은 그 학생을 찾아갔을까? 아마도 형은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형은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 학생의 가족과 친구들, 그들 중에서 몇몇은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형의 멱살을 잡으며 면상을 후려쳤을지도 모른다. 아마 눈을 다친 그 학생도 의식을 다 회복했을지도 모른다. 절망했을 것이다. 저주했을 것이다.

병상시트를 쥐어뜯으며 몇번을 실신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분노와 울부짖음속에서 형은 서 있었을까? 그리고는 용서받지 못한 자신을 이끌고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 한 대를 꺼내물고 창가로 갔다. 라디오에서 오후5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도 시내와 서울 각 대학에서는 극렬한 시위가 계속 되었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 다음 소식을 알려 드리겠읍니다. 오늘 오후 3시10분 쯤 한강변에서 약 이십 사오세 가량의 남자 익사체가 발견되었읍니다. 경찰은 이 사체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이십 사오 세의 남자,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때렸다.

잠바를 얼른 걸쳐입고 밖으로 뛰쳐 나갔다.

Ⅲ

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세계를 등진 채 순결한 영혼의 세계로 떠난 것이다.

형을 묻고 돌아온 지도 벌써 한 달이 흘렀다. 여전히 세상은 시끄러웠고, 수많은 학생들이 다치고 쓰러졌다. 하나의 사고는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그 상처를 파급시켰다. 언젠가 그 상처들은 커다란 분노로 일어나리라.

비가 오는 날은 유난히 형 생각이 간절하게 났다. 악몽과 피의식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떤 타협속에서 소멸되어 버릴텐데, 형은 자기 스스로 형(形)을 집행해 버린 것이다. 결국 형은 내 가슴에 이 시대가 죽여버린, 이 시대가 잃어버린 우상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그 즈음해, 형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힘은 나에게도 밀려오고 있었다.

아마도 오늘쯤 희망실업의 김사장이 경찰을 대동하고 찾아올 것이다.

희망실업은 이 야학을 사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미국인 재단에게 육영사업을 하고 있다는 눈가림이었다. 재단으로부터 보조를 받아내는 도구인 동시에 또 아이들을 다른 회사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올가미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휴학하는 동안 학교선배의 소개로 들어 올 때부터 금방 알아낼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야학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학을 거쳐가는 아이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형의 사건으로 알게 된 소희 누나가 희망실업으로 위장 취업해 들어오면서 더욱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가 있었다. 누나는 처음 만날 때부터 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누나가 형의 애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둘을 철저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그 노력이 이번 희망실업 노조임금인상 투쟁에서 여실히 그 성과를 드러내고 있었다. 며칠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야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농성은 희망야학과 노조와의 관계를 표면에 드러내고 만 것이다. 경찰이 눈치채어 버린 것이다.

소희 누나가 어제 위장취업이 드러나 잡혀갔다. 그렇다면 아마도 오늘은 이곳 야학으로도 그들이 찾아올 것이다. 고문을 이겨낸다고 해도 그것은 어차피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책상 서랍을 열었다. 형이 남긴 노트를 꺼냈다.

노트 끝을 펼쳤다. 형이 남긴 유언 같은 시가 쓰여 있었다.

새들의 나라에
누군가 벽을 쌓았다.
사방으로 천장까지.
자유롭고 싶은 새들은
담담해서 매일 몇 마리씩
날아 올랐지만

벽에 부딪쳐
불구가 되거나 숨져갔다.
간혹 군데 군데 무너지기도 했지만
지친 부리를 쉬는 동안
벽은 더 튼튼해졌고,
모이통을 독점한 몇몇 새들은
날고자 하는 새들을
반역자로 처단했다
이제 무엇이 날아 올라
자유를 노래할까
축제처럼 고무풍선만 가득한
새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매일 벽에
머리깨고 죽는 새들 있어
벽은 끝내 무너지리라.

오전내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사이로 해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날개를 접고 내려앉아 물기를 말리던 새들이 다시 힘껏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엮고나서

밥, 자유, 평등, 평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건만 만사가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비고비를 넘어 오늘까지 온 것도 다행인 듯하다.

-心-

'서정'이 죽어버린 이 땅에서 '감상'은 사치다.
더러움을 호흡하며, 살아 있다는 것마저 부끄러운데…

그날은 온다.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나는 안다.

-碩-

4·26총선에서의 야당의 승리는 뜻밖이었듯이 현재 한국사회의 흐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전환기에 청년학도에게 바라는 바는 오직 그것, 시대를 꿰 뚫는 통찰력으로 민족의 앞날을 위해 정진하는 것 뿐이다.
조국은 오직 그대들 손에…

-哲-

힘들었다.
나태와 사랑의 부족이 가장 큰 적이었다.

-지영-

지랄탄 소리에 숨 죽이며 등줄기가 끈끈하도록 뛰어다닌 産苦—
상경논총이 연세 역사의 초석이 되길 기원하며…

-廷-

인간은 삶이 허무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후훗—
내게 사랑마저 없다면…

-환-

완성은 제2의 도약이라고 아무개가 말했다.
논총의 완성속에 가일층 발전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니 무척 기쁘다.
아아! 그러나 완성 뒤에 오는 이 허탈함은 어찌할꼬.
소주 한잔에 아쉬움과 허탈함을 담으며 제40호 상경논총을 기약한다. -宙昶-

상경논총 제39호

1988년 6월 15일 인쇄
1988년 6월 20일 발행

발행인 최 문 석

편집인 상경대학 편집위원회

찍은곳 삼 영 인 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134 우편번호120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편집위원회

비 매 품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그룹 - 동남



이 땅은 젊은이들의 조상님들의 고귀한 혼이 깃든 바로 우리들의 한지처입니다. 진정 나라를 아끼는 젊은이라면 한 점을 더 나아가 생각하고 한 번 더 사숙한 조 있어야 합니다.



代表理事

회망찬 미래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東南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리는뜻은 저희 역시 "회망찬 미래를 갖고 젊은 사람이 첫 출범시키는 미래의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社会에 진출할때 쯤 저희 東南은 틀림없이 그룹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株) 東南프로덕션을 비롯하여 「週刊 낚시」, 東南장학회, 그 밖의 모든 사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함께 성장할 미래의 東南그룹을 기억하여 주십시요.

(株)동남프로덕션

(주)동남프로덕션